

협동연구총서 24-45-01

연구보고24-일반03

청년 친화적인 지역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I

최용환 · 김영한 · 권오영 · 박윤수 · 오문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만들어갑니다.



협동연구총서 24-45-01

연구보고24-일반03

청년 친화적인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I

저 자 최용환, 김영한, 권오영, 박윤수, 오문준

연구진 연구책임자_최용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김영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권오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_박윤수(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공동연구원_오문준(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연구보조원_이경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청년 친화적인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I”

1. 협동연구 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협동연구총서 24-45-01	청년 친화적인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I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협력 연구 기관	한국청소년정 책연구원 숙명여자대학교 서울시복지재단	최용환 선임연구위원 (총괄책임자)	김영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오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윤수(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오문준(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이경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주관 연구 기관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최용환 선임연구위원 (총괄책임자)	김영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오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경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보고서를 펴내며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저출생과 인구소멸로 인한 지방소멸과 균형발전, 그리고 지역특화 산업의 육성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3년차 연구 중에 1년차 연구로, 인구소멸 위기 속에 청년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의 세부 정책방향과 정책의 청사진을 분석하고 향후 국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1차년도 연구는 청년 친화적인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국가정책의 방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청년 친화적인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정책이 바람직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신기술과 신산업에 대한 동형화(isomorphism)적 성격이 강하여 보다 현실에 맞는 특화된 정책개발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차년도 연구에서는 지역인재들의 일자리 미스매치의 원인과 관련, 지역인재 일자리 정책에 대하여 기업이 주요대상이 되는 ‘수요정책분석(demand side policy analysis)’과 구직의사가 있는 청년과 이를 길러내는 대학이 주요대상이 되는 ‘공급정책분석(supply side policy analysis)’을 실시하여 향후 육성될 청년인재들의 ‘노동시장균형(labor market equilibrium)’의 세부 정책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협동연구로서 본 연구를 같이 하여주신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와 서울시복지재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요약

■ 연구목적

- 최근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낮은 출산율과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임. 이에 국가적으로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는 실정임. 이는 기존 정책들이 ‘대학, 기업, 지자체’의 연계를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Cooperative Governance)’ 수준의 성과만을 파악하는데 그쳤고, 사업의 이행 성과만을 점검하는 회고적 평가(Retrospective Evaluations)에 그친 것이 가장 큰 원인임.
- 이에 본 연구는 1차년도 연구인 만큼 인구소멸 위기 속에 청년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의 세부 정책방향과 정책의 청사진을 분석하고 향후 국가정책의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 연구내용

- 구체적으로 2차 통계를 통한 ‘지역별 산업특성과 청년 경제활동인구의 특징’을 살펴보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역대 청년층과 대학교육 지원의 세부목표’, ‘비수도권(14개 시도)의 지역별 특화인재양성 및 관련사업과 청년 지역인재육성 및 일자리 창출 연계된 중앙정부의 부처별 지원사업 목표’를 분석.
- 그리고 ‘대학, 기업, 지자체’의 각 주체들이 체감하는 연계성과를 알아보기 위한 ‘지자체, 기업, 대학’의 정책관계자 산학연 협력에 대한 정보공유 행동실험을 추진.
- 무엇보다 본 연구는 청년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관계자 조사 및 전문가조사를 통하여 청년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의 정책성과를 위한 정부의 역할 및 지역산업 전략과 비수도권(14개 시도)의 지역 특화인재양성 추진 방향을 제언함.

■ 연구방법

- 문헌연구: 청년 친화적 지역인재 양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국내외 문헌을 분석. 또한 '지역인재 양성과 청년일자리 창출'의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의 추진과제', 대학정책의 정책동향을 분석
- 2차자료 분석: ①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수, ②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지수, ③산업연구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K-지방소멸지수 등을 통한 지역인재육성 환경 분석. 또한 만19세부터 34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여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활용한 지역별 청년인구 현황을 분석, 지역별 경제현황을 위한 지역내총생산 (GRDP), 고용노동부의 '지역별 취업자 현황',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를 통한 '지역별 산업구조' 분석
- 청년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관계자 설문조사: '지자체, 기업, 대학'의 정책관계자의 청년 지역인재육성과 일자리 창출관련 정책 인식도 조사는 위탁조사업체를 통해 온라인 조사로 추진. 구체적으로 대학관계자 72명, 기업관계자 71명, 공무원 32명이 응답. 청년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앙부처의 역할,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지역별 특화인재양성 분야 및 관련 사업에 대한 대한 중요도-성과도(IPA) 및 계층적 분석(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조사
- 청년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의 협업성과 분석을 위한 행동실험: 지역인재육성과 일자리 창출 정책성과의 근본적 한계를 도출하기 위한 지자체, 기업, 대학의 상호신뢰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공유 행동실험 설문 문항을 고안. 예를 들면, 지자체 관계자에게 지역 발전을 위해 기업 또는 대학과 협업하는 프로젝트 참여를 요청받은 상황을 제시하고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기업 또는 대학과 정보를 얼마나 공유할 의향이 있는지 설문
- 청년 지역인재육성과 일자리 창출 관련 전문가조사: 청년 지역인재육성과 일자리 창출관련 전문가조사는 청년정책 및 정책전문가를 대상으로 위탁업체의 온라인 조사. 청년지역인재와 일자리 창출 관련 실무가 및 전문가들의 총 155명이 응답. 청년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의 정책성과를 위한 정부역할 및 지역산업 전략과 비수도권(14개 시도)의 지역 특화인재양성 추진 방향조사

■ 연구결과

주요 연구결과

- 문헌연구결과, 지난 청년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은 ‘대학, 기업, 지자체’의 연계를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Cooperative Governance)’의 형식적 강조, 지자체별 특성화 전략이 부재와 구체화되지 않음 등으로 그 성과가 미흡함.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가용 자원과 규모의 부족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역청년인재양성 전략 및 기업과의 연계 전략을 세우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함.
- ‘지역별 산업특성과 청년 경제활동인구의 특징’을 보면 ①부산, 인천 등은 기존 산업은 유지하되, 향후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감소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는 전략이 필요. ②광주, 대전 등은 경제성장을 위한 미래 및 신산업에 투자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지역인재 육성도 지역주력사업, 특화산업에 맞추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 외에 ③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인구감소 위험도가 높은 지역은 청년인구의 유출 방지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신산업과 관련된 투자와 일자리 양성이 가장 높게 필요. ④종합하면, 각 지역의 산업발전계획과 대학 자원 간의 연계를 통해 지역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필요.
- 청년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①산학협력 기반의 인재양성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지역정주형 인재양성과 직업평생교육의 혁신에 대한 중요성이 더 높음. ② 지역산업적 측면에서 볼 때 스마트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스마트제조 엔지니어링, 친환경 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AI, ICT와 관련된 지역청년인재 양성이 시급. 특히 경북, 경남, 광주, 울산, 부산의 각 산업이 이와 관련된 중점개선 과제로 도출. ④ 지역 기반 청년인재 양성의 환경 조성을 위해 ‘법제도 개선 및 개정’ 등 필요, ⑤ 중앙부처 간 ‘연계 및 협력 강화와 통합적 평가’가 필요. 청년지역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핵심부처 간 연계와 협력이 필수적이고, 또 통합적 평가로 사업의 효과성을 향상시킬 정례화된 연계·협력 체계 마련과 통합적 평가 체계 구축이 요구됨

주요 연구결과

- ‘지자체, 기업, 대학’의 정책관계자 산학연 협력에 대한 정보공유 행동실험분석결과,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역 대학보다 지역 기업에 더 높은 신뢰를 보여 기업과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려는 경향이 있음. 기업 관계자들 또한 대학보다는 지자체와의 협력에서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의향을 보였으며, 대학에 대한 신뢰는 상대적으로 낮았음. 대학 관계자들 역시 기업보다는 지자체에 대한 신뢰가 높아, 지자체와의 정보 공유를 더 우선시함. 산학연 협력 생태계가 성공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신뢰가 부족한 조직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 특히, ① 지자체와 기업에게는 대학과의 신뢰를 증진하고, ② 대학에게는 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처방으로 기업중심의 개방적 연계협력이 중요.
- 청년 지역인재육성과 일자리 창출 관련 전문가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정부의 청년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정과제들 중 많은 과제들이 중점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지정되어 관리가 될 필요가 있음. 국정과제 중 6개(국정과제 112번, 113번, 117번, 118번, 119번, 120번)가 중점개선 영역에 해당되었음. 따라서 이들 과제에 대한 집중 실행 및 관리 방안이 마련될 필요.
 - 둘째, 청년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의 정책성과를 위해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의 실효적 성과관리가 제도화되어야 함.
 - 셋째, 지역 특화인재양성 분야 및 관련 사업목표로 지역혁신, 대학혁신, 협업은 모두 동시에 강조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앞선 ‘지자체, 기업, 대학’의 정책관계자 산학연 협력에 대한 정보공유 행동실험분석의 차이에서 확인된 만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개방적 연계와 지원정책으로 이들의 세부정책대안을 마련해야함.

■ 핵심 정책제언

핵심 정책제언

정책방안	정책대안	세부 정책제언	관련정책추진체계					
			중앙	지자체	지역기업	대학	국책	민간
법제도개선 및 정책강화	1. 청년친화적인 지역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개정	1-1. 법률제정을 통한 정책추진 강화	●	●	●	●	●	
		1-2.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을 통한 정책추진 강화	●	●	●	●	●	
	2. 중앙부처 연계강화 및 정책평가 내실화	2-1. 주요 중앙부처(고용노동부, 과기부, 중기부, 산자부, 행안부)의 콘트론타워 강화	●				●	
		2-2. 청년친화 지역인재육성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의 효과성 평가체계 구축	●	●			●	
기업참여 중심의 지역일자리 창출	3. 지역기업의 개방적 참여 유도	3-1. 지역 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강화	●	●	●			
	4. 지역기업 중심의 청년인재육성 활성화	4-1. 기업 참여 중심의 지산학연 생태계 구축		●	●	●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강화	5. 미래산업과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산업혁신	5-1. 로봇,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전문인재 양성, 친환경 에너지 및 미래 모빌리티 인재 양성	●	●	●			
		5-2. 지역친화형 인재육성 및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수립	●	●		●	●	
	6. 지역청년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평생교육 강화	6-1. 지역 산업구조와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대학의 직업교육		●		●		●
		6-2. 지역특화산업 고숙련 인력양성을 위한 평생교육 혁신지구 마련		●		●		●
지역청년 정주여건 강화	7. 고숙련 지역인재의 정주기반 마련지원	7-1. 지역친화형 인재육성에 대한 주거 및 자산 형성 지원	●	●				●
		7-2. 정주청년에 대한 지역활력형 편의성 증진		●				●
지역대학 역량 강화	8. 지역중심 청년인재양성을 위한 대학교육의 혁신	8-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내실화	●			●	●	

- 1차년도 연구로서 청년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방향과 청사진을 진단함. 그 결과, 기업중심의 산학협력의 중요성과 지역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하는 인프라와 제도마련, 평생교육지원,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별 일자리 창출의 차별화 전략마련 등이 필요함.

핵심 정책제언

- 이에 본 연구는 청년 지역인재육성과 일자리 창출이 내실있게 추진되기 위하여
1) 법제도개선 및 정책강화, 2) 기업참여 중심의 지역일자리 창출, 3)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강화, 4) 지역청년 정주여건 강화, 5) 지역대학 역량 강화의 5가지 정책방안을 제안함.
- 그리고 1) 법제도개선 및 정책강화를 위한 ① 청년친화적인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 개정, ② 중앙부처 연계강화 및 정책평가 내실화, 2) 기업참여 중심의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③ 지역기업의 개방적 참여 유도, ④ 지역기업 중심의 청년인재육성 활성화, 3)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⑤ 미래산업과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산업혁신, ⑥ 지역청년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평생교육 강화, 4) 지역청년 정주여건 강화를 위한 ⑦ 고숙련 지역인재의 정주기반 마련지원, 5) 지역대학 역량 강화를 위한 ⑧ 지역중심 청년인재양성을 위한 대학교육의 혁신의 8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함.
- 그리고 8가지 정책대안에 대하여 13개의 세부 정책대안을 제안함.

청년 친화적인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I

협동연구총서 24-45-01
연구보고24-일반03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4
3. 연구 추진체계	5
4. 연구 방법	5

II. 이론적 배경 및 주요정책 현황

1. 청년친화적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선행연구	13
2.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정책으로서의 대학정책 변화와 쟁점	29
3. 지역인재육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계획 평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39
4. 기존 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독창성	76

Ⅲ. 지역별 산업특성과 청년 경제활동인구의 특징

1. 지역별(시·도) 지방소멸위험 및 청년인구 특성 81
2. 지역별(시·도) 산업구조의 특징 94
3. 청년지역인재육성을 통한 시도별 일자리 창출방안 · 112

Ⅳ. ‘지자체, 기업, 대학’의 정책관계자의 청년 지역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 인식도 조사

1. 조사개요 125
2.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정책으로서 역대 정부의 대학정책 평가 128
3. 비수도권(14개 시도)의 지역별 특화인재양성 및 관련사업의 중요도-성과도(IPA):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 133
4.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세부목표’에 대한 계층적 분석(AHP) 및 중요도-성과도(IPA)분석 142
5. 청년 지역인재육성 및 일자리 창출 연계된 중앙정부의 부처별 지원사업에 대한 중요도-성과도(IPA) 153
6. 시사점 166

Ⅴ. ‘지자체, 기업, 대학’의 정책관계자 산학연 협력에 대한

정보공유 행동실험분석

1. 설문 개요 171
2. 지자체, 기업, 대학의 신뢰측정에 대한 정보공유 행동실험 문항 173
3. 정보공유 행동실험분석 결과 174
4. 소결 179

Ⅵ. 청년 지역인재육성과 일자리 창출 관련 전문가조사

1. 조사개요 183
2. 윤석열 정부의 ‘청년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관련 국정과제 IPA분석 184

3. 청년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의 정책성과를 위한 관련 중앙부처의 역할 IPA분석	187
4. 청년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의 주요 부처의 지역산업 전략에 대한 IPA분석	189
5. 비수도권(14개 시도)의 지역 특화인재양성 분야 및 관련 사업목표 AHP	197
6. 시사점	198

Ⅶ. 정책 제언

1. 청년친화적인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입법적 방안	205
2. 중앙부처 연계강화 및 정책평가 내실화	210
3. 지역기업의 개방적 참여 유도	216
4. 지역기업 중심의 청년인재육성 활성화	224
5. 미래산업과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산업혁신	229
6. 지역청년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평생교육 강화	233
7. 고숙련 지역인재의 정주기반 마련 지원	237
8. 지역중심 청년인재양성을 위한 대학교육의 혁신	241

참고문헌	245
-------------------	------------

표 목차

표 I -1. 연구 추진체계	5
표 I -2. ‘대학, 기업, 지자체’의 연계를 통한 지역인재 양성과 청년일자리 창출의 주요정책의 회고적 평가 방법	6
표 I -3. 양적 연구: 청년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관계자 설문조사	7
표 I -4. 청년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의 협업성과 분석을 위한 행동실험	8
표 I -5. 청년 지역인재 양성과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전문가 조사	9
표 I -6. 정책실무협의회 계획	10
표 II -1. 청년 친화적 지역인재 육성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관한 선행연구	26
표 II -2. 2023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성과분석 평가지표	41
표 II -3. 평가위원 배경 특성	48
표 II -4. 2023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성과분석 평가결과	49
표 II -5. 2023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성과분석 평가결과(서울)	53
표 II -6. 2023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성과분석 평가결과(부산)	54
표 II -7. 2023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성과분석 평가결과(인천)	55
표 II -8. 2023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성과분석 평가결과(대구)	56
표 II -9. 2023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성과분석 평가결과(대전)	57
표 II -10. 2023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성과분석 평가결과(광주)	58

표 II -11. 2023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성과분석 평가결과(울산)	59
표 II -12. 2023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성과분석 평가결과(세종)	60
표 II -13. 2023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성과분석 평가결과(경기)	61
표 II -14. 2023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성과분석 평가결과(강원)	62
표 II -15. 2023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성과분석 평가결과(충북)	63
표 II -16. 2023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성과분석 평가결과(충남)	64
표 II -17. 2023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성과분석 평가결과(전북)	65
표 II -18. 2023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성과분석 평가결과(전남)	66
표 II -19. 2023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성과분석 평가결과(경북)	67
표 II -20. 2023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성과분석 평가결과(경남)	68
표 II -21. 2023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성과분석 평가결과(제주)	69
표 II -22. 수도권과 비수도권 권역별 평가점수	70
표 II -23. 시범지역과 비시범지역 권역별 평가점수	73
표 III -1. 시도별 인구감소지역(시군구) 개수 및 비율: 인구감소지수기준(행정안전부)	82
표 III -2. 시도별 지방소멸위험 분류 및 지수(한국고용정보원)	83
표 III -3. 시도별 지방소멸지수(한국고용정보원)	83
표 III -4. 시도별 인구감소지역(시군구) 개수 및 비율: 지방소멸지수기준(한국고용정보원)	84
표 III -5. 시도별 지방소멸위험 분류 및 지수(산업연구원)	85
표 III -6. 시도별 인구감소지역(시군구) 개수 및 비율: K-지방소멸지수기준(산업연구원)	86
표 III -7. 시도별 지방소멸위험 해당 지역 비율: 지수별 비교 및 평균 ..	87
표 III -8. 지역별 인구 현황: 2024년 5월 기준	89
표 III -9. 지역별 청년인구 추이(19~34세):2012~2023년	91

표 Ⅲ-10. 지역별 청년인구 추이(19~25세)2012~2023년	92
표 Ⅲ-11. 지역별 청년인구 추이(26~34세)2012~2023년	93
표 Ⅲ-12. 지역내총생산(명목 GRDP) 추이: 2012~2022년	96
표 Ⅲ-13. 지역별 취업자 현황: 2023년 하반기	99
표 Ⅲ-14. 시도별 산업별 종사자수(2020)	104
표 Ⅲ-15. 시도별 산업별 종사자(2020): 지역 내 비중	106
표 Ⅲ-16. 시도별 특성 종합 및 인재육성방안	114
표 Ⅳ-1. 응답자 특성	127
표 Ⅳ-2. 역대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정책에 대한 인지도(9점 척도) ..	128
표 Ⅳ-3. 역대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정책에 대한 회고적 평가(9점 척도)	129
표 Ⅳ-4. 역대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정책의 목표별 중요도	130
표 Ⅳ-5. 역대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목표별 달성도	131
표 Ⅳ-6. 비수도권(14개 시도)의 지역별 특화인재양성 및 관련사업의 중요도	133
표 Ⅳ-7. 비수도권(14개 시도)의 지역별 특화인재양성 및 관련사업의 달성도	135
표 Ⅳ-8.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화인재양성 및 관련사업 분야 중요도(기업)	137
표 Ⅳ-9.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화인재양성 및 관련사업 분야 달성도(기업)	138
표 Ⅳ-10.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화인재양성 및 관련사업 분야 중요도(비기업)	139
표 Ⅳ-11.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화인재양성 및 관련사업 분야 달성도(비기업)	141
표 Ⅳ-1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성과목표별 상대적 중요도(소속별)	143
표 Ⅳ-1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지역정주형 인재양성 중요도	144
표 Ⅳ-14.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지역정주형 인재양성 달성도	145
표 Ⅳ-15.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의 중요도	146
표 Ⅳ-16.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의 달성도	147

표 IV-17.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직업·평생교육의 혁신의 중요도	149
표 IV-18.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직업·평생교육의 혁신의 달성도	150
표 IV-19.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지역현안 해결의 중요도	151
표 IV-20.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지역현안 해결의 달성도	152
표 IV-2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된 정부 부처별(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의 중요도 ·	154
표 IV-2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된 정부 부처별(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의 달성도 ·	155
표 IV-2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사업의 중요도	156
표 IV-24.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사업의 달성도	157
표 IV-25.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된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의 중요도	159
표 IV-26.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된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의 달성도	160
표 IV-27.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사업의 중요도	161
표 IV-28.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사업의 달성도	162
표 IV-29.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된 부처별(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지원사업의 중요도	164
표 IV-30.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된 부처별(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지원사업의 달성도	165
표 V-1. 소속 기관별 응답자 특성	172
표 VI-1. 응답자 특성	184
표 VI-2. 윤석열 정부의 '청년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관련 국정과제 중요도	185
표 VI-3. 윤석열 정부의 '청년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관련 국정과제 목표달성도	186
표 VI-4. 청년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정책성과를 위한 관련 중앙부처의 역할 중요도	188

표 VI-5. 청년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정책성고를 위한 관련 중양부처의 목표 달성도	188
표 VI-6. 산업통상자원부의 '2기 지역혁신클러스터 특화산업'의 중요도	190
표 VI-7. 산업통상자원부의 '2기 지역혁신클러스터 특화산업'의 목표달성도	191
표 VI-8.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추진방향'(주축산업)의 중요도	192
표 VI-9.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추진방향'(주축산업)의 목표달성도	193
표 VI-10.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추진방향'(미래산업)의 중요도	195
표 VI-11.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추진방향'(미래산업)의 목표달성도	196
표 VII-1. 청년친화적인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 개정	205
표 VII-2. 중앙부처 연계강화 및 정책평가 내실화	210
표 VII-3. 지역기업의 개방적 참여 유도	216
표 VII-4. 지역기업 중심의 청년인재육성 활성화	224
표 VII-5. 미래산업과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산업혁신	229
표 VII-6. 지역청년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평생교육 강화	233
표 VII-7. 고숙련 지역인재의 정주기반 마련 지원	237
표 VII-8. 지역중심 청년인재양성을 위한 대학교육의 혁신	241

그림 목차

그림 II-1.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15
그림 II-2.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의 추진과제	18
그림 II-3. 인구감소지역의 지정현황	19
그림 II-4.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대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33
그림 II-5. 글로컬 30 정책의 주요 내용	35
그림 II-6.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방안	38
그림 II-7. 2023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성과분석 평가결과	50
그림 II-8. 2023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성과분석 평가결과(정책형성)	51
그림 II-9. 2023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성과분석 평가결과(정책집행)	51
그림 II-10. 2023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성과분석 평가결과(정책성과)	52
그림 II-11.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평가점수 결과 비교	71
그림 II-12.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평가점수 결과 분야별 비교	71
그림 II-13. 시범지역과 비시범지역 간 평가점수 결과 비교	73
그림 II-14. 시범지역과 비시범지역 간 평가점수 결과 분야별 비교	74
그림 III-1. 시도별 지역내총생산(GRDP)	94
그림 III-2. 지역내총생산(명목 GRDP) 추이: 2012~2022년	97
그림 III-3. 지역주력산업 현황(2023)	110
그림 III-4. 지역혁신클러스터 특화산업(안)	111
그림 IV-1. IPA 매트릭스	126
그림 IV-2. 역대 정부 대학 구조개혁 정책 목표 IPA	132
그림 IV-3.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화인재양성 및 관련사업 분야 IPA	136
그림 IV-4.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화인재양성 분야 IPA(기업)	139
그림 IV-5.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화인재양성 분야 IPA(비기업)	142

그림 IV-6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성과목표별 상대적 중요도(전체)	143
그림 IV-7.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지역정주형 인재양성 IPA	146
그림 IV-8.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IPA	148
그림 IV-9.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직업·평생교육의 혁신 IPA	151
그림 IV-10.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지역현안 해결 IPA	153
그림 IV-1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된 정부 부처별 지원사업 IPA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156
그림 IV-1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사업 IPA	158
그림 IV-1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된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IPA	161
그림 IV-14.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사업 IPA	163
그림 IV-15.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된 정부 부처별 지원사업 IPA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166
그림 V-1. 정보공유 행동실험 문항: 지자체 표본	173
그림 V-2. 정보공유 행동실험 결과: 지자체 표본	175
그림 V-3. 정보공유 행동실험 결과: 기업 표본	177
그림 V-4. 정보공유 행동실험 결과: 대학 표본	178
그림 VI-1. 윤석열 정부의 '청년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관련 국정과제 IPA	187
그림 VI-2. 청년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정책성과를 위한 관련 중앙부처의 역할 IPA	189
그림 VI-3. 산업통상자원부의 '2기 지역혁신클러스터 특화산업'의 IPA	192
그림 VI-4.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추진방향'(주축산업)의 IPA	194
그림 VI-5.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추진방향'(미래산업)의 IPA	197

그림 VI-6.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성과목표별 상대적 중요도(전체)	198
그림 VII-1. 본 연구의 정책 제언에 대한 요약	204
그림 VII-2. 청년 지역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 정책의 내실화를 위한 중앙부처 연계 및 정책평가 강화	212
그림 VII-3. 지역기업 중심의 청년일자리 거버넌스	221
그림 VII-4. 지역기업 중심의 인재양성 로드맵	227
그림 VII-5. 미래산업과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지역별 산업혁신 전략	231
그림 VII-6. 지역청년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평생교육 강화의 4가지 전략	234
그림 VII-7. 지역인재청년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정책 패키지	238
그림 VII-8. 지역중심 청년인재양성을 위한 대학교육의 변화 방향 ...	242

○———— 제1장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 내용
- 3. 연구 추진체계
- 4. 연구 방법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낮은 출산율과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이다. 이에 국가적으로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는 실정이다. 윤석열 정부 역시 국정과제와 2023년 말에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의 추진과제들을 통해 낮은 출산율과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노력을 담은 다양한 정책들의 핵심에는 지방소멸과 균형발전 그리고 지역특화 산업의 육성이 핵심이다. 이 정책들 가운데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역인재 양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한 해법, 즉 기업이 중심이 된 ‘대학, 기업, 지자체’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 ‘대학, 기업, 지자체’의 연계정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많은 연구들이 이미 ‘대학, 기업, 지자체’의 연계가 인재양성과 지역산업발전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대학, 기업, 지자체’의 연계가 특효약(magic bullet)으로만 제시될 뿐 구체적인 방안은 모호하게 도출되는 사례가 대다수인 것이 현실이다.¹⁾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시범사업 중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의 결과에서 보듯이 청년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은 단순히 대학교육의 혁신과 산학협력만으로는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 이는 기존 정책들이 ‘대학, 기업, 지자체’의 연계를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Cooperative Governance)’ 수준의 성과

1) 특히 모호한 연구들은 막연히 산학연의 연계를 주장(권경득, 2016; 기정훈, 박헌수, 2013; 김동규, 2020; 박승규, 2018; 변정현, 2021; 이성희, 오선정, 2022; 채윤정, 2023)한다.

만을 파악하는데 그쳤고, 사업의 이행 성과만을 점검하는 회고적 평가(Retrospective Evaluations)에 그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에 본 연구는 1차년도 연구인 만큼 인구소멸 위기 속에 청년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의 세부 정책방향과 정책의 청사진을 분석하고 향후 국가정책의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²⁾ 구체적으로 2차 통계를 통한 ‘지역별 산업특성과 청년 경제활동인구의 특징’을 살펴보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역대 청년층과 대학교육 지원의 세부목표’, ‘비수도권(14개 시도)의 지역별 특화 인재양성 및 관련사업과 청년 지역인재육성 및 일자리 창출 연계된 중앙정부의 부처별 지원사업 목표’를 분석한다. 그리고 ‘대학, 기업, 지자체’의 각 주체들이 체감하는 연계성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지자체, 기업, 대학’의 정책관계자 산학연 협력에 대한 정보공유 행동실험을 추진한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청년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관계자 조사 및 전문가조사를 통하여 청년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의 정책성과를 위한 정부역할 및 지역산업 전략과 비수도권(14개 시도)의 지역 특화인재양성 추진 방향을 제언한다.

2. 연구 내용

먼저, 본 연구는 ‘대학, 기업, 지자체’ 연계를 통한 지역인재 양성과 청년일자리에 대한 문헌분석을 실시한다. 그리고 대학관계자 70명, 기업 70명, 지자체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현재 지역인재 양성과 청년일자리 정책의 가장 큰 정책방향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사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또한, 2025년에 전면 시행을 준비 중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정책의 기획, 집행, 예상되는 성과를 평가하여 ‘대학, 기업, 지자체’의 연계를 통한 지역인재 양성과 청년일자리 창출의 정책방향을 분석한다. 이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협업성과 분석을 위한 행동실험을 조사하여 실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참여자인 대학, 기업, 지자

2) 2차년도(2025) 연구는 지역의 청년인재양성이 지역노동시장에서 일자리로 구현되기 위한 조건을 탐색하여 그간 놓쳐져 온 청년의 ‘잡 미스매치(job mismatch)’를 극복하고자 하는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인재들의 일자리 미스매치의 원인과 관련, 지역인재 일자리 정책에 대하여 기업이 주요 대상이 되는 ‘수요정책분석(demand side policy analysis)’과 구직의사가 있는 청년과 이를 길러내는 대학이 주요 대상이 되는 ‘공급정책분석(supply side policy analysis)’을 실시하여 향후 육성될 청년인재들의 ‘노동시장 균형(Labor market equilibrium)’의 세부 정책대안을 제시하며 이를 지원할 지자체의 주요과제를 도출할 것이다.

체의 협업성과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계층적 분석기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과 중요도-성과도(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의 전문가조사를 통한 분석을 실시하여 ‘대학, 기업, 지자체’의 연계를 통한 지역인재 양성과 청년일자리 창출의 전망적 평가(Prospective Evaluations)를 실시하여 정책제언을 도출한다. 또한 본 과제는 정부의 4대 교육개혁의 하나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청년 친화적인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을 시작으로 3년 과제를 추진하는 만큼 1차년도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청년 지역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3. 연구 추진체계

표 | -1. 연구 추진체계

연구인력	담당업무	비고
최용환 선임연구위원	- 연구총괄 - 청년 친화적 지역인재 양성과 청년일자리 창출의 연구설계 및 분석 - 지방소멸과 연계한 지역인재 양성과 청년일자리 창출 과제 제시	
김영한 선임연구위원, 권오영 부연구위원	- 전문가 의견조사 및 분석 - 전문가 자문 추진	
박윤수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 청년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관계자성과분석과 행동실험	※경제학 전공자
오문준 연구위원 (서울시복지재단)	- 청년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가조사 분석	※정책학 전공자
이경아 연구원	- 자료수집, 통계현황정리, 전문가 의견 조사 등 참여	

4.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본 연구에서는 청년 친화적 지역인재 양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분석하기 위하여 국내

의 문헌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지방소멸과 청년 일자리의 대응으로서 ‘지역인재 양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의 추진과제’의 동향을 분석한다. 또한 ‘지역인재 양성과 청년일자리 창출’은 교육부가 현재 추진하는 대학정책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동향을 분석한다. 즉, ‘글로벌대학 30’ 정책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4대 교육개혁의 한 방안이며 ‘지역인재 양성과 청년일자리 창출’의 지원체계를 직접적으로 목표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 ‘대학, 기업, 지자체’의 연계를 통한 지역인재 양성과 청년일자리 창출의 주요정책의 회고적 평가(Retrospective Evaluations)

먼저, 청년 친화적 지역인재 양성과 청년일자리 창출의 분석을 위한 사전단계로 기존에 추진된 관련 사업들의 사업성과를 평가하였다. 대상은 ‘대학구조개혁’부터 최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의 시범사업’까지 청년 친화적 지역인재 양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목표하는 정책들이며, 평가지표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구성하여 정책의 기획, 집행, 성과 부분을 측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평가위원은 관련 정책 및 정책평가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하였으며, 평가방법은 지표에 따른 평가위원의 정성평가로 2024년 5월에 실시하였다.

표 1-2. ‘대학, 기업, 지자체’의 연계를 통한 지역인재 양성과 청년일자리 창출의
주요정책의 회고적 평가 방법

주요 요소	내용	비고
대상	‘대학구조개혁’부터 최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의 시범사업’까지 청년 친화적 지역인재 양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목표하는 정책들	
평가지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구성하되 정책의 기획, 집행, 성과 부분을 측정	
평가위원	관련 정책 및 정책평가 전문가 3인	
평가방법	지표에 따른 평가위원의 정성평가	
평가시기	2024년 5월	

3) 양적 연구: 청년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관계자 설문조사

본 연구는 사전 단계로 ‘대학구조개혁’, ‘글로벌대학 30’ 정책부터 최근 추진 중인 ‘지역 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의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회고적 성과를 조망한 이후, 최근 대학개혁의 추진되는 사업이며 청년 친화적 지역인재 양성과 청년일자리 창출의 지원체계 구축의 대표사업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사업 관련 지역의 ‘대학, 기업, 지자체’ 관련 조사로 실태와 향후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표 1 -3. 양적 연구: 청년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관계자 설문조사

주요 요소	내용	비고
모집단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의 시범사업 지역	
표집틀	시범사업 지역인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의 7개 지역과 그 외에 내년에 전면 시행될 지자체의 대학 및 기업, 지자체 담당자	
표본수	대학관계자 70명, 기업 70명, 지자체 공무원 30명	
표집방법	임의집계구 표집	
조사시기	2024년 6~8월	

* 본 조사는 추후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와 협조하여 시행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기도 함(2024. 1. 11.)

4) 청년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의 협업성과 분석을 위한 행동실험

‘대학, 기업, 지자체’의 연계방안의 기존 정책들의 성과는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광범위한 협력적 거버넌스(Cooperative Governance) 수준의 성과이다. 앞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같은 모델이 보다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 주체의 협업수준이 성과로써 파악되어야 하며 이는 상호관계적 성과로 협력적 거버넌스(Cooperative Governance) 수준의 성과와는 다르다. 이에 본 연구는 독재자 게임(Dictator Game)을 기본으로 구성하여 실험자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참여주체에게 일정한 일정 금액을 부여하고, 피실험자로 하여금 주어진 금액을 피실험자 자신의 몫과 (게임에서 지정된) 제3자의 몫으로 임의대로 나누도록 지시한 뒤, 피실험자의 선택을 관찰하여 실제 본 사업을 통하여 ‘대학, 기업, 지자체’의 연계의 수준이 어떤지 파악하여

실천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3)

표 1 -4. 청년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의 협업성과 분석을 위한 행동실험

주요 요소	내용	비고
모집단	시범사업 지역인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등 7개 지역의 대학 및 기업, 지자체 담당자	
표본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사업체 참여하는 대학관계자 70인, 기업관계자 70인, 지자체 관계자 30인	
표집방법	무작위 표집	
조사방법	온라인 실험설문	
조사내용	대학, 기업, 지자체 간의 협업을 측정하는 사업예산 배분을 독재자게임으로 구성	
조사시기	2024년 8월	
협동연구	경제학과 교수진과 협동연구 추진	

* 관련 행동실험 문항 및 시기, 협동연구는 조정 가능

구체적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사업 지역인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의 7개 지역의 대학 및 기업, 지자체 담당자를 무작위 추출하며, 시범사업체 참여하는 대학관계자 70인, 기업관계자 70인, 지자체 관계자 30인을 유효표본으로 한다. 조사 방법은 온라인 실험 설문이며, 조사 내용은 대학, 기업, 지자체 간의 협업을 측정하는 사업예산 배분을 독재자게임으로 구성한다. 조사 시기는 2024년 8월이며 경제학과 교수진과 협동연구를 추진한다.

5) 전문가조사를 통한 청년 지역인재 양성과 청년일자리 창출의 전망적 평가
(Prospective Evaluations)

다음으로는 청년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혁신클러스터 특화산업’,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추진방향’, 지역인재 양성과 연계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지역인재 양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3) 독재자 게임(Dictator game)이란, 실험자가 피실험자에게 일정 금액을 부여하고, 피실험자로 하여금 주어진 금액을 피실험자 자신의 몫과 (게임에서 지정된) 제3자의 몫으로 마음대로 나누도록 지시한 뒤, 피실험자의 선택을 관찰하는 실험을 의미한다. 피실험자가 마치 독재자와 같이 자기 마음대로 주어진 금액을 본인과 제3자 사이에 배분한다는 의미에서 독재자 게임이라고 불린다(최용환, 성유리, 박윤수, 김보경, 2020b: 141).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부처 역할, 17개 시도별 특화인재양성 분야 및 관련 사업의 주요 내용에 대한 전망적 평가(Prospective Evaluations)를 실시한다. 전문가조사는 계층적 분석기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과 중요도-성과도(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분석을 통하여 실시한다. 특히 IPA는 쟁점 사안의 중요도와 실행정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직관적 매트릭스 분석이 가능하여 앞으로 청년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향성과 정교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전문가 의견조사의 대상은 청년지역인재과 일자리 창출 관련 실무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조사 시작 전에 청년지역인재과 일자리 창출 관련 실무가 및 전문가들의 소속 홈페이지 정보를 활용하여 집락 및 할당 추출을 통해 모집된 500여 명을 확보할 예정이다. 그리고 집락 및 할당 추출을 통해 모집된 500여 명을 대상에 대한 전문가 집단별 무작위 추출하고 이들에 대하여 계층적의사결정법(AHP) 문항과 중요도-성과도(IPA: 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문항을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조사 시기는 2024년 8월부터 9월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며, 유효표본은 150명 내외를 목표로 한다.

표 1 -5. 청년 지역인재 양성과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전문가 조사

주요 요소	내용	비 고
조사대상 전문가	전국 지역인재 양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전문가	
선정방법	조사 전 청년지역인재과 일자리 창출 관련 실무가 및 전문가들의 소속 홈페이지 정보를 활용하여 집락 및 할당 추출을 통해 모집된 500여 명을 대상 ⁴⁾	
조사내용	국정과제 및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의 추진과제' 그리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세부과제에 대한 전망적 평가	
조사방법	집락 및 할당 추출을 통해 모집된 500여 명을 대상에 대한 전문가 집단별 무작위 추출하여 유효표본 150명 내외	
조사시기	2024년 8월~9월	

4) 조사 모집단의 규모는 전문가 자문회의(2024.07.29.)의 결과, 조사 모집단 규모를 500명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자문위원의 공통된 의견에 따른 것임.

6) 정책연구실무협의회

표 1 -6. 정책실무협의회 계획

차수	주요내용	참석공무원 부처(과)	개최시기
1차	'대학, 기업, 지자체'의 연계를 통한 지역인재 양성과 청년일자리 정책	교육부 지역인재 정책과	1월 11일
2차	청년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방안	교육부 지역인재 정책과	4월 22일

○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주요정책 현황

- 1. 청년친화적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선행연구
- 2.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정책으로서의 대학정책
변화와 쟁점
- 3. 지역인재육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계획
평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 4. 기존 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독창성

1. 청년친화적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선행연구

1) 청년정책으로서 지역미래인재 육성

최근 우리나라는 낮은 출산율과 수도권 집중으로 인하여 전례 없는 급격한 지방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서울신문, 2023년 8월 30일 자). 우리나라의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화의 문제는 우리보다 먼저 지방소멸을 고민해 온 일본과 프랑스보다도 더욱 심각하다. 구체적으로 이영철(2022)은 일본의 수도 동경권이 전체 GDP의 약 35%, 프랑스의 수도 주변이 약 30%를 차지함에 비하여, 대한민국의 수도권은 GDP의 50%를 넘으며 좋은 일자리와 대학교도 70% 이상 집중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는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와 맞물려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권양섭, 2023).

이 같은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 중 한 가지는 인구감소 시대에 대학과 기업의 연계를 통하여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이다(이영철, 2022). 또한 김현호(2022)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인구활력적 측면과 경제생기적 측면 두 가지 접근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인구활력적 측면에서는 새로운 인구유입 촉진 및 정착이 목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신규 인구의 유입정착’, ‘육아돌봄 의료 여건 향상’,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인재 육성’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어 경제생기적 측면으로는 인구유입의 토대가 되는 일자리, 소득 창출이 목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 산업 육성 및 소득증대’,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특화자원개발 상품화’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전술한 연구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지역인재 양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다. 이영철(2022)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수도권의 과밀화를 탈피한

균형발전,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방의 청년 일자리 창출, 대학과 기업체 간의 접촉을 확대하는 지식기반 산업 중심의 산학협력 모델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미국의 스탠퍼드(Stanford)대학은 실리콘밸리와 협력하여 급속도로 성장하여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한 좋은 사례이며, 지역의 기업체와 협력하는 연구중심의 대학은 지역인재와 산업체가 주거, 통근시간, 생활안정 등의 무형적 혜택을 누리는 장점이 있어 우리와 같은 지방소멸과 청년일자리 문제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이영철, 2022).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지역인재 양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크게 6대 국정목표로 ① 정치행정부문 ‘국정목표 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② 경제부문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③ 사회부문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④ 미래부문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⑤ 외교안보부문 ‘국정목표 5.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⑥ 지방시대부문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제시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22). 또한 지방시대에 관한 10개의 국정과제가 있다. 이들 국정과제 중에서 111번부터 114번까지가 지방분권 국정과제로 볼 수 있으며, 115번부터 120번까지는 균형발전 국정과제로 구분할 수 있다(박재희, 주희진, 김필, 이재용, 2022).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그림 II-1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II-1.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 출처: 대한민국정부(2022).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p.10을 재구성

지방소멸과 미래인재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10개의 국정과제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대한민국정부, 2022)로 ‘국정목표 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국정과제 111번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행안부)’는 자치권을 강화하여 강한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내용이며, ‘국정과제 112번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행안부·기재부)’는 지방의 재정자주도 및 지방재원의 확충, 균특회계 및 국고 보조금 개선 등 재정권의 이행과 지방의 재정책임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과제로 주로

행정분권과 지방분권이 그 목적이다.

그러나 ‘국정과제 113번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교육부)’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직접적 해법으로 지역인재 육성을 제시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국정과제 113번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교육부)’은 지자체의 지역대학 및 산업 등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인재 양성을 통한 취업과 창업 그리고 정주까지 고려한 지역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지자체, 교육청, 지방대학 간 협업과 공동사업발굴 그리고 지역산업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 및 취업, 정주’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대학 중심 창업·산학협력을 통한 우수인재 배출을 그 내용으로 한다(대한민국정부, 2022). 나아가 ‘국정과제 113번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교육부)’은 지자체와 대학의 연계를 통하여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발전을 주도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다음으로 ‘국정과제 115번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산업부)’은 지자체가 투자기업과 협의하여 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여 협력기업을 지역에 집적화하며, 과감한 세제 혜택, 규제 개혁과 투자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여 지방에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며, ‘국정과제 116번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국토부)’은 산학연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정주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여 수도권 인구의 분산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국정과제 117번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중기부)’은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및 혁신벤처의 성장거점인 혁신캠퍼스타운, 캠퍼스 혁신파크조성 및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통한 기업주도의 혁신생태계조성과 지역 주도의 지역경제 성장 모델을 통해 지역의 자립성장 및 지역 균형발전을 그 목적으로 한다(대한민국정부, 2022).

이어 ‘국정과제 118번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산업부)’은 지역 주도로 초광역권 신산업을 육성 그리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산업과 연계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정과제 119번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중기부·행안부)’는 지역대학을 활용하여 로컬 크리에이터를 양성하여 지역 콘텐츠와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지역산업 창출을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국정과제 120번 지방소멸 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산업부·행안부)’는 인구감소에 대한 특례 및 재정 지원과 균형발전지표를 통한 지역의 역량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지방소멸과 미래인재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10개의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국정과제 113번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교육부)’, ‘국정과제 115번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산업부)’, ‘국정과제 117번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중기부)’, ‘국정과제 118번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산업부)’, ‘국정과제 119번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중기부·행안부)’ 등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중점적인 목표를 두고 있는 가운데, 지역인재 양성과 청년의 일자리를 위하여 지자체와 대학 그리고 기업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 이외에도 지방소멸시대의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 바 있는데, 대표적으로 2023년 12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림 II-2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산업 진흥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

- ① 지역맞춤형 일자리 제공
- ② 로컬콘텐츠 활용
- ③ 지역고용정책 역량 제고

기업 지방이전 촉진

- ① 투자 유치 환경 개선
- ② 지역중소기업 위기관리
- ③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

지역맞춤형 인재 양성

- ① 지방대학 혁신 및 인력 유치
- ② 지역 공교육 혁신
- ③ 지역산업 맞춤형인재 양성

미래 혁신 산업 지원

- ① 농어촌 미래산업 육성
- ②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
- ③ 치유산업 활성화 지원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매력있는 공간 창출

- ① 인구변화 반영 주거지원
- ② 디지털·스마트 기술 활용
- ③ 국토공간 공간 혁신

낙후지역 인프라 확충

- ① 빈집 등 생활인프라 정비
- ② 농산어촌 교통편의 제고

의료 및 돌봄사각 해소

- ① 의료접근성 향상 도모
- ② 빈틈없는 아이돌봄 확대
- ③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충

문화향유 및 참여기회 확대

- ① 문화 접근성 확보
- ② 고령층 여가활동 지원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

생활인구제도 확립

- ① 생활인구 산정 분석
- ② 생활인구 활성화
- ③ 관계인구(거창) 도입 및 연계

지역 이주 및 체류 활성화

- ① 청장년인구 유입 촉진
- ② 농어촌 방문·체류 활성화
- ③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지역문화·관광자원 개발

- ① 자주 오래 머무는 지역
- ② 지역특화 관광상품 개발

지역 맞춤형 외국인정책

- ① 지역특화 비자발급 유연화
- ② 일손해결형 외국인력 유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 ① 재지정 기준 개선
- ② 유형화 및 체계적 지원

제도적 지원 강화

- ① 대응계획 내실화
- ② 특례 중점 발굴
- ③ 지역연계·협력 강화

재정적 지원 확대

- ① 예산체계화 및 지원강화
- ② 지방소멸대응기금 성과 제고
- ③ 지역활성화펀드 활성화

실증 기반 체계 확립

- ① 인구감소지역 통계관리
- ②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③ 성과점검 및 환류 강화

그림 II-2.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의 추진과제

* 출처: 관계부처합동(2023).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인구감소지역 활력 제고 추진. p13을 재구성하여 인용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은 ①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산업 진흥, ②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③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의 3대 전략으로 추진된다. 이 중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산업 진흥’은 지역인재를 발굴 및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방소멸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의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산업 진흥’은 ①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지역맞춤형 일자리 제공, 로컬콘텐츠 활용, 지역고용정책 역량 제고), ② 기업 지방이전 촉진(투자 유치 환경 개선, 지역중소기업 위기관리,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 ③ 지역맞춤형 인재 양성(지방대학 혁신 및 인력 유치, 지역 공교육 혁신, 지역산업 맞춤형인재 양성), ④ 미래·혁신 산업 지원(농어촌 미래산업 육성,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 치유산업 활성화 지원)를 목적으로 한다(관계부처합동, 2023). 특히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산업 진흥’의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은 주로 교육부가 담당하여 추진하며, ‘글로벌대학 육성(‘23~’27)’,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23~’29)’, ‘우수 유학생 유치(‘23~’27)’, ‘평생교육(‘22~’25)’, ‘대학창업(‘12~’25)’ 등이 주요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상의 정부 정책을 종합해보면 지역의 정주나 생활인구의 유입도 지방소멸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지만, 정부가 생각하는 지역소멸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대학과 기업이 연계한 지역인재 양성 및 신산업을 바탕으로 하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2) 청년 친화적 지역인재육성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연구

지금까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추진되는 해법으로서 지역인재 육성과 청년들의 일자리 정책을 알아보았다. 실제 많은 연구들이 인구감소와 청년실업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인재육성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분석하고 있다.

먼저 Arranz, Arroyabe, Sena, Arranz and Fernandez de Arroyabe(2022)는 유럽 연합(EU),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크로아티아 및 터키를 대상으로 한 대학 졸업자의 취업 가능성에 대한 횡단조사자료를 분석하여 지역대학과 기업 간의 연계 강화가 대학생들의 취업 가능성을 매우 높인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Arranz 외(2022)는 지역 인재육성에 있어 대학과 기업 간의 연계는 청년들이 취업 이전에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역량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측면에서는 고용주의 요구를 취업 전 청년들을 교육하는 대학에서 공급할 수 있게 하여 상호 폭넓은 협력이 가능한 일자리 창출의 메커니즘을

구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Monteiro, Almeida, and Garcia-Aracil(2021)은 대학 졸업을 앞둔 11명의 청년들에 대한 질적 인터뷰 분석을 통하여 청년들의 대학교육과 기업의 취업 간의 관련 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그들은 대학, 기업, 지역 간의 협력이 대학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을 앞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고등교육의 경험을 제공하며, 자기효능, 지식적 측면에서 취업 가능성을 높인다고 하였다. 나아가 Monteiro 외(2021)는 대학에서 노동시장으로 진입을 앞둔 청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요구하는 실질적 경험이기 때문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진로의회를 제공하고 기업에서 원하는 필요한 역량을 대학교육에서 갖추게 하는 ‘대학, 기업, 지역’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졸업을 앞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모델로 자리 잡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Orazbayeva, Plewa, Davey, and Muros(2019)는 질적 접근을 통하여 대학과 기업의 연계에 대한 6가지 영역의 주제를 도출하고 유럽과 호주 등의 33개 국가의 실무자와 기업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대학과 기업의 연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학의 졸업을 앞둔 청년들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과 기업의 협력과정에서 대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연구와 실습이 가장 중요하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의 연계뿐만 아니라 지역 정책입안자의 협력과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한편, Velez, Afcha, and Bustamante(2019)는 에콰도르의 24개 지역 2,815개의 체증화된 기업체 표본을 대상으로 대학과 기업의 연계에 대한 노동시장의 성과를 로짓과 프로빗 등의 계량경제학모델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그들은 ‘대학-기업-지역’에 더 많은 연구개발비와 연구활동이 추진될 경우, 지역의 고용창출과 기업의 혁신적 성과는 더 높아짐을 입증하였다. 특히 Velez 외(2019)는 대학과 기업의 연계로 발생하는 지역의 대학 졸업생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성과는 무엇보다 기업의 규모에 비례함을 확인하였는데, 협력의 연계를 넘어 협력의 규모와 관련 대학, 기업, 지역 간 협업투자의 규모가 중요함을 밝혔다.

Zhang(2024)은 청년기에 해당하는 대졸자들의 일자리는 세계적인 이슈이며, 지역인재로서 이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대학, 기업, 정부’의 협력모델을 통한 인재양성, 지식, 생산의 효율적 결합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이와 같은 ‘대학-기업-지역’ 간의 지역인재 양성은 1900년 초 미국 신시내티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으며, ‘대학-정부-기

업'의 협력이 일자리 창출 등 노동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원인은 전문적 교육과정을 통한 협력을 통하여 시너지효과를 통한 상호이익을 누리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Zhang(2024)은 '대학-기업-지방정부' 간 협력모델에 있어 지방정부가 그 협력적 관계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이지만, 오히려 지방정부는 대학과 기업의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같은 노동시장 산출에 동기부여와 조력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대학-기업'의 인센티브 배분에 정부가 참여하는 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기정훈과 박헌수(2013)는 지역발전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연구방법으로는 인구와 고용 변화를 추정하는 공간연립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였다. 특히 기정훈과 박헌수(2013)는 지역발전의 일자리 사업 중 대규모 사업들은 대졸취업난을 극복하고 청년들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것들이 많으며, 지방대학이 우수인재를 육성 및 공급함으로써 지역산업을 선도할 목적의 인재사업은 교육인적자원 부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인재의 고용을 높일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은 지역에 특화된 산업의 투자를 통해 유발될 수 있으며 시설중심의 투자사업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낮았으나 지역산업을 선도할 목적을 가진 지방대학의 인재사업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게 나타났다(기정훈, 박헌수, 2013).

그리고 최용환(2015)은 다국가 패널분석을 통하여 청년 실업률의 영향요인과 정책방향 탐색을 분석하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한 대안을 연구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의 강화를 바탕으로 한中等교육의 다변화와 대학교육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최용환(2015)은 대학교육의 커리큘럼 변화를 통해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공급할 수 있어야 청년실업의 해소와 청년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근본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김용우(2014) 역시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은 대학교육 시스템의 질적인 해법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용우(2014)는 특히 대학교육과정의 목표가 취업이 아니지만 대졸 신입인력을 기준으로 기업에서 필요한 원활한 능력에 대비했을 때, 신규 취업자가 보유한 역량 수준이 26%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현상임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서 김용우(2014)는 미국 워싱턴 대학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3년마다 산업체의 요구(Needs)를 대학 교육과정

(Curriculum)에 잘 반영되어 있는지를 조사하고 대학-기업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협력하여 관련 역량을 습득하는 경시대회와 인턴십 등을 제안하였다.

이어 권경득(2016)은 지역과 대학, 기업들이 연계하여 기업이 주도하는 맞춤형 인력양성에 따른 일자리를 창출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청년실업과 맞물린 일자리 창출에 있어 노동시장의 주도권은 기업에 있으므로 기업의 요구에 맞는 노동력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이를 위해 공공부문보다는 기업주도의 협력적 거버넌스(Cooperative Governance)에 기초한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협력지원체계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권경득(2016)은 지역의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특성에 적합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맞춤형 청년일자리 창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대기업과 협력체,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모델’, ‘지역수요에 부합하는 기업유형’, ‘기업주도의 맞춤형 인재양성의 사업계획, 실행, 성과까지 포괄하는 사업모니터링 체계 구축’, ‘고용시장의 현실에 맞는 대학의 눈높이 교육’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박승규(2018)는 청년들의 수요에 맞는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 특화사업에 대한 파악, 양적인 일자리보다 질적인 일자리 생성의 중요성 인지, 직업훈련의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특히 박승규(2018)는 ‘대학-기업-지자체’의 연계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지역 기업수요를 파악하고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과 함께 대학이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공급할 수 있는 하는 실질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재육성이 다른 대안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지역고용이 먼저 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역특화산업의 일자리 공급이 가능해진다고 하였다(박승규, 2018).

김선재(2018)는 지역경제와 지역대학의 산학협력효과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분석하였으며, 산학연 연계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를 통하여 추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육과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론적 배경은 1990년 Romer와 1995년 Jones에서 제시된 신(新)고전학파형 내생적 성장모형에 따라 설계하였다. 김선재(2018)는 특히 정부가 참여하는 산학연 연계를 통하여 생산 및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분야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분야, 교육, 정보통신 및 방송업 등으로 꼽았으며, 나아가 첨단 신산업을 중심으로 ‘대학-기업-지자체’의 연계 모델을 구축하여 지역 청년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더욱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뿐만 아니라 김동규(2020)는 4차산업이라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지자체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무엇보다 그는 새로운 첨단기술이 예상되는 산업의 일자리 창출에서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이 가장 요구되며 지자체는 이에 대한 지원 노력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김동규(2020)는 지역 인재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술환경에 맞는 학습과 교육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와 더불어 지역대학과 산업계 그리고 지자체가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산업구조 변화를 분석하여 기업에 인력을 공급하는 지역특화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변정현(2021)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업의 발전 방향을 분석하였는데, 현재 지역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은 협동적 모델이기보다는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되어 있어 지역의 신산업 투자와 기업육성에 한계가 있으며, 지역에서 큰 요구가 있지 않은 유사중복 사업이 다수 설계되었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변정현(2021)은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기업이 필요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인재가 갖추어야 할 기술과 능력을 발굴하여 지역사업체가 필요한 청년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나아가 청년인재양성은 지역기업육성, 지역 인구유출 방지, 대학교 등의 맞춤형 교육훈련 등이 협력적으로 구성되어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오민지와 안선민(2022)은 지역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고용 거버넌스를 연구하였으며, 지역의 고용문제는 지역 산업구조와 인구 및 노동공급 특성과 같은 지역 특성뿐 아니라 지방분권에 대한 이슈도 포함하고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오민지와 안선민(2022)은 지역의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인력양성과 지역산업에 기반한 기업체와 대학 그리고 지방정부의 협조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추가적으로 지역산업에 기반한 지역주도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있어 지역산업과 인력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및 사업체와 같은 산업계와 교육청, 대학 등의 인력수급 관련 기관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들의 참여와 효과적 연계를 위하여 의사결정 참여의 징검다리로서 지역고용 거버넌스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오민지, 안선민, 2022).

한편 이성희와 오선정(2022)은 대학생들의 효과적인 취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대학은 기업과 노동시장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특히 그들은 대학 산학협력 인재양성과 대학 일자리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이성희와 오선정(2022)은 지역의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학협력 네트워크

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즉, 협력 인재양성이 지역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 세분류를 기반으로 한 수요 분석을 토대로 어떤 직업 전문인력을 양성할 것인지 그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산학협력 선도대학을 선정하며, 선정단계에서는 직업노동시장 수요분석을 통해 대학 교육프로그램이 대학생들의 취업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에 맞게 설계가 되었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이성희, 오선정, 2022).

그리고 박준우, 여찬구와 우승현(2023)은 전국 5대 권역을 대상으로 하여 대졸 청년졸업자의 취업결정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대학에서는 대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기 전에 프로그램 제공 및 진로선택 후 취업 준비활동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소재지역의 특성과 전공에 따라 맞춤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지방정부와 대학은 서로 연계하여 대졸자들이 효과적인 진로선택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서 지역 청년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박준우 외, 2023).

송원근(2023)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연구하였다. 그는 대학과 지자체,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한 청년대졸자 인력양성이 기업이 부담해야 할 인재양성의 비용을 대학과 국민들이 부담하는 부작용도 있지만 대체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송원근(2023)은 지금까지 추진된 지역혁신과 일자리 창출정책에서 대학의 역할은 산학협력을 통해 구체화되었으며, 대학과 기업, 지자체 간의 산학협력은 신산업의 기초를 만들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공헌하고 지역산업이 요구하는 인력배출에도 기여하였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이와 같은 연계협력 모델이 더욱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주도성이 보다 공고히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조건으로 ① ‘대학, 기업 및 지자체’의 협력성과를 반영하는 평가지표의 마련과 ② 그 지역의 고등학교 교육 및 평생교육도 지역의 이해와 역량강화 그리고 ③ 지역인재들이 취업 후 정주할 수 있는 인프라 제공 등도 같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였다(송원근, 2023).

마지막으로 채윤정(2023)은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현재 대학중심의 민관학 연계정책인 ‘글로벌대학 30’과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향후 과제와 전망을 제시하였다. 특히 채윤정(2023)은 지역혁신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존의 대학, 기업, 지자체 간 연계

정책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① 산학협력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에 대한 지원 및 지역기업의 종사자 교육관리, 지방대학과 기업 간 연계와 이력관리, ② 지자체를 중심으로 대학과 지역산업체를 연결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원체계 별도 구축, ③ 사업성과관리의 개선 등을 필요한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상의 청년 친화적 지역인재 육성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선행연구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II-1과 같다.

표 II-1. 청년 친화적 지역인재 육성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관한 선행연구

번호	연구자	주요 연구내용
1	Arranz 외 (2022)	· 유럽연합(EU),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크로아티아 및 터키를 대상으로 한 대학 졸업자의 취업가능성에 대한 횡단조사자료를 분석 · 지역대학과 기업 간의 연계 강화가 대학생들의 취업가능성을 매우 높인다고 주장
2	Monteiro 외 (2021)	· 대학졸업을 앞둔 11명의 청년들에 대한 질적 인터뷰 분석을 통하여 청년들의 대학교육과 기업의 취업 간의 관련 요인을 분석 · 대학, 기업, 지역 간의 협력이 대학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을 앞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고등교육의 경험을 제공하며, 자기효능, 지식적 측면에서 취업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
3	Orazbayeva 외 (2019)	· 질적 연구를 통하여 대학과 기업의 연계에 대한 6가지 영역의 주제를 도출하고 유럽과 호주 등의 33개 국가의 실무자와 기업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대학과 기업의 연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및 분석 ·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의 연계뿐만 아니라 지역 정책입안자의 협력과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
4	Velez 외 (2019)	· 에콰도르의 24개 지역 2,815개의 계층화된 기업체 표본을 대상으로 대학과 기업의 연계에 대한 노동시장의 성과를 로짓과 프로빗 등의 계량경제학 모델로 분석 · 대학-기업-지역에 더 많은 연구개발비와 연구활동이 추진될 경우, 지역의 고용창출과 기업의 혁신적 성과는 더 높아짐을 확증

번호	연구자	주요 연구내용
5	Zhang (2024)	· 청년기에 해당하는 대졸자들의 일자리는 세계적인 이슈이며, 지역인재로서 이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대학, 기업, 정부'의 협력모델을 통한 인재 양성, 지식, 생산과의 효율적 결합 강조 · '대학-기업-지역' 간의 지역인재 양성은 1900년 초 미국 신시내티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으며, '대학-정부-기업'의 협력이 일자리 창출 등 노동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원인은 전문적 교육과정을 통한 협력을 통하여 시너지효과를 통한 상호이익을 누리기 때문임을 주장
6	기정훈, 박헌수 (2013)	· 인구와 고용 변화를 추정하는 공간연립방정식 모델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 지역발전의 일자리 사업 중 대규모 사업들은 대졸취업난을 극복하고 청년들의 고용율을 높이기 위한 것들이 많으며, 지방대학이 우수인재를 육성공급함으로써 지역산업을 선도할 목적의 인재사업은 교육인적자원 부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강조
7	최용환 (2015)	· 다국가 패널분석을 통하여 청년 실업률의 영향요인과 정책방향 탐색을 분석 ·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의 강화를 바탕으로 한 중등 교육의 다변화와 대학교육의 변화가 중요함을 주장
8	김용우 (2014)	·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은 대학교육 시스템의 질적인 해법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 · 대학교육과정의 목표가 취업이 아니지만 대졸 신입인력을 기준으로 기업에서 필요한 원활한 능력에 대비했을 때, 신규 취업자가 보유한 역량 수준이 26%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현상임을 지적
9	권경득 (2016)	· 역과 대학, 기업들이 연계하여 기업이 주도하는 맞춤형 인력양성에 따른 일자리를 창출방안을 모색 · 청년실업과 맞물린 일자리 창출에 있어 노동시장의 주도권은 기업에 있으므로 기업의 요구에 맞는 노동력 공급이 가장 중요함을 주장
10	박승규 (2018)	· 청년들의 수요에 맞는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 특화사업에 대한 파악, 양적인 일자리보다 질적인 일자리 생성의 중요성 인지, 직업훈련의 강화 등을 제안 · '대학-기업-지자체'의 연계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지역 기업수요를 파악하고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과 함께 대학이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공급할 수 있는 실질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재육성이 다른 대안보다 우선시 되어야 함을 주장
11	김선재 (2018)	· 지역경제와 지역대학의 산학협력효과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분석 · 첨단 신산업을 중심으로 '대학-기업-지자체'의 연계 모델이 구축하여 지역 청년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더욱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언

번호	연구자	주요 연구내용
12	김동규 (2020)	· 4차산업이라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는 지자체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한 연구 · 새로운 첨단기술이 예상되는 산업의 일자리 창출에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이 가장 요구되며 지자체는 이에 대한 지원 노력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주장
13	변정현 (2021)	·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업의 발전방향을 분석 ·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기업이 필요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인재가 갖추어야 할 기술과 능력을 발굴하여 지역사업체가 필요한 청년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주장
14	오민지, 안선민 (2022)	·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고용거버넌스를 연구 · 지역의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력양성과 지역산업에 기반한 기업체와 대학 그리고 지방정부의 협조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을 제언
15	이성희, 오선정 (2022)	· 대학 산학협력 인재양성과 대학일자리 사업의 효과를 분석 · 지역의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주장
16	박준우 외 (2023)	· 전국 5대 권역을 대상으로 하여 대졸 청년졸업자의 취업결정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 · 지방정부와 대학은 서로 연계하여 대졸자들이 효과적인 진로선택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서 지역 청년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
17	송원근 (2023)	·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연구 · 지금까지 추진된 지역혁신과 일자리 창출정책에서 대학의 역할은 산학협력을 통해 구체화되었으며, 대학과 기업, 지자체 간의 산학협력은 신산업의 기초를 만들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공헌하고 지역산업이 요구하는 인력배출에도 기여하였다고 분석
18	채윤정 (2023)	·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현재 대학중심의 민관학 연계정책인 ‘글로벌대학 30’과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을 중심으로 분석 · 지역혁신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존의 대학, 기업, 지자체 간 연계정책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주장

2.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정책으로서의 대학정책 변화와 쟁점

1)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구조개혁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정책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대학구조개혁 관련 정책이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 경쟁력 및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구조개혁방안이 발표된 이후 현재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각 정권별로 강조하는 부분이나 세부적인 실행 및 추진 방안의 차이점은 있었지만, 20년간 대학구조개혁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거시적인 목표와 그에 따른 대학구조개혁정책의 방향성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2003~2008)의 대학구조개혁정책 및 방안은 학령인구의 감소, 지방대학 정원 미달 현상, 교육의 질적 향상 필요성,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 등을 배경으로 한 대학경쟁력 강화를 목표를 두고 추진되었다(신현석, 2016; 이용균, 2023). 이러한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무현 정부가 선택한 방안은 대학특성화였다. 그래서 2004년에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방안에 담겨있는 기본 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사회 인력 수요에 부합하는 학과 개편 등으로 대변되는 각 대학의 특성화를 강조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4). 이러한 대학특성화를 위해 세부 정책 및 전략으로는 산업계 참여를 통한 대학특성화로의 접근, 대학협의체 및 대학연구소 등에 전문가 참여 비율 확대, 국립대와 사립대의 서로 다른 특성을 염두에 둔 차별적 특성화 방식 추진 등을 실시하는 가운데, 대학구조개혁의 모든 과정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지속적인 자율화를 실행해 나갔다(교육인적자원부, 2004). 그 결과 경쟁력이 부족했던 대학을 통폐합하고 대학 입학 정원을 감축하는 성과 및 BK21, 누리사업, 수도권 특성화 사업 등을 시행하면서 대학특성화 분야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고 있다(박혜진, 2023; 이슬아 2017). 그러나 이 시기에 대학특성화 방안에서 지역인재 양성과 관련된 대학정책의 성과는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즉,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통폐합 및 정원 감축, 그리고 대학특성화를 위한 방안을 통해 지역대학의 질적 향상과 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해서 일정 부분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바는 있지만, 지역인재 양성 혹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시적인 대학 구조개혁 방안이나 지원방안은 제시되거나 실행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이명박 정부(2008~2013) 역시 대학경쟁력 강화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여 대학 구조개혁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명박 정부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핵심은 2009년에 발표된 ‘대학구조조정 추진방안’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심각하게 다가온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직시한 상황에서 전 정부보다 더욱 강력하고 광범위한 대학 구조개혁을 실시하였다. 대학특성화를 통한 국립대학의 통폐합 및 법인화, 부실운영되는 사립대학의 퇴출 촉진 등 상시적으로 대학을 구조개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그러다 보니 이명박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 기조는 노무현 정부의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참여유도적 정책 기조가 아닌 대학을 제재하는 정책 기조로 변화할 수밖에 없었으며, 실제로 정책 방안도 대학의 구조개혁을 압박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는 형태로 진행되었다(김미란, 2014; 신현석, 2016). 그 결과로 이명박 정부 기간 중 경쟁력이 부족하거나 대학특성화에 실패한 대학들이 정부재정지원 제한, 학자금 대출 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러한 강력한 제재로 인하여 많은 지역의 대학들이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특성화를 위해 노력했는데, 특히 정부가 제시한 지역과 연계한 대학특성화를 지원하는 정책을 받아들이는 움직임이 가시화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남수경, 2016). 다시 말해 대학이 위치한 지역과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 구조로 대학체제를 개편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 대학이 호응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대학의 호응은 대학이나 지역 단위가 아닌 국가 단위에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대학 구조개혁 방안의 첫 출발점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어 박근혜 정부(2013~2017) 대학 구조개혁 정책 역시 학령인구 감소의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대학경쟁력 강화 및 대학정원 감축을 주요 목표로 하는 방안들을 추진하였다. 2014년에 발표된 대학구조개혁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전국의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기 위한 평가체제를 도입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교육부, 2014). 이명박 정부의 부실대학 퇴출 방안 형태가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대학 정원 감축 형태로 변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방향성 또한 대학의 구조개혁을 압박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간다는 이명박 정부의 주요 방침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박근혜 정부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0,614명의 정원을 감축시키며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의 질적 향상 제고에 대응하였다. 그러나 6만여

명의 정원 감축 중 76.7%를 지방대에서 감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위기를 가속화시켰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대학교육연구소, 2021).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 및 방안은 본 장에서 주목하는 대학특성화의 부분 중 지역 대학과 연계한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측면에서는 일면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명박 정부의 대학평가 기준이 정량평가 기준이었다면, 정성평가 강화, 대학 균형발전 관련 항목 등을 수정, 보완하면서 대학들이 지역 특성 및 지역 산업 그리고 지역인재 양성과 연계된 대학특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추진과 같은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대학들이 지역과 연계한 대학특성화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였다(김미란, 2014; 남수경, 2016).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2017~2022)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 역시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15년 간 이어져 온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경쟁력이라는 두 가지 주요 명제 안에서 이루어지다보니,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목표는 대학정원 감축과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및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만의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의 차별화를 위해 정책의 용어, 정책의 방안 및 실행 방법은 변화를 주고자 하였다.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강조했던 대학의 자율성 강조를 다시금 도입하여 대학의 자율혁신을 지원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데 주력하고자 하였다(변기용, 송인영, 2018; 오윤정, 2020). 이는 대학평가의 이름과 평가내용에도 반영되었다. 대학구조개혁평가라는 이름을 대학기본역량진단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하면서 혁신의 주체로서의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평가내용에서는 지역, 권역별 균형을 고려하고 대학 운영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반영한 지표들을 추가함으로써 박근혜 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주요 명제와 목표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평가 항목의 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평가 결과에 따른 대학정원 조정 및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의 조정이라는 정책의 큰 틀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학특성화 측면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의 확장을 통해 지역혁신체계를 만들어내는데 깊은 관심이 있었는데 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의 확장에 포함된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지역대학 활용 방안 정책이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지역과 지역에 있는 대학의 혁신 모델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였고, 이를 통해 지역 인구 유출 축소, 지역의 발전

및 지역인재 양성,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하였다(문정희, 2021).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의 대학이 다양한 협업과 공조 속에 대학혁신 및 지역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많은 모델과 아이디어들이 사업으로 추진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이 사업단위 및 플랫폼 형식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대학혁신과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데는 한계가 분명하였다.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지난 20년간 추진된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주요 내용과 정책의 주요 내용에 따른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대학과의 연계성 및 특성화에 미치는 시사점을 함께 살펴보았다. 지난 20년간 추진되어 온 대학구조개혁은 대학경쟁력 확보라는 일관된 목표가 기반이 되어,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과 대학 교육의 질적 제고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운영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대학특성화 정책이나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대학과 지역사회를 연계하고자 하는 노력들도 지속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부수적인 효과가 아닌, 정책의 시작과 중심에 지역혁신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놓고 추진된 대학 구조개혁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아래 그림 II-4에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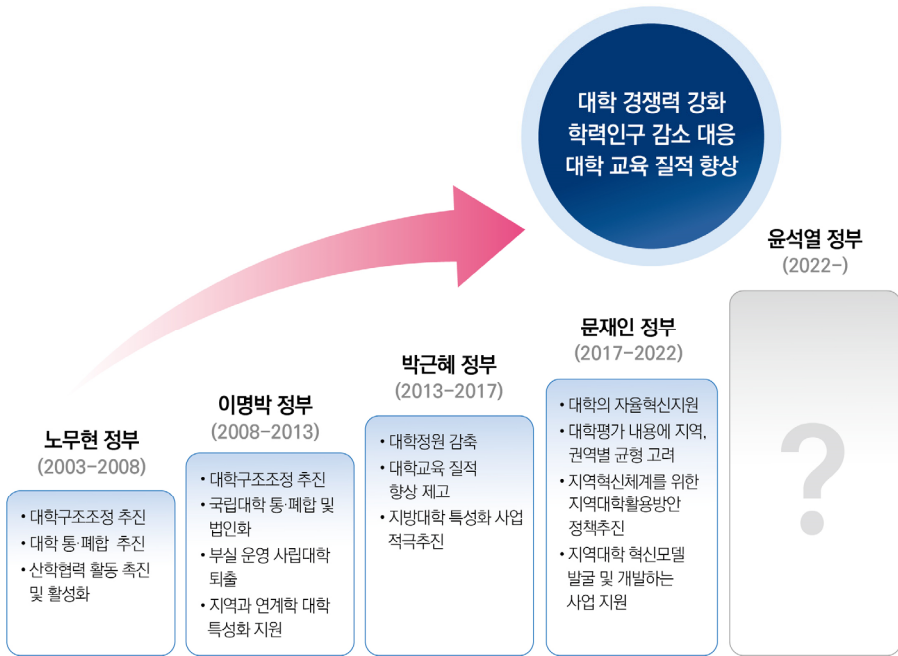


그림 11-4.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역대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 역시 대학경쟁력 확보라는 일관된 목표와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 및 대학 교육의 질적 제고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대학 구조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중심축은 지난 정부와는 차이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들의 지역별 대학의 경쟁력을 집중적으로 높이는 가운데 지역과 대학이 합심해서 인구감소 및 해당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글로벌대학 30’ 정책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정책이 있다.

2) 글로벌대학 30

윤석열 정부가 2023년 도입한 ‘글로벌대학 30’ 정책은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대학 교육과정이 학령인구 감소와 급격한 산업구조에 발맞추어 변화되어야 하는 현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심화되어 수도권으로 지역인재 유출이 일상화되며 비수도

권의 지역 소멸 요인이 되는 현실, 그리고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지원 방식으로는 대학이 지역 상황에 맞게 자율적 혁신을 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바라보는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추진되었다(교육부, 2023). 이러한 문제 인식을 토대로 ‘글로벌대학 30’ 정책은 비수도권 지역 및 인구소멸지역의 산업수요에 맞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역 내 다양한 산업, 지역 내 대학의 탄탄한 파트너십 구축을 과감하게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지역 내 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긍정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진행 중에 있다(염민호, 2023).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목표에 맞춰 2026년까지 30개 내외 대학을 글로벌대학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지정된 학교는 5년간 약 1천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대학의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글로벌대학 30’ 정책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다(교육부, 2023). 글로벌대학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대학의 단독 계획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해당 지역 산업체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산학협력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대학 30’ 정책이 대학과 지역 간 중장기적인 상생협력체계 및 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 주력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적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3년 11월에 1차 글로벌대학 선발에 지원한 94개의 대학 중 10개 대학이 선정된 결과에서도 이러한 정책적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그림 II-5를 통해 잘 확인할 수 있다.

목표

1. 대학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은 국제사회**와 연결
2. 대학의 혁신을 통해 **지역의 혁신과 발전**에 기여
3. 불확실한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미래 인재** 양성
→ 이를 위한 **마중물**로서 **글로벌대학 30**교 내의 육성

·글로벌대학 : 담대한 혁신으로 지역의 산업·사회 연계 특화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

※ 근거 : 지방대육성법 제17조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 및 행·재정 지원

추진 전략

대학외부
① 지원 전략 혁신

① “선택과 집중” 전략

대학 혁신 성공모델 창출 지원을 통한 대학 혁신의 방향 제시

② 범부처·지자체간 장벽없는 지원

혁신에 필요한 규제 특례, 범부처·지자체 재원 집중 지원

③ 수요자 관점의 대학혁신 지원

민간전문가(글로벌대학위원회) 주도 계획 수립부터 선정·평가 지원 추진

④ 스마트한 선정 및 성과관리

대학이 부담없는 선정·관리 방식, 데이터 기반 효율적 성과관리

대학내부
② 대학 구조·운영 혁신

① 산학·지역협력의 허브화

지역과 산업의 수요를 반영한 인재양성·연구·창업 등 추진

② 대학 내·외부의 벽 허물기

학외자의 대학운영 참여 확대
지역사회와 학생의 수요를 반영한 학사운영 및 내부 체제 개편

③ 대학 혁신 추진체계 운영

총장의 혁신 리더십 지원
지속가능한 혁신추진체계 구축

④ 대학 성과의 투명한 공개

대학의 자율 성과관리 시스템을 통한 성과 분석 및 대국민 공개

그림 II-5. 글로벌 30 정책의 주요 내용

* 출처: 교육부. (2023a). 글로벌대학 30 추진방안. p.4를 재구성

‘글로벌대학 30’ 정책에 발맞추어 구체적 대학지원정책도 20년간 이어져 온 방식과는 다르게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대학재정지원에 대한 방식은 중앙정부의 하향식 계획을 바탕으로 한 소수 사업단 중심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사업별로 예산이 분절적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글로벌대학 30’ 정책의 대학재정지원 방식은 상향식 혁신체계를 중심으로 하여 대학 단위의 전략적 지원을 기반으로 운영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학이 자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칸막이형 예산이 아닌 통합적 방향으로 예산 운용 계획을 밝혔다(교육부, 2023). 그리고 이러한 지원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하여, 대학이 과감한 혁신을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들을 철폐할 것임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산업체에도 지역 대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제시하고 있다. 글로벌 선정 대학과 대학이 속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산업체가 함께 지역의 인구유출을 막고 지역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함께 기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지역 내 대학이 동반 성장하는 긍정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글로벌대학 30’ 정책의 목표를 잘 뒷받침하고 있다(채운정, 2023).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대학 30’ 정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시한 대학 구조개혁 정책 중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성과를 직접적으로 목표로 한 첫 번째 정책으로 간주될 수 있다. 아직 시행되고 있는 정책으로서 실행 결과에 대한 다양한 기여점 및 문제점이 평가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역대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에서 다소 소외되었던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키워드를 정책의 중심으로 끌어왔다는 점에서 ‘글로벌대학 30’ 정책은 충분한 의의를 가진다.

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윤석열 정부의 중앙정부 지원 중심에서 지역혁신 중심으로 기조를 변화한 대학 구조개혁 정책은 ‘글로벌대학 30’ 정책과 더불어 지역주도 인재양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인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교육부, 2023). RISE 체계의 구축은 지역대학의 혁신을 통해 양성된 인재들이 해당 지역에서의 취업과 창업을 통해 정주하게 만드는 과정을 통한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시작되었다(교육부, 2023). 이러한 비전

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지역발전을 고려하고 연계하여 지역대학에 선택과 집중을 강화한 투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대학지원에 대한 권한을 확대하면서, 인구 감소 및 미래 사회를 위한 대학 교육의 질적 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대학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구조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염민호, 2023; 채운정, 2023). 다시 말해, 지역과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동반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에는 대학을 육성하는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효과를, 대학에는 지역발전의 핵심 허브로서 해당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고자 하는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RISE체계 구축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들에서 하지 않았던 두 가지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지난 20년간 교육부에서 운영해왔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중앙정부인 교육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도록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산 구조에 대한 대폭적인 변화를 추진하였다.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편성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이견 도출로 인한 RISE체계 구축 실행 속도의 둔화를 방지하고자 기존의 교육부가 운영하던 예산 구조를 변화하는 방식을 통해 RISE체계 구축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했던 RIS(지역혁신), LINC 3.0(산학협력), LiFE(대학평생교육), HiVE(전문직업교육), 지방대학활성화 사업을 통합하고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규모 및 구조의 조정 등을 통해 2025년부터 교육부가 주도했던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2조 원 + α)을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전환할 계획이다(교육부, 2023). 즉, RISE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을 고려하고 연계하여, 지역대학에 선택과 집중을 강화한 투자에 대한 예산으로 2조 원 이상의 규모가 속도감 있게 투입되는 것이다. 둘째, RISE체계가 지향하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혁신을 이루기 위해 각 시·도의 조직체계를 개편하여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대학 지원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지역 RISE 센터를 전담기관으로 지정 및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교육부, 2023). 이를 통해 기존의 교육부에서 한국연구재단으로, 한국연구재단에서 대학으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던 체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RISE 센터로, 지역 RISE센터에서 대학으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지역 주도 지역인재 양성의 효율성을 높이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그림 II-6을 통해 잘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6.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방안

* 출처: 교육부. (2023b).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지역 선정 운영 계획, p.20을 재구성

이러한 RISE 추진계획에 따라 2023년에 7개 시·도지역(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이 RISE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7개 시·도는 RISE체계 구축 추진을 위해 시·도 지역에 있는 대학 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할 대학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RISE센터를 지정하여 대학재정지원사업 전담 기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7개 시·도는 지역혁신 및 발전과 연계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소속 지역대학에 대한 지원 5개년 계획(2025~2029)을 수립하여 교육부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RISE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RISE 기본계획 수립, 법령 개정, RISE 재원의 재정협의 및 사업운영 기준 마련, 현장 소통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을 계획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과 2024년에 걸친 RISE 시범지역 운영 및 RISE체계 구축의 추진 기반을 마련한 후, 2025년부터는 전국의 시·도에 걸쳐 전면적인 RISE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교육부, 2023).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관점으로 봤을 때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는 단연 돋보이는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RISE체계가 구축하고자 하는 ‘지역대학 지원 - 지역인재 양성 - 지역인재의 지역 내 취업 및 창업 - 지역사회 정주 - 지역사회 발전’으로 이어지는 생태계 구축은 중·장기적으로 인구감소에 대비하고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청년 친화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역시 글로벌 30 정책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첫 삽을 뜨고 추진 중에 있는 대학 구조개혁 정책이기 때문에 정책집행으로 인한 실제 지역사회 및 지역대학에 미치는 성과와 한계에 대한 평가는 유보적일 수밖에 없다.

3. 지역인재육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계획 평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본 절에서는 현재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인재와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을 분석하고 그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인재 육성과 청년의 일자리에 대한 중요성은 국정과제에도 많이 반영되어 있다.

특히 2024년에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2025년에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교육부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은 지역인재 육성과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국가정책

의 아이콘과 같다. 이에 본 장은 17개 시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그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고 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정책의 원활한 분석을 위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계획서 평가는 2024년 5월 6일부터 5월 10일까지 17개 시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계획서 평가지표 개발

(1) 평가지표 개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계획서의 평가지표는 정책분석을 위하여 정책 과정을 반영하여 기획, 집행, 성과로 개발되었으며,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로 구분하였다.⁵⁾ 세부평가 영역과 지표는 정책 관련 유관 전문가를 초빙하여 델파이형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개발되었으며, 2024년 4월 4일과 2024년 4월 19일의 2차례에 걸쳐 추진되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계획서의 평가지표가 없어 새롭게 개발하는 작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기존에 추진했던 지역밀착형 고등교육지원정책 평가자료 및 지역별로 실시하고 있는 지역청년일자리 정책 평가자료를 검토 및 분석하여 평가지표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자료 검토 후 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에 맞게 평가결과가 지역의 아웃풋(output)에 과도하게 집중되기보다는, 아웃컴(outcome) 위주로 성과부분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2) 평가지표의 구성 및 체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계획서의 평가지표는(100점 만점) 분야별로 ‘정책형성’(37점), ‘정책집행’(23점), ‘정책성과’(40점)로 구분한 후 세부평가 영역과 지표를 개발하였다. 평가지표의 내용은 다음의 표 II-2과 같다.

5) 본 평가체계와 지표는 정책의 달성도 이외의 효과성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지자체 청소년정책평가(이창호, 최용환, 도수관, 2016), 청소년정책분석평가(최용환, 김강배, 장선희, 조예진, 2018), 사회정책 중 도박관련 지역센터 운영평가(최용환, 곽창규, 이성규, 2020a), 서울시 청년정책거버넌스 활성화 평가(최용환, 이동성, 장해윤, 임채홍, 2023) 등의 공통적 요소를 기반으로 하여 그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표 II-2. 2023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자원체계(RISE) 사업 성과분석 평가지표

분야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정책 형성 (37)	1. 계획수립의 적절성 (24)	1-1. 정책이해관계로서 RISE 사업 정책의 정당성	8
		1-2. 지역 의견수렴의 적극성 및 지역특성에 따른 차별적 계획수립	8
		1-3.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8
	2. 정책기반 확보 수준 (13)	2-1. 정책기획, 의견수렴의 충실성 및 협업에 대한 적극성	8
		2-2. 예산 지원 수준의 적절성	5
정책 집행 (23)	3. 추진과정의 효율성 (13)	3-1. 추진과정의 충실성	5
		3-2.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성	8
	4. 정책소통 및 관리의 노력 (10)	4-1. 정책홍보·소통의 충실성	5
		4-2. 사업관리의 적절성	5
정책 성과 (40)	5. 정책성과 및 효과성 예측 (40)	5-1.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	20
		5-2. 정책 효과성 예측	20
총점			100

항목	1. 계획수립의 적절성(24점)
----	-------------------

지표	1-1. 정책이해관계로서 RISE 사업 정책의 정당성(8점)
A. 내용	◦ 시급성에 따른 사업추진이 아닌 공공정책으로서 RISE 사업추진의 정책적 타당성과 합리성 - RISE 사업이 시급함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라, 정책수혜대상의 합리적 규모, 사업의 비중복성, 사업의 제안배경, 성과목표 등의 측면에서 다른 지역청년인재양성 및 대학 지원 사업과 비교하여 타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객관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판단
B. 기준	• (우수: 8점~6점) 시급성에 따른 사업추진이 아니며 타 정책 사례의 일반적 수용이 아닌 사업의 제안 배경, 사업의 독창성, 제안 근거에서 정책의 정당성을 충실히 확보 • (보통: 5점~3점) 시급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지만 차년도 사업으로서 유지될 수 있는 근거가 일부 존재 • (미흡: 2점~0점) 정책의 정당성보다 시급성에 따른 사업의 성격과 타 사업과 중복적 성격이 큼. 그리고 사업의 추진 논리가 부재

지표	1-2. 지역 의견수렴의 적극성 및 지역특성에 따른 차별적 계획수립(8점)
A. 내용	◦ RISE 센터 구성의 다양성 - 인적특성과 지역특성에 따라 RISE 센터의 특성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 ◦ 대학, 기업, 청년 의견 수렴의 충실성 - 해당 지역의 RISE 센터 운영실적이 분기별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 - 해당 지역의 RISE 제안 정책이 지역별 청년인재양성 정책요구를 대표하고 있는지 여부 ◦ 지역특수성의 고려 - 타 지역 유사 정책의 벤치마킹을 넘어 청년인구현황, 지역의 대학 및 기업 문화 등 지역 환경의 특수성을 조사·분석을 근거로 해당 지역만이 RISE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하였는지에 대한 여부 - 전담인력 보유 등 타 지자체 대비 행정역량 차이의 반영 ◦ 맞춤형 정책의 기획·추진 여부 - 타 지역의 정책과 차별화되는 창의적 사업인지 판단
B. 기준	• (우수: 8점~6점) 해당 지역별 대학, 기업, 청년에 대한 의견수렴이 매우 우수하며, 해당 지역만의 지역특수성을 통계적으로 반영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사업인 경우 • (보통: 5점~3점) 해당 지역별 대학, 기업, 청년에 대한 의견수렴이 보통이며, 해당 자치구의 지역특수성이 타 지역의 벤치마킹이나 통상적 수준으로 분석되어 반영된 경우 • (미흡: 2점~0점) 해당 지역별 대학, 기업, 청년에 대한 의견수렴이 미흡하며, 지역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경우

지표	1-3.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8점)
A. 내용	•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 ㉓ 성과지표의 관련성 및 사업실적에 따른 정책효과성 측정여부 - 성과지표가 사업내용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관련이 있는지 판단 - 성과지표가 측정 근거자료의 신뢰성을 감안하여 설정되었는지 판단 - 사업대상의 만족도 등의 정성적 지표를 포함하여 다양한 지표를 병용 다각적인 관점에서 성과측정을 시도하였는지 여부 - 사업수행실적을 넘어 해당 자치구 청년들의 정책효과성을 측정하고 있는 평가지표의 구성 여부 및 적절성 ㉔ 목표치 설정의 적극성 수준 - (정량적 측정이 가능하고 과거 유사사업 추진실적이 있는 경우) 과거 2년 간 실적치 추세를 보았을 때 성취 가능한 최대치의 목표인지 판단 - (정량적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신규 사업인 경우) 국내외 유사사업 통계, 과제의 난이도 등을 고려했을 때 도전적인 목표치인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 목표치 설정의 적극성 판단기준 예시 ① 평가대상 과제와 유사한 목적으로 추진해 온 기존정책이 있는 경우 a. 최근 수년간 실적치가 존재 : 상승 국면일 경우 추세치 수준 이상의 설정, 하향 국면일 경우 평균값 이상으로 설정 b. 실적치가 2개년만 있는 경우 : 상승 국면일 경우 상승추세치 반영, 하향 국면일 경우 둘 중 높은 실적치 수준 ② 신규 사업 등 최근 연도의 실적치가 전혀 없는 경우 : 국내외 유사사업 통계자료, 업무수행 및 목표치 달성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성적, 정량적으로 판단 ③ 성과지표가 법률 제·개정 등인 경우 : 이해관계자가 다수이거나 비용부담자가 명백하여 반대가 심한 사안 등 법률 제·개정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개정 포함) ④ RISE 사업 성과와 관련한 국가통계 및 평가지수를 활용하여 성과지표를 설정한 경우 : 기준이 되는 지표의 목표치 설정의 근거와 기준의 적절성 및 해당 국가통계와 평가지수 활용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판단
B. 기준	• 근거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평가위원이 종합적으로 판단 ㉓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사업성과에 따른 정책효과성 측정 • (우수) 정책내용과 성과지표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며, 투입(input), 산출(output), 정책효과(outcome) 측정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성과를 측정하고 있음 • (보통) 정책내용과 성과지표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나, 투입(input)과 산출(output), 정책효과(outcome) 측정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고 있지 않음 • (미흡) 성과지표가 정책내용과 관련이 없음 ㉔ 목표치 설정의 적극성 수준 • (우수) 성과목표의 설정이 타당하며 최근 추세 이상의 목표치를 설정 • (보통) 최근 추세 수준으로 성과목표치를 설정함 • (미흡) 성과목표치 설정 수준이 낮음 ⇒ 단, 정책내용의 난이도, 행정능력 등 지자체 수준, 만족도 등과 같이 한계치가 있는 지표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본 지표의 평정은 ㉓와 ㉔의 종합적 수준을 고려하여 (우수: 8점~6점), (보통: 5점~3점), (미흡(2점~0점))으로 평정

항목	2. 정책기반 확보수준(13점)
----	-------------------

지표	2-1. 정책기획, 의견수렴의 충실성 및 협업에 대한 적극성(8점)
A. 내용	◦ RISE 사업 정책기획을 위한 사전조사 실시 - 사업추진을 위한 해당 지역별 대학, 기업, 청년에 대한 기초자료조사, 통계청 등 2차 자료 조사분석, 가용재원과 인력현황 등 지자체 내·외부의 정책여건 또는 장·단점 분석 실시 여부 - 사전분석결과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사업에 반영 여부 ◦ 정책기획 내용의 적합성과 적절성 - 해당 지역 청년인재양성 관련 대학지원 정책의 문제의식과 핵심내용에 대한 정확한 인지 및 계획상 반영 정도(적합성) - 계획을 통해 추구하는 목표 및 결과 수준의 적절성 ◦ 참여 주체의 상호 간 협업에 대한 적극성 - 지자체의 지역 대학 및 지역 민간기업과의 협업에 대한 적극성 - 지역 대학의 지자체 및 지역 민간기업과의 협업에 대한 적극성 - 지역 민간기업의 지자체 및 지역 대학과의 협업에 대한 적극성
B. 기준	• (우수: 8점~6점) 해당 해당 지역별 대학, 기업, 청년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는 대표성 있는 의견발굴 노력,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걸쳐 정책여건에 대한 사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함. 정책기획 내용의 적합성과 적절성이 높음. 참여 주체의 상호 간 협업에 대한 적극성 수준이 높음 • (보통: 5점~3점) 정책여건에 대한 사전분석을 실시하였으나 사업계획 수립 해당 지역별 대학, 기업, 청년에 대한 의견반영이 보통임. 기존의 타 사업 등에서 조사·분석된 정보를 활용하여 의견반영 자료로 사용함. 정책기획 내용의 적합성과 적절성 수준이 보통임. 참여 주체의 상호 간 협업에 대한 적극성 수준이 보통임 • (미흡: 2점~0점) 정책여건에 대한 사전분석을 실시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 정책 기획 내용의 적합성과 적절성이 낮음. 참여 주체의 상호 간 협업에 대한 적극성 수준이 낮음

지표	2-2. 예산 지원 수준의 적절성(5점)
A. 내용	◦ 재정확보를 위한 지역 및 대학의 노력과 예상 예산분에 대하여 판단 ◦ RISE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 및 대학의 자부담 예산의 확보 여부 - 인건비, 사업비 등을 포함한 충분한 재정지원 확보를 위한 우수노력의 사례 - 자체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지역 및 대학 정책우선순위에 RISE사업이 위치하고 있는지 평가
B. 기준	• (우수: 5점~4점) 자체 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통해 자부담 예산이 편성됨 • (보통: 3점~2점) 자부담 예산 편성의 규모는 다소 부족하더라도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정책설명 등, 예산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확인 • (미흡: 1점~0점) 자부담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함 ◦ 지자체의 행정 및 재정능력 등에 대한 지자체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이 종합적으로 판단

항목	3. 추진과정의 효율성(13점)
----	-------------------

지표	3-1. 추진과정의 충실성(5점)
A. 내용	• 과제별 추진계획상 일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 월별, 분기별 등과 같이 사업특성에 맞게 세부 일정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당초 사업추진 일정에 맞게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 추진계획을 지연시킨 사례와 지연 사유가 타당하지 판단 • 사업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 사업지침의 준수여부 - 사업이 관련한 법령과 조례, 사업지침 등에서 정한 내용과 절차 등에 적합하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B. 기준	• (우수: 5점~4점) 추진과정과 관련 법령, 조례, 사업지침 등을 충실히 준수 • (보통: 3점~2점) 추진과정과 법령, 조례, 사업지침 등에 핵심적 내용 등을 대부분 준수 • (미흡: 1점~0점) 추진과정과 법령, 조례, 사업지침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였으며 그 사유가 타당하지 못함

지표	3-2.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성(8점)
A. 내용	• RISE 사업 정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 - 현장점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 담당자 변경과 같은 사업 환경과 상황 변화를 분석하고, 자원투입 등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사업여건 및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 • 단순한 사업의 완수를 넘어 RISE 사업의 방향을 이해하고 이를 위하여 적절히 대응하였는지 여부 - 정부가 추진하는 RISE 사업을 이해하고 그 추진방향의 변화에 대응노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 • RISE 사업방향에 대한 지역 및 대학별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정부가 지향하는 RISE 사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판단
B. 기준	• (우수: 8점~6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건·상황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 • (보통: 5점~3점) 정기적인 모니터링 과정은 없으나, 사업추진 상 발생한 문제 및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함 • (미흡: 2점~0점) 정기적인 모니터링 과정은 없으며, 사업추진 상 발생한 문제 및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함

항목	4. 정책소통 및 관리의 노력(10점)
지표	4-1. 정책홍보·소통의 충실성(5점)
A. 내용	• RISE 사업홍보 및 소통의 효과성 제고 - 정책수행의 전 과정에서 홍보활동과 의견수렴을 충실하게 진행하고 적절한 피드백 조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 효과적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주요 정책내용을 적기에 홍보하였는지에 대한 여부 - 비판적·부정적 보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보완조치를 실시하고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 해당 지역, 대학, 기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실시 여부 - 사업 수혜자 및 기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등과 같은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 자체평가 결과의 환류 여부 • 해당 지역, 대학, 기업에 대한 RISE 사업의 인지도 확대를 위한 노력 - RISE 사업에 대하여 해당 지역, 대학,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인지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여부
B. 기준	• (우수: 5점~4점) 정책 내용의 홍보와 의견수렴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피드백 실적이 우수하며 RISE 사업에 대한 지역, 대학, 기업들의 인식비율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우수 • (보통: 3점~2점) 정책 내용의 홍보와 의견수렴 활동을 진행하였으나, 피드백 실적이 미흡함. 또는 RISE 사업에 대한 지역, 대학, 기업들의 인식비율 확대를 위한 노력이 보통 • (미흡: 1점~0점) 정책 내용에 대한 홍보가 미흡함
지표	4-2. 사업관리의 적절성 (5점)
A. 내용	• 사업의 성과목표와 예산집행내용과의 연관성 및 효율성 - 예산의 내역 및 현재까지의 집행 내역이 사업 성과 또는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과 일정한 논리적 연계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 - 예산 내역상 혹은 집행 과정에서 비용절감을 통한 재정지출의 효율성 확보 노력
B. 기준	• 근거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평가위원이 종합적으로 정성판단 • (우수: 5점~4점): 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예산이 편성 및 집행되었으며, 집행과정에서 예산절감 노력이 우수 • (보통: 3점~2점): 사업목적과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연계성이 보통 수준이며 예산절감 노력이 보통 • (미흡: 1점~0점): 사업목적 달성과는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연계성이 다소 떨어지며, 집행에 있어서 낭비적 요소가 있는 경우

항목	5. 정책성과 및 효과성 예측(40점)
지표	5-1.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20점)
A. 내용	◦ 해당 과제의 추진계획 상 정책목표를 실제 달성한 정도(추진 중인 경우 계획서상의 성과 달성의 적절성 정도) - 객관적인 통계·근거자료를 토대로 목표치 대비 실제 달성도를 정량적으로 판단하되,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적절성 등 선행조건, 달성된 목표의 질적 충실성, 목표달성과 직결된 외생적 변수 등에 대한 정성적 판단을 병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정량적 판단) 당초 설정한 목표치 대비 실제 달성 비율(추진 중인 경우 계획서상의 성과 달성의 비율) ※ 성과지표가 다수인 경우 성과지표 각각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목표달성 비율을 산정하며, 100% 이상 달성된 경우에도 그 지표는 100%만 달성한 것으로 계산 ※ 성과지표가 조례 제·개정 등 비계량적인 경우 조례 제·개정의 난이도, 입법 진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정성적 판단) 계획상 성과지표 및 목표치 자체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음 의도한 정책목표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판단
B. 기준	• (우수: 20점~14점) 목표달성도가 100% 이상이고 질적으로도 매우 충실 • (보통: 13점~7점) 목표달성도가 80% 이상, 100% 미만이고, 질적으로도 충실 • (미흡: 6점~0점) 목표달성도가 80% 미만이고, 질적으로도 부실
지표	5-2. 정책 효과성 예측(20점)
A. 내용	◦ 예상한 정책효과의 구현 정도 - 정책형성 단계에서 원래 의도했던 정책목표를 실현시키고 있는지 판단 - 정책기획과 '정책목표에 따른 정책결과(outcome)' 가능성 간의 인과성 파악 - 정책 수혜자 중심의 성과 가능성 파악 - 정책목표의 목표달성을 이외의 자치구 청년들에게 미친 긍정적 파급효과의 가능성이 무엇인지 판단 ※ 실제 제출 시까지 정책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라도, 각 지역에서 향후 일정한 정책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타당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고려하여 평가 - 정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지도 혹은 만족도 등의 정책체감 정도 - 정책기획시 의도한 정책목표를 달성하여 정책대상자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정도 ◦ 지자체, 대학, 기업의 협력을 통한 실제 지역인재 창출 및 고용의 효과 정도 - 지자체 지원 및 정책의 결과로 기업이 지역인재를 실제 고용하는 효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평가 - RISE 사업을 통한 지자체, 대학, 기업의 협력을 통하여 기업이 실제 지역인재 고용을 진행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평가
B. 기준	◦ 근거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평가위원이 종합적으로 판단 • (우수: 20점~14점) 본 사업의 지역인재육성을 통한 지역기업의 청년고용창출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며, 사업이행을 넘어 본 사업을 통한 기업의 고용확대를 위한 성과지표가 적극적으로 반영됨 • (보통: 13점~7점) 본 사업의 지역인재육성을 통한 지역기업의 청년고용창출이 보통으로 기대되며, 본 사업을 통한 기업의 고용확대보다 사업의 이행성과에 보다 충실함 • (미흡: 6점~0점) 본 사업의 지역인재육성을 통한 지역기업의 청년고용창출이 낮을 것으로 기대되며, 본 사업을 통한 기업의 고용확대를 측정하기 어려움

정책형성 분야는 총 37점을 배분하였고 정책형성의 평가항목은 계획수립의 적절성(24점)과 정책기반 확보 수준(13점)으로 나누어 지표를 구성하였다. 계획수립의 적절성 항목의 세부 평가 항목은 세 가지 세부 평가항목으로 나누었는데 i) 정책이해관계로서 RISE 사업 정책의 정당성(8점), ii) 지역 의견수렴의 적극성 및 지역특성에 따른 차별적 계획수립(8점), iii)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8점)으로 구성하였다. 정책기반 확보 수준의 세부 평가항목은 두 가지 세부 평가항목으로 나누었는데 i) 정책기획, 의견수렴의 충실성 및 협업에 대한 적극성(8점), ii) 예산 지원 수준의 적절성(5점)으로 구성하였다.

정책집행 분야는 총 23점을 배분하였고 정책집행의 평가항목은 추진과정의 효율성(13점)과 정책소통 및 관리의 노력(10점)으로 나누어 지표를 구성하였다. 추진과정의 효율성 항목의 세부 평가항목은 두 가지 세부 평가항목으로 나누었는데 i) 추진과정의 충실성(5점), ii)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성(8점)으로 구성하였다. 정책소통 및 관리의 노력 항목의 세부 평가항목은 두 가지 세부 평가항목으로 나누었는데 i) 정책홍보·소통의 충실성(5점), ii) 사업관리의 적절성(5점)으로 구성하였다.

정책성과 분야는 총 40점을 배분하였고 정책성과 및 효과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세부 평가항목은 두 가지 세부 평가항목으로 나누었는데 i)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20점), ii) 정책 효과성 예측(20점)으로 구성하였다.

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계획서 평가결과의 특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계획서 평가결과는 2024년 5월 6일부터 5월 10일까지 17개 시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통해 도출되었다. 평가위원은 RISE 사업계획서의 주요 영역인 행정, 정책, 법적인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가 가능한 역량과 경력을 갖춘 평가위원 3명을 선정하였다. 평가위원 배경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II-3과 같다.

표 II-3. 평가위원 배경 특성

조사대상자	성별	직업	전문영역	관련업무경력
평가위원 A	남	대학교수	행정학	10년
평가위원 B	남	연구원	정책학	13년
평가위원 C	남	연구원	법학	18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평가지표에 맞춰 ‘정책형성’(37점), ‘정책집행’(23점), ‘정책성과’(40점)로 분야별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17개 시도별 평가점수 총점 및 분야별 점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II-4과 같다.

표 II-4. 2023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성과분석 평가결과

지 역	총 점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			
		영 역 별 점 수	1. 계획수립의 적절성			2. 정책기반 확보 수준		영 역 별 점 수	3. 추진과정의 효율성		4. 정책소통 및 관리의 노력		영 역 별 점 수	5. 정책성과 및 효과성 예측	
			1-1	1-2	1-3	2-1	2-2		3-1	3-2	4-1	4-2		5-1	5-2
경북	64.0	27.0	6.7	5.0	3.7	6.7	5.0	16.3	3.7	4.7	3.3	4.7	20.7	14.7	6.0
서울	62.7	24.0	7.3	4.7	2.7	5.7	3.7	17.0	4.3	4.7	3.3	4.7	21.7	15.0	6.7
경기	62.3	24.7	6.3	4.7	2.3	6.7	4.7	16.3	3.7	4.7	3.3	4.7	21.3	15.3	6.0
광주	61.3	25.0	6.3	5.3	2.0	6.3	5.0	16.0	3.3	4.7	3.3	4.7	20.3	13.3	7.0
인천	61.3	23.7	7.0	4.0	2.3	6.7	3.7	15.3	3.0	4.3	3.7	4.3	22.3	15.0	7.3
제주	61.0	24.3	6.7	4.3	2.0	7.0	4.3	16.7	4.0	4.3	3.7	4.7	20.0	14.3	5.7
충남	61.0	24.3	6.7	4.7	3.7	5.7	3.7	15.7	3.0	4.3	3.3	5.0	21.0	14.0	7.0
전북	60.3	23.3	6.3	4.3	2.7	5.7	4.3	15.7	3.3	4.7	3.3	4.3	21.3	14.3	7.0
전남	60.3	24.7	6.7	4.7	2.3	6.7	4.3	16.0	3.3	4.7	3.3	4.7	19.7	14.3	5.3
경남	60.0	24.7	6.3	5.0	2.3	6.7	4.3	16.3	3.7	4.7	3.3	4.7	19.0	13.0	6.0
대전	60.0	23.3	6.0	4.3	2.7	6.7	3.7	15.7	3.3	4.0	3.3	5.0	21.0	14.0	7.0
강원	59.3	23.0	6.3	4.3	2.3	5.7	4.3	16.0	3.3	4.3	3.7	4.7	20.3	15.0	5.3
대구	59.3	23.0	5.3	4.0	2.3	6.7	4.7	16.0	3.7	4.3	3.3	4.7	20.3	14.0	6.3
부산	59.3	23.3	6.0	4.7	2.3	6.3	4.0	16.0	4.3	4.7	3.0	4.0	20.0	14.0	6.0
세종	58.3	23.3	6.0	4.3	2.3	6.7	4.0	15.3	3.7	4.7	2.3	4.7	19.7	14.3	5.3
울산	58.0	23.3	6.3	4.7	2.3	5.7	4.3	15.0	3.3	3.7	3.3	4.7	19.7	14.3	5.3
충북	57.3	21.3	6.3	3.7	2.3	5.7	3.3	15.0	3.3	4.3	2.7	4.7	21.0	14.3	6.7
전체 평균	60.4	23.9	6.4	4.5	2.5	6.3	4.2	15.9	3.5	4.5	3.3	4.6	20.5	14.3	6.2

17개 시도의 평균점수는 60.4점이었으며, 가장 점수가 높은 지역 경북이 64점, 가장 점수가 낮은 지역 충북이 57.3점으로 6.7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분야별로는 정책형성 분야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지역 경북이 27점, 가장 낮은 지역 충북이 21.3으로 5.7점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정책집행 분야에서는 가장 점수가 높은 지역 서울이 17점, 가장 낮은 지역 충북과 울산이 15점으로 2점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책성과 분야에서는 가장 점수가 높은 지역 인천이 22.3점, 가장 낮은 지역 경남이 19점으로 3.3점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점수에 큰 편차를 보인 분야의 순서는 정책형성, 정책성과, 정책집행 분야의 순으로 나타났다. 총점 배분의 순위가 정책성과(40점), 정책형성(37점), 정책집행(24점)의 순서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배분된 점수의 편차와 상관없이 분야에 따라 지역별 점수 편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표를 기반으로 17개 시도별 총점 및 분야별 점수를 높은 지역부터 정리하면 그림 II-7부터 1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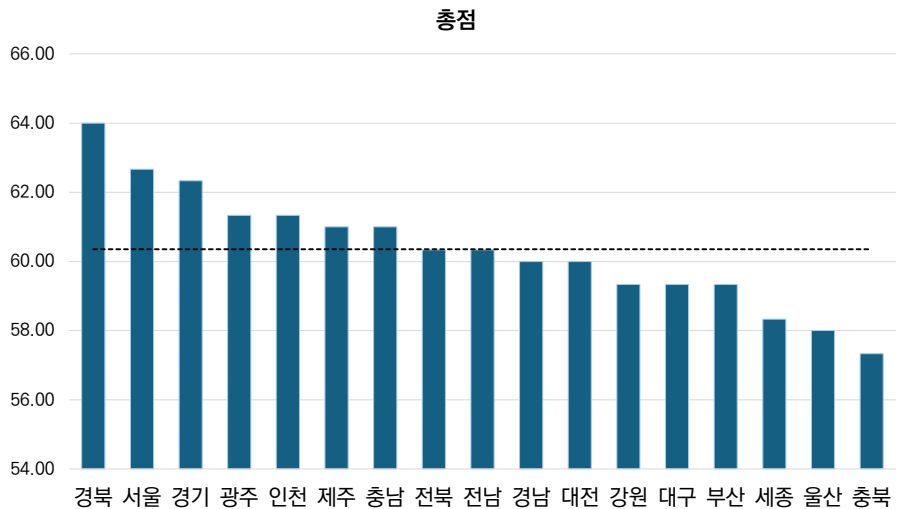


그림 II-7. 2023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성과분석 평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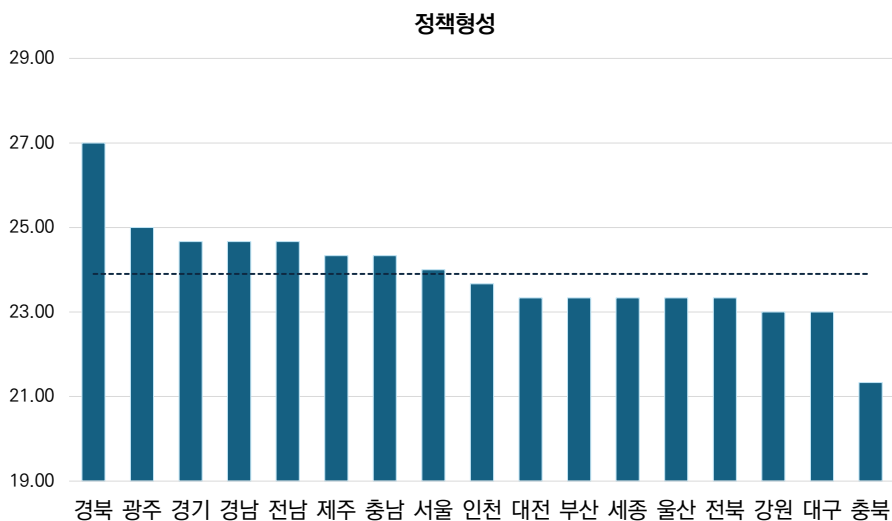


그림 II-8. 2023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성과분석 평가결과(정책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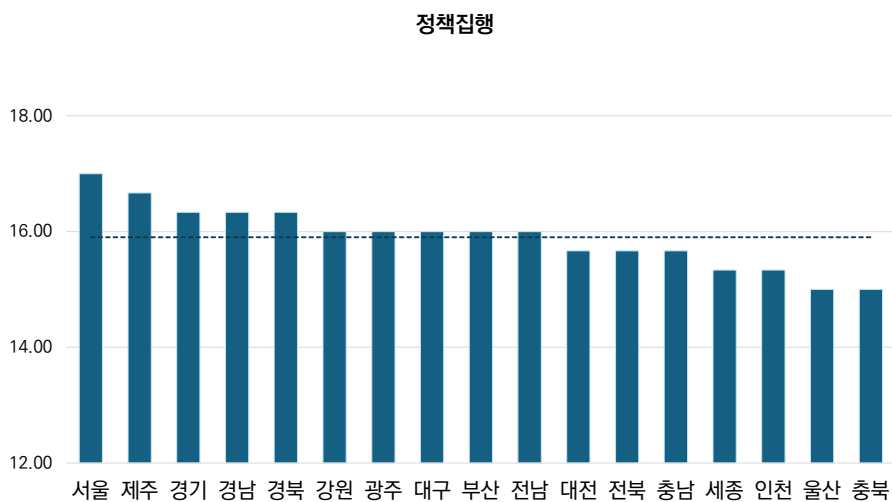


그림 II-9. 2023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성과분석 평가결과(정책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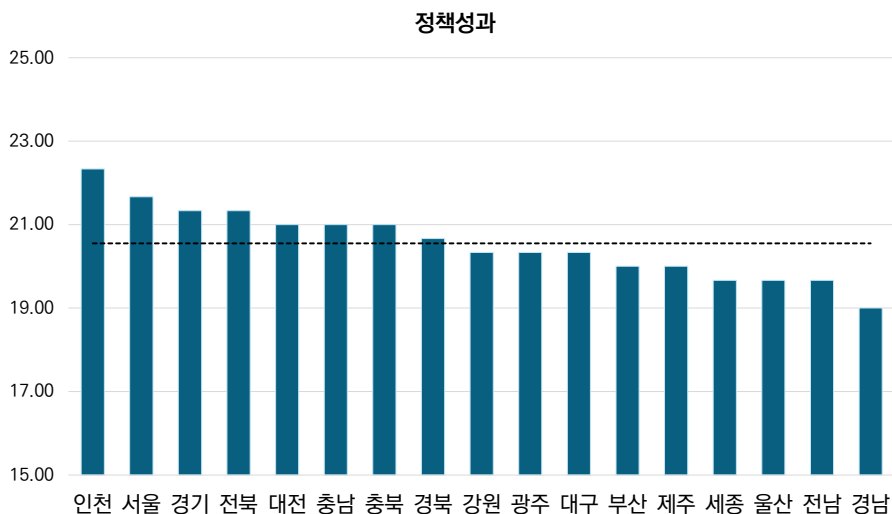


그림 II-10. 2023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성과분석 평가결과(정책성과)

총점과 분야별 점수를 보면 세 가지 유의미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는 대체로 수도권 지역인 서울, 경기, 인천의 점수가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수도권 지역의 점수의 평균이 비수도권 지역의 점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점은 비수도권 지역인 경북 지역의 점수가 다른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이 주목된다. 마지막으로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7개 시도(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와 비시범지역의 평가점수에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다.

3) 17개 시도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계획서 분석 결과

(1) 서울

서울 지역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점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II-5와 같다.

표 II-5. 2023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성과분석 평가결과(서울)

분야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점수	전체 평균
정책 형성 (37)	1. 계획수립의 적절성 (24)	1-1. 정책이해관계로서 RISE 사업 정책의 정당성	8	7.3	6.4
		1-2. 지역 의견수렴의 적극성 및 지역특성에 따른 차별적 계획수립	8	4.7	4.5
		1-3.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8	2.7	2.5
	2. 정책기반 확보 수준 (13)	2-1. 정책기획, 의견수렴의 충실성 및 협업에 대한 적극성	8	5.7	6.3
		2-2. 예산 지원 수준의 적절성	5	3.7	4.2
정책 집행 (23)	3. 추진과정의 효율성 (13)	3-1. 추진과정의 충실성	5	4.3	3.5
		3-2.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성	8	4.7	4.5
	4. 정책소통 및 관리의 노력 (10)	4-1. 정책홍보·소통의 충실성	5	3.3	3.3
		4-2. 사업관리의 적절성	5	4.7	4.6
정책 성과 (40)	5. 정책성과 및 효과성 예측 (40)	5-1.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	20	15.0	14.3
		5-2. 정책 효과성 예측	20	6.7	6.2
총점			100	62.7	60.4

서울 지역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계획서의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로 분류한 분야별 평가내용을 기반으로 한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서울의 지역적 특성과 풍성한 자원을 고려하여 국내 중심이 아닌 글로벌 차원의 목표 수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달성도 평가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서울 지역의 대표성을 감안하였을때 다른 16개 시도와의 지역별 차별화를 넘어 범국가적 차별화를 낼 수 있는 혁신적 성과 도출이 가능하도록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의 취지에 보다 부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직접적인 성과와 더불어 긴밀히 연계된 정책효과가 발생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2) 부산

부산 지역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점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II-6와 같다.

표 II-6. 2023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성과분석 평가결과(부산)

분야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점수	전체 평균
정책 형성 (37)	1. 계획수립의 적절성 (24)	1-1. 정책이해관계로서 RISE 사업 정책의 정당성	8	6.0	6.4
		1-2. 지역 의견수렴의 적극성 및 지역특성에 따른 차별적 계획수립	8	4.7	4.5
		1-3.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8	2.3	2.5
	2. 정책기반 확보 수준 (13)	2-1. 정책기획, 의견수렴의 충실성 및 협업에 대한 적극성	8	6.3	6.3
		2-2. 예산 지원 수준의 적절성	5	4.0	4.2
정책 집행 (23)	3. 추진과정의 효율성 (13)	3-1. 추진과정의 충실성	5	4.3	3.5
		3-2.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성	8	4.7	4.5
	4. 정책소통 및 관리의 노력 (10)	4-1. 정책홍보·소통의 충실성	5	3.0	3.3
		4-2. 사업관리의 적절성	5	4.0	4.6
정책 성과 (40)	5. 정책성과 및 효과성 예측 (40)	5-1.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	20	14.0	14.3
		5-2. 정책 효과성 예측	20	6.0	6.2
총점			100	59.3	60.4

부산 지역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계획서의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 성과로 분류한 분야별 평가내용을 기반으로 한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부산 지역의 유관기관 간 협업에 기초하여 부산 지역의 지역적 특성이 더 부각될 수 있는 실천적 사업 목표 수립과 수단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부산 지역 고유의 특성 및 차별성을 위한 지자체, 대학, 기업의 실질적 협의체 구성 노력과 활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산 지역의 규모와 지역 특성을 감안한 산업 역량 등에 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부산 지역은 물론이고 인접 지역의 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도출할 수 있는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3) 인천

인천 지역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점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II-7과 같다.

표 II-7. 2023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성과분석 평가결과(인천)

분야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점수	전체 평균
정책 형성 (37)	1. 계획수립의 적절성 (24)	1-1. 정책이해관계로서 RISE 사업 정책의 정당성	8	7.0	6.4
		1-2. 지역 의견수렴의 적극성 및 지역특성에 따른 차별적 계획수립	8	4.0	4.5
		1-3.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8	2.3	2.5
	2. 정책기반 확보 수준 (13)	2-1. 정책기획, 의견수렴의 충실성 및 협업에 대한 적극성	8	6.7	6.3
		2-2. 예산 지원 수준의 적절성	5	3.7	4.2
정책 집행 (23)	3. 추진과정의 효율성 (13)	3-1. 추진과정의 충실성	5	3.0	3.5
		3-2.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성	8	4.3	4.5
	4. 정책소통 및 관리의 노력 (10)	4-1. 정책홍보·소통의 충실성	5	3.7	3.3
		4-2. 사업관리의 적절성	5	4.3	4.6
정책 성과 (40)	5. 정책성과 및 효과성 예측 (40)	5-1.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	20	15.0	14.3
		5-2. 정책 효과성 예측	20	7.3	6.2
총점			100	61.3	60.4

인천 지역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계획서의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로 분류한 분야별 평가내용을 기반으로 한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인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원 활용과 여건 분석 등을 통한 사업의

정당성은 높지만, 수도권이고 규모가 큰 인천 지역을 감안했을 때 인천 지역에만 한정되지 않은 글로벌 차원의 기대 및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계획 및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실질적 기대효과와 파급효과 등 성과에 대해 양적 측면만이 아닌 질적 측면 또한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정성적 성과 도출에 초점을 둔 성과 달성 방안 마련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4) 대구

대구 지역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점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II-8과 같다.

표 II-8. 2023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성과분석 평가결과(대구)

분야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점수	전체 평균
정책 형성 (37)	1. 계획수립의 적절성 (24)	1-1. 정책이해관계로서 RISE 사업 정책의 정당성	8	5.3	6.4
		1-2. 지역 의견수렴의 적극성 및 지역특성에 따른 차별적 계획수립	8	4.0	4.5
		1-3.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8	2.3	2.5
	2. 정책기반 확보 수준 (13)	2-1. 정책기획, 의견수렴의 충실성 및 협업에 대한 적극성	8	6.7	6.3
		2-2. 예산 지원 수준의 적절성	5	4.7	4.2
정책 집행 (23)	3. 추진과정의 효율성 (13)	3-1. 추진과정의 충실성	5	3.7	3.5
		3-2.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성	8	4.3	4.5
	4. 정책소통 및 관리의 노력 (10)	4-1. 정책홍보·소통의 충실성	5	3.3	3.3
		4-2. 사업관리의 적절성	5	4.7	4.6
정책 성과 (40)	5. 정책성과 및 효과성 예측 (40)	5-1.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	20	14.0	14.3
		5-2. 정책 효과성 예측	20	6.3	6.2
총점			100	59.3	60.4

대구 지역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계획서의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로 분류한 분야별 평가내용을 기반으로 한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대구 지역의 여건 및 산업적 특성에 기초한 결과와 사업계획이 서로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구체적인 성과 달성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사업계획서의 투입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결과와 관련된 성과목표 설정과 성과지표 간 인과적 연계성을 더욱 높이고 그에 따른 파급효과 도출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업 성과의 정성적·질적 측면을 고려한 성과와 지표 구성이 필요하고, 그에 기초한 결과 중심의 기대효과가 도출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5) 대전

대전 지역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점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II-9과 같다.

표 II-9. 2023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성과분석 평가결과(대전)

분야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점수	전체 평균
정책 형성 (37)	1. 계획수립의 적절성 (24)	1-1. 정책이해관계로서 RISE 사업 정책의 정당성	8	6.0	6.4
		1-2. 지역 의견수렴의 적극성 및 지역특성에 따른 차별적 계획수립	8	4.3	4.5
		1-3.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8	2.7	2.5
	2. 정책기반 확보 수준 (13)	2-1. 정책기획, 의견수렴의 충실성 및 협업에 대한 적극성	8	6.7	6.3
		2-2. 예산 지원 수준의 적절성	5	3.7	4.2
정책 집행 (23)	3. 추진과정의 효율성 (13)	3-1. 추진과정의 충실성	5	3.3	3.5
		3-2.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성	8	4.0	4.5
	4. 정책소통 및 관리의 노력 (10)	4-1. 정책홍보·소통의 충실성	5	3.3	3.3
		4-2. 사업관리의 적절성	5	5.0	4.6
정책 성과 (40)	5. 정책성과 및 효과성 예측 (40)	5-1.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	20	14.0	14.3
		5-2. 정책 효과성 예측	20	7.0	6.2
총점			100	60.0	60.4

대전 지역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계획서의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으로 분류한 분야별 평가내용을 기반으로 한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성과목표와 평가지표 간의 인과적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그에 대한 설정 근거의 구체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사업의 취지와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결과(outcome) 및 효과를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구성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성과로부터 비롯되는 파급효과를 낳는 결과 중심의 성과목표 설정과 성과지표의 정성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6) 광주

광주 지역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점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II-10와 같다.

표 II-10. 2023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성과분석 평가결과(광주)

분야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점수	전체 평균
정책 형성 (37)	1. 계획수립의 적절성 (24)	1-1. 정책이해관계로서 RISE 사업 정책의 정당성	8	6.3	6.4
		1-2. 지역 의견수렴의 적극성 및 지역특성에 따른 차별적 계획수립	8	5.3	4.5
		1-3.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8	2.0	2.5
	2. 정책기반 확보 수준 (13)	2-1. 정책기획, 의견수렴의 충실성 및 협업에 대한 적극성	8	6.3	6.3
		2-2. 예산 지원 수준의 적절성	5	5.0	4.2
정책 집행 (23)	3. 추진과정의 효율성 (13)	3-1. 추진과정의 충실성	5	3.3	3.5
		3-2.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성	8	4.7	4.5
	4. 정책소통 및 관리의 노력 (10)	4-1. 정책홍보·소통의 충실성	5	3.3	3.3
		4-2. 사업관리의 적절성	5	4.7	4.6
정책 성과 (40)	5. 정책성과 및 효과성 예측 (40)	5-1.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	20	13.3	14.3
		5-2. 정책 효과성 예측	20	7.0	6.2
총점			100	61.3	60.4

광주 지역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계획서의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으로 분류한 분야별 평가내용을 기반으로 한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대한 기본 인식과 판단에 따라 사업의 정당성은 높지만, 사업 성과의 정성적 질적 측면과 결과(outcome) 중심의 성과가 도출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둘째, 지역의 차별적 계획으로서 특성이 함께 구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과 목표와 성과지표 간 인과적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그로부터 결과 중심의 기대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7) 울산

울산 지역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점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II-11과 같다.

표 II-11. 2023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성과분석 평가결과(울산)

분야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점수	전체 평균
정책 형성 (37)	1. 계획수립의 적절성 (24)	1-1. 정책이해관계로서 RISE 사업 정책의 정당성	8	6.3	6.4
		1-2. 지역 의견수렴의 적극성 및 지역특성에 따른 차별적 계획수립	8	4.7	4.5
		1-3.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8	2.3	2.5
	2. 정책기반 확보 수준 (13)	2-1. 정책기획, 의견수렴의 충실성 및 협업에 대한 적극성	8	5.7	6.3
		2-2. 예산 지원 수준의 적절성	5	4.3	4.2
정책 집행 (23)	3. 추진과정의 효율성 (13)	3-1. 추진과정의 충실성	5	3.3	3.5
		3-2.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성	8	3.7	4.5
	4. 정책소통 및 관리의 노력 (10)	4-1. 정책홍보·소통의 충실성	5	3.3	3.3
		4-2. 사업관리의 적절성	5	4.7	4.6
정책 성과 (40)	5. 정책성과 및 효과성 예측 (40)	5-1.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	20	14.3	14.3
		5-2. 정책 효과성 예측	20	5.3	6.2
총점			100	58.0	60.4

울산 지역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계획서의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으로 분류한 분야별 평가내용을 기반으로 한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공단이 많은 울산 지역만의 특성이 차별적으로 구현된 사업계획이 지금보다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으며, 그에 대한 결과(outcome) 중심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성과목표와 지표 각각 인과적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가운데, 울산 지역에서 예상되는 구체적인 성과물은 예측가능한 결과에 기초한 내용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8) 세종

세종 지역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점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II-12과 같다.

표 II-12. 2023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성과분석 평가결과(세종)

분야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점수	전체 평균
정책 형성 (37)	1. 계획수립의 적절성 (24)	1-1. 정책이해관계로서 RISE 사업 정책의 정당성	8	6.0	6.4
		1-2. 지역 의견수렴의 적극성 및 지역특성에 따른 차별적 계획수립	8	4.3	4.5
		1-3.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8	2.3	2.5
	2. 정책기반 확보 수준 (13)	2-1. 정책기획, 의견수렴의 충실성 및 협업에 대한 적극성	8	6.7	6.3
		2-2. 예산 지원 수준의 적절성	5	4.0	4.2
정책 집행 (23)	3. 추진과정의 효율성 (13)	3-1. 추진과정의 충실성	5	3.7	3.5
		3-2.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성	8	4.7	4.5
	4. 정책소통 및 관리의 노력 (10)	4-1. 정책홍보·소통의 충실성	5	2.3	3.3
		4-2. 사업관리의 적절성	5	4.7	4.6
정책 성과 (40)	5. 정책성과 및 효과성 예측 (40)	5-1.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	20	14.3	14.3
		5-2. 정책 효과성 예측	20	5.3	6.2
총점			100	58.3	60.4

세종 지역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계획서의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로 분류한 분야별 평가내용을 기반으로 한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세종 지역이 행정중심도시로서 지니는 특성에 기초하여 차별적으로 구현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마련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결과(outcome) 중심의 직접적인 효과가 발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행정기관이 많은 지역 여건과 인프라, 가용 자원을 활용하는 가운데 성과목표와 지표 간 인과적 연계성을 높이고, 특히 성과 평가와 함께 실효성 있는 피드백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9) 경기

경기 지역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점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II-13와 같다.

표 II-13. 2023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성과분석 평가결과(경기)

분야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점수	전체 평균
정책 형성 (37)	1. 계획수립의 적절성 (24)	1-1. 정책이해관계로서 RISE 사업 정책의 정당성	8	6.3	6.4
		1-2. 지역 의견수렴의 적극성 및 지역특성에 따른 차별적 계획수립	8	4.7	4.5
		1-3.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8	2.3	2.5
	2. 정책기반 확보 수준 (13)	2-1. 정책기획, 의견수렴의 충실성 및 협업에 대한 적극성	8	6.7	6.3
		2-2. 예산 지원 수준의 적절성	5	4.7	4.2
정책 집행 (23)	3. 추진과정의 효율성 (13)	3-1. 추진과정의 충실성	5	3.7	3.5
		3-2.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성	8	4.7	4.5
	4. 정책소통 및 관리의 노력 (10)	4-1. 정책홍보·소통의 충실성	5	3.3	3.3
		4-2. 사업관리의 적절성	5	4.7	4.6
정책 성과 (40)	5. 정책성과 및 효과성 예측 (40)	5-1.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	20	15.3	14.3
		5-2. 정책 효과성 예측	20	6.0	6.2
총점			100	62.3	60.4

경기 지역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계획서의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 성과로 분류한 분야별 평가내용을 기반으로 한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의 특징을 살리고 경기 지역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자원과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경기 지역 범위를 넘어서는 효과 창출이 되도록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경기 지역의 규모와 위상을 고려했을 때, 사업목표 달성에 따른 파급효과가 경기 지역의 한계를 넘어선 글로벌 차원의 효과 달성이 되도록 할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업 취지에 부합하게 정성적 측면의 성과 도출이 될 수 있도록 성과목표와 지표의 질적 측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0) 강원

강원 지역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점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II-14과 같다.

표 II-14. 2023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성과분석 평가결과(강원)

분야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점수	전체 평균
정책 형성 (37)	1. 계획수립의 적절성 (24)	1-1. 정책이해관계로서 RISE 사업 정책의 정당성	8	6.3	6.4
		1-2. 지역 의견수렴의 적극성 및 지역특성에 따른 차별적 계획수립	8	4.3	4.5
		1-3.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8	2.3	2.5
	2. 정책기반 확보 수준 (13)	2-1. 정책기획, 의견수렴의 충실성 및 협업에 대한 적극성	8	5.7	6.3
		2-2. 예산 지원 수준의 적절성	5	4.3	4.2
정책 집행 (23)	3. 추진과정의 효율성 (13)	3-1. 추진과정의 충실성	5	3.3	3.5
		3-2.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성	8	4.3	4.5
	4. 정책소통 및 관리의 노력 (10)	4-1. 정책홍보·소통의 충실성	5	3.7	3.3
		4-2. 사업관리의 적절성	5	4.7	4.6
정책 성과 (40)	5. 정책성과 및 효과성 예측 (40)	5-1.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	20	15.0	14.3
		5-2. 정책 효과성 예측	20	5.3	6.2
총점			100	59.3	60.4

강원 지역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계획서의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으로 분류한 분야별 평가내용을 기반으로 한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강원 지역의 지역에 대한 상황 인식과 여건 판단 등을 통한 사업의 정당성은 높지만, 성과의 질적 측면과 결과(outcome) 중심의 성과가 도출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강원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간 연계성을 높이고 그로부터 결과 중심의 기대효과를 충분하게 도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11) 충북

충북 지역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점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II-15와 같다.

표 II-15. 2023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성과분석 평가결과(충북)

분야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점수	전체 평균
정책 형성 (37)	1. 계획수립의 적절성 (24)	1-1. 정책이해관계로서 RISE 사업 정책의 정당성	8	6.3	6.4
		1-2. 지역 의견수렴의 적극성 및 지역특성에 따른 차별적 계획수립	8	3.7	4.5
		1-3.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8	2.3	2.5
	2. 정책기반 확보 수준 (13)	2-1. 정책기획, 의견수렴의 충실성 및 협업에 대한 적극성	8	5.7	6.3
		2-2. 예산 지원 수준의 적절성	5	3.3	4.2
정책 집행 (23)	3. 추진과정의 효율성 (13)	3-1. 추진과정의 충실성	5	3.3	3.5
		3-2.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성	8	4.3	4.5
	4. 정책소통 및 관리의 노력 (10)	4-1. 정책홍보·소통의 충실성	5	2.7	3.3
		4-2. 사업관리의 적절성	5	4.7	4.6
정책 성과 (40)	5. 정책성과 및 효과성 예측 (40)	5-1.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	20	14.3	14.3
		5-2. 정책 효과성 예측	20	6.7	6.2
총점			100	57.3	60.4

충북 지역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계획서의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으로 분류한 분야별 평가내용을 기반으로 한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전반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충북지역의 상황에 부합하는 성과지표와 성과목표 간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결과(outcome) 및 효과 중심의 성과지표 구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충북 지역의 사업계획서에서 부족하다고 드러난 성과목표와 지표 간 인과적 연관성을 높이고 정성적 성과의 파급효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12) 충남

충남 지역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점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II-16와 같다.

표 II-16. 2023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성과분석 평가결과(충남)

분야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점수	전체 평균
정책 형성 (37)	1. 계획수립의 적절성 (24)	1-1. 정책이해관계로서 RISE 사업 정책의 정당성	8	6.7	6.4
		1-2. 지역 의견수렴의 적극성 및 지역특성에 따른 차별적 계획수립	8	4.7	4.5
		1-3.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8	3.7	2.5
	2. 정책기반 확보 수준 (13)	2-1. 정책기획, 의견수렴의 충실성 및 협업에 대한 적극성	8	5.7	6.3
		2-2. 예산 지원 수준의 적절성	5	3.7	4.2
정책 집행 (23)	3. 추진과정의 효율성 (13)	3-1. 추진과정의 충실성	5	3.0	3.5
		3-2.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성	8	4.3	4.5
	4. 정책소통 및 관리의 노력 (10)	4-1. 정책홍보·소통의 충실성	5	3.3	3.3
		4-2. 사업관리의 적절성	5	5.0	4.6
정책 성과 (40)	5. 정책성과 및 효과성 예측 (40)	5-1.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	20	14.0	14.3
		5-2. 정책 효과성 예측	20	7.0	6.2
총점			100	61.0	60.4

충남 지역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계획서의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으로 분류한 분야별 평가내용을 기반으로 한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충남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결과 중심의 성과목표 설정과 성과지표 간 인과적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그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한 피드백 과정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충남 지역이 얻게 되는 성과의 질을 고려한 성과와 지표 구성이 필요하고, 이때 구체적인 산출 근거에 기초한 성과 수준 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13) 전북

전북 지역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점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II-17과 같다.

표 II-17. 2023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성과분석 평가결과(전북)

분야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점수	전체 평균
정책 형성 (37)	1. 계획수립의 적절성 (24)	1-1. 정책이해관계로서 RISE 사업 정책의 정당성	8	6.3	6.4
		1-2. 지역 의견수렴의 적극성 및 지역특성에 따른 차별적 계획수립	8	4.3	4.5
		1-3.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8	2.7	2.5
	2. 정책기반 확보 수준 (13)	2-1. 정책기획, 의견수렴의 충실성 및 협업에 대한 적극성	8	5.7	6.3
		2-2. 예산 지원 수준의 적절성	5	4.3	4.2
정책 집행 (23)	3. 추진과정의 효율성 (13)	3-1. 추진과정의 충실성	5	3.3	3.5
		3-2.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성	8	4.7	4.5
	4. 정책소통 및 관리의 노력 (10)	4-1. 정책홍보·소통의 충실성	5	3.3	3.3
		4-2. 사업관리의 적절성	5	4.3	4.6
정책 성과 (40)	5. 정책성과 및 효과성 예측 (40)	5-1.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	20	14.3	14.3
		5-2. 정책 효과성 예측	20	7.0	6.2
총점			100	60.3	60.4

전북 지역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계획서의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으로 분류한 분야별 평가내용을 기반으로 한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전북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와 지역의 고등교육 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결과 중심의 성과가 효과적으로 나타나도록 성과지표 구성의 정교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지역의 제반 여건 분석에 따른 사업의 정당성은 높으나 정성적 성과 달성과 기대 효과를 위해 결과 중심의 성과지표 구성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인구 감소 등 지역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에 대한 해결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기업과 지역인재를 연결하는 구체적 실행 방안 도출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4) 전남

전남 지역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점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II-18와 같다.

표 II-18. 2023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성과분석 평가결과(전남)

분야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점수	전체 평균
정책 형성 (37)	1. 계획수립의 적절성 (24)	1-1. 정책이해관계로서 RISE 사업 정책의 정당성	8	6.7	6.4
		1-2. 지역 의견수렴의 적극성 및 지역특성에 따른 차별적 계획수립	8	4.7	4.5
		1-3.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8	2.3	2.5
	2. 정책기반 확 보 수준 (13)	2-1. 정책기획, 의견수렴의 충실성 및 협업에 대한 적극성	8	6.7	6.3
		2-2. 예산 자원 수준의 적절성	5	4.3	4.2
정책 집행 (23)	3. 추진과정의 효율성 (13)	3-1. 추진과정의 충실성	5	3.3	3.5
		3-2.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성	8	4.7	4.5
	4. 정책소통 및 관리의 노력 (10)	4-1. 정책홍보·소통의 충실성	5	3.3	3.3
		4-2. 사업관리의 적절성	5	4.7	4.6
정책 성과 (40)	5. 정책성과 및 효과성 예측 (40)	5-1.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	20	14.3	14.3
		5-2. 정책 효과성 예측	20	5.3	6.2
총점			100	60.3	60.4

전남 지역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계획서의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으로 분류한 분야별 평가내용을 기반으로 한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인구소멸지역으로 접어든 전남의 지역환경 및 산업적 특성에 기초한 분석을 사업 계획 내 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전남 지역 사업의 성과의 질을 고려한 성과와 지표 구성이 필요하고 그에 기초한 결과 중심의 기대효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15) 경북

경북 지역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점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II-19과 같다.

표 II-19. 2023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성과분석 평가결과(경북)

분야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점수	전체 평균
정책 형성 (37)	1. 계획수립의 적절성 (24)	1-1. 정책이해관계로서 RISE 사업 정책의 정당성	8	6.7	6.4
		1-2. 지역 의견수렴의 적극성 및 지역특성에 따른 차별적 계획수립	8	5.0	4.5
		1-3.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8	3.7	2.5
	2. 정책기반 확보 수준 (13)	2-1. 정책기획, 의견수렴의 충실성 및 협업에 대한 적극성	8	6.7	6.3
		2-2. 예산 자원 수준의 적절성	5	5.0	4.2
정책 집행 (23)	3. 추진과정의 효율성 (13)	3-1. 추진과정의 충실성	5	3.7	3.5
		3-2.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성	8	4.7	4.5
	4. 정책소통 및 관리의 노력 (10)	4-1. 정책홍보·소통의 충실성	5	3.3	3.3
		4-2. 사업관리의 적절성	5	4.7	4.6
정책 성과 (40)	5. 정책성과 및 효과성 예측 (40)	5-1.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	20	14.7	14.3
		5-2. 정책 효과성 예측	20	6.0	6.2
총점			100	64.0	64

경북 지역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계획서의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 성과로 분류한 분야별 평가내용을 기반으로 한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압도적인 최고 점수를 받은 만큼 시범 운영을 통한 경북 지역의 지역적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대단히 높고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사업계획서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결과(outcome) 중심의 성과목표와 지표 설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지역의 당면 과제와 지역 고등교육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의 실효성을 높여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은 조금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정량적 평가 구성은 대단히 훌륭하지만, 인구 소멸로 가고 있는 지역의 상황과 제반 여건 분석에 따른 사업의 정성적, 질적인 성과 달성과 기대효과를 위한 지표 구성의 개선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16) 경남

경남 지역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점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II-20과 같다.

표 II-20. 2023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성과분석 평가결과(경남)

분야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점수	전체 평균
정책 형성 (37)	1. 계획수립의 적절성 (24)	1-1. 정책이해관계로서 RISE 사업 정책의 정당성	8	6.3	6.4
		1-2. 지역 의견수렴의 적극성 및 지역특성에 따른 차별적 계획수립	8	5.0	4.5
		1-3.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8	2.3	2.5
	2. 정책기반 확보 수준 (13)	2-1. 정책기획, 의견수렴의 충실성 및 협업에 대한 적극성	8	6.7	6.3
		2-2. 예산 지원 수준의 적절성	5	4.3	4.2
정책 집행 (23)	3. 추진과정의 효율성 (13)	3-1. 추진과정의 충실성	5	3.7	3.5
		3-2.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성	8	4.7	4.5
	4. 정책소통 및 관리의 노력 (10)	4-1. 정책홍보·소통의 충실성	5	3.3	3.3
		4-2. 사업관리의 적절성	5	4.7	4.6
정책 성과 (40)	5. 정책성과 및 효과성 예측 (40)	5-1.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	20	13.0	14.3
		5-2. 정책 효과성 예측	20	6.0	6.2
총점			100	60.0	60.4

경남 지역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계획서의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로 분류한 분야별 평가내용을 기반으로 한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경남 지역의 계획서에 따른 사업에 대한 정당성은 높지만, 구체적인 결과 중심의 성과 달성을 위한 노력이 아직 부족하고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경남 지역의 지자체, 대학, 기업체 등의 유관기관 간 협력체제의 내실화를 통해 성과목표와 지표 간 인과적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결과 기반의 성과와 정성적 성과가 함께 반영된 매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성과목표 및 지표 구성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효과 평가 등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17) 제주

제주 지역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점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II-21과 같다.

표 II-21. 2023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성과분석 평가결과(제주)

분야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점수	전체 평균
정책 형성 (37)	1. 계획수립의 적절성 (24)	1-1. 정책이해관계로서 RISE 사업 정책의 정당성	8	6.7	6.4
		1-2. 지역 의견수렴의 적극성 및 지역특성에 따른 차별적 계획수립	8	4.3	4.5
		1-3.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8	2.0	2.5
	2. 정책기반 확보 수준 (13)	2-1. 정책기획, 의견수렴의 충실성 및 협업에 대한 적극성	8	7.0	6.3
		2-2. 예산 지원 수준의 적절성	5	4.3	4.2
정책 집행 (23)	3. 추진과정의 효율성 (13)	3-1. 추진과정의 충실성	5	4.0	3.5
		3-2.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성	8	4.3	4.5
	4. 정책소통 및 관리의 노력 (10)	4-1. 정책홍보·소통의 충실성	5	3.7	3.3
		4-2. 사업관리의 적절성	5	4.7	4.6
정책 성과 (40)	5. 정책성과 및 효과성 예측 (40)	5-1.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	20	14.3	14.3
		5-2. 정책 효과성 예측	20	5.7	6.2
총점			100	61.0	60.4

제주 지역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계획서의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로 분류한 분야별 평가내용을 기반으로 한 주요 핵심 내용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섬이라는 특성을 가진 제주라는 지역, 특별자치도로서의 특성이 차별적으로 구현된 사업계획 마련과 그에 대한 결과 중심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둘째, 제주 지역의 풍부한 인프라, 그리고 다양한 해상 자원을 활용하여 제주 지역만의 독특함이 구현된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좀 더 특성화 및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성적인 성과 평가가 더 강화될과 동시에 질적 평가에 근거한 피드백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이상으로 17개 시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점수와 주요 핵심사항 정리를 마치고 다음으로는 평가점수를 통해 드러난 권역별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4)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계획의 수도권 및 비수도권별 분석

17개 시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점수와 내용을 다양한 그룹으로 매칭하여 조합 후 분석한 결과 수도권(61.7)과 비수도권(59.8)의 차이가 다른 조합에 비해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점수를 비교하면 다음의 표 II-22과 같다.

표 II-22. 수도권과 비수도권 권역별 평가점수

	총 점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			
		영 역 별 점 수	1. 계획수립의 적절성			2. 정책기반 확보 수준		영 역 별 점 수	3. 추진과정의 효율성		4. 정책소통 및 관리의 노력		영 역 별 점 수	5. 정책성과 및 효과성 예측	
			1-1	1-2	1-3	2-1	2-2		3-1	3-2	4-1	4-2		5-1	5-2
수도권	61.7	24.2	6.7	4.5	2.5	6.5	4.0	16.2	3.7	4.7	3.3	4.5	21.3	14.7	6.7
비수도권	59.8	23.9	6.4	4.5	2.4	6.5	4.1	15.6	3.3	4.5	3.1	4.8	20.3	14.2	6.1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결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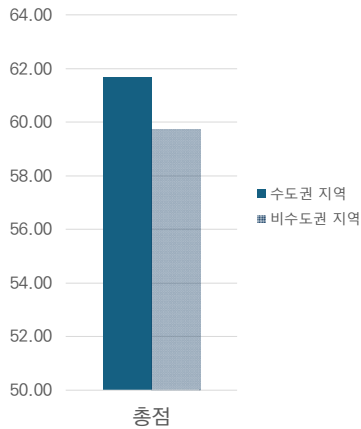


그림 II-11.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평가점수 결과 비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총점의 차이가 아주 크게 나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세부 영역에서 수도권 지역의 점수가 비수도권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결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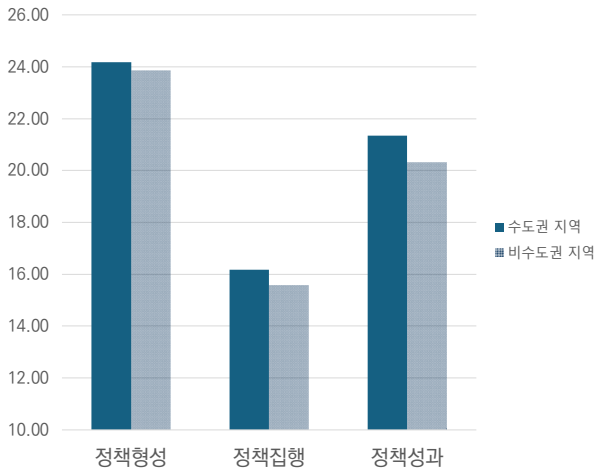


그림 II-12.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평가점수 결과 분야별 비교

영역별 점수와 평가 내용을 초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업계획서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수도권 지역은 지역인재 양성계획 중 기업과의 연계 방안에 있어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 및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이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기업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기가 수도권에 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지역의 서울의 경우 기업과 연계하여 실질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계획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기에 분야별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지역청년의 지역 정주 문제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정주라는 주요 이슈에서도 감점 요인이 적었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 충북의 경우 비수도권 지역의 특성상 지역청년의 지역 정주를 강화하는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인재 양성의 지역특성화 전략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전반적으로 낮다는 평가와 함께 분야별로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를 종합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평가점수 차이는 각 시도별의 사업계획 역량의 차이라기보다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과 관련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지역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의 깊이와 다양성 때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계획의 시범지역 및 비시범지역별 분석

17개 시도별 사업계획서 평가에 있어 주요한 차이점 중의 하나인 2023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7개 시도(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와 비시범지역의 평가점수에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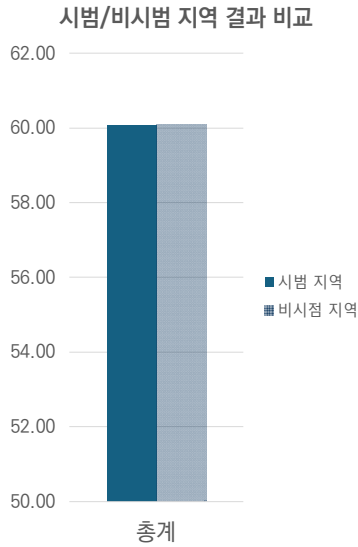


그림 II-13. 시범지역과 비시범지역 간 평가점수 결과 비교

그러나 세부 평가점수와 내용에서는 주목할만한 특징이 발견되고 있었다. 세부 평가점수는 다음의 표 II-23과 같다.

표 II-23. 시범지역과 비시범지역 권역별 평가점수

	총 점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성과			
		영 역 별 점 수	1. 계획수립의 적절성			2. 정책기반 확보 수준		영 역 별 점 수	3. 추진과정의 효율성		4. 정책소통 및 관리의 노력		영 역 별 점 수	5. 정책성과 및 효과성 예측	
			1-1	1-2	1-3	2-1	2-2		3-1	3-2	4-1	4-2		5-1	5-2
시범	60.1	24.3	6.4	4.5	2.5	6.6	4.2	15.5	3.4	4.6	3.0	4.6	20.3	14.1	6.2
비시범	60.1	23.7	6.4	4.5	2.4	6.4	4.0	15.8	3.4	4.5	3.2	4.8	20.7	14.4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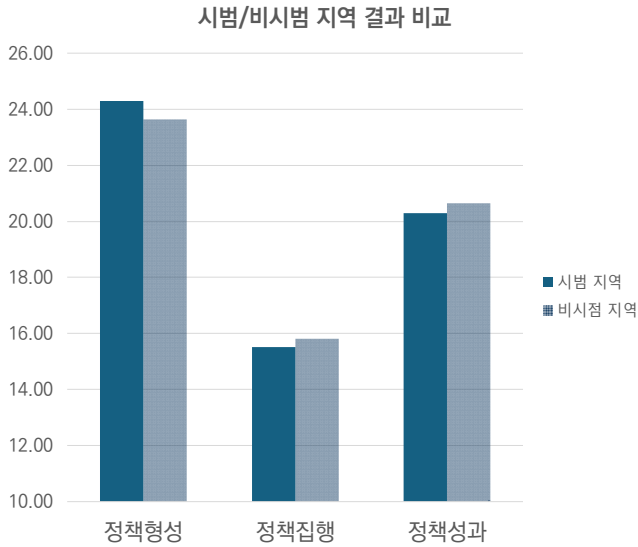


그림 II-14. 시범지역과 비시범지역 간 평가점수 결과 분야별 비교

시범지역의 경우 비시범지역에 비해 정책기반의 확보 수준 항목에서 대부분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있었다. 이는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7개의 시도들이 시범지역으로서 선정된 후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계획을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수립해야 하는지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기반 확보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 잘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표적으로 경북의 경우 시범 사업을 통해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진단 및 분석한 후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형태의 사업계획서를 제시함으로써, 정책기반 확보 수준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비시범지역의 경우 시범지역과 정책집행과 정책성과 분야에서 오히려 점수가 높게 나올 정도로 사업계획서상으로 시범지역과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는 3절에서 언급한 수도권,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상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큰 점수 차이에서 비롯된 착시 효과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제외한 점수를 보면 정책형성 분야뿐 아니라 정책집행 및 정책성과 분야에서도 시범지역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점을 보았을 때,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1년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준비작업을 진행한 효과는 충분히 있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종합하면 시범사업 운영의 경험을 잘 활용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경북지역으로 대표되는 비시범지역에 비해 보다 높은 시범지역 사업계획서의 구체성과 실행가능성으로 대변되는 완성도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범지역과 비시범지역 간의 차이를 잘 볼 수 없게끔 착시효과를 가져다 줄 정도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계획에 있어서 기업과의 연계와 실질적 일자리 창출 방안이 무엇보다 가장 우선시되는 평가기준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6) 평가결과의 종합 및 시사점

이상의 17개 시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점수와 내용 및 특징을 종합하면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17개 시도의 사업계획서 안에서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 계획에 대한 평가는 좋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절대 점수가 60점대에 분포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점수가 낮은 이유를 분석해 보면, 사업계획서 안에는 지역청년인재를 육성하고 기업과 연계하여 실질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특성화 전략이 부재하거나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원인이 작용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지역청년인재를 육성하고 기업과 연계하여 실질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특성화 전략에 대한 보완과 이를 구현할 사업효과성(outcome) 측면의 사업지표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권역 특성별로는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의 점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평가 총점의 절대적인 점수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표준편차를 볼 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지역청년인재를 육성하고 실질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숫자 및 협력 정도를 포함한 지역의 가용 자원 및 규모의 차이에서 수도권의 여건이 뛰어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가용 자원과 규모의 부족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역청년인재양성 전략 및 기업과의 연계 전략을 세우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 수도권의 경우는 지역특성화 전략에서 더 나아가 글로벌 차원의 산업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둔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거의 모든 지역의 평가결과에서 지적하고 있는 질적 측면을 고려한 구체적인 결과(outcome) 중심의 성과목표 제시와 산출 근거에 의한 목표와 성과지표 간 인과적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분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양적 측면만을 고려한

정량적인 사업평가가 담긴 계획서 구성만으로는 지역청년인재를 육성하고 기업과 연계하여 실질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특성화 구체적으로 세밀한 전략을 세우고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성공적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위해 질적인 측면을 대폭 확대한 보완책이 요구된다.

4. 기존 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독창성

1)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점

지금까지 역대 정부 및 윤석열 정부가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청년정책으로서 지역미래인재 육성’ 방향과 국정과제 그리고 청년 친화적 지역인재육성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살펴보았다. 이들 연구가 갖는 한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연구들은 지역인재 양성과 청년일자리 창출의 방안으로 ‘대학, 기업, 지자체’의 연계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즉, 전술한 바와 같이 많은 연구들(Monteiro et al., 2021; Zhang, 2024; 권경득, 2016; 김동규, 2020; 김용우, 2014; 변정현, 2021; 송원근, 2023; 오민지, 안선민, 2022; 채윤정, 2023)은 지역인재 양성과 청년일자리 창출의 정책제언으로 ‘대학, 기업, 지자체’의 연계를 제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협력적 거버넌스(Cooperative Governance) 수준의 제안으로 구체적인 방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둘째, 기존의 지역인재 양성과 청년일자리 창출의 연구들은 단위 사업시행의 성과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돌아보는 회고적 평가(Retrospective Evaluations)만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앞선 선행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다수의 연구들(Arranz et al., 2022; Velez et al., 2019; 기정훈, 박현수, 2013; 김선재, 2018; 박준우 외, 2023)은 ‘대학, 기업, 지자체’ 연계를 통한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의 개별사업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분석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지역인재 양성과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연구들은 단위 사업이 긍정적 성과가 있다는 이론적 공헌을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체계 모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이 더욱 성공한 지원체계가 되기 위한 개선사항을 언급하는 분석평가는 누락되어 있다.

셋째, 선행연구들은 지역인재 양성과 청년일자리 창출의 배경으로 지방소멸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이를 연계한 국가정책의 전략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박재희 외(2022)는 지역인재 양성과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국정과제 113번과 114번’을 차순위의 국정과제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정책에서 지방소멸의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정과제’와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의 추진과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지역인재 양성과 청년일자리 창출은 지방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핵심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2) 본 연구의 독창성

첫째, 본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Cooperative Governance) 수준의 ‘대학, 기업, 지자체’의 연계 방안을 넘어 ‘대학, 기업, 지자체’의 지원체계 구축모델을 정교화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국가적으로 추진되는 ‘글로벌대학 30’ 정책 이외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를 중점으로 살펴봄으로써, 청년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정책관계자인 ‘대학, 기업, 지자체’ 지원체계의 협업방향과 실제 기업이 중심이 되는 성과 창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이미 ‘대학, 기업, 지자체’의 연계 방안의 단위사업에 대한 긍정적 효과는 이론적으로 많이 밝혀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 기업, 지자체’의 연계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난 성과를 평가하는 회고적 평가(Retrospective Evaluations)에 그치지 않고 전망적 평가(Prospective Evaluations)를 통하여 지역인재 양성과 청년일자리 창출의 미래전략을 정책적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와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의 추진과제’의 대안으로 지역인재 양성과 청년일자리 창출이 제시되고 있는 바, 지방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별 산업전략 분석과 전문가조사를 통한 청년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의 연계정책을 도출하고자 한다.

○ — 제3장 지역별 산업특성과 청년 경제활동인구의 특징

- 1. 지역별(시·도) 지방소멸위험 및 청년인구 특성
- 2. 지역별(시·도) 산업구조의 특징
- 3. 청년지역인재육성을 통한 시도별 일자리 창출방안

지방소멸에 대응하고자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청년인구의 유입을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학, 기업,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인구감소, 청년인구, 지역의 경제 및 산업구조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즉, 이를 바탕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되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지역별 지방소멸위험 및 청년인구의 특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지역의 경제, 산업적 구조 등의 현황을 분석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일자리 창출 방안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지역별(시·도) 지방소멸위험 및 청년인구 특성

1) 지역별 지방소멸위험

최근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한 지원, 법률 제정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의 인구감소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지수는 ①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수, ②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지수, ③산업연구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K-지방소멸지수 등이 있다.

우선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와 관심지역 18개 시군구가 대표적이다. 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할 지역을 다양한 지표를 통해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하고 2021년 10월 해당 지수가 낮은 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수는 ①연평균인구증감율, ②인구밀도, ③청년순이동률, ④주간인구, ⑤고령화비율, ⑥유소년 비율, ⑦초출생률, ⑧재정자립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Ⅲ-1. 시도별 인구감소지역(시군구) 개수 및 비율: 인구감소지수기준(행정안전부)

시도	시군구 수	인구감소지수		해당지역
		개수	비율	
서울	25	0	0.0%	-
부산	16	3(5)	18.8%	동구, 서구, 영도구(금정구, 중구)
대구	8	3	37.5%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	10	2(3)	20.0%	강화군, 옹진군(동구)
광주	5	(1)	0.0%	(동구)
대전	5	(3)	0.0%	(대덕구, 동구, 중구)
울산	5	0	0.0%	-
세종	-	-	-	-
경기	31	2(4)	6.5%	가평군, 연천군(동두천시, 포천시)
강원	18	12(16)	66.7%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충북	11	6	54.5%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15	9	60.0%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14	10(11)	71.4%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익산시)
전남	22	16	72.7%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23	15(17)	65.2%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주시, 김천시)
경남	18	11(13)	6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사천시, 통영시)
제주	-	-	-	-

*참고: 인구감소지수 괄호 안은 관심지역 해당 시군구 수임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시하는 ‘지방소멸위험지수’는 가임여성 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인구수로 지방소멸의 위험도를 측정하고 있다. 먼저 지방소멸위험분류는 표 Ⅲ-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총 5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는 지방소멸위험지수가 1.5이상일 때는 소멸위험이 매우 낮음을 의미하며 2단계는 1.0-1.5미만은 보통으로, 0.5-1.0은 주의단계, 소멸위험지역은 소멸위험진입단계는 0.2-0.5미만, 소멸고위험지역은 0.2미만으로 볼 수 있다.

표 III-2. 시도별 지방소멸위험 분류 및 지수(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위험분류			지방소멸위험지수
1	소멸위험 매우낮음		1.5이상
2	소멸위험 보통		1.0-1.5미만
3	주의단계		0.5-1.0미만
4	소멸위험지역	소멸위험진입단계	0.2-0.5미만
5		소멸고위험단계	0.2미만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2023). 지방소멸위험지수 원시자료(23년)

<https://www.keis.or.kr/user/bbs/main/123/3889/bbsDataView/58493.do?page=1&column=&search=&searchSDate=&searchEDate=&bbsDataCategory=>

아래의 표 III-3은 시도별 지방소멸위험분류 및 지방소멸지수이다. 세종은 소멸위험이 보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부분은 주의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은 소멸위험진입단계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3. 시도별 지방소멸지수(한국고용정보원)

시도	총인구	20~39세 여성 인구	65세이상 인구	지방소멸위험 지수	지방소멸위험 분류
서울	9,427,583	1,433,714	1,672,316	0.857	3
부산	3,315,516	381,824	718,419	0.531	3
대구	2,360,662	267,593	439,162	0.609	3
인천	2,971,788	373,266	469,683	0.795	3
광주	1,428,927	179,635	224,558	0.800	3
대전	1,445,875	185,068	235,026	0.787	3
울산	1,108,665	119,306	165,926	0.719	3
세종	385,285	49,665	40,644	1.222	2
경기	13,600,800	1,715,726	2,016,088	0.851	3
강원	1,534,067	148,710	353,233	0.421	4
충북	1,593,434	167,769	319,973	0.524	3
충남	2,123,625	217,334	439,853	0.494	4
전북	1,766,524	173,934	412,540	0.422	4
전남	1,814,858	162,156	459,449	0.353	4
경북	2,594,399	232,942	622,508	0.374	4
경남	3,272,381	317,118	643,954	0.492	4
제주	677,090	75,165	116,547	0.645	3

한편, 표 III-4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23년 2월 기준 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소멸위험지역은 총 6개 시도, 118개 시·군·구가 이에 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4. 시도별 인구감소지역(시군구) 개수 및 비율: 지방소멸지수기준(한국고용정보원)

시도	시군구 수	지방소멸 위험지역		
		개수	비율	해당 지역
서울	25	0	0.0%	
부산	16	7	43.8%	영도구, 동구, 서구, 중구, 금정구, 사하구, 남구
대구	8	2	25.0%	서구, 남구
인천	10	3	30.0%	강화군, 옹진군, 동구
광주	5	0	0.0%	-
대전	5	0	0.0%	-
울산	5	0	0.0%	-
세종	-	-	-	-
경기	31	6	19.4%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강원	18	16	88.9%	횡성군, 정선군, 평창군, 영월군, 양양군, 고성군, 홍천군, 태백시, 삼척시, 철원군, 화천군, 동해시, 양구군, 인제군, 강릉시, 속초시
충북	11	8	72.7%	괴산군, 보은군, 단양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충주시
충남	15	12	80.0%	서천군, 부여군, 청양군, 태안군, 금산군, 예산군, 보령시, 논산시, 공주시, 홍성군, 당진시, 서산시
전북	14	13	92.9%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고창군, 무주군, 순창군, 부안군,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완주군, 군산시, 익산시
전남	22	18	81.8%	고흥군, 신안군, 보성군, 함평군, 구례군, 곡성군, 장흥군, 완도군, 강진군, 진도군, 해남군, 장성군, 담양군, 영암군, 영광군, 화순군, 나주시, 여주시
경북	23	20	87.0%	군위군, 의성군, 봉화군, 청송군, 청도군, 영양군, 영덕군, 성주군, 고령군, 상주시, 문경시, 울진군, 예천군, 울릉군, 영주시, 영천시, 안동시, 경주시, 김천시, 포항시
경남	18	13	72.2%	합천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고성군, 창녕군, 밀양시, 함안군, 거창군, 사천시, 통영시
제주	-	-	-	-

*출처: 한국고용정보원. (2023). 지방소멸위험지수 원시자료(23년). <https://www.keis.or.kr/user/bbs/main/123/3889/bbsDataView/58493.do?page=1&column=&search=&searchSDate=&searchEDate=&bbsDataCategory=>

또한, 산업경제연구원에서 제시하는 K-지방소멸지수는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산출하고 있는데 이 중 소멸위기에 해당하는 지역은 총 59개로 나타났다. K-지

방소멸 단계는 소멸무관(1.5 이상), 소멸안심(1.25~1.5 미만), 소멸예방(1.0~1.25 미만), 소멸선제대응(0.75~1.0 미만), 소멸위기로 구분된다. 이 중 소멸 위기는 소멸우려(0.5~0.75 미만)와 소멸위험(0.5 미만)으로 다시 구분된다.

표 III-5. 시도별 지방소멸위험 분류 및 지수(산업연구원)

지방소멸 위험분류		지방소멸위험지수	
1	소멸무관	1.50 이상	
2	소멸안심	1.25~1.50 미만	
3	소멸예방	1.0~1.25 미만	
4	소멸선제대응	0.75~1.0 미만	
5	소멸위기	소멸우려	0.5~0.75 미만
6		소멸위험	0.5 미만

*출처: 허문구 외. (2022). 지방소멸시대의 인구감소 위기 극복방안 :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44. 재인용

K-지방소멸지수에 따르면 소멸우려는 50개 지역, 소멸 위험은 9개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총 59개 지역이 소멸위기지역에 해당하여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소멸위기지역은 2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내용은 아래의 표 III-6과 같다.

표 III-6. 시도별 인구감소지역(시군구) 개수 및 비율: K-지방소멸지수기준(산업연구원)

시도	시군구 수	지방소멸 위기지역		
		개수	비율	해당지역
서울	25	0	0.00%	
부산	16	2	12.5%	영도구, 서구
대구	8	0	0.0%	
인천	10	2	20.0%	옹진군, 강화군
광주	5	0	0.0%	
대전	5	0	0.0%	
울산	5	1	20.0%	동구
세종	-	-	-	-
경기	31	2	6.5%	가평군, 연천군
강원	18	10	55.6%	고성군, 화천군, 정선군, 평창군, 양구군, 삼척시, 양양군, 영월군, 태백시, 인제군
충북	11	3	27.3%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충남	15	2	13.3%	태안군, 서천군
전북	14	6	42.9%	장수군, 무주군, 순창군, 진안군, 임실군, 부안군
전남	22	13	59.1%	신안군, 구례군, 완도군, 함평군, 곡성군, 영광군, 강진군, 영암군, 보성군, 해남군, 진도군, 고흥군, 장흥군
경북	23	9	39.1%	울릉군, 봉화군, 청송군, 영양군, 군위군, 청도군, 영덕군, 울진군, 의성군
경남	18	9	50.0%	의령군, 하동군, 합천군, 산청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함양군, 통영시
제주	-	-	-	

*출처: 허문구, (2022). K-지방소멸지수 개발과 정책과제 -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 산업연구원.

이상을 종합할 때, 지방소멸과 관련된 세 가지 유형의 지수별 인구감소에 대한 위험도는 일부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즉, 지수별로 인구감소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의 범위가 다소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각 시도 내 지역소멸의 위험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시군구)의 비중을 바탕으로 지역의 인구감소 위험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시도별 인구감소위험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 비중의 평균은 전남이 71.2%, 강원도가 70.4%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전북, 69.07%. 경북 63.77%, 경남 61.1%로 인구감소지역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 광주, 대전 등의 경우 인구감소의 위험도가 0.0%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I-7. 시도별 지방소멸위험 해당 지역 비율: 지수별 비교 및 평균

(단위: %)

시도	시군구 수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수		고용정보원 지방소멸지수		산업연구원 K지방소멸지수		평균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비율
서울	25	0	0.0%	0	0.0%	0	0.00%	0.0	0.00%
부산	16	3(5)	18.8%	7	43.8%	2	12.5%	4.0	25.03%
대구	8	3	37.5%	2	25.0%	0	0.0%	1.7	20.83%
인천	10	2(3)	20.0%	3	30.0%	2	20.0%	2.3	23.33%
광주	5	(1)	0.0%	-	0.0%	0	0.0%	0.0	0.00%
대전	5	(3)	0.0%	-	0.0%	0	0.0%	0.0	0.00%
울산	5	-	0.0%	-	0.0%	1	20.0%	1.0	6.67%
세종	-	-	-	-	-	-	-	-	-
경기	31	2(4)	6.5%	6	19.4%	2	6.5%	3.3	10.80%
강원	18	12(16)	66.7%	16	88.9%	10	55.6%	12.7	70.40%
충북	11	6	54.5%	8	72.7%	3	27.3%	5.7	51.50%
충남	15	9	60.0%	12	80.0%	2	13.3%	7.7	51.10%
전북	14	10(11)	71.4%	13	92.9%	6	42.9%	9.7	69.07%
전남	22	16	72.7%	18	81.8%	13	59.1%	15.7	71.20%
경북	23	15(17)	65.2%	20	87.0%	9	39.1%	14.7	63.77%
경남	18	11(13)	61.1%	13	72.2%	9	50.0%	11.0	61.10%
제주	-	-	-	-	-	-	-	-	-

*참고: 인구감소지수 괄호 안은 관심지역 18개 포함 숫자이며 소멸지역 비율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음

2) 지역별 인구특성 및 청년인구 현황

청년의 연령은 청년기본법 제3조1항에서 만 19세부터 34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에 의해서 다양하게 규정되고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만 19세부터 34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지역별 청년인구 현황을 분석하였다. 청년인구를 분석하기 위해 활용된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를 활용하였다. 2024년 5월 기준으로 총 인구 대비 청년인구 수는 약 1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총인구 대비 지역별 청년인구의 평균은 5.9%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과 경기 지역에 청년인구 비율이 집중되어 있어 이를 제외한 평균은 3.4%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총 청년인구 대비 청년 인구 비율이 22.10%로, 19~25세

이하 청년 인구는 20.30%, 26~34세 청년 인구는 23.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총인구 대비 청년 인구 비율이 6.00%이며, 19~25세 이하 청년 인구는 6.10%, 26~34세 청년 인구는 5.90%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대구는 전체 청년인구 대비 청년 인구 비율이 4.40%로, 19~25세 이하 청년 인구는 4.70%, 26~34세 청년 인구는 4.3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천은 총인구 대비 청년 인구 비율이 6.00%, 19~25세 이하 청년 인구는 5.80%, 26~34세 청년 인구는 6.2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전체 청년인구 대비 청년인구 비율이 2.90%로, 19~25세 이하 청년 인구는 3.20%, 26~34세 청년 인구는 2.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총 청년인구 중 청년인구 비율이 3.10%로 연령대별로는 19~25세 이하 3.30%, 26~34세 3.00%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울산은 전체 청년인구 대비 지역의 청년 인구가 2.0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19~25세 이하 2.00%, 26~34세 청년 인구는 2.00%로 전반적으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총 청년인구 수 중 0.70%를 차지하고 있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며, 19~25세 이하 청년 인구는 0.70%, 26~34세 청년 인구는 0.70%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는 총 청년인구 대비 차지하는 청년인구 비율이 27.60%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19~25세 이하 청년 인구는 27.20%, 26~34세 청년 인구는 27.80%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총 청년인구 대비 청년인구 비율이 2.60%이며, 19~25세 이하 청년 인구는 2.80%, 26~34세 청년 인구는 2.40%로 나타났으며, 충청북도는 전국 대비 청년인구 비율이 2.90%로, 19~25세 이하 청년 인구는 3.00%, 26~34세 청년 인구는 2.90%로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는 총 청년인구 대비 청년 인구 비율이 3.70%, 19~25세 이하 청년 인구는 3.80%, 26~34세 청년 인구는 3.6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라북도는 총 청년인구 중 청년 인구 비율이 2.90%로, 19~25세 이하 청년 인구는 3.30%, 26~34세 청년 인구는 2.70%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총 청년인구 청년 인구 비율이 2.70%, 19~25세 이하 청년 인구는 3.00%, 26~34세 청년 인구는 2.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상북도는 총 청년인구 중 청년 인구 비율이 3.90%로, 19~25세 이하 청년 인구는 4.20%, 26~34세 청년 인구는 3.70%로 타 지역 대비 세부 연령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상남도는 총 청년인구 중 청년 인구 비율이 5.10%, 19~25세 이하 청년 인구는 5.50%, 26~34세

청년 인구는 4.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총 청년인구 중 청년 인구 비율이 1.20%로, 19~25세 이하 청년 인구는 1.20%, 26~34세 청년 인구는 1.10%를 차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청년인구는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청년인구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을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지역의 전체 청년인구가 총 청년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 지역별 인구 현황: 2024년 5월 기준

(단위: 명, %)

시도	총인구수		청년인구수					
			총계		19~25세 이하		26~34세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명	비율
서울	10,807,902	18.8%	2,207,539	22.1%	771,567	20.3%	1,435,972	23.3%
부산	3,649,430	6.4%	599,873	6.0%	233,194	6.1%	366,679	5.9%
대구	2,633,214	4.6%	443,902	4.4%	178,491	4.7%	265,411	4.3%
인천	3,394,078	5.9%	603,701	6.0%	219,496	5.8%	384,205	6.2%
광주	1,585,355	2.8%	292,718	2.9%	121,617	3.2%	171,101	2.8%
대전	1,628,575	2.8%	312,451	3.1%	124,995	3.3%	187,456	3.0%
울산	1,224,979	2.1%	199,160	2.0%	74,790	2.0%	124,370	2.0%
세종	431,543	0.8%	68,568	0.7%	24,799	0.7%	43,769	0.7%
경기	15,373,331	26.8%	2,753,463	27.6%	1,034,842	27.2%	1,718,621	27.8%
강원	1,671,120	2.9%	254,589	2.6%	106,421	2.8%	148,168	2.4%
충북	1,767,998	3.1%	289,674	2.9%	112,877	3.0%	176,797	2.9%
충남	2,355,591	4.1%	367,353	3.7%	146,380	3.8%	220,973	3.6%
전북	1,911,157	3.3%	290,402	2.9%	126,157	3.3%	164,245	2.7%
전남	1,953,505	3.4%	273,787	2.7%	115,999	3.0%	157,788	2.6%
경북	2,776,246	4.8%	391,768	3.9%	160,943	4.2%	230,825	3.7%
경남	3,541,299	6.2%	513,575	5.1%	209,416	5.5%	304,159	4.9%
제주	743,051	1.3%	117,694	1.2%	47,206	1.2%	70,488	1.1%
계	57,448,374	100.0%	9,980,217	100.0%	3,809,190	100.0%	6,171,027	100.0%

*출처: 통계청. (2024). 주민등록인구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DA7014S_01

한편, 지역별 청년인구 추이와 연령별로 세분화한 청년인구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2012~2023년까지 청년인구 수를 종합한 결과는 표 III-7, 표 III-8, 표 III-9에 제시되었다. 전국의 청년 인구는 2012년 11,399,682명에서 2023년 10,068,859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지역별로 서울의 청년인구는 2012년 2,566,437명에서 2023년 2,217,197명으로, 부산의 청년인구는 2012년 787,770명에서 2023년 607,924명으로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청년인구는 2012년 547,183명에서 2023년 450,839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천의 경우 2012년 667,849명에서 2023년 606,319명으로 감소하였다. 광주의 청년인구는 2012년 338,250명에서 2023년 295,956명으로 대전은 2012년 355,317명에서 2023년 313,825명으로 청년인구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울산의 경우 청년인구가 2012년 263,571명에서 2023년 201,892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원도의 경우 2012년 301,267명에서 2023년 258,308명으로 감소하였다.

충청북도 또한 2012년 328,441명에서 2023년 292,501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충청남도의 청년인구는 2012년 421,754명에서 2023년 368,976명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의 경우 청년인구는 2012년 369,100명에서 2023년 294,796명으로, 전라남도의 청년인구는 2012년 347,784명에서 2023년 278,275명으로 감소하였으며 경상북도의 청년인구는 2012년 540,408명에서 2023년 397,705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의 청년인구는 2012년 689,450명에서 2023년 523,564명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세종특별자치시의 청년인구는 2012년 22,847명에서 2023년 69,076명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경기도의 청년인구는 2012년 2,736,129명에서 2023년 2,772,168명으로 증가하였다. 제주도는 2012년 116,125명에서 2023년 119,538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19년 이후 감소 추세로 돌아섰지만, 전체적으로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9. 지역별 청년인구 추이(19~34세):2012~2023년

(단위: 명)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서울	2,566,437	2,540,060	2,492,073	2,426,970	2,365,665	2,318,538	2,288,179	2,294,143	2,282,199	2,242,927	2,234,407	2,217,197
부산	787,770	778,088	761,140	742,982	720,690	698,459	678,237	666,000	654,724	638,708	624,161	607,924
대구	547,183	543,803	534,424	525,514	517,234	507,114	498,896	490,926	483,649	469,026	459,859	450,839
인천	667,849	675,845	671,231	663,413	654,254	642,146	634,077	630,929	619,005	612,591	610,302	606,319
광주	338,250	337,846	333,797	327,211	322,401	315,641	311,821	312,150	310,353	307,204	302,889	295,956
대전	355,317	355,854	351,417	343,963	339,335	332,294	326,833	323,660	320,808	317,947	315,745	313,825
울산	263,571	266,467	266,383	263,535	257,050	247,497	238,571	232,783	224,683	215,527	208,119	201,892
세종	22,847	24,850	32,443	43,486	49,021	54,876	61,008	65,495	66,807	69,086	70,030	69,076
경기	2,736,129	2,763,023	2,756,931	2,750,088	2,749,632	2,738,035	2,750,535	2,787,377	2,819,015	2,833,437	2,806,957	2,772,168
강원	301,267	300,176	296,904	294,956	289,889	284,772	277,462	275,448	271,635	266,993	263,797	258,308
충북	328,441	328,398	325,855	323,216	319,537	314,029	311,070	309,003	304,865	299,290	295,838	292,501
충남	421,754	422,860	419,622	414,713	409,248	404,162	398,260	393,552	385,541	377,330	372,110	368,976
전북	369,100	365,936	360,189	354,289	347,007	339,212	329,278	322,705	315,453	308,516	301,226	294,796
전남	347,784	345,462	341,607	338,551	331,923	323,919	316,169	311,360	300,952	291,009	284,181	278,275
경북	540,408	535,452	524,830	513,626	498,780	482,208	467,877	458,967	439,468	427,359	412,237	397,705
경남	689,450	686,642	677,892	666,935	651,811	634,271	618,378	606,292	585,909	564,465	541,956	523,564
제주	116,125	118,592	120,693	122,456	124,138	125,171	125,982	126,109	125,501	124,025	122,380	119,538
계	11,399,682	11,389,354	11,267,431	11,115,904	10,947,615	10,762,344	10,632,633	10,606,899	10,510,567	10,365,440	10,226,194	10,068,859

*출처: 통계청. (2024). 주민등록인구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DA7014S_01

표 III-10. 지역별 청년인구 추이(19~25세)2012~2023년

(단위: 명)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서울	960,500	968,733	974,398	971,496	966,873	947,326	923,482	911,904	881,653	839,292	814,935	782,835
부산	330,756	333,193	334,413	333,616	330,114	319,963	307,192	297,441	284,346	267,476	252,619	239,374
대구	240,195	243,683	247,469	248,474	249,374	244,334	236,856	229,346	221,218	205,964	196,092	184,377
인천	277,589	285,459	290,012	291,917	292,885	286,512	278,181	271,652	259,323	246,028	235,118	224,173
광주	143,316	147,282	151,532	153,636	156,351	155,425	153,140	151,990	147,843	140,561	133,566	125,358
대전	149,019	152,807	154,961	155,897	156,801	154,546	151,222	148,361	143,680	137,443	131,776	126,986
울산	110,721	114,331	117,290	118,292	118,000	114,102	109,224	104,893	98,302	90,510	83,685	77,544
세종	8,837	9,765	12,094	15,573	17,804	20,046	22,326	23,702	23,933	24,681	25,044	25,108
경기	1,104,677	1,143,568	1,175,212	1,202,474	1,227,854	1,223,246	1,209,696	1,209,110	1,194,489	1,158,097	1,109,597	1,059,975
강원	135,124	138,233	140,653	143,401	142,858	141,011	136,239	133,491	128,197	121,680	115,707	109,505
충북	138,207	140,969	144,288	147,394	148,716	147,918	145,026	141,865	135,797	127,810	121,831	115,825
충남	168,999	171,586	174,387	177,420	179,472	179,702	176,991	174,073	167,673	160,111	154,156	149,011
전북	162,464	165,456	168,123	170,560	171,119	170,389	165,344	161,112	154,534	146,499	138,108	130,633
전남	152,836	155,742	159,446	162,535	163,249	161,732	158,549	155,029	146,831	136,858	128,558	120,600
경북	229,686	231,105	231,957	232,192	230,927	226,139	219,534	214,515	201,122	189,688	177,287	165,871
경남	283,385	289,718	295,616	300,372	302,522	297,734	290,922	283,018	268,425	251,021	232,260	217,485
제주	49,809	52,281	55,057	57,397	59,560	60,312	60,015	59,338	57,545	54,438	51,781	48,758
계	4,646,120	4,743,911	4,826,908	4,882,646	4,914,479	4,850,437	4,743,939	4,670,840	4,514,911	4,298,157	4,102,120	3,903,418

*출처: 통계청. (2024). 주민등록인구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DA7014S_01

표 III-11. 지역별 청년인구 추이(26~34세)2012~2023년

(단위: 명)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서울	1,605,937	1,571,327	1,517,675	1,455,474	1,398,792	1,371,212	1,364,697	1,382,239	1,400,546	1,403,635	1,419,472	1,434,362
부산	457,014	444,895	426,727	409,366	390,576	378,496	371,045	368,559	370,378	371,232	371,542	368,550
대구	306,988	300,120	286,955	277,040	267,860	262,780	262,040	261,580	262,431	263,062	263,767	266,462
인천	390,260	390,386	381,219	371,496	361,369	355,634	355,896	359,277	359,682	366,563	375,184	382,146
광주	194,934	190,564	182,265	173,575	166,050	160,216	158,681	160,160	162,510	166,643	169,323	170,598
대전	206,298	203,047	196,456	188,066	182,534	177,748	175,611	175,299	177,128	180,504	183,969	186,839
울산	152,850	152,136	149,093	145,243	139,050	133,395	129,347	127,890	126,381	125,017	124,434	124,348
세종	14,010	15,085	20,349	27,913	31,217	34,830	38,682	41,793	42,874	44,405	44,986	43,968
경기	1,631,452	1,619,455	1,581,719	1,547,614	1,521,778	1,514,789	1,540,839	1,578,267	1,624,526	1,675,340	1,697,360	1,712,193
강원	166,143	161,943	156,251	151,555	147,031	143,761	141,223	141,957	143,438	145,313	148,090	148,803
충북	190,234	187,429	181,567	175,822	170,821	166,111	166,044	167,138	169,068	171,480	174,007	176,676
충남	252,755	251,274	245,235	237,293	229,776	224,460	221,269	219,479	217,868	217,219	217,954	219,965
전북	206,636	200,480	192,066	183,729	175,888	168,823	163,934	161,593	160,919	162,017	163,118	164,163
전남	194,948	189,720	182,161	176,016	168,674	162,187	157,620	156,331	154,121	154,151	155,623	157,675
경북	310,722	304,347	292,873	281,434	267,853	256,069	248,343	244,452	238,346	237,671	234,950	231,834
경남	406,065	396,924	382,276	366,563	349,289	336,537	327,456	323,274	317,484	313,444	309,696	306,079
제주	66,316	66,311	65,636	65,059	64,578	64,859	65,967	66,771	67,956	69,587	70,599	70,780
계	6,753,562	6,645,443	6,440,523	6,233,258	6,033,136	5,911,907	5,888,694	5,936,059	5,995,656	6,067,283	6,124,074	6,165,441

*출처: 통계청. (2024). 주민등록인구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DA7014S_01

2. 지역별(시·도) 산업구조의 특징

1) 지역별 경제현황(10년)

지역별 경제현황은 지역내총생산(GRDP)를 통해 분석하였다. 2022년 기준 지역내총생산은 서울과 경기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대구, 광주, 대전, 세종, 강원도, 전북, 제주 등에서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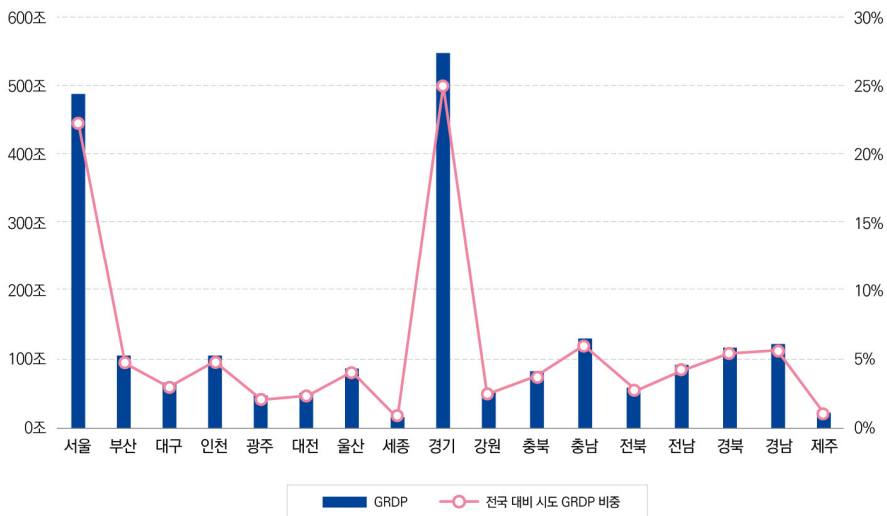


그림 III-1. 시도별 지역내총생산(GRDP)

전반적으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GRDP의 추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구체적인 수치는 표 III-10에 제시되어 있다. 서울은 2012년 334,325십억 원에서 2022년 485,748십억 원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며 부산은 2012년 71,156십억 원에서 2022년 104,297십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대구는 2012년 44,843십억 원에서 2022년 63,189십억 원의 지역내 총생산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인천은 2012년 66,408십억 원에서 2022년 104,497십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광주는 2012년 29,774십억 원의 지역내총생산 규모에서 2022년 45,220십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대전은 2012년 32,877십억 원에서 2022년 49,566십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은

2012년 70,002십억 원에서 2022년 86,255십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타 지자체 대비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2012년 311,415십억 원에서 2022년 546,816십억 원으로 강원도는 2012년 34,557십억 원에서 2022년 52,531십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충청북도는 2012년 45,510십억 원에서 2022년 79,424십억 원으로 지역내 총생산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는 2012년 94,248십억 원에서 2022년 128,488십억 원으로 해당 기간 내 증가율이 높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라북도는 2012년 41,200십억 원에서 2022년 57,793십억 원으로 전라남도는 2012년 64,522십억 원에서 2022년 90,946십억 원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상북도는 2012년 92,989십억 원에서 2022년 115,341십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경상남도는 2012년 98,371십억 원에서 2022년 120,060십억 원으로 지역내총생산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제주의 경우 2012년 13,193십억 원에서 2022년 21,048십억 원으로 지역내총생산 규모가 증가하였다.

한편,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볼 때 2021년 대비 2022년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울산(10.6%), 부산(6.6%), 경남(6.3%), 대전(6.1%)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증가율이 낮은 지역은 경북(1.8%), 충남(2.4%), 강원(2.6%) 등으로 나타났다.

표 III-12. 지역내총생산(명목 GRDP) 추이: 2012~2022년

(단위: 십억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서울	334,325	340,712	350,258	370,168	387,364	404,080	423,742	435,927	444,545	472,040	485,748
부산	71,156	73,319	77,563	82,701	85,536	87,836	89,980	93,012	91,286	97,806	104,297
대구	44,843	46,905	48,818	51,822	53,167	54,833	56,714	58,095	57,725	60,987	63,189
인천	66,408	69,398	74,612	80,138	84,663	88,547	88,735	90,041	89,615	98,671	104,497
광주	29,774	31,263	33,017	34,846	36,819	37,744	39,805	41,520	42,068	43,743	45,220
대전	32,877	33,675	34,931	37,163	39,335	40,537	41,308	43,092	44,393	46,717	49,566
울산	70,002	71,266	70,135	72,854	74,661	75,750	73,648	74,655	69,363	77,974	86,255
세종	-	6,538	8,336	9,262	9,979	10,632	11,102	11,855	12,704	13,972	14,497
경기	311,415	333,380	351,735	381,978	407,438	451,426	479,822	477,413	491,298	529,211	546,816
강원	34,557	36,279	38,776	40,868	43,079	45,512	46,926	48,823	48,657	51,207	52,531
충북	45,510	47,737	50,082	55,192	59,671	65,312	69,637	69,420	69,584	75,289	79,424
충남	94,248	93,939	96,781	101,299	106,869	115,558	115,534	113,488	115,531	125,416	128,488
전북	41,200	43,478	45,152	47,018	47,879	49,348	50,595	51,998	52,820	55,956	57,793
전남	64,522	66,476	66,215	68,878	71,615	73,732	75,425	76,948	78,819	88,384	90,946
경북	92,989	97,212	103,477	103,120	107,441	110,028	108,783	106,805	105,772	113,286	115,341
경남	98,371	99,701	101,056	106,591	109,338	109,492	110,720	114,021	110,847	112,950	120,060
제주	13,193	13,961	15,148	16,947	18,719	19,981	20,051	20,309	19,616	20,188	21,048
계	1,445,391	1,505,239	1,566,088	1,660,844	1,743,575	1,840,349	1,902,528	1,927,421	1,944,644	2,083,795	2,165,717

*출처: 통계청. (2022). 「지역소득」 시도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C81&conn_path=I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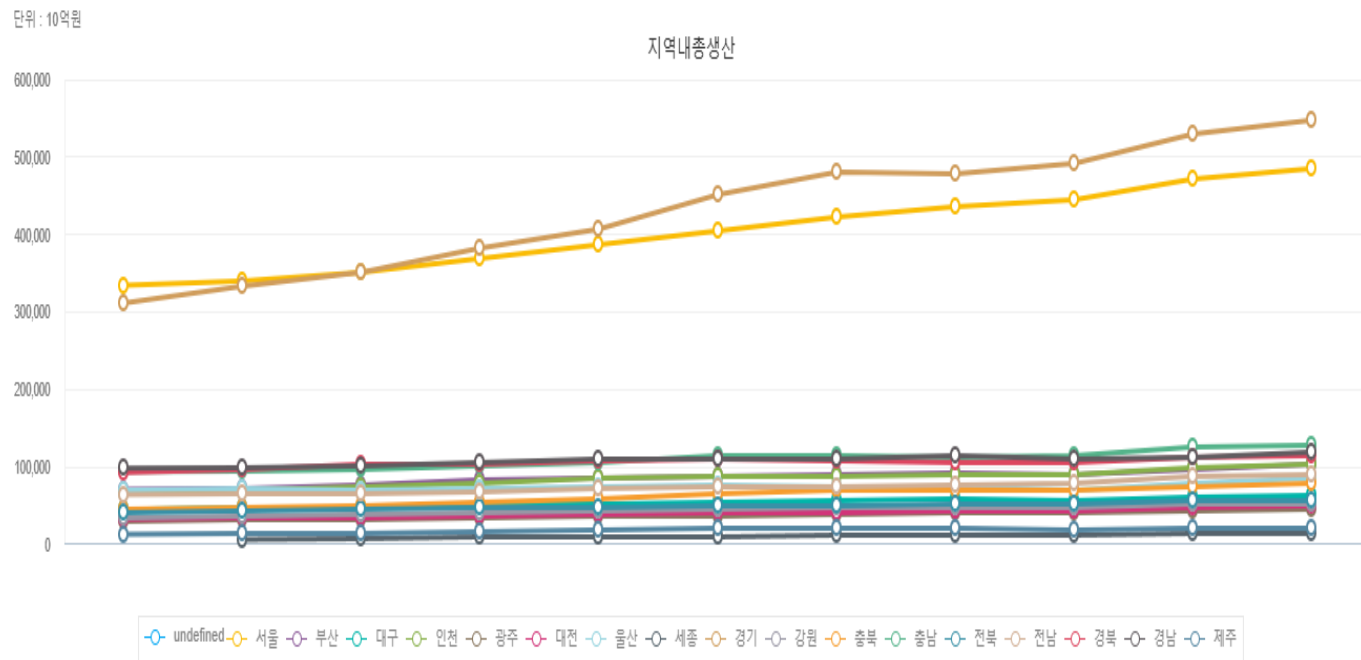


그림 III-2. 지역내총생산(명목 GRDP) 추이: 2012~2022년

한편, 지역별고용조사를 바탕으로 지역의 산업 및 직업별 고용현황을 분석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전북, 전남을 제외하고 모두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의 취업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3년 지역별 취업자의 상위 직업 중 지역별 특색이 나타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문화예술, 스포츠 전문가 등의 직종에서 취업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부산은 매장 판매 및 상품대여직으로 영업직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구의 경우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을 제외하고 보건의료, 복지, 종교 등의 분야에서 취업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한편, 인천의 경우 청소 등 노무직이 높게 나타나는 동시에 운전 및 운송 관련직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광주와 대전의 경우 대구와 마찬가지로 보건의료, 복지, 종교 등의 분야에서 취업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은 기계, 제조 등의 분야에서 취업자의 비중이 높게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종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등에서의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뒤이어 교육서비스업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는 취업자의 규모가 가장 큰 지자체로서 보건, 사회복지, 종교 등 관련직이 2순위로 높게 나타남과 동시에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이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충북, 충남 등에서는 농축산 숙련직이 2위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충남은 운전 및 운송 관련직이 3순위로 취업자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과 전남, 경북 등은 농축산 숙련직이 취업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경남과 제주 또한 농축산 숙련직이 상대적으로 취업자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Ⅲ-13. 지역별 취업자 현황: 2023년 하반기

(단위: 천명)

지역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서울	전 체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문화·예술· 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5,223	907	349	326	317	306
부산	전 체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1,701	242	125	122	102	97
대구	전 체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1,261	166	98	86	80	71
인천	전 체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운전 및 운송 관련 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1,672	265	111	103	85	85
광주	전 체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776	108	56	55	51	47
대전	전 체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803	121	67	54	50	47
울산	전 체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기계 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운전 및 운송 관련 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575	79	48	35	34	32
세종	전 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 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음식점 및 주점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소매업; 자동차 제외
	211	36	27	11	11	8
경기	전 체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7,748	1,201	447	420	393	377
강원	전 체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농·축산 숙련직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867	101	92	80	69	49

지역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충북	전 체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농·축산 숙련직	운전 및 운송 관련 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954	127	113	61	55	51
충남	전 체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농·축산 숙련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1,280	188	182	73	65	58
전북	전 체	농·축산 숙련직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999	169	119	68	64	59
전남	전 체	농·축산 숙련직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1,018	194	105	73	60	59
경북	전 체	농·축산 숙련직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운전 및 운송 관련직
	1,486	288	159	94	85	81
경남	전 체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농·축산 숙련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운전 및 운송 관련직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1,783	244	204	103	93	91
제주	전 체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농·축산 숙련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408	50	42	34	29	25

*출처: 고용노동부. (2024).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재구성

2) 지역별 산업구조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의 시도별 산업 종사자 수를 바탕으로 산업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아래의 표 III-12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시도별 종사자 수이며, 각 산업별 비율은 표 III-13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산업별 종사자 규모를 살펴보면 총 21,583천 명 중 서울은 5,045천 명으로 종사가 규모가 가장 높으며, 경기도(5,029천 명), 경상남도(1,336천 명), 경상북도(1,086천 명), 그리고 부산(1,364천 명) 순으로 산업별 종사자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산업에서 수도권의 종사자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산업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업, 임업 및 어업 분야는 전남이 7천 명으로 종사자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광업은 강원도가 4천 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분야는 전체 산업에서 가장 높은 종사자 수를 보이고 있는데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1,282천 명으로 가장 높게 집중되어 있고, 서울과 경상남도, 경상북도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은 경기도에 9천 명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도 경기도에 28천 명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설업은 서울이 384천 명, 경기도에 265천 명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부산, 경상남도에서도 종사자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매 및 소매업 분야에서는 서울 842천 명, 경기도에 677천 명이 분포하고 있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운수 및 창고업은 서울 259천 명, 경기도에 244천 명 등으로 비수도권 대비 높은 종사자 수를 보이고 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도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보통신업은 서울에 370천 명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경기도에도 122천 명으로 나타났으며, 금융 및 보험업은 서울에 263천 명으로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 부동산업은 서울에 155천 명, 경기도에 124천 명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서울에 494천 명, 경기도에 277천 명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은 서울에 446천 명, 경기도에 212천 명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은 서울에 148천 명, 경기도에 136천 명으로 집중되어 있다. 교육서비스업은 경기도에 361천 명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서울에도 334천 명으로 종사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경기도에 466천 명, 서울에도 많은 산업체가 있다.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서울에 77천 명, 경기도에 95천 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천명인 서비스업은 서울에 174천 명, 경기도에 180천 명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다.

한편, 지역 내 산업별 비중을 살펴보면 서울은 도매 및 소매업이 16.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9.8%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4%), 숙박 및 음식점업(8.2%),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8.8%)도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부산은 도매 및 소매업이 15.0%, 제조업이 14.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1.8%), 숙박 및 음식점업(10.1%), 교육서비스업(7.2%)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제조업이 18.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매 및 소매업(14.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12.2%로 뒤를 잇고 있다. 이 외에도 숙박 및 음식점업(9.6%), 교육서비스업(8.6%) 등도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인천은 제조업이 22.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매 및 소매업이 12.6%로 뒤를 잇고 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1.4%), 숙박 및 음식점업(9.4%), 운수 및 창고업(7.7%)도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광주는 제조업이 1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매 및 소매업(13.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13.3%로 나타나고 있으며 건설업(9.5%), 숙박 및 음식점업(9.1%)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전은 도매 및 소매업(14.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11.5%, 제조업이 10.2%, 순으로 산업별 종사자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은 제조업이 3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이 9.0%로 뒤를 잇고 있다. 도매 및 소매업(9.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2%), 교육서비스업(7.0%), 건설업(6.8%)도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세종은 제조업이 1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5.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9.3%), 도매 및 소매업(8.0%), 건설업(4.7%)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제조업이 25.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매 및 소매업이 13.5%로 뒤를 잇고 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9.3%), 숙박 및 음식점업(8.9%), 교육서비스업(7.2%)이 종사자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14.8%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매 및 소매업(12.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1.3%), 제조업(9.7%), 교육서비스업(8.4%)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충북은 제조업이 30.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매 및 소매업이 10.5%로 뒤를 잇고 있다. 이 외에도 숙박 및 음식점업(9.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9.1%), 건설업(6.0%)의 종사자 규모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충남은 제조업이 32.1%로, 도매 및 소매업(10.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9.4%), 숙박 및 음식점업(9.3%), 건설업(5.4%) 순으로 종사자 규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제조업이 16.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13.5%로 뒤를 잇고 있다. 도매 및 소매업(13.1%), 숙박 및 음식점업(9.8%), 교육서비스업(8.9%)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제조업이 1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매 및 소매업이 12.3%로

뒤를 잇고 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1.8%), 건설업(10.6%), 숙박 및 음식점업(10.0%)도 주요 산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북은 제조업이 28.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매 및 소매업이 11.3%로 뒤를 잇고 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0.3%), 숙박 및 음식점업(9.7%), 교육서비스업(7.3%)도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경남은 제조업 분야의 종사자가 총 산업종사자의 29.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매 및 소매업(11.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0.2%), 숙박 및 음식점업(10.1%), 교육서비스업(7.1%) 순으로 종사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19.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매 및 소매업(15.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0.0%), 교육서비스업(7.7%), 건설업(7.2%)도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표 III-14. 시도별 산업별 종사자수(2020)

(단위: 천명)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산업	21,583	5,045	1,364	894	1,051	582	618	494	122	5,029	628	707	937	682	739	1,086	1,336	270
농업, 임업 및 어업	47	1	4	0	0	0	0	0	0	6	4	3	5	5	7	5	4	3
광업	14	0	0	0	1	0	0	0	0	1	4	1	1	1	3	1	1	0
제조업	3,985	246	202	162	238	84	63	170	20	1,282	61	213	301	115	119	304	394	12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9	6	4	3	4	2	2	2	1	9	4	2	7	3	8	7	5	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15	9	7	4	7	2	4	2	1	28	5	5	7	5	7	9	10	1
건설업	1,432	384	97	60	58	55	45	34	6	265	52	43	51	46	78	67	72	19
도매 및 소매업	2,963	842	205	133	132	79	87	48	10	677	79	74	101	89	91	122	153	41
운수 및 창고업	1,092	259	102	44	81	26	30	23	4	244	27	29	38	29	37	47	58	15
숙박 및 음식점업	2,024	413	137	86	99	53	57	44	11	445	93	65	87	67	74	105	135	53
정보통신업	621	370	17	13	10	9	16	4	2	122	8	6	6	7	8	8	10	5
금융 및 보험업	681	263	48	31	23	21	19	12	2	97	22	15	18	24	20	24	34	9
부동산업	511	155	34	23	23	19	14	8	4	124	11	12	14	12	11	15	26	5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60	494	50	29	36	20	52	17	8	277	18	22	24	22	17	30	37	8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109	446	70	37	47	27	38	16	4	212	23	29	38	20	24	29	35	1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19	148	47	31	41	20	29	15	19	136	44	34	37	39	49	58	57	15
교육서비스업	1,580	334	98	77	73	50	55	35	15	361	53	51	67	60	54	80	95	2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156	423	161	109	120	78	71	40	11	466	71	64	88	92	87	112	136	2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81	77	20	15	18	11	10	7	2	95	21	13	13	13	15	18	21	1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825	174	59	39	40	26	26	17	4	180	28	26	35	32	31	43	53	12

표 Ⅲ-15. 시도별 산업별 종사자(2020): 지역 내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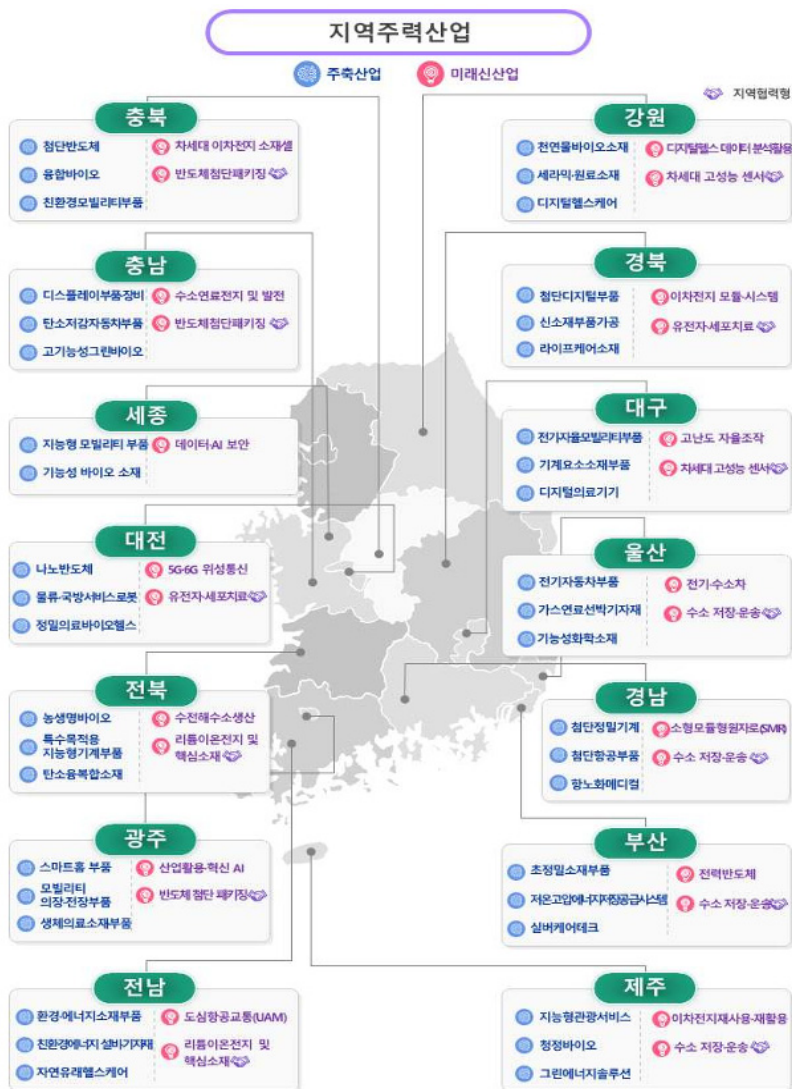
(단위: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농업, 임업 및 어업	0.0%	0.3%	0.0%	0.0%	0.1%	0.1%	0.1%	0.1%	0.1%	0.6%	0.4%	0.6%	0.7%	1.0%	0.5%	0.3%	1.1%
	18	18	18	19	18	18	18	18	18	18	17	18	17	17	18	18	16
광업	0.0%	0.0%	0.0%	0.1%	0.0%	0.0%	0.1%	0.1%	0.0%	0.7%	0.2%	0.1%	0.1%	0.3%	0.1%	0.0%	0.1%
	19	19	19	18	19	19	19	19	19	17	19	19	19	19	19	19	19
제조업	4.9%	14.8%	18.1%	22.6%	14.4%	10.2%	34.4%	16.1%	25.5%	9.7%	30.2%	32.1%	16.8%	16.1%	28.0%	29.5%	4.4%
	11	2	1	1	1	3	1	1	1	4	1	1	1	1	1	1	8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0.1%	0.3%	0.3%	0.4%	0.3%	0.3%	0.5%	0.5%	0.2%	0.6%	0.2%	0.7%	0.5%	1.1%	0.7%	0.3%	0.4%
	17	17	17	17	17	17	16	17	17	19	18	15	18	15	17	17	18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0.2%	0.5%	0.5%	0.7%	0.4%	0.6%	0.4%	0.5%	0.6%	0.8%	0.8%	0.7%	0.8%	1.0%	0.9%	0.7%	0.4%
	16	16	16	16	16	16	17	16	16	16	16	16	16	18	15	16	17
건설업	7.6%	7.1%	6.7%	5.5%	9.5%	7.2%	6.8%	4.7%	5.3%	8.2%	6.0%	5.4%	6.8%	10.6%	6.1%	5.4%	7.2%
	6	7	6	7	4	7	6	8	7	6	6	6	6	4	6	6	5
도매 및 소매업	16.7%	15.0%	14.9%	12.6%	13.6%	14.1%	9.6%	8.0%	13.5%	12.5%	10.5%	10.7%	13.1%	12.3%	11.3%	11.5%	15.1%
	1	1	2	2	2	1	2	6	2	2	2	2	3	2	2	2	2
운수 및 창고업	5.1%	7.5%	4.9%	7.7%	4.5%	4.8%	4.6%	3.0%	4.9%	4.3%	4.1%	4.0%	4.2%	5.0%	4.4%	4.3%	5.5%
	10	5	7	5	8	9	7	12	8	9	9	8	9	8	8	7	7
숙박 및 음식점업	8.2%	10.1%	9.6%	9.4%	9.1%	9.2%	9.0%	9.1%	8.9%	14.8%	9.1%	9.3%	9.8%	10.0%	9.7%	10.1%	19.5%
	5	4	4	4	5	4	3	5	4	1	3	4	4	5	4	4	1
정보통신업	7.3%	1.3%	1.4%	1.0%	1.6%	2.5%	0.7%	1.4%	2.4%	1.2%	0.8%	0.7%	1.0%	1.0%	0.8%	0.8%	2.0%
	7	15	15	15	15	13	15	15	13	15	15	17	15	16	16	15	15
금융 및 보험업	5.2%	3.5%	3.4%	2.2%	3.6%	3.1%	2.5%	1.7%	1.9%	3.5%	2.1%	1.9%	3.5%	2.7%	2.2%	2.5%	3.3%
	9	11	11	13	10	12	12	14	14	11	12	12	10	11	12	12	12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부동산업	3.1%	2.5%	2.5%	2.2%	3.2%	2.3%	1.5%	3.4%	2.5%	1.8%	1.7%	1.5%	1.8%	1.4%	1.4%	2.0%	2.0%
	13	13	13	12	13	14	13	9	12	14	14	13	14	14	14	13	1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8%	3.6%	3.2%	3.4%	3.5%	8.4%	3.4%	6.1%	5.5%	2.9%	3.1%	2.6%	3.2%	2.3%	2.7%	2.8%	2.9%
	2	10	12	11	11	6	8	7	6	13	11	11	11	12	10	10	13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8.8%	5.1%	4.2%	4.5%	4.6%	6.2%	3.3%	3.3%	4.2%	3.6%	4.2%	4.1%	2.9%	3.3%	2.7%	2.6%	4.4%
	3	8	9	8	7	8	10	10	9	10	8	7	12	10	11	11	1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9%	3.5%	3.5%	3.9%	3.4%	4.6%	3.1%	15.9%	2.7%	7.0%	4.8%	4.0%	5.7%	6.6%	5.3%	4.3%	5.7%
	14	12	10	9	12	10	11	2	11	7	7	9	7	7	7	8	6
교육서비스업	6.6%	7.2%	8.6%	7.0%	8.6%	9.0%	7.0%	11.9%	7.2%	8.4%	7.3%	7.1%	8.9%	7.3%	7.3%	7.1%	7.7%
	8	6	5	6	6	5	5	3	5	5	5	5	5	6	5	5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4%	11.8%	12.2%	11.4%	13.3%	11.5%	8.2%	9.3%	9.3%	11.3%	9.1%	9.4%	13.5%	11.8%	10.3%	10.2%	10.0%
	4	3	3	3	3	2	4	4	3	3	4	3	2	3	3	3	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5%	1.5%	1.6%	1.7%	1.9%	1.7%	1.4%	1.8%	1.9%	3.4%	1.9%	1.4%	1.9%	2.0%	1.7%	1.6%	3.9%
	15	14	14	14	14	15	14	13	15	12	13	14	13	13	13	14	1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4%	4.3%	4.4%	3.8%	4.5%	4.1%	3.4%	3.2%	3.6%	4.5%	3.7%	3.7%	4.7%	4.2%	4.0%	4.0%	4.4%
	12	9	8	10	9	11	9	11	10	8	10	10	8	9	9	9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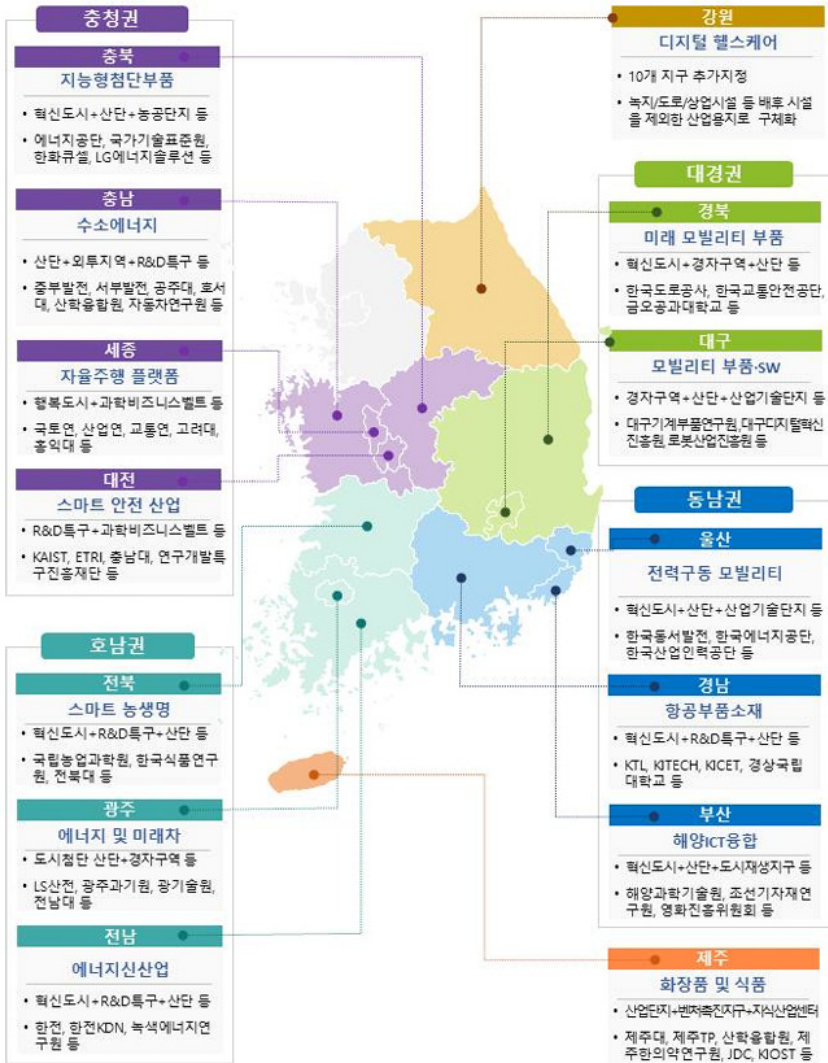
한편, 지역별 특화산업과 지역산업진흥계획 등에 따른 지역 산업구조의 재편 등에 따른 일자리 수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별 특화산업,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주력 사업 등의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기부는 ‘2023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에 근거하여 2,86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3,623명의 신규 고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른 지자체별 지역주력사업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부산의 주력사업은 초정밀소재부품, 저온고압에너지저장공급시스템, 실버케어테크, 전력반도체, 수소저장운송 등이며 특화산업은 해양 ICT융합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대구는 주력 사업은 전기자동차모빌리티부품, 기계요소소재부품, 디지털의료기기 등이며, 특화산업은 모빌리티부품 및 SW산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광주는 스마트홈부품, 모빌리티 의장-전장부품, 생체 의료소재부품, 산업활용, 혁신 AI, 반도체첨단 패키징 등이 주력사업이며, 에너지 및 미래차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대전의 경우 나노반도체, 물로국방서비스로봇, 정밀의료바이오헬스, 위성통신, 유전자세포치료 등을 주력사업으로 스마트안전산업을 특화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울산은 전기자동차부품, 가스연료선박기자재, 기능성화학소재, 전기수소차, 수소저장운송 등의 주력사업, 전력구동 모빌리티를 특화사업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세종은 지능형 모빌리티부품, 기능성 바이오 소재, 데이터AI 보안 등을 주력사업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자율주행플랫폼 특화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강원도는 천연물바이오소재, 세라믹원료소재, 디지털헬스케어, 디지털헬스데이터 분석 등 디지털 헬스케어 등의 의료산업을 특화 및 주력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충북은 첨단반도체, 융합바이오, 친환경모빌리티부품, 차세대 이차전지소재셀, 반도체첨단패키징이 주력산업으로 지능형첨단부품이 특화사업으로 육성될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주력사업으로 디스플레이부품장비, 탄소저감자동차부품, 고기능성그린바이오, 수소연료전지 및 발전, 반도체첨단패키징을 제시하고 있으며 수소에너지를 특화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전북은 농생명바이오, 특수목적용 지능형 기계부품, 탄소융복합소재, 수전해수소생산, 리튬이온전지 및 핵심소재 등이 주력사업이며 스마트농생명을 특화사업으로 제시하고 있어 농생명분야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남의 경우 환경 및 에너지 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환경에너지소재부품, 친환경에너지설비 기자재, 자연유래헬스케어, 도심항공교통, 리튬이온전지 및 핵심소재 등이 주력사업으로, 에너지 신산업이 특화산업으로 제시되었다. 경북은 첨단디지털부품, 신소재부품가공, 라이프케어 소재, 이차전지모듈시스템, 유전자세포치료 등을 주력사업으로 미래 모빌리티부품이 특화사업으로 자동차

관련 산업이 육성될 것으로 보이며 경남은 첨단경밀기계, 첨단항공부품, 항노화메디컬, 소형모듈형원자로, 수소저장 운송 등이 주력산업, 항공부품소재가 특화사업으로 항공관련 산업이 강조되는 양상이다. 제주는 관광과 화장품, 식품 등이 강조되는데 지능형관광서비스, 청정바이오, 그린에너지솔루션, 이차전지재사용, 수소저장운송이 주력사업으로 화장품 및 식품이 특화산업으로 제시되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3). 산업부·중기부 2023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 공동개최.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3f49a5a8c/166861/view?mno=&pageIndex=1&rowPageC=0&displayAuthor=&searchCategory=0&startDtD=2023-02-27&endDtD=2023-02-2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3f49a5a8c/166861/view?mno=&pageIndex=1&rowPageC=0&displayAuthor=&searchCategory=0&startDtD=2023-02-27&endDtD=2023-02-2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

그림 III-3. 지역주력산업 현황(2023)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3). 산업부 중기부 2023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 공동개최.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3f49a5a8c/166861/view?mno=&pageIndex=1&rowPageC=0&displayA>
 uthor=&searchCategory=0&startDtD=2023-02-27&endDtD=2023-02-2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

그림 III-4. 지역혁신클러스터 특화산업(안)

3. 청년지역인재육성을 통한 시도별 일자리 창출방안

시도별 향후 일자리 창출방안은 지역인재 육성방안과 연계되어 추진될 때 청년들의 지역 정주를 전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제, 인구, 산업적 특성 등의 현황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통해 인재육성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인구특성은 인구 감소위험을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청년인구 비중이 높은 곳과 낮은 곳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경제적 특성의 경우 GRDP와 산업별 종사자 수, 직업별 취업자 등을 포함하였다. 청년인구 특성과 경제적 특성에서 상, 중, 하로 구분하는 방식은 일차적으로 전 지역의 평균값을 상회하는 지역을 상으로 구분하고, 서울, 경기 등의 극단치를 제외하고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값을 구하여 평균 이상, 이하인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등급을 부여하였다.

한편, 지역인재육성은 지역의 산업육성계획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주력사업을 고려함으로써 지역별 산업진흥계획, 특화산업 등과 연계한 지역인재 육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유사한 측면에서 청년층의 지역인재 육성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 기본계획’이 추진 중에 있다. 이는 지역인재 양성은 지역 내 대학과 연계되어 추진되며, 지방대학에서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 내 정주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지역산업 및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지역인재 양성의 주요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한다. 해당 계획에서도 주력산업, 특화산업 등을 고려한 인재 양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인구감소위험도가 높고, 청년인구가 낮은 지역들은 지역 내 총생산의 규모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내총생산이 높다는 것은 해당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성장규모 등을 의미하고 있어 해당지역의 청년인구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즉, 지역의 경제지표는 개인의 기대소득을 유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층의 이동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구감소위험도와 청년인구비중, 지역내총생산이 낮은 지역은 청년층의 이동을 야기할 수 있고, 이는 다시 인구감소 위험도를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지역정주형 인재를 양성할 필요성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아래의 표 III-16을 보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역특화산업에 제한되지 않고 다양한 산업의 인재를 육성하는데 유리한 인구, 경제 및 산업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수도권에 위치한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산업에 대한 인재 육성보다는 다양한 부문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 또한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인구경제지표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는 부산, 인천 등은 기존 산업은 유지하되, 향후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감소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 산업에서 주요 주축산업은 유지하고 미래 신산업과 관련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와 관련된 수요가 증가할 것을 기대할 때 지역인재 양성도 미래 신산업과 주요산업의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한편, 인구감소위험도는 낮으나 청년인구, 경제지표 등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광주, 대전 등은 경제성장을 위한 미래 및 신산업에 투자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지역인재 육성도 지역주력사업, 특화산업에 맞추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외에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인구감소 위험도가 높은 지역은 경제지표도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현재의 산업구조가 인구 유입의 유인체계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 지역은 청년인구의 유출 방지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신산업과 관련된 투자와 일자리 양성이 가장 높게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인구, 경제, 산업적 특성과 이에 따른 인재양성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 III-16과 같다.

종합하면, 각 지역의 산업발전계획과 대학 자원 간의 연계를 통해 지역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관련 산업 분야의 직종에도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에서는 청년층의 지역 정주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마련,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16. 시도별 특성 종합 및 인재육성방안

시도	인구 감소 위험	청년 인구 비중	경제 및 산업특성					인재육성방안
			GR DP	산업별 종사자	고용수준	주력산업	특화산업	
서울	저위험	상	상	도소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조리 및 음식서비스직, 문화예술 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매장 판매 및 상품대여직,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	-	수도권은 인구, 경제적 특성이 유리하여 다양한 부문의 지역인재육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특징적으로 연구개발업, 광고, 법무, 회계, 경영컨설팅, 엔지니어링 기술 등의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으므로 이를 유지하고 문화예술체육 관련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된 인재 육성 등을 전략으로 세울 필요
부산	중위험	중	중	도소매업, 제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 및 창고업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매장 판매 및 상품대여직, 조리 및 음식서비스직, 교육전문가 및 관련직	조정밀소재부품 저온고압에너지저장 공급시스템 실버케어테크 전력반도체 수소저장운송	해양CT융합	인구, 경제지표의 현황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GDP개선정도가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산업을 유지하되 미래 신산업과 관련된 인재, 일자리 창출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예를 들면, 제조업 산업별 종사자 비중이 높아 기존의 산업구조를 유지하는 경우 주력산업에 대한 인재육성을 고려할 수 있음. 또한 해양CT융합과 관련된 제조업 분야 등을 강화할 수 있음

시도	인구 감소 위험	청년 인구 비중	경제 및 산업특성					인재육성방안
			GRDP	산업별 종사자	고용수준	주력산업	특화산업	
대구	중위험	하	하	제조업, 도소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청소 및 경비관련 단순노무직, 매장 판매 및 상품대여직, 운전 및 운송 관련 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전기자율모빌리티 부품 기계요소소재부품 디지털의료기기	모빌리티 부품/ SW	전반적으로 인구감소위험도는 낮지만, 청년인구비중이 낮아 향후 인구감소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또한, GRDP 규모 및 성장률이 전국대비 낮음. 이를 고려할 때 기존 제조업 생산, 공정, 정비 등에서의 ICT기술 융합 등이 필요. 이에 이와 관련된 인재를 육성하여 청년인구가 정주하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 주력 또는 특화산업을 고려할 때에는 자동차SW기술과 관련된 인재(미래형자동차, ICT전문인력) 육성 등을 고려할 수 있음
인천	중위험	중	중	제조업, 도소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송 및 창고업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청소 및 경비관련 단순 노무직, 매장 판매 및 상품대여직,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	-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이점과 인구, 경제 지표 등은 보통 수준이라는 점을 볼 때 청년지역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 항만, 공항 등의 운송과 관련된 고용, 산업별 종사자 등이 높아 연관산업과 관련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재육성 방향도 유사한 측면에서 수행될 필요가 있음

시도	인구 감소 위험	청년 인구 비중	경제 및 산업특성					인재육성방안
			GR DP	산업별 종사자	고용수준	주력산업	특화산업	
광주	저위험	하	하	제조업, 도소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교육전문가 및 관련 직, 조리 및 음식서비스직	스마트홈부품, 모바일 리티 의장-전장부품, 생체의료소재부품, 산업활용, 혁신 AI, 반도체첨단 패키징	에너지 및 미래차	인구감소위험은 낮으나 청년인구의 수도권 이탈 방지,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신산업에 보다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이와 관련된 인재를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대전	저위험	하	하	도소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보건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교육전문가 및 관련 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나노반도체, 물로국 방서비스로봇, 정밀 의료바이오헬스, 위성통신, 유전자세포 치료	스마트안전사업	인구감소위험은 낮으나 청년인구의 수도권 이탈, 경제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신산업에 투자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지역인재 육성도 지역주력사업, 특화 산업에 맞추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시도	인구 감소 위험	청년 인구 비중	경제 및 산업특성					인재육성방안
			GR DP	산업별 종사자	고용수준	주력산업	특화산업	
울산	저위험	하	중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기계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운전 및 운송 관련 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매장판매 및 상품대여직	전기자동차부품, 가스연료선박기자재, 기능성화학소재, 전기수소차, 수소저장 운송	전력구동 모빌리티	인구감소위험은 낮으나 청년인구의 지역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함. 기계제조 및 관련 기계조작직 고용수준이 높고 제조업 종사자가 많음. 기존의 산업은 향후 모빌리티, 전기수소차 등과 관련된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므로 이와 관련된 인재 육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세종	-	하	하	제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음식업 및 주점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소매업	지능형 모빌리티부품, 기능성 바이오 소재 데이터AI보안	자율주행플랫폼	세종은 전반적으로 인구 및 경제지표가 낮은 수준이나 지역내 총생산의 경우 규모는 작으나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서비스업이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음. 다만, 향후 산업발전에 대한 계획은 모빌리티 관련 기술지원, 데이터 처리 및 분석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지역인재육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시도	인구 감소 위험	청년 인구 비중	경제 및 산업특성					인재육성방안
			GR DP	산업별 종사자	고용수준	주력산업	특화산업	
경기	저위험	상	상	제조업, 도소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보건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매장판매 및 상품대여직, 공학전문가 및 기술직	-	-	수도권은 인구, 경제적 특성이 유리하여 다양한 부문의 지역인재육성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특징적으로 건축, 화학, 금속 재료, 기계 및 로봇공학, 환경공학 등의 공학전문가 및 기술직의 취업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제조업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향후 이와 관련된 인재 육성 등을 전략으로 세울 필요
강원	초고위험	하	하	숙박 및 음식점업, 도소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농축산관련직, 창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매장판매 및 상품대여직	천연물바이오소재 세라믹원료소재 디지털헬스케어 디지털헬스데이터 분석	디지털 헬스케어	강원도는 인구 및 경제지표의 수준이 낮은 지역으로서, 향후 산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관련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소멸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력산업 및 특화산업 등에서 제시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관련된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청년 인구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내 대학과 연계하여 지역인재의 고용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시도	인구 감소 위험	청년 인구 비중	경제 및 산업특성					인재육성방안
			GRDP	산업별 종사자	고용수준	주력산업	특화산업	
충북	고위험	하	중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농축산숙련직,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첨단반도체, 융합바이오, 친환경모빌리티부품, 차세대 이차전지소재셀, 반도체 첨단패키징	지능형첨단부품	충청북도 지역은 경제지표는 보통 수준이나 인구감소위험과 청년인구비중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인구 유출 방지와 지역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청년들의 정주를 건인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 2차산업 비중이 높은 측면을 갖고 있어 지역의 산업구조는 유지하되 주력산업, 특화산업 등을 고려한 인재 양성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충남	고위험	하	중	제조업, 도소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경영 및 회계 관련사무직, 농축산 숙련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보건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디스플레이부품장비, 탄소저감자동차부품, 고기능성그린바이오, 수소연료전지 및 발전, 반도체 첨단패키징	수소에너지	충청남도 지역은 경제지표는 보통 수준이나 인구감소위험과 청년인구비중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인구 유출 방지와 지역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청년들의 정주를 건인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지역은 2차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산업구조로, 제조업 관련 종사자 규모가 높고, 이는 주력산업, 특화산업과 연계되어 향후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특화산업 등을 고려한 연구개발인력 및 산업기술인력양성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시도	인구 감소 위험	청년 인구 비중	경제 및 산업특성					인재육성방안
			GR DP	산업별 종사자	고용수준	주력산업	특화산업	
전북	초고위험	하	하	제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농축산숙련직,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보건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조리 및 음식서비스직	농생명바이오, 특수 목적용 지능형 기계 부품, 탄소융복합소재, 수전해수소생산, 리튬이온전지 및 핵심소재	스마트농생명	인구감소 및 경제지표 등 청년인구의 유입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고용수준은 농축산숙련직이 높고, 청년들이 귀농, 귀향 등으로 지역 내 유입되었을 때 정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략 마련 필요. 특화산업이 스마트 농생명이라는 점에서 특히 농업, 식품, 연구 등을 포괄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등 스마트 농생명과 관련된 인재육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전남	초고위험	하	중	제조업, 도소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농축산숙련직,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매장판매 및 상품대여직, 조리 및 음식서비스직	환경에너지소재부품, 친환경에너지설비 기자재, 자연유래헬스케어, 도심항공교통, 리튬이온전지 및 핵심소재	에너지신산업	고용수준은 농축산 숙련직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별 종사자 규모는 제조업이 가장 높게 나타남. 농축산숙련직의 경우 관련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제조업의 경우 주력산업 및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므로 에너지 신산업, 미래형 운송기기 분야 인재 양성 등이 필요해 보임

시도	인구 감소 위험	청년 인구 비중	경제 및 산업특성					인재육성방안
			GR DP	산업별 종사자	고용수준	주력산업	특화산업	
경북	초고위험	하	중	제조업, 도소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농축산숙련직,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조리 및 음식서비스 직,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첨단디지털부품, 신소재부품가공, 라이프케어 소재, 이차전지모듈시스템, 유전자세포치료	미래 모빌리티부품	제조업 분야의 종사자 비중이 높으며 농축산숙련직의 고용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기존 산업이 제조업 중심으로 향후 주력산업과 특화산업의 제조업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며, 이에 지역인재 양성은 모빌리티 및 신소재 관련 기술개발 인재양성 등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경남	고위험	하	중	제조업, 도소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농축산 숙련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 직, 운전 및 운송 관련직, 매장판매 및 상품 대여직	첨단경밀기계, 첨단항공부품, 항노화메디컬, 소형모듈형원자로, 수소저장 운송	항공부품소재	경남지역은 제조업 중심 기반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 비해 농축산숙련직의 고용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제조업 경기 둔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항공부품제조기업의 생산선향상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시도	인구 감소 위험	청년 인구 비중	경제 및 산업특성					인재육성방안
			GR DP	산업별 종사자	고용수준	주력산업	특화산업	
제주	-	하	하	숙박 및 음식점업, 도 소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건설업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농축산 숙련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 직,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보건 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지능형관광서비스, 청정바이오, 그린에너지솔루션, 이차전지재사용, 수소저장 운송	화장품 및 식품	산업별 종사자는 관광업 관련 사업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기존 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향후 특화 및 주력사업의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인재육성은 산업구조의 전반적 변화를 고려한 스마트관광, 청정바이오 및 에너지 관련 인재 양성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제4장 ‘지자체, 기업, 대학’의 정책관계자의 청년 지역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 인식도 조사

- 1. 조사개요
- 2.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정책으로서 역대 정부의 대학정책 평가
- 3. 비수도권(14개 시도)의 지역별 특화인재양성 및 관련사업의 중요도-성과도(IPA)
- 4.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세부목표’에 대한 계층적 분석(AHP) 및 중요도-성과도(IPA)분석
- 5. 청년 지역인재육성 및 일자리 창출 연계된 중앙 정부의 부처별 지원사업에 대한 중요도-성과도(IPA)
- 6. 시사점

‘지자체, 기업, 대학’의 정책관계자의 청년 지역인재육성과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 인식도 조사

본 장에서는 앞선 지역별 산업특성과 청년 경제활동 인구의 특징분석에 이어 ‘지자체, 기업, 대학’의 정책관계자의 청년 지역인재육성과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 인식도 조사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지자체 공무원, 기업인, 대학관계자는 지역 청년인재육성과 일자리 창출 정책의 주요 정책관계자로 지금까지 추진된 정책현황과 앞으로의 추진될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1. 조사개요

‘지자체, 기업, 대학’의 정책관계자의 청년 지역인재육성과 일자리 창출관련 정책 인식도 조사는 위탁조사 업체를 통해 온라인 조사로 추진되었다.⁶⁾ 구체적으로 대학관계자 72명, 기업관계자 71명, 공무원 32명이 응답하였으며, 대학 관계자와 지자체 관계자는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로부터 추천받은 명단에서 연쇄표집을 하였으며, 기업인의 경우 위탁조사 업체가 보유한 패널자료를 활용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4년 7월 4일부터 8월 2일까지 약 1개월간 실시되었다.

조사 내용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역대 정부의 대학정책,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의 세부 목표에 대한 계층적 분석(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교육부의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 중 비수도권(14개 시도)의 지역별 특화인재양성 분야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중요도-성과도(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조사, 청년 지역인재육성 및 일자리 창출의 세부목표인 ‘지역정주형 인재양성’,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직업·평생교육의 혁신’, ‘지역현안 해결’에 대한 중요도-성과도

6) 본 설문은 원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과제관리번호: 202406-HR-고유-011)를 통과하였다.

(IPA), 청년 지역인재육성 및 일자리 창출 연계된 중앙정부의 부처별 지원사업에 대한 중요도-성과도(IPA)이다.

특히 중요도-성과도(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조사는 중요도와 실행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IPA 매트릭스 분석이 이루어진다. IPA 매트릭스는 유지강화 (Ⅰ사분면), 중점개선(Ⅱ사분면), 점진개선(Ⅲ사분면), 지속유지(Ⅳ사분면) 네 영역으로 구분된다(그림 Ⅳ-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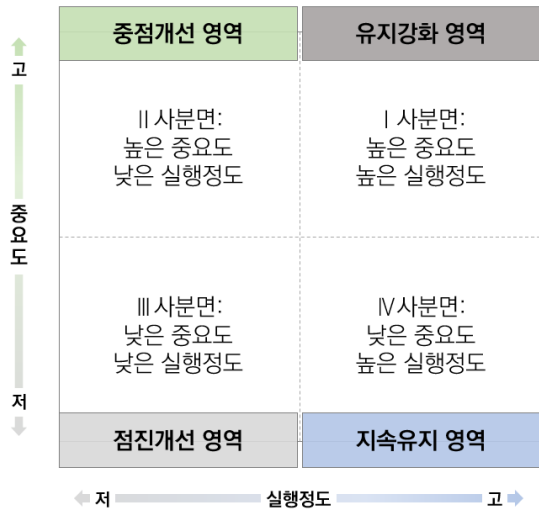


그림 Ⅳ-1. IPA 매트릭스

Ⅰ 사분면은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영역으로 중요도와 실행도 모두 높은 상태를 계속 유지 및 강화해야 할 영역에 해당한다. Ⅱ사분면은 중요도는 높으나 그 실행 정도가 낮은 상태를 보이는 위치이다. 이는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할 영역에 해당한다. Ⅲ사분면은 중요도와 실행 정도가 모두 낮은 상태를 나타내는 위치이다. 이 위치는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할 영역으로 분류된다. Ⅳ사분면은 중요도는 낮은 반면, 실행 정도는 높은 위치이다. 이는 지속유지 영역에 해당한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특성은 표 Ⅳ-1과 같다. 전체 응답자 175명 중 남성이 117명으로 66.9%이며 여성은 58명으로 33.1%이다. 연령대는 30대 38.9%, 40대 30.3%, 50대 23.4%, 60대 7.4%이다. 근무 지역은 수도권 28.6%, 전라권 36.0%, 충청권 27.4%, 강원

권 3.4%, 제주권 4.6%이다. 학력은 전문대학/대학교 졸업 58.9%, 석사 수료/졸업 19.4%, 박사 수료/졸업 21.7%이다. 응답자의 소속은 대학관계자 41.1%, 지역기업의 관계자 40.6%,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8.3%이고, 경력은 3년 이상 ~ 6년 미만 22.9%, 6년 이상 77.1%이다.

표 IV-1. 응답자 특성

		사례수	%
전체		(175)	100.0
성별	남자	(117)	66.9
	여자	(58)	33.1
연령대	30대	(68)	38.9
	40대	(53)	30.3
	50대	(41)	23.4
	60대	(13)	7.4
근무 지역	수도권	(50)	28.6
	전라권	(63)	36.0
	충청권	(48)	27.4
	강원권	(6)	3.4
	제주권	(8)	4.6
학력	전문대학/대학교 졸업	(103)	58.9
	석사 수료/졸업	(34)	19.4
	박사 수료/졸업	(38)	21.7
소속	대학관계자	(72)	41.1
	지역기업의 관계자	(71)	40.6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2)	18.3
경력	3년 이상 ~ 6년 미만	(40)	22.9
	6년 이상	(135)	77.1

2.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정책으로서 역대 정부의 대학정책 평가

역대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노무현 정부 6.01, 이명박 정부 6.43, 박근혜 정부 6.30, 문재인 정부 6.22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실시한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았고 노무현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인지도는 가장 낮았다.

표 IV-2. 역대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정책에 대한 인지도(9점 척도)

	사례 수	노무현 정부 (2003~2008)	이명박 정부 (2008~2013)	박근혜 정부 (2013~2017)	문재인 정부 (2017~2022)
전체	(175)	6.01	6.43	6.30	6.22
소속					
대학관계자	(72)	6.32	6.86	6.99	6.97
지역기업의 관계자	(71)	5.82	6.28	5.87	5.72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2)	5.72	5.78	5.72	5.66

역대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대한 각 항목별 회고적 평가 결과를 보면, 우선 노무현 정부에서는 상대적으로 ‘사업관리의 적절성’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모두 ‘정책이해관계로서 사업 정책의 정당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3. 역대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정책에 대한 회고적 평가(9점 척도)

	사례 수	정책 이해관계로 사업 정책의 정당성	지역의 견수령의 적구성 및 지역특성에 따른 차별적 계획 수립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정책 기획, 의견수령의 충실성 및 협업에 대한 적극성	예산 지원 수준의 적절성	추진 과정의 충실성	모니터링 및 상황변화 대응성	정책 홍보·소통의 충실성	사업 관리의 적절성	정책목표 달성 가능성	정책 효과성
노무현 정부 (2003~2008)												
전체	(175)	5.27	4.27	4.29	4.31	4.39	4.43	4.38	4.40	5.34	4.41	4.32
소속												
대학관계자	(72)	5.51	4.54	4.60	4.58	4.61	4.71	4.65	4.68	5.71	4.85	4.65
지역기업의 관계자	(71)	5.01	4.37	4.21	4.34	4.42	4.38	4.31	4.35	5.23	4.27	4.3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2)	5.28	3.47	3.78	3.66	3.84	3.91	3.91	3.88	4.78	3.75	3.59
이명박 정부 (2008~2013)												
전체	(175)	6.13	4.44	4.52	4.41	4.48	5.11	5.21	5.04	5.44	5.32	4.38
소속												
대학관계자	(72)	6.51	4.72	5.00	4.68	4.96	5.26	5.53	5.15	5.58	5.69	4.74
지역기업의 관계자	(71)	5.75	4.25	4.08	4.08	4.06	4.94	4.93	4.92	5.25	5.07	4.13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2)	6.13	4.22	4.41	4.53	4.34	5.16	5.13	5.06	5.53	5.03	4.16
박근혜 정부 (2013~2017)												
전체	(175)	6.05	5.18	4.35	4.23	5.12	5.19	4.04	4.13	5.07	5.10	4.03
소속												
대학관계자	(72)	6.24	5.19	4.56	4.33	5.31	5.53	4.18	4.18	5.39	5.26	4.18
지역기업의 관계자	(71)	5.66	4.94	4.10	4.13	4.69	4.68	3.83	3.99	4.70	4.80	3.72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2)	6.50	5.66	4.47	4.25	5.66	5.59	4.19	4.34	5.19	5.38	4.41
문재인 정부 (2017~2022)												
전체	(175)	6.01	5.12	4.23	4.28	4.13	5.33	5.29	5.26	5.22	4.11	4.19
소속												
대학관계자	(72)	6.51	5.64	4.68	4.51	4.58	5.82	5.83	5.69	5.71	4.69	4.71
지역기업의 관계자	(71)	5.28	4.75	3.96	4.17	3.77	5.00	4.97	5.13	4.89	3.72	3.85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2)	6.50	4.78	3.81	4.00	3.91	4.97	4.78	4.56	4.88	3.69	3.81

역대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목표별 중요도와 달성도 분석을 위해 총 13개 문항(9점 척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학구조조정 추진, 대학 통폐합 추진, 산학협력 활동 촉진 및 활성화, 국립대학 통폐합 및 법인화, 부실운영 사립대학 퇴출, 지역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 지원, 대학정원 감축,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 제고,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적극 추진, 대학의 자율혁신 지원, 대학평가 내용의 지역별 권역별 균형 고려, 지역혁신체계를 위한 지역대학 활용 방안, 지역대학 혁신모델 발굴 및 개발 사업 지원이 각 문항에 해당한다.

우선, 표 IV-4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중요도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 제고(7.61)가 가장 높았고, 부실운영 사립대학 퇴출(7.55), 지역대학 혁신모델 발굴 및 개발 사업 지원(7.19) 순으로 나타났다. 국립대학 통폐합 및 법인화(6.48)가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경향은 대학관계자, 지역기업의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의 조사 결과와도 대체로 유사하다. 비록 순위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인 중요도 인식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 역대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정책의 목표별 중요도

내용	집단	전체	소속기관		
			대학관계자	지역기업의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사례 수		(175)	(72)	(71)	(32)
대학구조조정 추진 중요도		7.13	7.25	6.83	7.50
대학 통폐합 추진 중요도		6.97	7.13	6.73	7.16
산학협력 활동 촉진 및 활성화 중요도		7.14	7.24	6.92	7.41
국립대학 통폐합 및 법인화 중요도		6.48	6.90	6.23	6.09
부실운영 사립대학 퇴출 중요도		7.55	7.92	7.14	7.63
지역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 지원 중요도		7.06	7.49	6.75	6.81
대학정원 감축 중요도		6.52	6.43	6.17	7.50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 제고 중요도		7.61	7.97	7.42	7.19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적극 추진 중요도		7.15	7.22	7.17	6.94
대학의 자율혁신 지원 중요도		6.79	7.60	6.56	5.50
대학평가 내용의 지역별 권역별 균형 고려 중요도		6.80	6.92	6.96	6.19

내용	집단	전체	소속기관		
			대학관계자	지역기업의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역혁신체계를 위한 지역대학 활용방안 중 요도		7.07	7.26	7.14	6.50
지역대학 혁신모델 발굴 및 개발 사업 지원 중요도		7.19	7.35	7.07	7.09

표 IV-5에 나타나 있는 목표별 달성도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학협력 활동 촉진 및 활성화(5.58)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학의 자율혁신지원(5.24), 대학평가 내용의 지역별 권역별 균형 고려(5.02) 순이다. 부실운영 사립대학 퇴출(4.38)이 가장 낮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각 항목별 중요도와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대학관계자, 지역기업의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의 조사 결과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표 IV-5. 역대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목표별 달성도

내용	집단	전체	소속기관		
			대학관계자	지역기업의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사례수		(175)	(72)	(71)	(32)
대학구조조정 추진 달성도		4.73	4.75	5.04	3.97
대학통폐합 추진 달성도		4.62	4.74	4.79	4.00
산학협력 활동 촉진 및 활성화 달성도		5.58	5.67	5.37	5.88
국립대학 통폐합 및 법인화 달성도		4.87	5.01	4.94	4.38
부실운영 사립대학 퇴출 달성도		4.38	4.17	4.94	3.63
지역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 지원 달성도		4.87	4.81	5.15	4.41
대학정원 감축 달성도		4.77	4.83	4.93	4.25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 제고 달성도		4.82	4.78	4.93	4.66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적극추진 달성도		5.10	5.29	4.93	5.03
대학의 자율혁신지원 달성도		5.24	5.33	5.23	5.06
대학평가 내용의 지역별 권역별 균형 고려 달성도		5.02	5.04	5.15	4.69
지역혁신체계를 위한 지역대학 활용방안 달성도		4.86	4.89	4.92	4.69
지역대학 혁신모델 발굴 및 개발 사업 지원 달성도		4.88	4.97	4.86	4.72

이와 같이 역대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에 대한 중요도와 달성도를 정성적으로 판단 및 평가한 IPA 분석 결과는 그림 IV-2와 같다. 중요도와 달성도의 각 평균값은 7.04과 4.90이며, 이를 기준으로 4개 영역(중점개선, 유지강화, 점진개선, 지속유지)으로 구분된 결과를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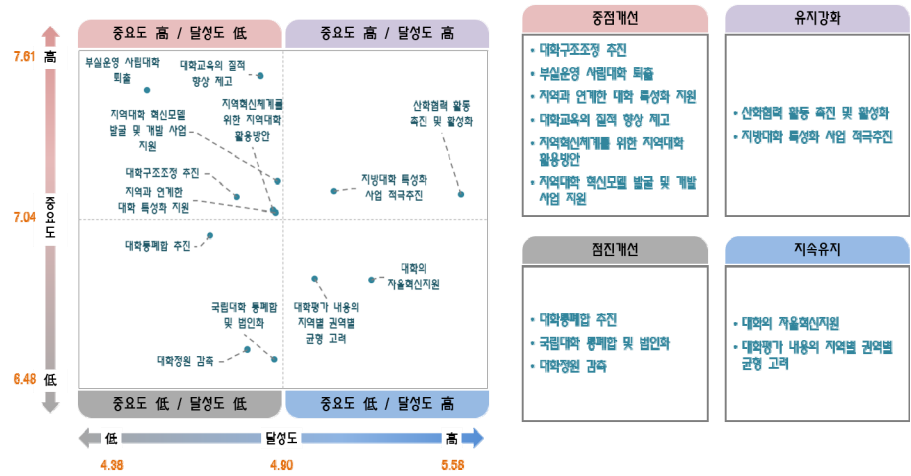


그림 IV-2. 역대 정부 대학 구조개혁 정책 목표 IPA

구체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달성도와 중요도가 모두 높아서 유지강화해야 할 목표에는 산학협력 활동 촉진 및 활성화와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적극 추진이 해당된다. 그리고 현재 낮은 달성도를 보이지만 중요도는 높게 나타난 중점개선 영역에는 대학구조조정 추진, 부실운영 사립대학 퇴출, 지역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 지원,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 제고, 지역혁신체계를 위한 지역대학 활용방안, 지역대학 혁신모델 발굴 및 개발 사업 지원이 포함된다. 달성도와 중요도가 모두 낮은 점진개선 영역에는 대학통폐합 추진, 국립대학 통폐합 및 법인화, 대학정원 감축이 해당된다. 달성도는 높지만 중요도는 낮아서 지속유지 해야 하는 영역에는 대학의 자율혁신지원과 대학평가 내용의 지역별 권역별균형 고려 등이 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역대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 목표들 중 상대적으로 많은 목표들(총 13개 중 6개)이 중점개선 목표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3. 비수도권(14개 시도)의 지역별 특화인재양성 및 관련사업의 중요도-성과도 (IPA: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화인재양성 및 관련사업의 중요도와 달성도 분석을 위해 총 14개 시도(9점 척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강원, 충남, 충북, 세종, 대전, 경북, 경남, 대구, 전북, 전남, 광주, 울산, 부산, 제주 각 지역별 특화인재양성 및 관련사업으로 항목을 구성하였다.

표 IV-6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중요도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전의 생활밀착형 융합 바이오인재양성 중요도(6.36)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울산의 친환경 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인재 양성 중요도(6.29), 충남의 친환경 동력시스템 및 차세대 디스플레이 전문 인재양성 중요도(6.05) 순이다. 전남의 블루 이코노미 인재양성, 에너지 신산업, 미래형 운송기기 분야 인재양성 중요도(5.50)가 가장 낮다. 대학관계자, 지역기업의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의 조사 결과와도 대체로 유사하다.

표 IV-6. 비수도권(14개 시도)의 지역별 특화인재양성 및 관련사업의 중요도

내용	집단	전체	소속기관		
			대학관계자	지역기업의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사례 수		(175)	(72)	(71)	(32)
(강원) 디지털 인재양성 중요도		5.94	6.07	5.75	6.09
(충남) 친환경 동력시스템 및 차세대 디스플레이 전문인재양성 중요도		6.05	6.19	5.99	5.84
(충북) 바이오 헬스 분야 인재양성 중요도		5.93	5.86	5.94	6.03
(세종) 세종 스마트시티 인재양성 중요도		5.73	5.88	5.76	5.31
(대전) 생활밀착형 융합 바이오인재양성 중요도		6.36	6.42	6.32	6.31
(경북) AI ICT 전문인재 양성 중요도		5.99	5.50	6.23	6.59
(경남) 스마트 제조엔지니어링, 스마트 제조 ICT, 스마트 공동체 분야 인재양성 중요도		6.00	5.83	6.23	5.88
(대구) 로봇, 미래형자동차, ICT 등 신성장산업 전문인재양성 중요도		5.99	5.57	6.44	5.94
(전북) 청년 농업인 및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 중요도		5.93	6.03	5.69	6.25

내용	집단	전체	소속기관		
			대학관계자	지역기업의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전남) 블루 이코노미 인재양성, 에너지 신산업, 미래형 운송기기 분야 인재양성 중요도		5.50	5.28	5.63	5.72
(광주) AI 전문인재/헬스케어, 자동차, 에너지분야 AI 융합인재 양성 중요도		5.98	6.07	5.94	5.88
(울산) 친환경 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인재 양성 중요도		6.29	6.56	5.99	6.38
(부산) 해양항만, 제조 금융, 영화 영상 의료 ICT 융합인재양성 중요도		6.00	6.43	5.73	5.63
(제주)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형 그린뉴딜 인재 양성(그린에너지, 청정바이오, 스마트 관광 등) 중요도		5.78	6.01	5.45	5.97

표 IV-7의 목표별 달성도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북의 바이오 헬스 분야 인재양성 달성도(5.16)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전의 생활밀착형 융합 바이오인재양성 달성도(5.06), 충남의 친환경 동력시스템 및 차세대 디스플레이 전문인재양성 달성도(5.03) 순이다. 반면 광주의 AI 전문인재/헬스케어, 자동차, 에너지분야 AI 융합인재 양성 달성도(4.55)가 가장 낮다.

표 IV-7. 비수도권(14개 시도)의 지역별 특화인재양성 및 관련사업의 달성도

내용	집단	전체	소속기관		
			대학관계자	지역기업의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사례 수		(175)	(72)	(71)	(32)
(강원) 디지털 인재양성 달성도		4.85	5.01	4.58	5.06
(충남) 친환경 동력시스템 및 차세대 디스플레이 전문인재양성 달성도		5.03	5.19	4.82	5.13
(충북) 바이오 헬스 분야 인재양성 달성도		5.16	4.94	5.15	5.66
(세종) 세종 스마트시티 인재양성 달성도		4.90	5.06	4.66	5.09
(대전) 생활밀착형 융합 바이오인재양성 달성도		5.06	5.06	4.89	5.44
(경북) AI ICT 전문인재 양성 달성도		4.86	4.79	4.82	5.13
(경남) 스마트 제조엔지니어링, 스마트 제조 ICT, 스마트 공동체 분야 인재양성 달성도		4.77	5.07	4.46	4.78
(대구) 로봇, 미래형자동차, ICT 등 신성장산업 전문인재양성 달성도		4.99	4.86	5.11	5.00
(전북) 청년 농업인 및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 달성도		4.84	4.81	4.89	4.81
(전남) 블루 이코노미 인재양성, 에너지 신산업, 미래형 운송기기 분야 인재양성 달성도		4.81	4.81	4.99	4.44
(광주) AI 전문인재/헬스케어, 자동차, 에너지분야 AI 융합인재 양성 달성도		4.55	4.40	4.76	4.41
(울산) 친환경 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인재 양성 달성도		4.85	5.17	4.44	5.06
(부산) 해양항만, 제조 금융, 영화 영상 의료 ICT 융합인재양성 달성도		4.83	4.96	4.69	4.88
(제주)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형 그린뉴딜 인재 양성(그린에너지, 청정바이오, 스마트 관광 등) 달성도		4.69	5.04	4.41	4.53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화인재양성 및 관련사업의 중요도와 달성도에 관한 IPA 분석 결과는 그림 IV-3과 같다. 중요도와 달성도의 각 평균값은 5.96과 4.87이며, 이를 기준으로 4개 영역(중점개선, 유지강화, 점진개선, 지속유지)으로 구분된 결과를 도출하였다.

상대적으로 달성도와 중요도가 모두 높아서 유지강화해야 할 영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는 충남, 대전, 대구이며, 현재 낮은 달성도를 보이지만 중요도는 높게 나타난 중점개선 영역에는 경북, 경남, 광주, 울산, 부산이 해당된다. 달성도와 중요도가 모두 낮은 점진개선 영역에는 강원, 전북, 전남, 제주가 해당되며, 달성도는 높지만 중요도는 낮아서 지속유지해야 하는 영역에는 충북과 세종이 해당한다. 상대적으로 중점개선 영역에 해당하는 지역이 많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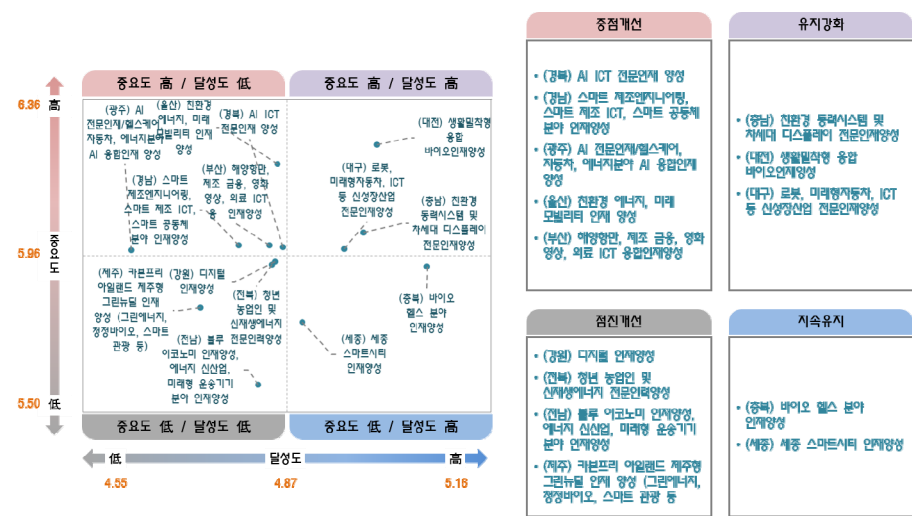


그림 IV-3.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화인재양성 및 관련사업 분야 IPA

표 IV-8과 같이 지역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화인재양성 및 관련사업의 중요도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의 로봇, 미래형자동차, ICT 등 신성장산업 전문인재양성(6.4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전의 생활밀착형 융합 바이오인재양성(6.32), 경북의 AI ICT 전문인재 양성(6.23), 경남의 스마트 제조엔지니어링(6.23), 스마트 제조 ICT, 스마트 공동체 분야 인재양성(6.23) 순이다. 제주의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형 그린뉴딜 인재 양성(5.45)이 가장 낮다.

표 IV-8.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화인재양성 및 관련사업 분야 중요도(기업)

내용	집단	지역기업의 관계자
사례 수		(71)
(강원) 디지털 인재양성 중요도		5.75
(충남) 친환경 동력시스템 및 차세대 디스플레이 전문인재양성 중요도		5.99
(충북) 바이오 헬스 분야 인재양성 중요도		5.94
(세종) 세종 스마트시티 인재양성 중요도		5.76
(대전) 생활밀착형 융합 바이오인재양성 중요도		6.32
(경북) AI ICT 전문인재 양성 중요도		6.23
(경남) 스마트 제조엔지니어링, 스마트 제조 ICT, 스마트 공동체 분야 인재양성 중요도		6.23
(대구) 로봇, 미래형자동차, ICT 등 신성장산업 전문인재양성 중요도		6.44
(전북) 청년 농업인 및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 중요도		5.69
(전남) 블루 이코노미 인재양성, 에너지 신산업, 미래형 운송기기 분야 인재양성 중요도		5.63
(광주) AI 전문인재/헬스케어, 자동차, 에너지분야 AI 융합인재 양성 중요도		5.94
(울산) 친환경 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인재 양성 중요도		5.99
(부산) 해양항만, 제조 금융, 영화 영상 의료 ICT 융합인재양성 중요도		5.73
(제주)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형 그린뉴딜 인재 양성(그린에너지, 청정바이오, 스마트 관광 등) 중요도		5.45

지역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화인재양성 및 관련사업의 달성도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북의 바이오 헬스 분야 인재양성(5.15)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구의 로봇, 미래형자동차, ICT 등 신성장산업 전문인재양성(5.11), 전남의 블루 이코노미 인재양성, 에너지 신산업, 미래형 운송기기 분야 인재양성(4.99) 순이다. 제주의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형 그린뉴딜 인재 양성(4.41)이 가장 낮다.

표 IV-9.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화인재양성 및 관련사업 분야 달성도(기업)

내용	집단	지역기업의 관계자
사례 수		(71)
(강원) 디지털 인재양성 달성도		4.58
(충남) 친환경 동력시스템 및 차세대 디스플레이 전문인재양성 달성도		4.82
(충북) 바이오 헬스 분야 인재양성 달성도		5.15
(세종) 세종 스마트시티 인재양성 달성도		4.66
(대전) 생활밀착형 융합 바이오인재양성 달성도		4.89
(경북) AI ICT 전문인재 양성 달성도		4.82
(경남) 스마트 제조엔지니어링, 스마트 제조 ICT, 스마트 공동체 분야 인재양성 달성도		4.46
(대구) 로봇, 미래형자동차, ICT 등 신성장산업 전문인재양성 달성도		5.11
(전북) 청년 농업인 및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 달성도		4.89
(전남) 블루 이코노미 인재양성, 에너지 산업, 미래형 운송기기 분야 인재양성 달성도		4.99
(광주) AI 전문인재/헬스케어, 자동차, 에너지분야 AI 융합인재 양성 달성도		4.76
(울산) 친환경 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인재 양성 달성도		4.44
(부산) 해양항만, 제조 금융, 영화 영상 의료 ICT 융합인재양성 달성도		4.69
(제주)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형 그린뉴딜 인재 양성(그린에너지, 청정바이오, 스마트 관광 등) 달성도		4.41

이러한 중요도와 달성도에 대한 IPA 분석결과는 그림 IV-4와 같다. 중요도와 달성도의 각 평균값은 5.93과 4.76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결과에 따르면, 우선 상대적으로 달성도와 중요도가 모두 높아서 유지강화해야 할 영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는 충남, 충북, 대전, 경북, 대구이며, 낮은 달성도를 보이지만 중요도는 높게 나타난 중점개선 영역에는 경남, 광주, 울산이 해당된다. 달성도와 중요도가 모두 낮은 점진개선 영역에는 강원, 세종, 제주, 부산이 해당되며, 달성도는 높지만 중요도는 낮아서 지속유지 해야 하는 영역에는 전북과 전남이 해당한다. 이를 통해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와 다소 다른 결과를 보이는 지역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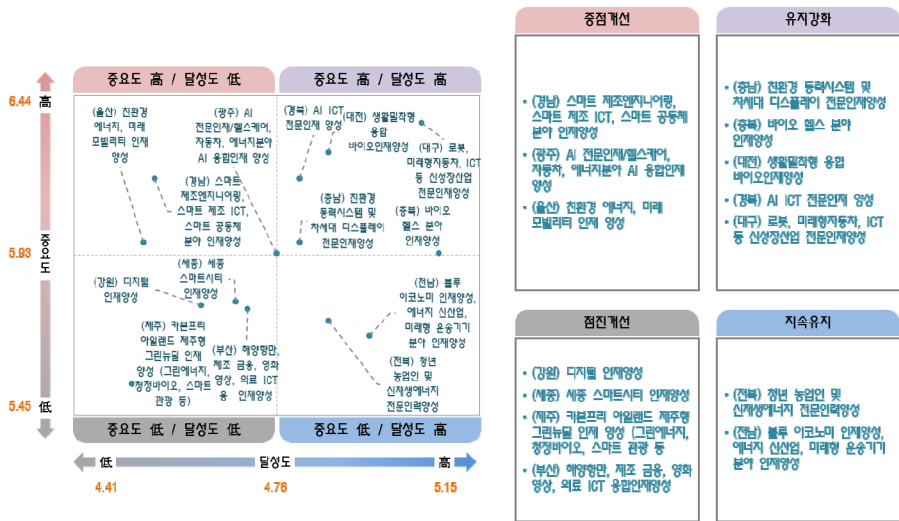


그림 IV-4.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화인재양성 분야 IPA(기업)

표 IV-10과 같이 대학관계자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구성된 비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화인재양성 및 관련사업의 중요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울산의 친환경 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인재 양성(6.5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전의 생활밀착형 융합 바이오인재양성(6.38), 부산의 해양항만, 제조 금융, 영화 영상 의료 ICT 융합인재양성 (6.18)순이다. 전남의 블루 이코노미 인재양성, 에너지 신산업, 미래형 운송기기 분야 인재양성의 중요도성(5.41)이 가장 낮다.

표 IV-10.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화인재양성 및 관련사업 분야 중요도(비기업)

내용	집단	전체	소속기관	
			대학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사례 수		(104)	(72)	(32)
(강원) 디지털 인재양성 중요도		6.08	6.07	6.09
(충남) 친환경 동력시스템 및 차세대 디스플레이 전문인재양성 중요도		6.09	6.19	5.84
(충북) 바이오 헬스 분야 인재양성 중요도		5.91	5.86	6.03
(세종) 세종 스마트시티 인재양성 중요도		5.70	5.88	5.31

내용	집단	전체	소속기관	
			대학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전) 생활밀착형 융합 바이오인재양성 중요도		6.38	6.42	6.31
(경북) AI ICT 전문인재 양성 중요도		5.84	5.50	6.59
(경남) 스마트 제조엔지니어링, 스마트 제조 ICT, 스마트 공동체 분야 인재양성 중요도		5.85	5.83	5.88
(대구) 로봇, 미래형자동차, ICT 등 신성장산업 전문인재양성 중요도		5.68	5.57	5.94
(전북) 청년 농업인 및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 중요도		6.10	6.03	6.25
(전남) 블루 이코노미 인재양성, 에너지 신산업, 미래형 운송기기 분야 인재양성 중요도		5.41	5.28	5.72
(광주) AI 전문인재/헬스케어, 자동차, 에너지분야 AI 융합인재 양성 중요도		6.01	6.07	5.88
(울산) 친환경 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인재 양성 중요도		6.50	6.56	6.38
(부산) 해양항만, 제조 금융, 영화 영상 의료 ICT 융합인재양성 중요도		6.18	6.43	5.63
(제주)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형 그린뉴딜 인재 양성(그린에너지, 청정바이오, 스마트 관광 등) 중요도		6.00	6.01	5.97

대학관계자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구성된 비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화인재양성 및 관련사업의 달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남) 친환경 동력시스템 및 차세대 디스플레이 전문인재양성(5.17)과 (대전) 생활밀착형 융합 바이오인재양성(5.17)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울산) 친환경 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인재 양성(5.13) 등의 순이다. (광주) AI 전문인재/헬스케어, 자동차, 에너지분야 AI 융합인재 양성(4.40)이 가장 낮다.

표 IV-11.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화인재양성 및 관련사업 분야 달성도(비기업)

내용	집단	전체	소속기관	
			대학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사례 수		(104)	(72)	(32)
(강원) 디지털 인재양성 달성도		5.03	5.01	5.06
(충남) 친환경 동력시스템 및 차세대 디스플레이 전문인재양성 달성도		5.17	5.19	5.13
(충북) 바이오 헬스 분야 인재양성 달성도		5.16	4.94	5.66
(세종) 세종 스마트시티 인재양성 달성도		5.07	5.06	5.09
(대전) 생활밀착형 융합 바이오인재양성 달성도		5.17	5.06	5.44
(경북) AI ICT 전문인재 양성 달성도		4.89	4.79	5.13
(경남) 스마트 제조엔지니어링, 스마트 제조 ICT, 스마트 공동체 분야 인재양성 달성도		4.98	5.07	4.78
(대구) 로봇, 미래형자동차, ICT 등 신성장산업 전문인재양성 달성도		4.90	4.86	5.00
(전북) 청년 농업인 및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 달성도		4.81	4.81	4.81
(전남) 블루 이코노미 인재양성, 에너지 신산업, 미래형 운송기기 분야 인재양성 달성도		4.69	4.81	4.44
(광주) AI 전문인재/헬스케어, 자동차, 에너지분야 AI 융합인재 양성 달성도		4.40	4.40	4.41
(울산) 친환경 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인재 양성 달성도		5.13	5.17	5.06
(부산) 해양항만, 제조 금융, 영화 영상 의료 ICT 융합인재양성 달성도		4.93	4.96	4.88
(제주)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형 그린뉴딜 인재 양성(그린에너지, 청정바이오, 스마트 관광 등) 달성도		4.88	5.04	4.53

이러한 중요도와 달성도에 대한 IPA 분석 결과는 그림 IV-5와 같다. 중요도와 달성도의 각 평균값은 5.98과 4.95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결과에 따르면, 우선 상대적으로 달성도와 중요도가 모두 높아서 유지강화해야 할 영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는 강원, 충남, 대전, 울산이며, 낮은 달성도를 보이지만 중요도는 높게 나타난 중점개선 영역에는 전북, 광주, 제주, 부산이 해당된다. 달성도와 중요도가 모두 낮은 점진개선 영역에는 경북, 대구,

전남이 해당되며, 달성도는 높지만 중요도는 낮아서 지속유지해야 하는 영역에는 충북, 경남, 세종이 해당한다. 여기서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IPA 분석 결과와 다소 다른 결과를 보이는 지역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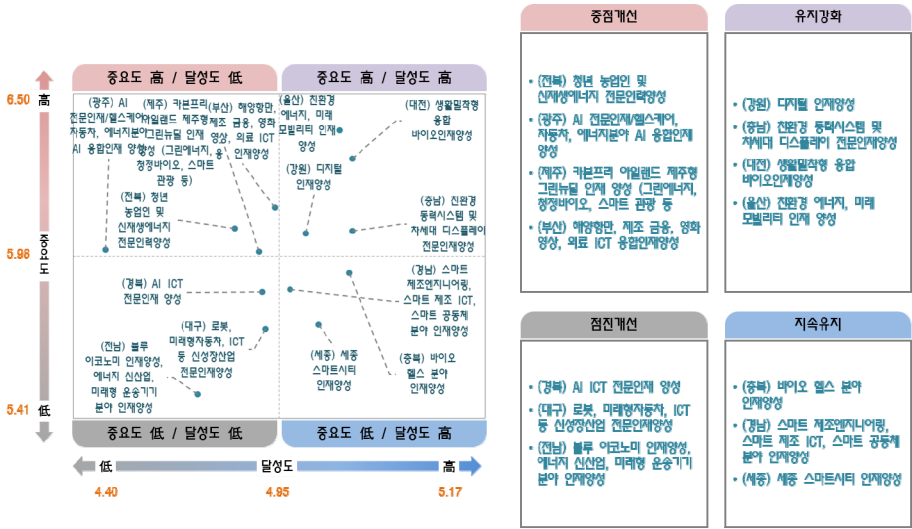


그림 IV-5.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화인재양성 분야 IPA(비기업)

4.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세부목표’에 대한 계층적 분석(AHP) 및 중요도-성과도(IPA)분석

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세부목표’에 대한 계층적 분석(AHP)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성과목표별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위해 AHP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IV-6과 같다. 각 관계자별로 각각의 성과목표에 대해 정성적 지식에 기초하여 상대적인 중요도를 판단하였다. 그리고 중요도 판단 결과는 가중치로 계산되었다.

전문가들이 청년의 공정한 사회진출을 위한 정책영역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해 판단한 결과에 따르면, 그 가중치는 ‘지역정주형 인재양성’, ‘직업·평생교육의 혁신’,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지역현안 해결’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가중치로 계산된

성과목표는 ‘지역정주형 인재양성’으로 30.8%이며, 이어서 ‘직업 · 평생교육의 혁신’은 25.2%, ‘지 · 산 · 학 · 연 협력 생태계 구축’은 23.5%로 나타났다. ‘지역현안 해결’은 20.5%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가중치를 보였다. 따라서 관계자들은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체계의 성과목표들 중 지역정주형 인재양성을 상대적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IV-6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성과목표별 상대적 중요도(전체)

세부적으로 전문가별로 정책영역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가중치 차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 중요도는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다소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모든 관계자들이 지역정주형 인재양성을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업 · 평생교육의 혁신과 지 · 산 · 학 · 연 협력 생태계 구축을 비교해보면 다소 차이는 있으나 유의미한 수준으로 볼 정도는 아니다. 지역현안 해결의 중요도에 관해서는 모두 가장 낮은 수준의 응답을 보였다. 관계자별 각 성과목표 간 가중치 차이의 정도가 다른데,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의 응답에서 그 차이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IV-12에서는 그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표 IV-1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성과목표별 상대적 중요도(소속별)

내용	집단	전체	소속기관		
			대학관계자	지역기업의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사례수		(175)	(72)	(71)	(32)
지역정주형 인재양성		.308	.289	.285	.401
지 · 산 · 학 · 연 협력 생태계 구축		.235	.248	.231	.217
직업 · 평생교육의 혁신		.252	.244	.269	.230
지역현안 해결		.205	.219	.215	.152

2) 청년 지역인재육성 및 일자리 창출의 세부목표에 대한 중요도-성과도(IPA)

(1) 지역정주형 인재양성'의 세부과제에 대한 '중요도-성과도' 분석

표 IV-13과 같이 지역정주형 인재양성의 세부과제에 대한 중요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창업 연계 지역 정주 제도 구축(6.97)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학 지역특성화 기반 취업역량 강화 사업 중요도(6.95), 지역특화산업 고숙련 전문기술인력 양성 모형(6.83) 순이다. 또한, 지역 창업 선도대학 육성(6.23)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대학 관계자, 지역기업의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상의 조사 결과와도 대체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표 IV-1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지역정주형 인재양성 중요도

내용	집단	전체	소속기관		
			대학관계자	지역기업의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사례수		(175)	(72)	(71)	(32)
지역 미래 먹거리를 위한 창업인재 양성 기반조성 중요도		6.53	6.60	6.32	6.81
대학특성화 기반 실전 창업지원 중요도		6.36	6.61	5.92	6.78
지역대학이 보유한 창업공간 연계 지원 중요도		6.26	6.29	6.07	6.59
지역 창업 선도대학 육성 중요도		6.23	6.29	6.31	5.94
로컬창업 활성화 중요도		6.33	6.13	6.46	6.47
대학 기술혁신 창업 활성화 중요도		6.55	6.44	6.59	6.72
지역 창업 문화 조성 중요도		6.38	6.28	6.32	6.75
취창업 연계 지역 정주 제도 구축 중요도		6.97	7.04	6.70	7.41
대학 지역특성화 기반 취업역량 강화 사업 중요도		6.95	6.93	6.93	7.06
산업단지 환경 조성을 통한 인재 유치 중요도		6.81	6.79	6.90	6.66
지역특화산업 고숙련 전문기술인력 양성 모형 중요도		6.83	6.72	6.85	7.06
지역 일자리맵 구축·운영 중요도		6.76	6.72	6.69	7.00
지자체 중심 유학생 유치 및 정주인력 양성 중요도		6.63	6.47	6.51	7.28

지역정주형 인재양성의 세부과제에 대한 달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표 IV-14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대학이 보유한 창업공간 연계 지원 달성도(5.25)와 지역 창업 선도대학

육성(5.25)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로컬창업 활성화(5.10), 지역대학 지역특성화 기반 취업역량 강화 사업(5.06) 순이다. 지자체 중심 유학생 유치 및 정주인력 양성(4.71)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V-14.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지역정주형 인재양성 달성도

내용	집단	전체	소속기관		
			대학관계자	지역기업의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사례수		(175)	(72)	(71)	(32)
지역 미래 먹거리를 위한 창업인재 양성 기반조성 달성도		5.09	5.11	5.01	5.22
대학특성화 기반 실전 창업지원 달성도		4.87	4.92	4.76	5.03
지역대학이 보유한 창업공간 연계 지원 달성도		5.25	5.49	5.04	5.19
지역 창업 선도대학 육성 달성도		5.25	5.42	4.90	5.63
로컬창업 활성화 달성도		5.10	5.14	5.14	4.94
대학 기술혁신 창업 활성화 달성도		4.95	4.83	5.06	4.97
지역 창업 문화 조성 달성도		4.89	4.90	4.85	4.94
취창업 연계 지역 정주 제도 구축 달성도		4.74	4.92	4.69	4.47
대학 지역특성화 기반 취업역량 강화 사업 달성도		5.06	5.06	5.08	5.03
산업단지 환경 조성을 통한 인재 유치 달성도		4.87	5.04	4.72	4.84
지역특화산업 고숙련 전문기술인력 양성 모형 달성도		4.83	5.18	4.49	4.78
지역 일자리맵 구축·운영 달성도		4.99	5.25	4.76	4.91
지자체 중심 유학생 유치 및 정주인력 양성 달성도		4.71	4.74	4.58	4.94

이러한 중요도와 달성도에 대한 IPA 분석 결과는 그림 IV-7과 같다. 중요도와 달성도의 각 평균값은 6.59와 4.97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결과에 따르면, 우선 상대적으로 달성도와 중요도가 모두 높아서 유지강화해야 할 영역에 해당하는 세부과제는 대학 지역특성화 기반 취업역량 강화 사업과 지역 일자리맵 구축·운영이며, 낮은 달성도를 보이지만 중요도는 높게 나타난 점진개선 영역에는 취창업연계 지역 정주 제도 구축, 산업단지 환경 조성을 통한 인재 유치, 지역특화산업 고숙련 전문기술 인력 양성 모형, 지자체 중심 유학생 유치 및 정주인력 양성이 해당된다. 달성도와 중요도가 모두 낮은 점진개선 영역에는 대학특성화 기반 실전 창업지원, 대학 기술혁신 창업 활성화, 지역 창업 문화 조성이 해당되며,

달성도는 높지만 중요도는 낮아서 지속유지해야 하는 영역에는 지역 미래 먹거리를 위한 창업인재 양성 기반조성, 지역대학이 보유한 창업공간 연계 지원, 지역 창업 선도대학 육성, 로컬창업 활성화가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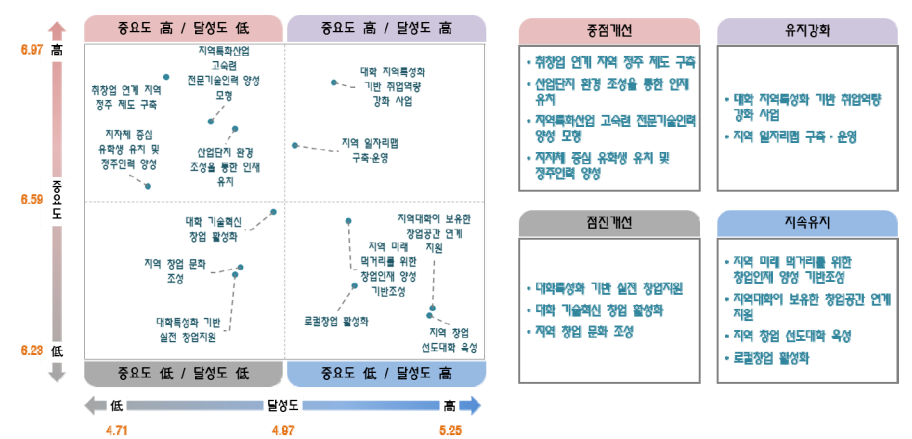


그림 IV-7.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지역정주형 인재양성 IPA

(2)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의 세부과제에 대한 ‘중요도-성과도’ 분석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의 세부과제에 대한 중요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전략 사업 연계 특성화 대학 육성(6.8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역과 대학의 지역기업 육성지원(6.80), 지역특화 과학기술 개발 인재 유치(6.43) 순이다. 산학협력 협동조합 설립·운영(5.94)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V-15.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의 중요도

내용	집단	전체	소속기관		
			대학관계자	지역기업의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사례 수		(175)	(72)	(71)	(32)
연구특화 위케이션(Work + Vacation) 클러스트 조성 중요도		6.05	6.42	5.97	5.38
MEGAversity(Multi-disciplinary Education and Global Alliance University) 구성·운영 중요도		5.98	6.25	5.70	5.97

내용	집단	전체	소속기관		
			대학관계자	지역기업의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민간주도 산학협력 플랫폼 구축 중요도		6.16	6.35	5.92	6.28
지·산·학 융합지구 조성 중요도		6.35	6.58	6.32	5.91
산학협력 협동조합 설립·운영 중요도		5.94	5.93	6.24	5.28
대학-산업체 협업 다각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중요도		6.38	6.06	6.34	7.22
지역과 대학의 지역기업 육성지원 중요도		6.80	6.57	6.70	7.53
지역전략사업 연계 특성화 대학 육성 중요도		6.84	6.79	6.62	7.44
대학연계 특구 조성 중요도		6.36	6.21	6.38	6.66
지역특화 과학기술 개발 인재 유치 중요도		6.43	6.38	6.21	7.03

표 IV-16에서 볼 수 있듯이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의 세부과제에 대한 달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산업체 협업 다각화 표준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4.91)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산·학 융합지구 조성(4.83), 연구특화 위케이션(Work + Vacation) 클러스트 조성(4.78) 순이다. 이어서 MEGAversity (Multi-disciplinary Education and Global Alliance University)구성·운영(4.51)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V-16.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의 달성도

내용	집단	전체	소속기관		
			대학관계자	지역기업의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사례 수		(175)	(72)	(71)	(32)
연구특화 위케이션(Work + Vacation) 클러스트 조성 달성도		4.78	4.75	5.01	4.34
MEGAversity(Multi-disciplinary Education and Global Alliance University) 구성·운영 달성도		4.51	4.33	4.82	4.25
민간주도 산학협력 플랫폼 구축 달성도		4.65	4.60	4.79	4.44
지·산·학 융합지구 조성 달성도		4.83	4.93	4.85	4.59
산학협력 협동조합 설립·운영 달성도		4.77	4.78	4.96	4.34
대학-산업체 협업 다각화 표준 현장실습 학기제 운영 달성도		4.91	4.69	5.15	4.88

내용	집단	전체	소속기관		
			대학관계자	지역기업의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역과 대학의 지역기업 육성지원 달성도		4.68	4.63	4.63	4.91
지역전략사업 연계 특성화 대학 육성 달성도		4.69	4.74	4.55	4.91
대학연계 특구 조성 달성도		4.62	4.58	4.70	4.53
지역특화 과학기술 개발 인재 유치 달성도		4.55	4.51	4.62	4.47

이러한 중요도와 달성도에 대한 IPA 분석 결과는 그림 IV-8과 같다. 중요도와 달성도의 각 평균값은 6.33과 4.70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결과에 따르면, 우선 상대적으로 달성도와 중요도가 모두 높아서 유지강화해야 할 영역에 해당하는 지·산·학 융합지구 조성, 대학-산업체 협업 다각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운영이며, 낮은 달성도를 보이지만 중요도는 높게 나타난 증점개신 영역에는 大壑연계 특구 조성, 지역특화 과학기술 개발, 지역과 대학의 지역기업 육성지원, 지역전략사업 연계 특성화 대학 육성이다. 달성도와 중요도가 모두 낮은 점진개신 영역에는 MEGAversity(Multi-disciplinary Education and Global AllianceUniversity) 구성·운영, 민간주도 산학협력 플랫폼 구축이 해당되며, 달성도는 높지만 중요도는 낮아서 지속유지해야 하는 영역에는 연구특화 위케이션(Work + Vacation) 클러스트조성과 산학협력 협동조합 설립·운영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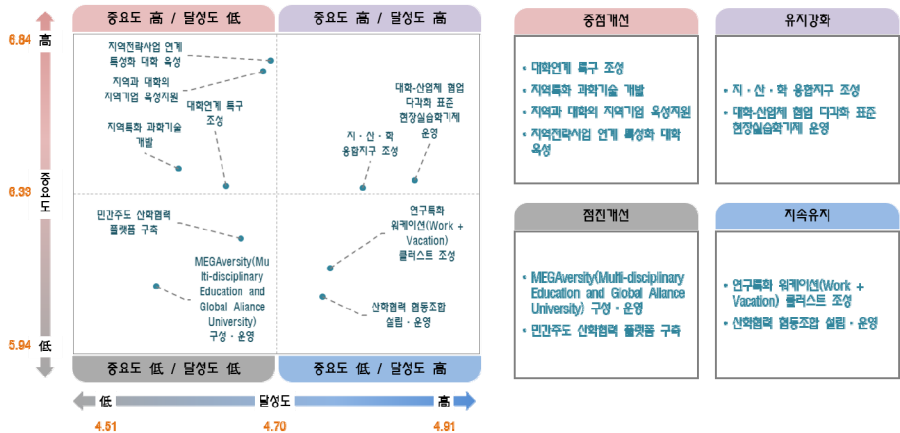


그림 IV-8.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IPA

(3) ‘직업·평생교육의 혁신’의 세부과제에 대한 ‘중요도-성과도’ 분석

표 IV-17과 같이 직업·평생교육의 혁신'의 세부과제에 대한 중요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중장년 직업전환교육(6.69)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역특화 평생직업교육(6.65), 지역사회 협력 평생교육(6.27) 순이다. 그리고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추진(5.71)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V-17.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직업·평생교육의 혁신의 중요도

내용	집단	전체	소속기관		
			대학관계자	지역기업의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사례 수		(175)	(72)	(71)	(32)
한국형 이원 직업교육 중요도		6.07	6.28	5.83	6.16
신중장년 직업전환교육 중요도		6.69	6.89	6.24	7.22
지역특화 평생직업교육 중요도		6.65	6.64	6.44	7.16
선취업 후진학지원 중요도		6.19	5.75	6.21	7.13
시민대학 운영지원 중요도		6.19	6.22	6.45	5.56
지역사회 협력 평생교육 중요도		6.27	6.46	6.30	5.81
지역 평생교육 네트워크 고도화 중요도		6.25	6.46	6.37	5.53
채용약정형 주문식 성인학습자교육 중요도		6.08	5.65	6.20	6.78
지역 평생학습 경력·이력관리 플랫폼 구축 중요도		6.20	6.13	6.39	5.94
평생직업교육 앵커대학 육성 중요도		5.91	5.57	6.44	5.53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추진 중요도		5.71	5.65	6.21	4.72
직업교육 혁신지구 추진 중요도		5.90	5.71	6.32	5.41

표 IV-18과 같이 직업·평생교육의 혁신의 세부과제에 대한 달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채용약정형 주문식 성인학습자교육(4.99)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역 평생학습 경력·이력관리 플랫폼 구축 달성도(4.91), 한국형 이원 직업교육 달성도(4.16) 순이다. 그리고 한국형 이원 직업교육 달성도(4.16)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V-18.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직업·평생교육의 혁신의 달성도

내용	집단	전체	소속기관		
			대학관계자	지역기업의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사례 수		(175)	(72)	(71)	(32)
한국형 이원 직업교육 달성도		4.75	4.79	4.76	4.66
신증장년 직업전환교육 달성도		4.21	4.00	4.46	4.13
지역특화 평생직업교육 달성도		4.45	4.13	4.69	4.66
한국형 이원 직업교육 달성도		4.16	4.18	4.07	4.31
시민대학 운영지원 달성도		4.63	4.19	4.83	5.19
지역사회 협력 평생교육 달성도		4.36	4.14	4.17	5.28
지역 평생교육 네트워크 고도화 달성도		4.40	4.13	4.55	4.69
채용약정형 주문식 성인학습자교육 달성도		4.99	4.56	5.32	5.25
지역 평생학습 경력·이력관리 플랫폼 구축 달성도		4.91	4.64	5.23	4.84
평생직업교육 앵커대학 육성 달성도		4.31	4.03	4.61	4.28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추진 달성도		4.18	3.88	4.51	4.16
직업교육 혁신지구 추진 달성도		4.34	4.08	4.58	4.41

이러한 중요도와 달성도에 대한 IPA 분석 결과는 그림 IV-9와 같다. 중요도와 달성도의 각 평균값은 6.18과 4.48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결과에 따르면, 우선 상대적으로 달성도와 중요도가 모두 높아서 유지강화해야 할 영역에 해당하는 세부과제는 시민대학 운영지원과 지역 평생학습 경력·이력관리 플랫폼 구축이며, 낮은 달성도를 보이지만 중요도는 높게 나타난 점진개선 영역에는 신증장년직업전환교육, 지역특화 평생직업교육, 선취업 후진학지원, 지역사회 협력 평생교육, 지역 평생교육 네트워크 고도화이다. 달성도와 중요도가 모두 낮은 점진개선 영역에는 평생직업교육 앵커대학 육성, 평생학습 집중진흥지구 추진, 직업교육 혁신지구 추진이 해당되며, 달성도는 높지만 중요도는 낮아서 지속 유지해야 하는 영역에는 한국형 이원 직업교육과 채용약정형 주문식 성인학습자교육이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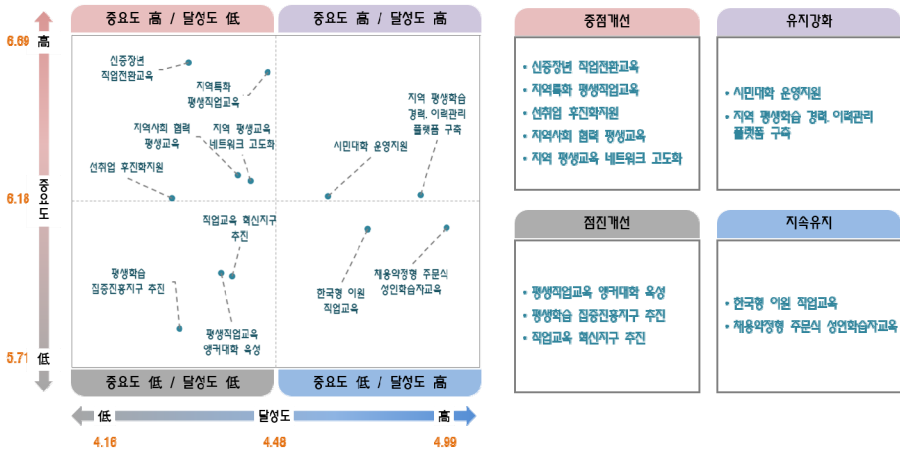


그림 IV-9.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직업·평생교육의 혁신 IPA

(4) ‘지역현안 해결’의 세부과제에 대한 ‘중요도-성과도’ 분석

지역현안 해결의 세부과제에 대한 중요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 간 교류 지원 사업(6.57)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역산업 전환 및 미래산업육성(6.54), 지역인재를 위한 대학연계 중등교육 지원(6.52) 순이다. 그리고 교원양성과정 개선대학 지원사업(5.75)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IV-19와 같다.

표 IV-19.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지역현안 해결의 중요도

내용	집단	전체	소속기관		
			대학관계자	지역기업의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사례 수		(175)	(72)	(71)	(32)
지역문제해결 리빙랩 육성 중요도		6.21	6.03	6.31	6.38
지역활력타운 조성 중요도		6.06	5.94	6.10	6.22
대학과 연계한 지역문화도시 육성 중요도		6.41	6.19	6.34	7.03
지역산업 전환 및 미래산업육성 중요도		6.54	6.40	6.18	7.63
지역인재를 위한 대학연계 중등교육 지원 중요도		6.52	6.35	6.49	6.97
지역 열린 캠퍼스 중요도		6.34	5.88	6.51	7.00
글로벌 인재·자원유치 지원 사업 중요도		6.37	6.11	6.37	6.97

내용	집단	전체	소속기관		
			대학관계자	지역기업의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중요도		6.29	6.08	6.23	6.88
지역 간 교류 지원 사업 중요도		6.57	6.56	6.54	6.69
교원양성과정 개선대학 지원사업 중요도		5.75	5.32	6.20	5.72

표 IV-20과 같이 직업·평생교육의 혁신의 세부과제에 대한 달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문제해결 리빙랩 육성(4.9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역 간 교류 지원 사업(4.65), 대학과 연계한 지역문화도시 육성(4.64) 순이다. 그리고 교원양성과정 개선대학 지원사업(4.39)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분야에서는 각 현안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V-20.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지역현안 해결의 달성도

내용	집단	전체	소속기관		
			대학관계자	지역기업의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사례 수		(175)	(72)	(71)	(32)
지역문제해결 리빙랩 육성 달성도		4.98	4.92	4.90	5.31
지역활력타운 조성 달성도		4.63	4.43	4.65	5.03
대학과 연계한 지역문화도시 육성 달성도		4.64	4.35	4.75	5.06
지역산업 전환 및 미래산업육성 달성도		4.59	4.43	4.38	5.44
지역인재를 위한 대학연계 중등교육 지원 달성도		4.52	4.35	4.55	4.84
지역 열린 캠퍼스 달성도		4.63	4.68	4.65	4.50
글로벌 인재·자원유치 지원 사업 달성도		4.56	4.18	4.83	4.81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달성도		4.43	4.15	4.75	4.38
지역 간 교류 지원 사업 달성도		4.65	4.61	4.66	4.72
교원양성과정 개선대학 지원사업 달성도		4.39	4.26	4.48	4.50

중요도와 달성도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IPA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IV-10과 같다. 중요도와 달성도의 각 평균값은 6.30과 4.60이다. 구체적으로 영역별로 보면, 달성

도와 중요도가 모두 높아서 유지강화해야 할 영역에 해당하는 세부과제는 대학과 연계한 지역문화도시 육성, 지역 열린 캠퍼스, 지역 간 교류 지원 사업이며, 낮은 달성도를 보이지만 중요도는 높게 나타난 중점개선 영역에는 지역산업 전환 및 미래산업육성, 지역인재를 위한 대학연계 중등교육 지원, 글로벌 인재·자원유치 지원 사업이다. 달성도와 중요도가 모두 낮은 점진개선 영역에는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과 교원양성과정 개선대학 지원사업이 해당되며, 달성도는 높지만 중요도는 낮아서 지속유지해야 하는 영역에는 지역문제해결 리빙랩육성과 지역활력타운조성이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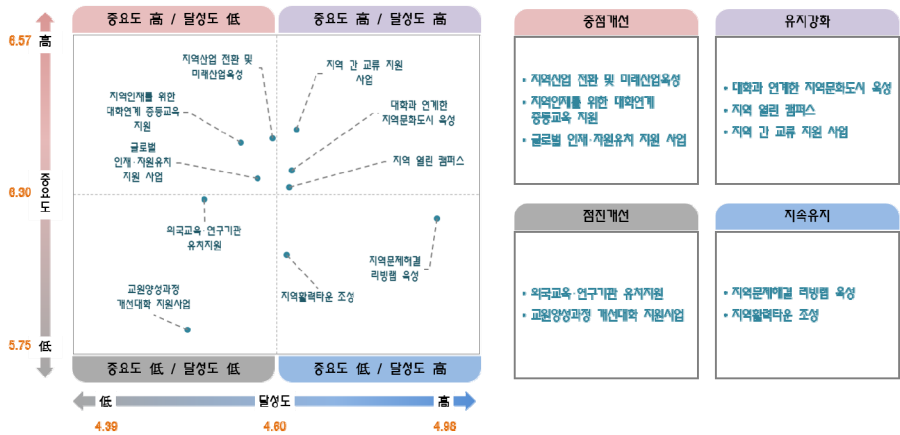


그림 IV-10.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지역현안 해결 IPA

5. 청년 지역인재육성 및 일자리 창출 연계된 중앙정부의 부처별 지원사업에 대한 중요도-성과도(IPA)

1)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된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사업의 중요도 대한 결과는 표 IV-21과 같다.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6.71)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체계지원 (6.63),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6.40) 순이다. 그리고 K-디지털 플랫폼(5.91)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문화도시 중요도(5.91)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V-2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된 정부 부처별(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의 중요도

내용	집단	전체	소속기관		
			대학관계자	지역기업의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사례 수		(175)	(72)	(71)	(32)
(고용노동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 중요도		6.40	6.47	6.18	6.72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중 요도		6.71	6.74	6.73	6.63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체계지원 중요도		6.63	6.63	6.59	6.75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중요도		6.05	6.17	6.31	5.22
(고용노동부) K-디지털 플랫폼 중요도		5.91	5.90	6.18	5.34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분야 인재육성 중요도		6.03	6.07	6.23	5.53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활력촉진 지원사업 중 요도		6.25	6.29	6.38	5.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전문인력양성 중요도		6.19	5.96	6.62	5.75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배치 중 요도		6.02	5.79	6.44	5.63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문화도시 중요도		5.91	5.72	6.21	5.69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된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사업의 달성도 대한 결과는 표 IV-22와 같다. 고용노동부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달성도(5.37)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문화활력촉진 지원사업(5.03), 고용노동부의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6.40) 순이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지역 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4.42)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V-2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된 정부 부처별(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의 달성도

내용	집단	전체	소속기관		
			대학관계자	지역기업의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사례 수		(175)	(72)	(71)	(32)
(고용노동부)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 달성도		4.73	5.33	4.54	3.81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달성도		4.42	5.04	4.06	3.84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체계지원 달성도		4.52	4.90	4.30	4.16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달성도		5.37	5.88	5.10	4.84
(고용노동부) K-디지털 플랫폼 달성도		4.70	5.15	4.49	4.16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분야 인재육성 달성도		4.73	4.99	4.55	4.56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활력촉진 지원사업 달성도		5.03	5.36	4.89	4.63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전문인력양성 달성도		4.56	4.64	4.49	4.53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배치 달성도		4.63	4.89	4.38	4.59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문화도시 달성도		4.67	4.76	4.70	4.41

이와 같은 중요도와 달성도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IPA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IV-11과 같다. 중요도와 달성도의 각 평균값은 6.21과 4.74이다. 구체적으로 영역별로 보면, 달성도와 중요도가 모두 높아서 유지강화해야 할 영역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문화활력촉진지원사업이며, 낮은 달성도를 보이지만 중요도는 높게 나타난 중점개선 영역에는 고용노동부의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체계지원사업이 해당된다. 달성도와 중요도가 모두 낮은 점진개선 영역에는 고용노동부의 K-디지털 플랫폼,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분야 인재육성,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전문인력양성,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배치,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원사업이 해당되며, 달성도는 높지만 중요도는 낮아서 지속유지해야 하는 영역에는 고용노동부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사업이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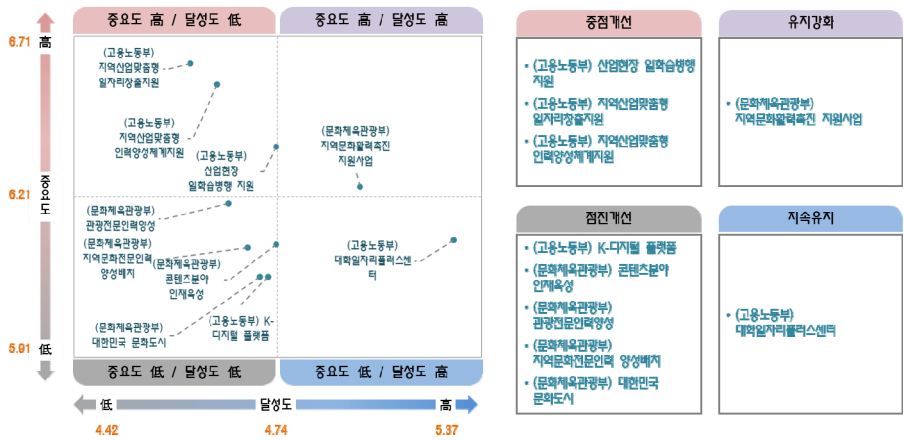


그림 IV-1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된 정부 부처별 지원사업 IPA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사업의 중요도에 대한 결과는 표 IV-23과 같다. 기업·창업 성장지원(6.6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기업연계 청년기술전문인력 육성(6.64), SW중심대학(6.57) 순이다. 그리고 캠퍼스SW아카데미(6.27)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V-2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사업의 중요도

내용	집단	전체	소속기관		
			대학관계자	지역기업의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사례 수		(175)	(72)	(71)	(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중심대학 중요도		6.57	6.64	6.49	6.5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훈련(지역자능화혁신인재양성) 중요도		6.52	6.51	6.52	6.5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업·창업 성장지원 중요도		6.68	6.64	6.62	6.9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업연계 청년기술전문인력 육성 중요도		6.64	6.65	6.54	6.8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형 캠퍼스SW아카데미		6.31	6.47	6.15	6.28

내용	집단	전체	소속기관		
			대학관계자	지역기업의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데미 중요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캠퍼스SW아카데미 중요도		6.27	6.15	6.35	6.3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산업연계 대학 Open-Lab 육성지원 중요도		6.36	6.28	6.37	6.5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주도SW성장지원 중요도		6.32	6.39	6.24	6.3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SW사업 운영 및 활성화 중요도		6.39	6.28	6.42	6.5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혁신지구 중요도		6.39	6.50	6.44	6.0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사업의 달성도 대한 결과는 표 IV-24와 같다. SW중심대학 달성도(5.48)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캠퍼스SW아카데미(5.14), 네트워크형 캠퍼스SW아카데미(5.11) 순이다. 그리고 디지털 혁신지구(4.78)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V-24.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사업의 달성도

내용	집단	전체	소속기관		
			대학관계자	지역기업의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사례 수		(175)	(72)	(71)	(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중심대학 달성도		5.48	5.96	5.11	5.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훈련(지역지능화혁신인 재양성) 달성도		4.97	5.28	4.73	4.8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업·창업 성장지원 달성도		5.00	5.32	4.77	4.7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업연계 청년기술전문인력 육성 달성도		4.95	5.07	4.96	4.6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형 캠퍼스SW아카 데미 달성도		5.11	5.39	5.01	4.6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캠퍼스SW아카데미 달성도		5.14	5.36	5.06	4.8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산업연계 대학 Open-Lab 육성지원 달성도		5.10	5.58	4.87	4.53

내용	집단	전체	소속기관		
			대학관계자	지역기업의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주도SW성장지원 달성도		4.87	5.13	4.68	4.7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SW사업 운영 및 활성화 달성도		4.79	4.96	4.65	4.7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혁신지구 달성도		4.78	5.11	4.63	4.34

이와 같은 중요도와 달성도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IPA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IV-12와 같다. 중요도와 달성도의 각 평균값은 6.44와 5.02이다. 구체적으로 영역별로 보면, 달성도와 중요도가 모두 높아서 유지강화해야 할 영역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은 SW중심대학사업이며, 낮은 달성도를 보이지만 중요도는 높게 나타난 점진개선 영역에는 교육훈련(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 기업·창업 성장지원, 기업연계 청년기술전문인력 육성 사업이 포함된다. 달성도와 중요도가 모두 낮은 점진개선 영역에는 지역주도SW성장지원, 지역SW사업 운영 및 활성화, 디지털 혁신지구 사업이 해당되며, 달성도는 높지만 중요도는 낮아서 지속유지해야 하는 영역에는 네트워크형 캠퍼스SW아카데미, 캠퍼스SW아카데미, 지역산업연계 대학 Open-Lab 육성지원이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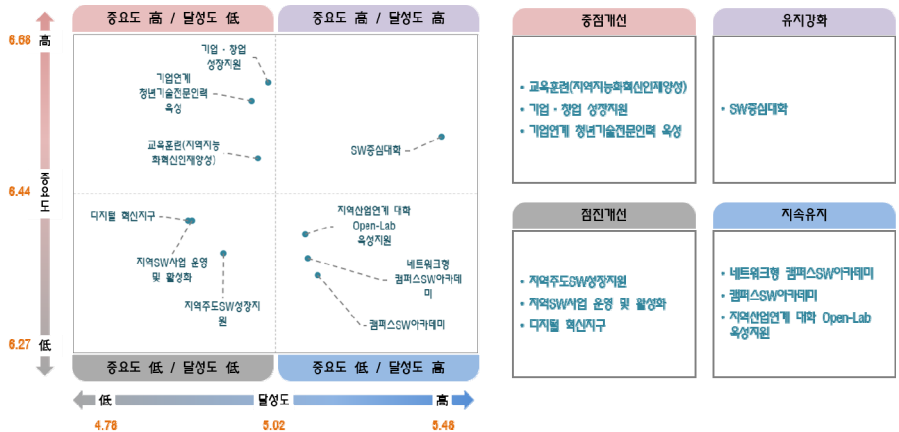


그림 IV-1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사업 IPA

3)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사업의 중요도에 대한 결과는 표 IV-25와 같다. 지역특화산업육성+(R&D)(6.74)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6.58), 지역중소기업공동수요기술개발(R&D)(6.43) 순이다. 그리고 로컬 콘텐츠 중점대학 사업이(6.06)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V-25.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된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의 중요도

내용	집단	전체	소속기관		
			대학관계자	지역기업의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사례 수		(175)	(72)	(71)	(32)
(중소벤처기업부) 틱스(TIPS) 중요도		6.12	5.85	6.42	6.06
(중소벤처기업부) 산학연CollaboR&D(R&D) 중요도		6.34	6.26	6.59	5.97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인력양성 대학 중요도		6.18	5.90	6.56	5.97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중소기업공동수요기술개발(R&D) 중요도		6.43	6.19	6.66	6.47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중심대학 중요도		6.28	6.10	6.59	6.00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중요도		6.15	6.07	6.37	5.84
(중소벤처기업부) 로컬 콘텐츠 중점대학 중요도		6.06	5.92	6.31	5.81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공모사업 중요도		6.36	6.22	6.42	6.53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산업육성+(R&D) 중요도		6.74	6.60	6.68	7.19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중요도		6.58	6.33	6.77	6.72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사업의 달성도 대한 결과는 표 IV-26과 같다. 틱스(TIPS) 달성도(5.28)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산학연 CollaboR&D(R&D)(5.27), 중소기업 인력양성 대학 달성도(5.1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4.95)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V-26.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된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의 달성도

내용	집단	전체	소속기관		
			대학관계자	지역기업의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사례 수		(175)	(72)	(71)	(32)
(중소벤처기업부) 틱스(TIPS) 달성도		5.28	5.32	5.21	5.34
(중소벤처기업부) 산학연CollaboR&D(R&D) 달성도		5.27	5.65	5.10	4.78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인력양성 대학 달성도		5.15	5.35	5.10	4.84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중소기업공동수요기술개발(R&D) 달성도		5.06	5.26	5.00	4.75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중심대학 달성도		5.14	5.26	5.15	4.84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달성도		4.95	5.15	4.86	4.72
(중소벤처기업부) 로컬 콘텐츠 중점대학 달성도		4.97	5.18	4.99	4.44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공모사업 달성도		5.13	5.29	5.18	4.66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산업육성+(R&D) 달성도		5.05	5.11	5.04	4.94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달성도		5.07	5.26	4.99	4.84

중소벤처기업 지원 사업의 중요도와 달성도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IPA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IV-13과 같다. 중요도와 달성도의 각 평균값은 6.32과 5.11이다. 구체적으로 영역별로 보면, 달성도와 중요도가 모두 높아서 유지강화해야 할 영역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은 산학연CollaboR&D(R&D)과 지역혁신공모사업이며, 낮은 달성도를 보이지만 중요도는 높게 나타난 중점개선 영역에는 중소기업공동수요기술개발(R&D지역),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사업이 해당된다. 달성도와 중요도가 모두 낮은 점진개선 영역에는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활성화 사업과 로컬 콘텐츠 중점대학 사업이 해당되며, 달성도는 높지만 중요도는 낮아서 지속유지해야 하는 영역에는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과 로컬 콘텐츠 중점대학 사업이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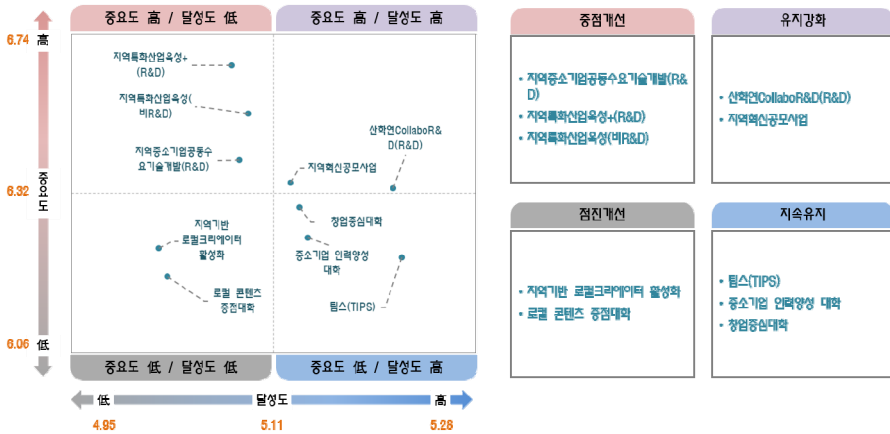


그림 IV-13.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된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IPA

4)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사업의 중요도에 대한 결과는 표 IV-27과 같다.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사업(6.49)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산업기술거점센터육성시범사업(6.37)과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인 청년 석사, 박사연구 인력 성장지원(6.37)이 따른다. 그리고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 사업 (6.02)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V-27.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사업의 중요도

내용	집단	전체	소속기관		
			대학관계자	지역기업의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사례 수		(175)	(72)	(71)	(32)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혁신클러스터 고도화 중요도		6.21	6.25	6.24	6.03
(산업통상자원부)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 중요도		6.02	5.83	6.37	5.69
(산업통상자원부) 산학융합촉진지원 중요도		6.30	6.26	6.27	6.44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중요도		6.49	6.60	6.59	6.0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거점센터육성시범사업 중요도		6.37	6.21	6.58	6.25

내용	집단	전체	소속기관		
			대학관계자	지역기업의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전문가 양성 및 공급 중요도		6.30	6.18	6.52	6.09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인 청년 석사, 박사연구 인력 성장지원 중요도		6.37	6.11	6.63	6.34
(산업통상자원부)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 대학 중요도		6.10	5.76	6.49	5.97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사업의 달성도에 대한 결과는 표 IV-28과 같다.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사업(5.4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산학융합촉진지원 사업(5.39)과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 사업(5.33) 순이다. 그리고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 사업(4.94)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V-28.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사업의 달성도

내용	집단	전체	소속기관		
			대학관계자	지역기업의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사례 수		(175)	(72)	(71)	(32)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혁신클러스터 고도화 달성도		5.14	5.24	5.24	4.72
(산업통상자원부)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 달성도		5.33	5.54	5.38	4.72
(산업통상자원부) 산학융합촉진지원 달성도		5.39	5.63	5.27	5.13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달성도		5.44	5.32	5.62	5.3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거점센터육성시범사업 달성도		5.33	5.29	5.52	4.97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전문가 양성 및 공급 달성도		5.19	5.14	5.41	4.84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인 청년 석사, 박사연구 인력 성장지원 달성도		5.01	5.10	5.13	4.53
(산업통상자원부)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 대학 달성도		4.94	4.99	5.08	4.50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사업의 중요도와 달성도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IPA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IV-14와 같다. 중요도와 달성도의 각 평균값은 6.27과 5.22이다. 구체적으

로 영역별로 보면, 달성도와 중요도가 모두 높아서 유지강화해야 할 영역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은 산학융합촉진지원,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산업기술거점센터육성시범사업이며, 낮은 달성도를 보이지만 중요도는 높게 나타난 중점개선 영역에는 지역전문가 양성 및 공급사업과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인 청년 석사, 박사연구 인력 성장지원사업이 해당된다. 달성도와 중요도가 모두 낮은 점진개선 영역에는 국가혁신클러스터 고도화와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사업이 해당되며, 달성도는 높지만 중요도는 낮아서 지속 유지해야 하는 영역에는 거점기관 개방형 혁신사업이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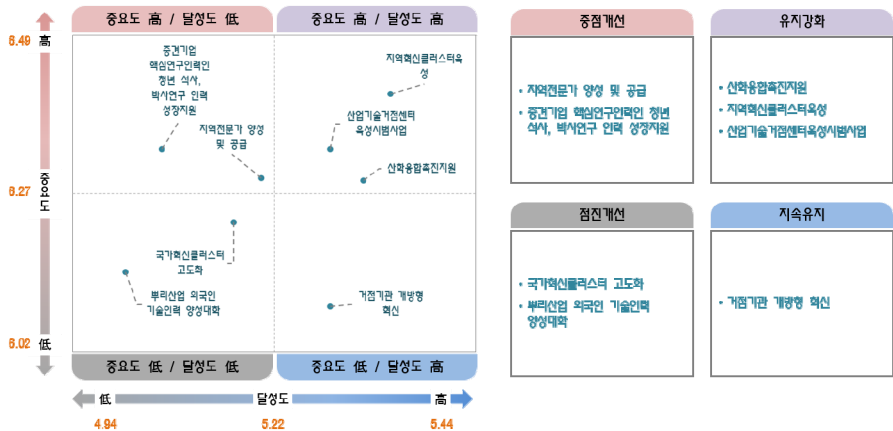


그림 IV-14.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사업 IPA

5)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의 지원사업의 중요도에 대한 결과는 표 IV-29와 같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6.5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국토교통부의 혁신융합캠퍼스 구축 사업(6.37), 행정안전부의 주민참여지역문제해결확산 중요도(6.26) 순이다. 그리고 농림 축산식품부의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사업(5.70)이 가장 낮았다.

표 IV-29.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된 부처별(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지원사업의 중요도

내용	집단	전체	소속기관		
			대학관계자	지역기업의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사례 수		(175)	(72)	(71)	(32)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중요도		6.54	6.51	6.73	6.16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지역문제해결확산 중요도		6.26	6.29	6.41	5.84
(행정안전부) 지역활력타운조성 중요도		6.22	6.18	6.37	5.97
(국토교통부) 캠퍼스 혁신 파크 중요도		6.05	6.00	6.14	5.97
(국토교통부) 혁신융합캠퍼스 구축사업 중요도		6.37	6.32	6.52	6.13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 인력양성 중요도		5.78	5.89	6.04	4.94
(농림축산식품부)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 중요도		5.70	5.76	6.07	4.75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중요도		6.07	5.68	6.06	7.00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의 지원사업의 달성도에 대한 결과는 표 IV-30과 같다. 행정안전부의 주민참여지역 문제해결확산 사업(5.04)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국토교통부의 캠퍼스 혁신 파크 사업(5.01),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4.95) 순이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의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4.67)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V-30.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된 부처별(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지원사업의 달성도

내용	집단	전체	소속기관		
			대학관계자	지역기업의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사례 수		(175)	(72)	(71)	(32)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달성도		4.80	5.07	4.66	4.50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지역문제해결확산 달성도		5.04	5.08	5.32	4.31
(행정안전부) 지역활력타운조성 달성도		4.82	4.96	5.03	4.06
(국토교통부) 캠퍼스 혁신 파크 달성도		5.01	4.86	5.14	5.06
(국토교통부) 혁신융합캠퍼스 구축사업 달성도		4.75	4.83	4.62	4.88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 인력양성 달성도		4.72	4.88	4.79	4.22
(농림축산식품부)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 달성도		4.67	4.86	4.73	4.13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달성도		4.95	4.90	5.14	4.66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지원사업의 중요도와 달성도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IPA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IV-15와 같다. 중요도와 달성도의 각 평균값은 6.12와 4.85이다. 구체적으로 영역별로 보면, 달성도와 중요도가 모두 높아서 유지강화해야 할 영역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주민참여지역문제해결 확산 사업이며, 낮은 달성도를 보이지만 중요도는 높게 나타난 중점개선 영역에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행정안전부의 지역활력타운조성, 국토교통부의 혁신융합 캠퍼스 구축사업이 해당된다. 달성도와 중요도가 모두 낮은 점진개선 영역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식품외식산업인력양성과 농림축산식품부의 한식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이 해당되며, 달성도는 높지만 중요도는 낮아서 지속유지해야 하는 영역에는 국토교통부의 캠퍼스 혁신 파크와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이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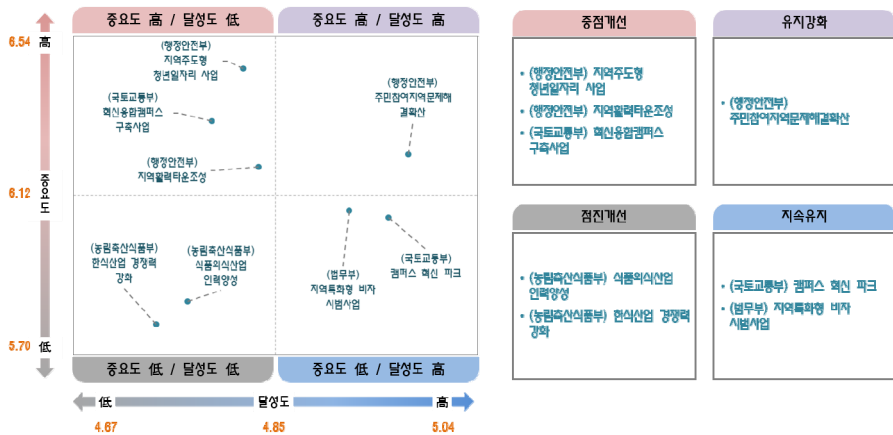


그림 IV-15.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연계된 정부 부처별 지원사업 IPA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6. 시사점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크게 네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지역청년 인재 육성을 위해 ‘지역정주형 인재양성’과 ‘직업평생교육의 혁신’이 중요하다. 앞서 살펴본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성과목표별 상대적 중요도(AHP) 분석 결과에 따르면, 특히 산학협력 기반의 인재양성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지역정주형 인재양성과 직업평생교육의 혁신에 대한 중요성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역대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목표에 관한 IPA분석에서도 지역정주를 가능하게 하는 지역과 연계한 특성 지원과 직업평생교육과 같은 지역대학 혁신모델에 관한 발굴이 중점 추진 과제로 도출되었다.

둘째, 지역산업적 측면에서 볼 때 스마트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지역청년인재 양성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스마트제조 엔지니어링, 친환경 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AI, ICT와 관련된 지역청년인재 양성이 시급하다. 특히 앞서 분석한 지역별 특화인재 양성에 관한 IPA 분석 결과를 보면, 경북, 경남, 광주, 울산, 부산의 각 산업이 중점개선 과제로 도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의 산업은 각각 경북의 AI ICT 전문인재 양성, 경남의 스마트 제조엔지니어링, 스마트 제조 ICT, 스마트 공동체 분야 인재양성, 광주의 AI 전문인재/헬스케어, 자동차, 에너지분야 AI 융합인재 양성, 울산의 친환경 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터인재 양성, 부산의 해양항만, 제조 금융, 영화 영상, 의료 ICT 융합인재양성 등이다. 따라서 지역청년인재 양성과 관련하여 지역산업 측면에서 스마트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산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 기반 청년인재 양성의 시의적 환경 조성을 위해 ‘법제도 개선 및 개정’ 등이 필요하다.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과 연계된 청년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법제도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특히 앞서 AHP 분석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정주형 인재양성의 상대적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또한 IPA 결과에서 중점과제로 도출된 지자체 중심의 유학생 유치와 산업단지 환경조성을 통한 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정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공식화된 제도적 생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는 곧 관련 법제도 마련의 중요성을 의미한다. 이처럼 법제도와 같은 법적 근거에 의한 청년인재 양성은 사업의 명확성을 높이고 실효성 및 효과성 제고에 큰 기여를 하므로 그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중앙부처 간 ‘연계 및 협력 강화와 통합적 평가’가 필요하다. IPA 분석에 따르면, 청년지역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특히 중요하고 시급한 지원사업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들 부처 간 연계와 협력이 필수적이고, 또 유의미한 통합적 평가로 사업의 효과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정례화된 연계·협력 체계 마련과 통합적 평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 제5장 ‘지자체, 기업, 대학’의 정책관계자 산학연 협력에 대한 정보공유 행동실험분석

- 1. 설문 개요
- 2. 지자체, 기업, 대학의 신뢰측정에 대한 정보공유 행동실험 문항
- 3. 정보공유 행동실험분석 결과
- 4. 소결

‘지자체, 기업, 대학’의 정책관계자 산학연 협력에 대한 정보공유 행동실험분석

지금까지 ‘지자체, 기업, 대학’의 정책관계자의 청년 지역인재육성과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 인식도 조사를 살펴보았다. 이를 보면 청년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의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는 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이다. 그러나 실제 청년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자체, 기업, 대학’의 정책관계자들이 협력적 성과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책관계자들의 상호신뢰 수준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지자체, 기업, 대학’의 정책관계자의 상호신뢰 수준을 분석한다.

1. 설문 개요

제4장에서 소개한 설문조사에서는 지자체, 기업, 대학의 상호신뢰 수준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다. 지자체 관계자에게는 지역 내 기업과 대학에 대한 신뢰도를, 기업 관계자에게는 지역의 지자체와 대학에 대한 신뢰도를, 대학 관계자에게는 해당 지역 지자체와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각각 질문하였다. 응답자의 소속 기관에 따라 질문이 다르므로, 본 장에서는 표본을 기업, 대학, 지자체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표 V-1은 각 세부 표본에 따라 응답자의 특성이 이질적임을 보여준다. 세 표본 모두 남성이 여성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대학 표본에서 남성 비중이 77.8%로 가장 높았고, 지자체 표본에서는 56.3%로 가장 낮았다. 평균 연령은 세 표본 모두 40대로 나타난 가운데, 대학 표본에서 47.2세로 가장 많았고, 기업 표본에서 40.8세로 가장 적었다. 연령대 구성은 지자체 표본에서는 40대가 과반이었고, 기업 표본에서는 30대가 과반이었으며, 대학 표본은 30대와 50대가 각각 1/3씩 차지하였다. 대학 표본의 경우, 50대 위주의 교수와 30대 위주의 산학협력단 담당 교직원으로 표본이 양분되어서 발생한 결과

로 해석된다. 학력은 지자체와 기업에서는 대졸 이하가 다수였으나, 대학에서는 대학원 수료 이상이 과반이었다. 근속기간은 세 표본 모두 근속 6년 이상 비중이 70~80%로 나타났다. 지역 분포는 대학 표본에서는 수도권 비중이 40.3%로 가장 컸고, 기업 표본에서는 충청권 비중이 40.8%로 가장 컸다. 반면, 지자체 표본에서는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비중이 각각 20% 전후로 고르게 분포하였다.

지자체, 기업, 대학 표본의 특성이 이질적이라는 표 V-1의 결과는 서로 다른 표본을 단순 비교하는 방식의 분석은 한계를 갖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각 표본을 독립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표 V-1. 소속 기관별 응답자 특성

응답자 특성	표본		
	지자체 (N=32)	기업 (N=71)	대학 (N=72)
성별			
남성	0.563	0.606	0.778
여성	0.438	0.394	0.222
연령(세)	44.5	40.8	47.2
연령대			
30대	0.219	0.521	0.333
40대	0.563	0.324	0.167
50대	0.219	0.141	0.333
60대	0.000	0.014	0.167
학력			
대졸 이하	0.656	0.718	0.431
대학원 수료 이상	0.344	0.282	0.569
근속기간			
근속 6년 미만	0.188	0.296	0.181
근속 6년 이상	0.813	0.704	0.819
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0.094	0.254	0.403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0.156	0.042	0.264
충청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	0.281	0.408	0.139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0.188	0.113	0.111
대경권(대구, 경북)	0.219	0.070	0.028
강원/제주권(강원, 제주)	0.063	0.113	0.056

* 자료: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정책관계자 설문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

2. 지자체, 기업, 대학의 신뢰측정에 대한 정보공유 행동실험 문항

지자체, 기업, 대학의 상호신뢰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공유 행동실험 설문 문항을 고안하였다⁷⁾. 지자체 표본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지자체 관계자에게 지역 발전을 위해 기업 또는 대학과 협업하는 프로젝트 참여를 요청받은 상황을 제시하고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기업 또는 대학과 정보를 얼마나 공유할 의향이 있는지 설문하였다. 구체적 설문 문항은 그림 V-1과 같다.

※ 귀하의 직장이 소재한 지역의 대학과 기업에 관한 귀하의 신뢰도를 여쭙보겠습니다.

[문 46]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 대학과 협업하는 프로젝트 참여를 요청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내부 정보를 지역 대학과 얼마나 공유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모든 내부 정보를 공유함.
- ② 중요한 내부 정보를 공유함.
- ③ 최소한의 내부 정보만 공유함.
- ④ 내부 정보를 전혀 공유하지 않음.

[문 47]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 기업과 협업하는 프로젝트 참여를 요청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내부 정보를 지역 기업과 얼마나 공유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모든 내부 정보를 공유함.
- ② 중요한 내부 정보를 공유함.
- ③ 최소한의 내부 정보만 공유함.
- ④ 내부 정보를 전혀 공유하지 않음.

* 출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정책관계자 설문조사 설문지에서 발췌

그림 V-1. 정보공유 행동실험 문항: 지자체 표본

그림 V-1의 질문에 지자체 관계자가 응답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또는 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신뢰도를 1~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모든 내부 정보를 공유함”을 선택한 경우 4점, “중요한 내부 정보를 공유함”을 선택한 경우 3점, “최소한의 내부 정보만

7) 지자체, 기업, 대학 간의 상호신뢰는 다면적인 개념으로,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측정한 정보공유 의향은 상호신뢰의 일부 요소만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면 상호신뢰 관계는 자연히 형성되기 어려울 것이므로, 기관 간 정보공유 의향은 상호신뢰의 전제 조건 또는 필요조건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측정한 기관 간 정보공유 의향은 상호신뢰의 필요조건을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공유함”을 선택한 경우 2점, “내부 정보를 전혀 공유하지 않음”을 선택한 경우 1점을 부여하였다.

마찬가지로 기업 표본에서는 기업 관계자에게 자신이 속한 지역의 지자체 또는 대학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그림 V-1과 유사한 방식으로 설문하였다, 또한 대학 표본에서는 대학 관계자에게 그림 V-1과 유사한 방식으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지자체와 기업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설문하였다. 이상의 설문 문항에 대한 기업 관계자 또는 대학 관계자들의 응답을 바탕으로 기업 관계자의 지역 지자체 또는 지역 대학에 대한 신뢰도와 대학 관계자의 지역 지자체 또는 지역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각각 1~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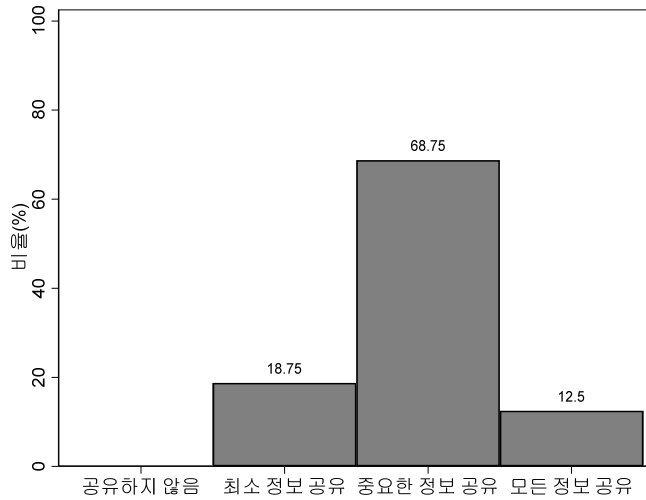
3. 정보공유 행동실험분석 결과

1) 지자체 표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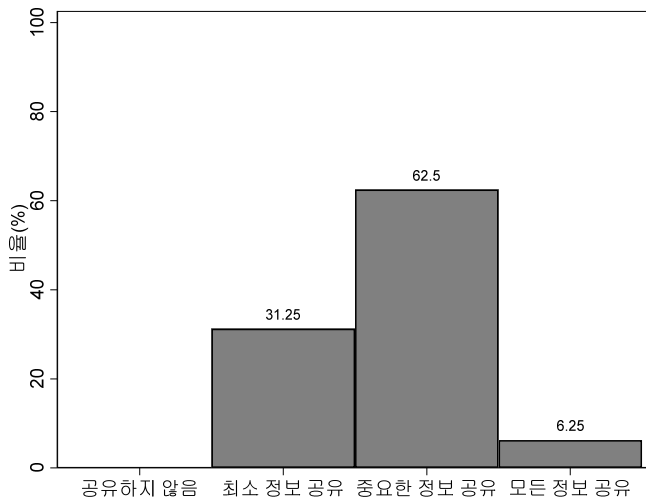
그림 V-2는 지자체 관계자들이 지역 기업과 대학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여준다. 패널 A는 지역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패널 B는 지역 대학에 대한 신뢰도를 각각 나타낸다. 지역 기업과의 정보 공유 의향을 조사한 패널 A를 보면, ‘모든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응답이 12.5%,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응답이 68.8%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81.3%의 지자체 관계자가 적어도 중요한 정보를 공유할 의향을 보였다. 한편, 지역 대학에 대한 정보 공유 의향을 다룬 패널 B에서는 ‘모든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응답이 6.3%,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응답이 62.5%로, 약 68.8%의 지자체 관계자가 대학과 최소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그림 V-2의 결과를 종합하면,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역 대학보다 기업에 대한 신뢰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지역 기업과의 정보 공유에서 81.3%가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답한 반면, 대학과의 정보 공유 의향은 68.8%에 그쳤다.

A. 지자체의 기업에 대한 신뢰도



B. 지자체의 대학에 대한 신뢰도



* 출처: 「지역혁신중심 대학자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정책관계자 설문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

그림 V-2. 정보공유 행동실험 결과: 지자체 표본

2) 기업 표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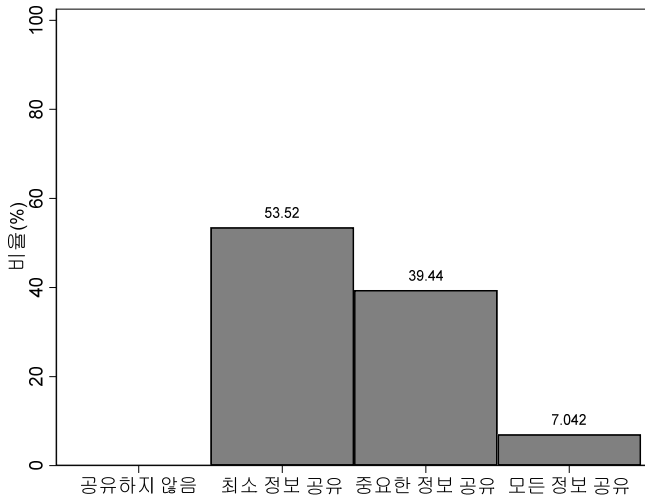
그림 V-3은 기업 관계자들이 지역 지자체와 대학에 대해 어떻게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패널 A는 지역 지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패널 B는 지역 대학에 대한 신뢰도를 각각 나타낸다.

지역 지자체와의 정보 공유 의향을 묻는 패널 A에 따르면, ‘모든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응답이 7.0%,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응답이 39.4%로, 약 46.4%의 기업 관계자가 지자체와 적어도 중요한 정보를 공유할 의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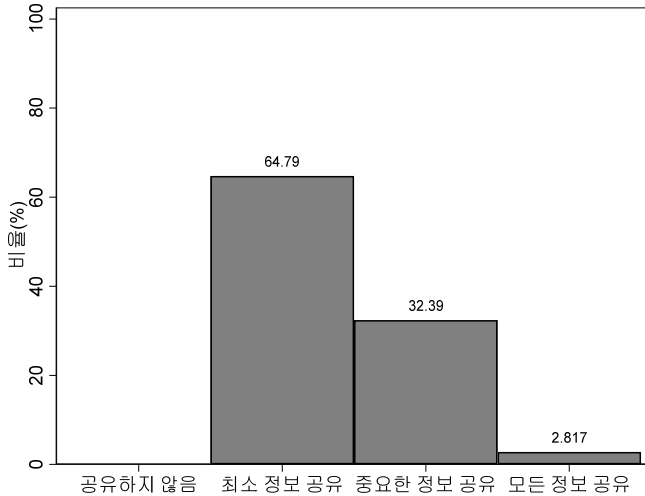
반면, 패널 B에서 지역 대학에 대한 정보 공유 의향을 보면, ‘모든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응답은 2.8%,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응답은 32.4%로, 약 35.2%가 대학과 중요한 정보를 공유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따라서, 기업 관계자들은 대학보다 지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다는 점이 나타난다. 지자체와의 정보 공유에 대한 의향이 46.4%로 높았던 반면, 대학과의 정보 공유 의향은 35.2%에 불과했다.

A. 기업의 지자체에 대한 신뢰도



B. 기업의 대학에 대한 신뢰도



* 자료: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정책관계자 설문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

그림 V-3. 정보공유 행동실험 결과: 기업 표본

3) 대학 표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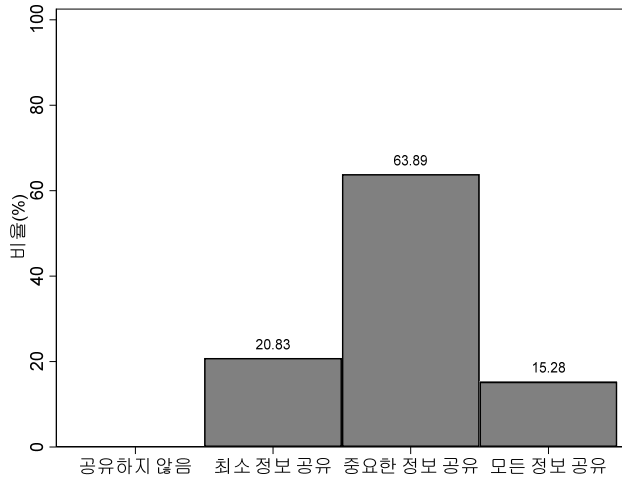
그림 V-4는 대학 관계자들이 지역 지자체와 기업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보여준다. 패널 A는 지역 지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패널 B는 지역 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각각 나타낸다.

지역 지자체와의 정보 공유 의향을 다룬 패널 A에서는 ‘모든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응답이 15.3%,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응답이 63.9%로, 전체적으로 79.2%의 대학 관계자가 적어도 중요한 정보를 공유할 의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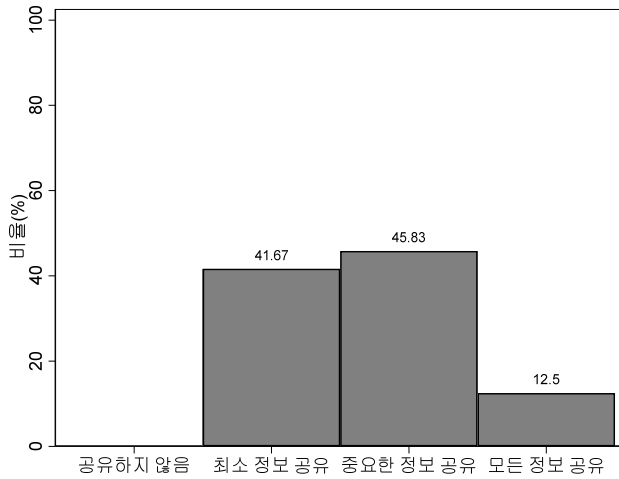
패널 B에서 지역 기업과의 정보 공유 의향을 보면, ‘모든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응답이 12.5%,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응답이 45.8%로 나타나, 약 58.3%의 대학 관계자가 기업과 정보를 공유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림 V-4의 결과를 종합하면, 대학 관계자들은 지역 지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기업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지자체와의 정보 공유 의향은 79.2%에 달한 반면, 기업과의 정보 공유 의향은 58.3%로 나타났다.

A. 대학의 지자체에 대한 신뢰도



B. 대학의 기업에 대한 신뢰도



* 자료: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정책관계자 설문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작성

그림 V-4. 정보공유 행동실험 결과: 대학 표본

4. 소결

본 장에서는 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에 필수적인 지자체, 기업, 대학 관계자들의 상호 신뢰 수준을 간단한 정보공유 행동실험 설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기관의 관계자들에게 지역 발전을 위한 협업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소속 기관의 정보를 다른 기관과 얼마나 공유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조사 결과, 각 기관 간의 정보 공유 의향으로 측정된 상호 신뢰도는 조직마다 상이하게 나타났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역 대학보다 지역 기업에 더 높은 신뢰를 보여, 기업과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기업 관계자들 또한 대학보다는 지자체와의 협력에서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할 의향을 보였으며, 대학에 대한 신뢰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학 관계자들 역시 기업보다는 지자체에 대한 신뢰가 높아, 지자체와의 정보 공유를 더 우선시했다.

이러한 결과는 산학연 협력 생태계가 성공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신뢰가 부족한 조직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지자체와 기업에게는 대학과의 신뢰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며, 대학에게는 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처방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산학연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고, 궁극적으로 청년 지역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 제6장 청년 지역인재육성과 일자리 창출 관련 전문가조사

- 1. 조사개요
- 2. 윤석열 정부의 ‘청년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관련 국정과제 IPA분석
- 3. 청년 지역인재 양성 and 일자리 창출의 정책성과를 위한 관련 중앙부처의 역할 IPA분석
- 4. 청년 지역인재 양성 and 일자리 창출의 주요 부처의 지역산업 전략에 대한 IPA분석
- 5. 비수도권(14개 시도)의 지역 특화인재양성 분야 및 관련 사업목표 AHP
- 6. 시사점

본 장에서는 앞선 ‘지자체, 기업, 대학’의 정책관계자의 청년 지역인재육성과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 인식도 조사분석과 정책관계자별 내부정보공유 행동실험분석에 이어 청년 전문가와 정책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청년 지역인재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역별 특성, 국정과제, 주요 부처의 전략,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 특화인재양성 분야 및 관련 사업목표 등을 분석한다. 이는 정책관계자 분석 결과에 더하여 앞으로 지역별 맞춤형 청년 지역인재육성과 일자리 창출의 청사진을 알아볼 수 있다.

1. 조사개요

청년 지역인재육성과 일자리 창출 관련 전문가조사는 청년전문가와 정책전문가를 대상으로 위탁업체를 통해 온라인으로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표집은 조사 전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실무가 및 전문가들의 소속 홈페이지 정보를 활용하여 집락 및 할당 추출을 통해 모집된 500여 명을 대상을 하여, 모집된 500여 명을 대상에 대한 무작위 추출로 총 150명의 유효표본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 총 155명이 응답을 하였으며, 청년전문가 65명, 정책전문가가 90명으로 총 155명이 응답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4년 8월 23일부터 9월 10일 약 2주간 실시되었다.⁸⁾

설문조사에 응답한 특성은 표 VI-1과 같다. 전체 응답자 155명 중 청년전문가는 65명으

8) 전문가조사는 위탁조사업체가 2024년 8월 22일부터 8월 27일까지 표집하였다. 구체적으로 청년전문가 표집단은 웹페이지 검색을 통한 청년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관련 전문가 156명 그리고 실무자 278명, 위탁조사업체가 자체 보유한 청년정책 전문가 인력풀 125명이다. 그리고 일반정책전문가 표집단은 2024년 8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전문가 분야는 홈페이지 또는 위탁업체가 보유한 자체 인력풀의 행정학, 경제학, 사회학, 사회정책 관련 교수 및 연구자로 총 253명이다. 이에 더하여 2024년 8월 28일 위탁조사업체가 자문위원 2명을 초빙하여 내부자문회의를 통해 500여명의 전문가 명단 확정하였다. 그리고 2024년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선별된 전문가 대상의 조사참여 여부를 전화로 컨택 후 최종 조사 대상자 결정되었다.

로 41.9%이고 정책전문가는 90명으로 58.1%이다. 남성은 101명으로 65.2%이며 여성은 54명으로 34.8%이다. 연령대는 30대 40%, 40대 29%, 50대 23.9%, 60대 7.1%이다. 근무 지역은 수도권 29%, 경상권 23.2%, 전라권 12.3%, 충청권 27.7%, 강원권 3.2%, 제주권 4.5%이다. 학력은 전문대학/대학교 졸업 60.6%, 석사 수료/졸업 17.4%, 박사 수료/졸업 21.9%이다. 경력은 3년 이상 ~ 6년 미만 22.6%, 6년 이상 77.4%이다.

표 VI-1. 응답자 특성

전체		사례수	%
		(155)	100.0
구분	청년 전문가	(65)	41.9
	정책 전문가	(90)	58.1
성별	남자	(101)	65.2
	여자	(54)	34.8
연령대	30대	(62)	40.0
	40대	(45)	29.0
	50대	(37)	23.9
	60대	(11)	7.1
근무 지역	수도권	(45)	29.0
	경상권	(36)	23.2
	전라권	(19)	12.3
	충청권	(43)	27.7
	강원권	(5)	3.2
	제주권	(7)	4.5
학력	전문대학/대학교 졸업	(94)	60.6
	석사 수료/졸업	(27)	17.4
	박사 수료/졸업	(34)	21.9
경력	3년 이상 ~ 6년 미만	(35)	22.6
	6년 이상	(120)	77.4

2. 윤석열 정부의 ‘청년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관련 국정과제 IPA분석

윤석열 정부의 청년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관련 국정과제에 대한 중요도와 목표 달성도 분석을 위해 총 9개 문항(9점 척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표 VI-2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중요도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과제 119번인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중기부·행안부)(7.01)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국정과제 120번인 지방소멸 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산업부·행안부)(6.99), 국정과제 113번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교육부)(6.8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정과제 111번인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행안부)(6.27)가 가장 낮다.

표 VI-2. 윤석열 정부의 ‘청년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관련 국정과제 중요도

내용	집단	전체	구분	
			청년전문가	정책전문가
사례 수		(155)	(65)	(90)
국정과제 111번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행안부) 중요도		6.27	6.03	6.44
국정과제 112번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행안부·기재부) 중요도		6.77	6.72	6.80
국정과제 113번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교육부) 중요도		6.86	6.82	6.90
국정과제 115번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산업부) 중요도		6.75	6.75	6.74
국정과제 116번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국토부) 중요도		6.30	6.31	6.30
국정과제 117번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중기부) 중요도		6.73	6.74	6.72
국정과제 118번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산업부) 중요도		6.75	6.62	6.84
국정과제 119번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중기부·행안부) 중요도		7.01	7.06	6.97
국정과제 120번 지방소멸 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산업부·행안부) 중요도		6.99	7.12	6.90

표 VI-3에 나타나 있는 목표 달성도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과제 116번인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국토부)(5.61)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국정과제 115번인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산업부)(5.34), 국정과제 113번인 지역인재 육성

을 위한 교육혁신(교육부)(4.86) 순이다. 국정과제 111번인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행안부)(4.74)이 가장 낮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각 항목별 중요도와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VI-3. 윤석열 정부의 '청년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관련 국정과제 목표달성도

내용	집단	전체	구분	
			청년전문가	정책전문가
사례 수		(155)	(65)	(90)
국정과제 111번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행안부) 달성도		4.74	4.62	4.83
국정과제 112번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행안부·기재부) 달성도		4.75	4.63	4.83
국정과제 113번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교육부) 달성도		4.86	4.52	5.10
국정과제 115번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산업부) 달성도		5.34	5.08	5.53
국정과제 116번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국토부) 달성도		5.61	5.35	5.80
국정과제 117번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중기부) 달성도		4.81	4.65	4.92
국정과제 118번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산업부) 달성도		4.85	4.65	4.99
국정과제 119번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중기부·행안부) 달성도		4.72	4.72	4.72
국정과제 120번 지방소멸 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산업부·행안부) 달성도		4.81	4.74	4.87

이와 같이 윤석열 정부의 청년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관련 국정과제에 대한 중요도와 달성도를 정성적으로 판단 및 평가한 IPA 분석 결과는 그림 VI-1과 같다. 중요도와 달성도의 각 평균값은 6.71과 4.94이며, 이를 기준으로 4개 영역(중점개선, 유지강화, 점진개선, 지속유지)으로 구분된 결과를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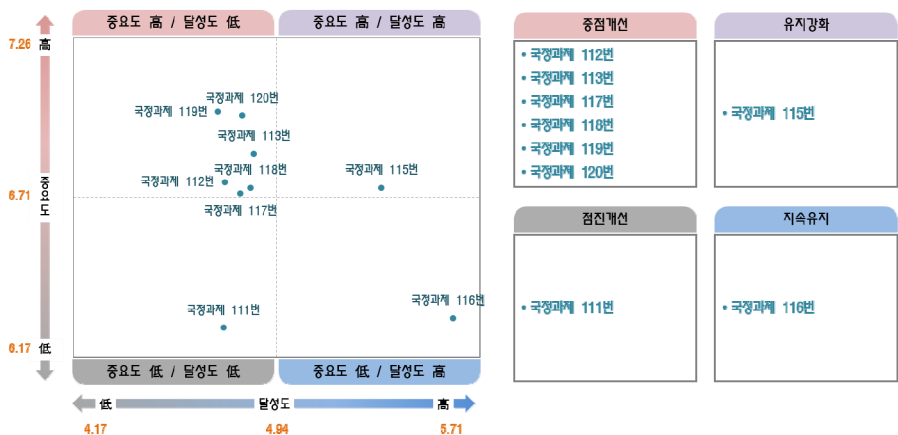


그림 VI-1. 윤석열 정부의 ‘청년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관련 국정과제 IPA

구체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달성도와 중요도가 모두 높아서 유지강화해야 할 과제는 국정과제 115번이 해당된다. 그리고 현재 낮은 달성도를 보이지만 중요도는 높게 나타난 중점개선 영역에는 국정과제 112번, 국정과제 113번, 국정과제 117번, 국정과제 118번, 국정과제 119번, 국정과제 120번이 포함된다. 달성도와 중요도가 모두 낮은 점진개선 영역에는 국정과제 111번이 해당된다. 달성도는 높지만 중요도는 낮아서 지속유지해야 하는 영역에는 국정과제 116번이 포함된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총 9개 과제 중 6개 과제가 중점개선 영역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청년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의 정책성과를 위한 관련 중앙부처의 역할 IPA분석

청년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의 정책성과를 위한 관련 중앙부처의 역할에 대한 중요도 조사 결과는 표 VI-4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중소벤처기업부(6.80)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6.66), 법무부(6.51) 순이다. 상대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5.93)의 중요도가 가장 낮다.

표 VI-4. 청년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정책성과를 위한 관련 중앙부처의 역할 중요도

내용	집단	전체	구분	
			청년전문가	정책전문가
사례 수		(155)	(65)	(90)
고용노동부 중요도		6.49	6.62	6.4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요도		6.37	6.46	6.30
국토교통부 중요도		6.15	6.14	6.16
농림축산식품부 중요도		5.93	6.18	5.74
법무부 중요도		6.51	6.29	6.67
문화체육관광부 중요도		5.97	5.74	6.14
산업통상자원부 중요도		6.66	6.46	6.81
중소벤처기업부 중요도		6.80	7.05	6.62
행정안전부 중요도		6.00	6.09	5.93

청년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의 정책성과를 위한 관련 중앙부처의 역할에 대한 목표 달성도 조사 결과는 표 VI-5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농림축산식품부(4.94)의 달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법무부(4.92), 행정안전부(4.57) 순이다. 상대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4.43)의 달성도가 가장 낮다.

표 VI-5. 청년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정책성과를 위한 관련 중앙부처의 목표 달성도

내용	집단	전체	구분	
			청년전문가	정책전문가
사례 수		(155)	(65)	(90)
고용노동부 달성도		4.50	4.38	4.5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달성도		4.48	4.38	4.54
국토교통부 달성도		4.54	4.32	4.70
농림축산식품부 달성도		4.94	4.77	5.06
법무부 달성도		4.92	4.65	5.11
문화체육관광부 달성도		4.43	4.28	4.53
산업통상자원부 달성도		4.46	4.32	4.57
중소벤처기업부 달성도		4.52	4.20	4.76
행정안전부 달성도		4.57	4.28	4.79

이와 같은 중요도와 달성도를 정성적으로 판단 및 평가한 IPA 분석 결과는 그림 VI-2와 같다. 중요도와 달성도의 각 평균값은 6.32와 4.60이다. 각 영역별로 보면, 우선 상대적으로 달성도와 중요도가 모두 높아서 유지강화해야 할 부처에는 법무부가 해당한다. 그리고 현재 낮은 달성도를 보이지만 중요도는 높게 나타난 중점개선 영역에는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포함된다. 달성도와 중요도가 모두 낮은 점진개선 영역에는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가 해당된다. 달성도는 높지만 중요도는 낮아서 지속유지해야 하는 영역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포함된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많은 부처가 상대적으로 중점개선 영역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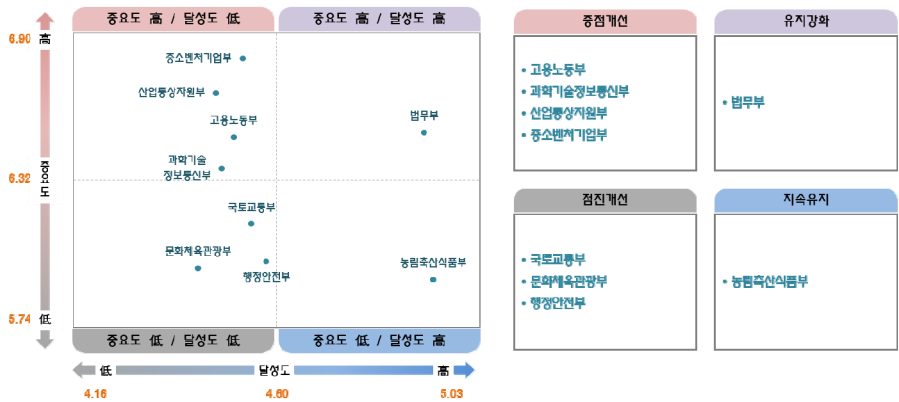


그림 VI-2. 청년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정책성과를 위한 관련 중앙부처의 역할 IPA

4. 청년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의 주요 부처의 지역산업 전략에 대한 IPA분석

1) 산업통상자원부의 ‘2기 지역혁신클러스터 특화산업’

청년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의 주요 부처의 지역산업 전략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2기 지역혁신클러스터 특화산업에 대한 중요도 조사 결과는 표 VI-6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대구의 모빌리티 부품 / SW(7.03)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울산의 전력구동 모빌리티(6.97), 부산의 해양ICT융합(6.96) 순이다. 상대적으로 대전의 스마트 안전사업(6.20)의 중요도가 가장 낮다.

표 VI-6. 산업통상자원부의 '2기 지역혁신클러스터 특화산업'의 중요도

내용	집단	전체	구분	
			청년전문가	정책전문가
사례 수		(155)	(65)	(90)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중요도		6.91	6.98	6.86
(충북) 지능형첨단부품 중요도		6.32	6.42	6.26
(충남) 수소에너지 중요도		6.70	6.80	6.63
(세종) 자율주행플랫폼 중요도		6.30	6.35	6.26
(대전) 스마트안전사업 중요도		6.20	6.31	6.12
(대구) 모빌리티 부품 / SW 중요도		7.03	6.92	7.10
(경북) 미래 모빌리티부품 중요도		6.78	6.69	6.84
(경남) 항공부품소재 중요도		6.77	6.63	6.88
(울산) 전력구동 모빌리티 중요도		6.97	6.92	7.00
(부산) 해양ICT융합 중요도		6.96	6.78	7.09
(광주) 에너지 및 미래차 중요도		6.75	6.48	6.96
(전북) 스마트농생명 중요도		6.51	6.62	6.43
(전남) 에너지산업 중요도		6.52	6.55	6.50
(제주) 화장품 및 식품 중요도		6.37	6.45	6.31

청년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의 주요 부처의 지역산업 전략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2기 지역혁신클러스터 특화산업에 대한 목표 달성도 조사 결과는 표 VI-7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광주의 에너지 및 미래차(4.76)의 달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충남의 수소에너지 (4.38), 세종의 자율주행플랫폼(4.33) 순이다. 상대적으로 부산의 해양ICT융합(3.08)의 달성도가 가장 낮다.

표 VI-7. 산업통상자원부의 '2기 지역혁신클러스터 특화산업'의 목표달성도

내용	집단	전체	구분	
			청년전문가	정책전문가
사례 수		(155)	(65)	(90)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달성도		4.13	4.03	4.20
(충북) 지능형첨단부품 달성도		3.67	3.60	3.72
(충남) 수소에너지 달성도		4.38	4.40	4.37
(세종) 자율주행플랫폼 달성도		4.33	4.12	4.48
(대전) 스마트안전사업 달성도		4.12	4.20	4.06
(대구) 모빌리티 부품 / SW 달성도		4.25	4.43	4.12
(경북) 미래 모빌리티부품 달성도		3.68	3.63	3.72
(경남) 항공부품소재 달성도		3.55	3.40	3.67
(울산) 전력구동 모빌리티 달성도		3.66	3.63	3.68
(부산) 해양CT융합 달성도		3.08	2.85	3.24
(광주) 에너지 및 미래차 달성도		4.76	4.89	4.67
(전북) 스마트농생명 달성도		3.31	3.43	3.22
(전남) 에너지산업 달성도		3.59	3.74	3.48
(제주) 화장품 및 식품 달성도		3.54	3.69	3.42

이와 같은 중요도와 달성도를 정성적으로 판단 및 평가한 IPA 분석 결과는 그림 VI-3과 같다. 중요도와 달성도의 각 평균값은 6.65과 3.86이다. 각 영역별로 보면, 우선 상대적으로 달성도와 중요도가 모두 높아서 유지강화해야 할 영역에는 강원, 충남, 대구, 광주가 포함된다. 그리고 현재 낮은 달성도를 보이지만 중요도는 높게 나타난 중점개선 영역에는 경북, 경남, 울산, 부산이 포함된다. 달성도와 중요도가 모두 낮은 점진개선 영역에는 충북, 전북, 전남, 제주가 해당된다. 달성도는 높지만 중요도는 낮아서 지속유지해야 하는 영역에는 세종과 대전이 포함된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각 지역별로 다양한 영역에 포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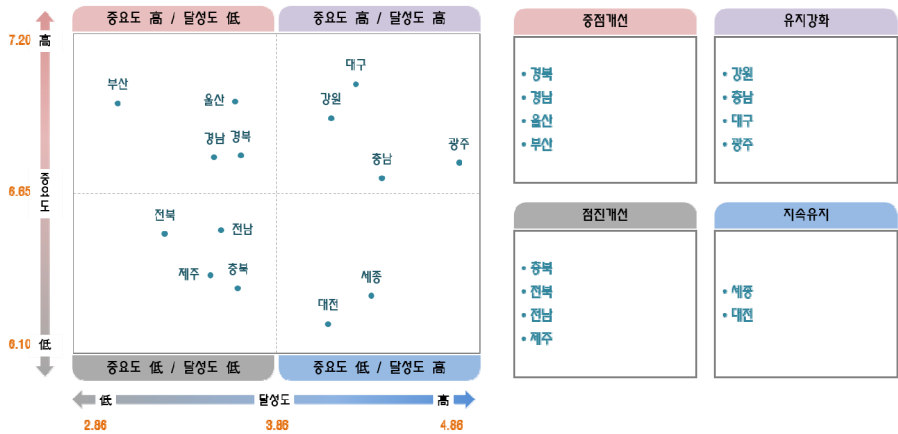


그림 VI-3. 산업통상자원부의 ‘2기 지역혁신클러스터 특화산업’의 IPA

2)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추진방향’(주축산업)

청년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의 주요 부처의 지역산업 전략 중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추진방향에서 주축산업에 대한 중요도 조사 결과는 표 VI-8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울산의 전기자동차부품(7.61)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제주의 지능형관광서비스(7.50), 경북의 첨단디지털부품(7.27) 순이다. 상대적으로 강원 의 천연물바이오소재(6.42)의 중요도가 가장 낮다.

표 VI-8.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추진방향’(주축산업)의 중요도

내용	집단	전체	구분	
			청년전문가	정책전문가
사례 수		(155)	(65)	(90)
(강원) 천연물바이오소재 중요도		6.42	6.57	6.31
(충북) 첨단반도체 중요도		7.25	7.15	7.32
(충남) 디스플레이부품장비 중요도		6.50	6.57	6.44
(세종) 지능형 모빌리티부품 중요도		6.84	6.98	6.73
(대전) 나노반도체 중요도		6.79	6.86	6.73
(대구) 전기자율모빌리티부품 중요도		7.19	7.26	7.14

내용	집단	전체	구분	
			청년전문가	정책전문가
(경북) 첨단디지털부품 중요도		7.27	7.49	7.11
(경남) 첨단경밀기계 중요도		7.16	7.09	7.21
(울산) 전기자동차부품 중요도		7.61	7.48	7.70
(부산) 초정밀소재부품 중요도		6.88	6.80	6.93
(광주) 스마트홈 부품 중요도		6.85	6.86	6.84
(전북) 농생명바이오 중요도		6.81	6.91	6.74
(전남) 환경에너지소재부품 중요도		6.76	6.69	6.81
(제주) 지능형관광서비스 중요도		7.50	7.60	7.43

청년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의 주요 부처의 지역산업 전략 중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추진방향에서 주축산업에 대한 목표 달성도 조사 결과는 표 VI-9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경북의 첨단디지털부품(5.46)의 달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대전의 나노반도체(5.30), 충북의 첨단반도체(5.12) 순이다. 상대적으로 제주의 지능형관광서비스(4.46)의 달성도가 가장 낮다.

표 VI-9.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추진방향'(주축산업)의 목표달성도

내용	집단	전체	구분	
			청년전문가	정책전문가
사례 수		(155)	(65)	(90)
(강원) 천연물바이오소재 달성도		4.98	4.97	4.99
(충북) 첨단반도체 달성도		5.12	5.03	5.18
(충남) 디스플레이부품장비 달성도		4.82	4.78	4.84
(세종) 지능형 모빌리티부품 달성도		4.82	4.97	4.71
(대전) 나노반도체 달성도		5.30	5.42	5.21
(대구) 전기자율모빌리티부품 달성도		4.85	4.68	4.98
(경북) 첨단디지털부품 달성도		5.46	5.63	5.33
(경남) 첨단경밀기계 달성도		4.64	4.68	4.61
(울산) 전기자동차부품 달성도		4.68	4.57	4.76
(부산) 초정밀소재부품 달성도		4.71	4.89	4.58

내용	집단	전체	구분	
			청년전문가	정책전문가
(광주) 스마트홈 부품 달성도		5.06	5.22	4.94
(전북) 농생명바이오 달성도		4.63	4.77	4.52
(전남) 환경에너지소재부품 달성도		4.67	4.69	4.66
(제주) 지능형관광서비스 달성도		4.46	4.49	4.43

이와 같은 중요도와 달성도를 정성적으로 판단 및 평가한 IPA 분석 결과는 그림 VI-4와 같다. 중요도와 달성도의 각 평균값은 6.99와 4.87이다. 각 영역별로 보면, 우선 상대적으로 달성도와 중요도가 모두 높아서 유지강화해야 할 영역에는 충북과 경북이 포함된다. 그리고 현재 낮은 달성도를 보이지만 중요도는 높게 나타난 점진개선 영역에는 대구, 경남, 울산, 제주가 포함된다. 달성도와 중요도가 모두 낮은 점진개선 영역에는 충남, 세종, 부산, 전북, 전남이 해당된다. 달성도는 높지만 중요도는 낮아서 지속유지해야 하는 영역에는 강원, 대전, 광주가 포함된다. 상대적으로 점진개선 영역에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VI-4.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추진방향’(주축산업)의 IPA

3)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추진방향'(미래신산업)

청년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의 주요 부처의 지역산업 전략 중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추진방향에서 미래신산업에 대한 중요도 조사 결과는 표 VI-10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대전의 5G-6G 위성통신(7.70)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울산의 전기수소차 중요도(7.63), 충북의 차세대 이차전지소재셀(7.31) 순이다. 상대적으로 제주의 이차전지재사용·재활용(5.94)의 중요도가 가장 낮다.

표 VI-10.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추진방향'(미래산업)의 중요도

내용	집단	전체	구분	
			청년전문가	정책전문가
사례 수	(155)		(65)	(90)
(강원) 디지털헬스 데이터 분석활용 중요도		6.81	6.86	6.78
(충북) 차세대 이차전지소재셀 중요도		7.31	7.23	7.37
(충남) 수소연료전지 및 발전 중요도		6.54	6.62	6.48
(세종) 데이터시보안 중요도		6.81	6.89	6.74
(대전) 5G-6G 위성통신 중요도		7.70	7.78	7.64
(대구) 고난도 자율조작 중요도		7.11	7.09	7.12
(경북) 이차전지모듈시스템 중요도		7.15	6.89	7.34
(경남) 소형모듈형원자로 중요도		6.96	6.98	6.94
(울산) 전기수소차 중요도		7.63	7.52	7.71
(부산) 전력반도체 중요도		7.01	6.98	7.02
(광주) 산업활용·혁신 AI 중요도		6.13	6.43	5.91
(전북) 수전해수소생산 중요도		6.63	7.00	6.36
(전남) 도심항공교통(UAM) 중요도		6.52	6.22	6.73
(제주) 이차전지재사용·재활용 중요도		5.94	6.11	5.82

청년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의 주요 부처의 지역산업 전략 중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추진방향에서 미래신산업에 대한 목표 달성도 조사 결과는 표 VI-1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제주의 이차전지재사용·재활용(5.26)의 달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강원도의 디지털헬스 데이터 분석활용(5.19), 경북의 이차전지모듈시스템(5.17) 순이다. 상대적으로 제주의 이차전지재사용·재활용(5.94)의 중요도가 가장 낮다.

표 VI-11.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추진방향'(미래산업)의 목표달성도

내용	집단	전체	구분	
			청년전문가	정책전문가
사례 수		(155)	(65)	(90)
(강원) 디지털헬스 데이터 분석활용 달성도		5.19	4.97	5.36
(충북) 차세대 이차전지소재셀 달성도		5.04	5.03	5.04
(충남) 수소연료전지 및 발전 달성도		4.99	4.86	5.09
(세종) 데이터AI보안 달성도		4.83	4.72	4.91
(대전) 5G-6G 위성통신 달성도		5.06	5.06	5.06
(대구) 고난도 자율조작 달성도		4.80	4.82	4.79
(경북) 이차전지모듈시스템 달성도		5.17	4.97	5.32
(경남) 소형모듈형원자로 달성도		4.64	4.48	4.76
(울산) 전기수소차 달성도		4.79	4.49	5.01
(부산) 전력반도체 달성도		4.78	4.60	4.91
(광주) 산업활용·혁신 AI 달성도		4.78	4.60	4.91
(전북) 수전해수소생산 달성도		4.77	4.46	4.99
(전남) 도심항공교통(UAM) 달성도		4.59	4.35	4.77
(제주) 이차전지재사용·재활용 달성도		5.26	5.11	5.38

중요도와 달성도를 정성적으로 판단 및 평가한 IPA 분석 결과는 그림 VI-5와 같다. 중요도와 달성도의 각 평균값은 6.87과 4.91이다. 각 영역별로 보면, 우선 상대적으로 달성도와 중요도가 모두 높아서 유지강화해야 할 영역에는 대전, 충북, 경북이 포함된다. 그리고 현재 낮은 달성도를 보이지만 중요도는 높게 나타난 중점개선 영역에는 대구, 울산, 부산, 경남이 포함된다. 달성도와 중요도가 모두 낮은 점진개선 영역에는 세종, 전북, 전남, 광주가 해당된다. 달성도는 높지만 중요도는 낮아서 지속유지해야 하는 영역에는 충남, 강원, 제주가 포함된다. IPA 분석 결과 네 영역 모두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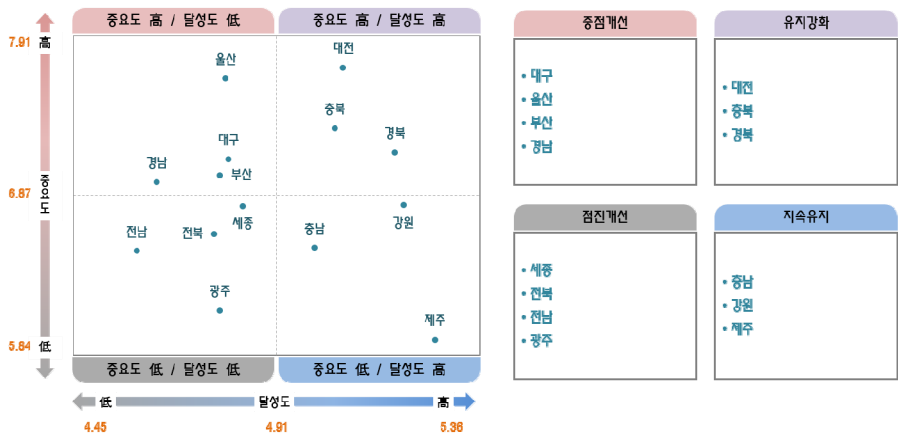


그림 VI-5.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추진방향’(미래산업)의 IPA

5. 비수도권(14개 시도)의 지역 특화인재양성 분야 및 관련 사업목표 AHP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역 특화인재양성 분야 및 관련 사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위해 AHP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그림 VI-6과 같다. 각 관계자별로 각각의 성과목표에 대해 정성적 지식에 기초하여 상대적인 중요도를 판단하였다. 그리고 중요도 판단 결과는 가중치로 계산되었다.

전문가들이 지역 특화인재양성 분야 및 관련 사업목표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해 판단한 전체 결과에 따르면, 그 가중치는 ‘지역혁신’, ‘대학혁신’, ‘협업’ 순으로 나타났다. 단, 사업 목표 간 차이는 크지 않다. 가장 높은 가중치로 계산된 사업목표는 ‘지역혁신’으로 0.352이며, ‘대학혁신’은 0.327, ‘협업’은 0.321이다. 이에 상대적 중요성 측면으로 볼 때, 전문가들은 비수도권(14개 시도)의 지역 특화인재양성 분야 및 관련 사업목표에서 지역혁신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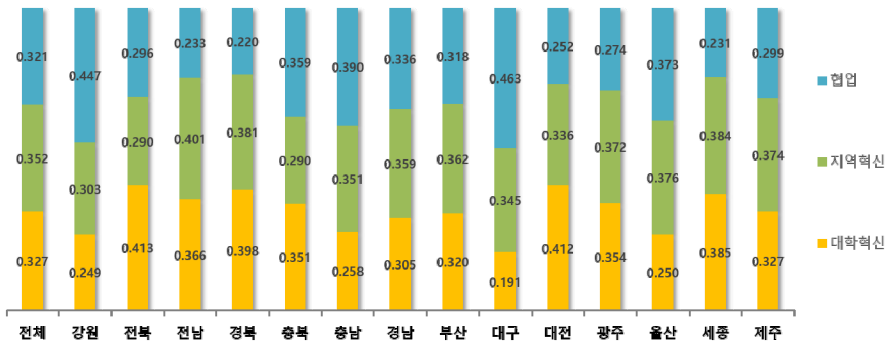


그림 VI-6.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성과목표별 상대적 중요도(전체)

전체 결과 이외에 각 지역별 결과 역시 비슷한 분포를 보이지만, 지역별 차이 역시 존재한다. 특히 전북, 경북, 충북, 대전 등은 상대적으로 지역혁신보다 대학혁신에 더 높은 가중치를 보인다. 또 강원, 충남, 대구는 협업에 가장 높은 가중치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대구의 경우 대학혁신에 대한 가중치가 가장 낮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이처럼 지역별로 다소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전반적인 경향은 지역 특화인재 양성의 세 분야 간 가중치의 차이가 크지는 않다.

6.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전문가 대상의 조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정부의 청년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정과제들 중 많은 과제들이 중점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지정되어 관리가 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윤석열 정부의 청년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관련 국정과제 IPA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총 9개의 관련 국정과제 중 6개(국정과제 112번, 113번, 117번, 118번, 119번, 120번)가 중점개선 영역에 해당되었다. 따라서 이들 과제에 대한 집중 실행 및 관리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의 정책성과를 위해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는 중앙부처의 역할에 관한 IPA 분석결과에서 도출된 것으로, 모두 중점개선 영역에 해당되는 부처이

다. 물론 그 외 다른 중앙부처의 역할도 중요하지만(유지강화, 점진개선, 지속유지), 중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역할의 목표달성도가 낮은 이들 부처에 대한 중점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 특화인재양성 분야 및 관련 사업목표로 지역혁신, 대학혁신, 협업은 모두 동시에 강조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전문가 대상의 지역 특화인재양성 분야 및 관련 사업목표의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비록 각 목표별 가중치의 차이는 있으나 그 정도가 크지는 않다. 이는 곧 지역혁신, 대학혁신, 협업 모두 지역 특화인재양성 분야 및 관련 사업목표로서 비슷한 비중으로 유의미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제7장 정책 제언

- 1. 청년친화적인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입법적 방안
- 2. 중앙부처 연계강화 및 정책평가 내실화
- 3. 지역기업의 개방적 참여 유도
- 4. 지역기업 중심의 청년인재육성 활성화
- 5. 미래산업과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산업혁신
- 6. 지역청년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평생교육 강화
- 7. 고숙련 지역인재의 정주기반 마련 지원
- 8. 지역중심 청년인재양성을 위한 대학교육의 혁신

지금까지 청년 지역인재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았으며, 지역별 산업 특성과 청년 경제활동 인구의 특징과 ‘지자체, 기업, 대학’의 정책관계자의 청년 지역인재육성과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 인식도 조사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지자체, 기업, 대학’의 정책관계자 산학연 협력에 대한 정보공유 행동실험분석과 청년 지역인재육성과 일자리 창출의 정책방향에 대한 전문가 조사결과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업중심의 산학협력의 중요성과 지역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하는 인프라와 제도마련, 평생교육지원, 수도권을 제외한 시도별 일자리 창출의 차별화 전략 마련 등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청년 지역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 내실있게 추진되기 위하여 1) 법제도 개선 및 정책 강화, 2) 기업참여 중심의 지역일자리 창출, 3)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강화, 4) 지역청년 정주여건 강화, 5) 지역대학 역량 강화의 5가지 정책 방안을 제안한다. 그리고 1) 법제도 개선 및 정책 강화를 위한 ① 청년친화적인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 개정, ② 중앙부처 연계강화 및 정책평가 내실화, 2) 기업참여 중심의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③ 지역기업의 개방적 참여 유도, ④ 지역기업 중심의 청년인재육성 활성화, 3)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⑤ 미래산업과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산업혁신, ⑥ 지역청년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평생교육 강화, 4) 지역청년 정주여건 강화를 위한 ⑦ 고숙련 지역인재의 정주기반 마련 지원, 5) 지역대학 역량 강화를 위한 ⑧ 지역중심 청년인재양성을 위한 대학교육의 혁신의 8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들의 각 정책대안에 대한 세부제언을 요약하면 그림 VIII-1과 같다.

정책방안	정책대안	세부 정책제언	관련정책추진체계						
			중앙	지자체	지역기업	대학	국책	민간	
법제도개선 및 정책강화	1. 청년친화적인 지역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개정	1-1. 법률제정을 통한 정책추진 강화	●	●	●	●	●		
		1-2.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을 통한 정책추진 강화	●	●	●	●	●		
	2. 중앙부처 연계강화 및 정책평가 내실화	2-1. 주요 중앙부처(고용노동부, 과기부, 중기부, 산자부, 행안부)의 콘트론타워 강화	●					●	
		2-2. 청년친화 지역인재육성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의 효과성 평가체계 구축	●	●				●	
기업참여 중심의 지역일자리 창출	3. 지역기업의 개방적 참여 유도	3-1. 지역 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강화	●	●	●				
	4. 지역기업 중심의 청년인재육성 활성화	4-1. 기업 참여 중심의 지산학연 생태계 구축		●	●	●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강화	5. 미래산업과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산업혁신	5-1. 로봇,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전문인재 양성, 친환경 에너지 및 미래 모빌리티 인재 양성	●	●	●				
		5-2. 지역친화형 인재육성 및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수립	●	●		●	●		
	6. 지역청년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평생교육 강화	6-1. 지역 산업구조와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대학의 직업교육		●		●			●
		6-2. 지역특화산업 고숙련 인력양성을 위한 평생교육 혁신지구 마련		●		●			●
지역청년 정주여건 강화	7. 고숙련 지역인재의 정주기반 마련지원	7-1. 지역친화형 인재육성에 대한 주거 및 자산 형성 지원	●	●					●
		7-2. 정주청년에 대한 지역활력형 편의성 증진		●					●
지역대학 역량 강화	8. 지역중심 청년인재양성을 위한 대학교육의 혁신	8-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내실화	●			●	●		

그림 Ⅷ-1. 본 연구의 정책 제언에 대한 요약

1. 청년친화적인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입법적 방안

표 Ⅶ-1. 청년친화적인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 개정

정책대안	세부 정책제언	관련 정책추진체계					
		중앙	지자체	지역기업	대학	국책	민간
1. 청년친화적인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 개정	1-1. 법률 제정을 통한 정책추진 강화	○	○	○	○	○	
	1-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통한 정책추진 강화						

1) 제언 배경

청년친화적인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은 단기간의 정책과제가 아닌 장기간의 정책과제로서,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지역인재 양성 및 (공공)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청년기본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기는 하나, 추진부처가 각기 상이하고 개별 법률 내용 간의 체계적 정합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더 나아가 청년고용촉진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이며, 개별 법률은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입법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입법적 방안을 통하여 청년친화적인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이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정책이 아닌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속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입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정책 대안

청년친화적인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입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선 현행 법률을 개정하여 정책적 추진 토대를 만드는 것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의 제정 목적과 주요 내용 및 추진체계 등 서로 상이하여 법률 개정을 통하여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입법적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법이기 때문에 청년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 및 내용 등을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법명에서 알 수 있듯이 청년 지역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에는 법 체계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어, 청년정책과 관련된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기에는 어렵다. 더 나아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내용도 지방대학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물론 이 법률이 지역인재 양성과 관련있는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 제2조 제2호는 '지역균형인재'를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정의하여 지방대학의 육성과 지원에 중점을 두어 지역인재의 범위를 좁게 설정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 방안을 공공기관과 대학의 우선 채용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년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청년 친화적인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법인 청년기본법을 개정하여 청년 친화적인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가칭 '청년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3) 관련 추진체계

기본적으로는 가칭 '청년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의 제정을 위해서는 우선 청년기본법을 소관하고 있고, 청년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국무조정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물론 중앙행정부처 간의 협력도 중요한데, 예를 들어 일자리와 관련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인재양성과 관련한 교육부, 지방분권 및 지역개발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등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중앙행정부처 외에 지역적 현안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도 중요한데,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를 통하여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추진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추진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추진에서의 국책연구기관, 지역대학, 지역기업 및 전문가들의 참여와 정책평가 및 실태조사 등도 이루어져야 한다.

4) 기대효과

청년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관련 법 제정을 통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가칭 ‘청년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의 제정을 통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정책 실행의 종합성·체계성을 확보하고, 관련 예산 등 재원 확보를 통해 정책 실행의 지속성도 확보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이 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적 차원에서의 청년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정책추진을 할 필요성이 있다.

법률과 조례 제정을 통한 전국 차원에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의 추진은 실효적인 청년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의 토대가 될 것이다.

청년기본법 개정안<제17조의2 신설>

제17조의2(청년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지역인재 양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은 법률과 조례로 정한다.

가칭 ‘청년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의 제정안의 주요 내용 예시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 및 지역기업 간의 연계를 통한 관련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소멸의 방지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의 청년을 말한다.
2. “지방대학”이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의 지방대학을 말한다.
2. “청년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학생과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지방대학 외의 대학을 졸업하고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수도권 이외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청년 지역인재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지역인재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지역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과 기업과 연계하여 청년 지역인재 양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고, 지방대학과 기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지방대학 및 기업이 연계하여 청년 지역인재 양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청년 지역인재 양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창출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청년 지역인재 양성 및 청년 일자리창출의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 지역인재 양성 및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 지역인재 양성 및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한 시책과제 및 중기·장기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청년 지역인재 양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4. 청년 지역인재 양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5. 청년 지역인재 양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 지역인재 양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청년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무총리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3조 제1항에 따른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무총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국무총리는 이를 종합·조정하여 제8조에 따른 청년 지역인재 양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과 제5조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은 「청년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인적자원 개발·지원 계획 및 일자리창출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제8조(청년 지역인재 양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위원회의 설치) ① 청년 지역인재 양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 지역인재 양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5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청년 지역인재 양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청년 지역인재 양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청년 지역인재 양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관련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금융위원회 위원장·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지역청년단체의 대표 등 지역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실무위원회·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무국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 및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지원 및 세제상의 혜택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년 지역인재 양성을 하거나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는 경우
2. 청년 지역인재 양성 및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에게 교육비, 교재비, 주거정착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청년 지역인재 양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영향평가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소관 정책의 수립·시행 또는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 시 해당 정책 또는 법령 또는 조례가 청년 지역인재 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과 법령 또는 조례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영향평가에 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제출받은 평가서에 관한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과 법령 또는 조례에 반영한 경우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영향평가의 대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정책결정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2조(권한의 위임·위탁)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그 업무의 일부를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중앙부처 연계강화 및 정책평가 내실화

표 Ⅶ-2. 중앙부처 연계강화 및 정책평가 내실화

정책대안	세부 정책제언	관련 정책추진체계					
		중앙	지자체	지역 기업	대학	국책	민간
2. 중앙부처 연계강화 및 정책평가 내실화	2-1. 주요 중앙부처(고용노동부, 과기부, 중기부, 산자부, 행안부)의 컨트론타워 강화	○				○	
	2-2. 청년친화 지역인재육성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의 효과성 평가체계 구축	○	○			○	

1) 제언 배경

한국 사회가 직면한 주요 문제 중 하나인 청년 일자리 문제와 지역소멸 위기로 인구 감소와 지방 경제의 불균형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주요 국정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를 포함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학, 기업, 지자체 간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간의 협력과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현재 다양한 부처에서 청년 일자리와 인재 양성을 목표로 개별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개별 부처의 정책이 통합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들이 각각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협력을 통한 사업 간 연계와 시너지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청년 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이 부족한 것도 문제이다. 정책이 단기적인 성과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중장기적인 효과나 정책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데 한계가 지적되기도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제언은 중앙부처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구축하고, 청년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통합된 평가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정책 대안

이에 본 연구는 청년 지역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 정책의 내실화를 위한 중앙부처 연계 및 정책평가 강화를 제안하고자 하며,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VIII-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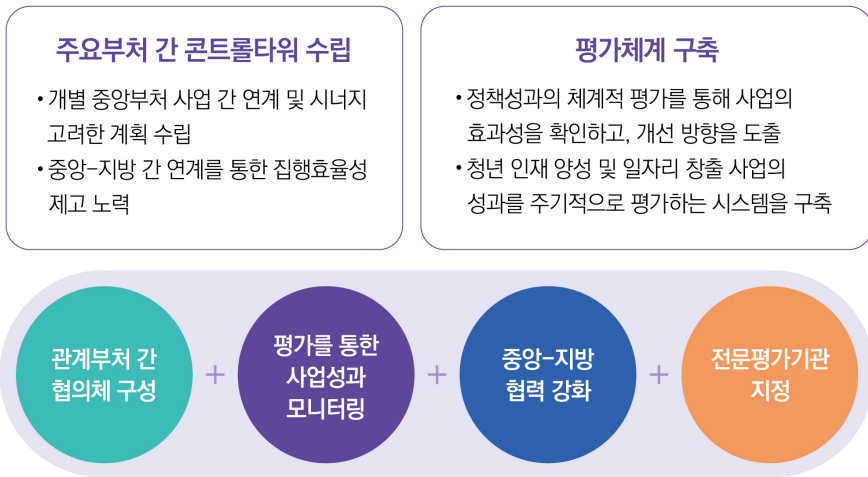


그림 Ⅶ-2. 청년 지역인재 육성과 일자리 창출 정책의 내실화를 위한 중앙부처 연계 및 정책평가 강화

(1) 주요 중앙부처(고용노동부, 과기부, 중기부, 산자부, 행안부)의 컨트롤타워 강화

청년 인재 양성 and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정책을 연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재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 주요 부처가 각각 개별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중복 투자가 발생하고 정책의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과 조율이 필요하다.

별도의 컨트롤타워를 담당할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는 각 부처의 청년 관련 기본계획을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정책을 종합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장기적으로는 청년 고용 및 일자리 창출 정책의 주관 부처를 지정하여, 각 부처의 청년정책을 통합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청년 인재 양성에 필요한 사업을 부처별로 분담하고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주무부처는 개별 부처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첨단 산업 및 연구 인재 양성,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된 청년 일자리 창출, 행정안전부는 지역 자치단

체와의 협력을 통한 청년 정책의 현지화를 담당할 수 있다. 이처럼 부처 간 역할을 분명히 나누어 협력하고,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이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청년친화 지역인재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의 효과성 평가체계 구축

청년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일관된 평가체계는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의 실행 단계에서부터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의 개선 방향을 도출할 수 있는 명확한 평가 절차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평가체계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일관성 있게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업의 성과가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서 중장기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확인하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다. 평가체계는 주기적인 성과 측정을 통해 정책의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을 도출할 수 있는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평가 절차와 구성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책을 수립할 때부터 평가 기준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평가 대상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와 평가 시점을 사전에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앙부처는 각 부처가 수행하는 청년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의 목표를 공유하고, 이와 관련된 성과 지표를 설정한 후 평가 방법론을 통합적으로 정립해야 한다.

다음으로, 청년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연간 또는 분기별로 사업의 중간 성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적으로 정책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평가 결과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유되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 사업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는 청년정책 관련 성과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의 중간 성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 계획을 조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

네 번째로, 정책의 효과성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외부 평가 기관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부 평가 기관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성과 분석을 제공하며, 평가 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책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책연구기관 등과의 연계를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 결과는 단순히 성과 측정에 그치지 않고,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한 피드백 루프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필요한 개선 사항을 즉시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피드백 루프는 정책 집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과 성과 향상이 가능해진다.

효과성 있는 평가체계가 구축되면, 정책의 목표 달성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정책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청년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정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3) 관련 추진체계

컨트론타워 강화와 평가체계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간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부처별 사업을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청년 정책의 총괄 역할을 맡고, 각 부처는 부처별 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율해야 한다.

첫째,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모든 중앙부처의 청년 관련 기본계획을 포함시켜, 종합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관계 부처 간의 협의체를 통해 각 부처가 추진하는 사업 간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추진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중앙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청년정책 평가체계를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고, 각 부처는 해당 평가체계를 바탕으로 사업 성과를 모니터링하며, 주기적으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정책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청년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사업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조율하고, 지역 맞춤형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청년들의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독립적인 평가 기관을 지정하여 정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책연구기관 등과의 연계를 통해 평가 품질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청년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의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

4) 기대효과

중앙부처 간 컨트롤타워 강화와 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청년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각 부처의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협력적인 정책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각 부처의 청년 관련 계획이 통합됨으로써 중복 사업을 줄이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해진다. 또한, 관계 부처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면 청년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평가체계가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되면,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활용한 다각적인 평가를 통해 정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청년들의 요구를 더 잘 반영하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독립적인 평가 기관을 통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면,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고, 중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와 청년 고용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컨트롤타워 체계와 평가체계는 청년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인구의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 소멸 위기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지역기업의 개방적 참여 유도

표 Ⅶ-3. 지역기업의 개방적 참여 유도

정책대안	세부 정책제언	관련 정책추진체계					
		중앙	지자체	지역 기업	대학	국책	민간
3. 지역기업의 개방적 참여 유도	3-1. 지역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강화	○	○	○			

1) 제언 배경

경제산업적 관점에서 지역의 성장과 활성화는 지역의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나타날 수 있다. 지역 고용지원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후,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지자체 주도로 본격화되었으며, 지역일자리 사업을 위한 예산 규모의 증가와 지역의 전략 및 특화사업과 복지사업이 연계되는 형식으로서의 사업의 다변화가 진행되는 중이다. 지역의 잠재력을 활성화하여, 지역의 경쟁력과 고용 성과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일자리 정책의 거버넌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과 책임의 정립과 시너지 효과의 창출을 기대한다.

지역일자리 거버넌스는 지역 차원에서의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주체로서 관심을 받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제 주체, 지역노동시장 주체 등이 지역일자리정책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협업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지역청년일자리 거버넌스는 일자리 창출의 수요와 공급에 대하여 청년을 대상으로 한정하는 차별성을 가지며, 지역노동시장의 다양한 참여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특화된 체계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지역청년일자리 거버넌스는 지역일자리정책의 틀 내에서 논의될 수 있으며, 지역 산업생태계의 변화와 사회문화적 특성의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및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에 필요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에 부합한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가진다.

지역기업과 지역주력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은 대부분 현금 또는 현물성 지원이라는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정부는 지역의 경제주체가 주도하는 경제성장을 산업 및 기업 정책의 방향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하 지산맞 사업)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 고용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구하

는 지역 단위의 대표사업의 성격을 가진다. 지산맞 사업은 지역주도형 고용정책으로 국가 및 중앙정부의 표준화된 일자리 정책을 보완하는 성격을 가지며 지역노동시장에 맞는 인력양성지원, 지역의 산업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지원, 고용위기 지역에서의 고용안정에 대한 선제적 지원 등을 포함하며, 최근에는 지역형, 지역체감형, 업종별 등으로 사업이 세분화되면서 지역의 주도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지역주도형 사업이 지역 스스로 일자리정책을 설계한 성과를 생산한 것과 비교하여, 각 지역의 특성을 맞춤형으로 설계한 일자리사업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 내 또는 지역 간에 유사해지는 동형화(isomorphism)와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성이 희미해지는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지역의 일자리정책사업이 또한 기존의 일자리사업을 진행하였던 경로의존을 보여주면서 유사 및 중복적 성향을 가진 사업이 설계 및 운영되거나, 공모사업 형태의 정책설계가 지역 간 격차를 증가시키거나 지역 간 경쟁을 심화시키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역일자리정책의 거버넌스가 주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 정책의 변화에 주목한 것과 비교하면, 일자리 창출이라는 결과 또는 성과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지역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하향적 인센티브 제공의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논의하는 한계가 나타나기도 한다. 지역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은 지역혁신체계와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연계하여, 지역의 인력수요와 인력양성을 일치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전제한다. 지방정부, 대학, 산업체 등의 지역의 주요 거버넌스 주체는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산업 분야에 필요한 지역인재를 양성하여 공급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혁신을 촉진할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지역일자리창출 거버넌스는 지역기업이 가지는 인재에 대한 수요 자체를 반영하는 방법의 도입과 운영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특히, 지역기업의 인력수요가 고숙련의 전문인력보다는 상대적으로 지역의 산업생태계 특성에 맞는 인력과 이들의 직무교육에 집중되면서, 지역기업이 원하는 일자리와 지역에서 육성되는 인력의 수요와 공급 간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다.

지역기업의 인력 수요와 지역대학 중심의 인력 공급 간 연계는 인적자원 개발기관인 대학의 관점보다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기업의 참여와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즉, 지역청년일자리 거버넌스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존의 지역산업 생태계의 필요와 새로운 성장을 모색하기 위한 지역사회 및 지역정부의 산업생태계의 발전 방향을 동시에

고려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기업 및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하고 지역혁신을 통한 신규 일자리의 창출을 모색하는 방법을 추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지역 일자리 정책과 맞춤형 취업 발굴을 위한 일자리 거버넌스를 지역 산업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거버넌스를 구성 중에 있다. 전북형 일자리 거버넌스는 산업 및 지역별 일자리 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맞춤형 취업연계, 수요맞춤형 인력개발훈련 및 양성, 산업체 일자리 수요 공유 등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 중에 있다. 지자체 내의 공공 및 민간의 일자리 유관기관, 인력양성기관, 산업기관 및 단체, 연구 및 자문기관 등은 산업별, 시군별, 연령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위한 기관자원을 공유하고 특히 기업실무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화산업분과를 운영하는 방식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계 및 협업체계를 구성한다.

2) 정책 대안

지역기업이 지역의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기업으로 하여금 지역청년일자리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청년 일자리를 제공한 지역기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또는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등의 재정 지원을 통해 일자리 제공 및 유지의 비용보조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공적자금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은 기업의 고용부담을 완화시켜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에는 효과적이나 일자리의 신규 창출에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장려금 또는 지원금 형태의 현금 보조 정책은 기업이 일자리 1개를 신설 또는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대체하기에는 과소한 규모이기도 하다. 또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은 기존의 일자리를 중장년층에서 청년층으로 대체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으나, 연령과 관계없이 일자리 자체의 증가에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기도 하다.

지역기업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보다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의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구분하여 사회적 가치에 대응하여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혁신과 변화를 유도하는 대안적 재정수단으로 교육훈련 및 복지분야에서 활용 중인 사회성과인센티브(social progress credit)는 기업의 사업모형을 사회적 가치의 창출을 지속가능한 경제적 이익의 생산으로 전환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의 일자리가 지역혁신과 성장, 지역의 청년 일자리가 청년계층에 대한 지원과

동행의 가치와 연관된다는 점에서, 청년을 위한 일자리를 신규 창출하는 기업은 사회적인 가치를 생산하는데 기여하는 주요 행위자로 기능할 수 있다. 특히,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일부 보조 받는 방식보다는 일자리의 신설이라는 산출을 만들기 위한 비용을 보상 받는 방식은 기업에게 있어서 일자리 신설의 사회적 성과와 신규 일자리를 통한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보다 유리한 기회로 작용될 수 있다.

임팩트 이코노미(impact economy)를 지역청년일자리 거버넌스에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산업생태계는 전략산업을 통한 경제성장과 기술혁신의 토대를 확보하고, 임팩트투자를 통해 지역사회문제에 대응하는 솔루션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광역단위에서의 지자체가 추진하는 전략산업은 고자본 및 고위험의 특성으로 지역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한계를 가진다면, 임팩트 투자를 통해 만들어지는 임팩트스타트업은 지역 현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며 지역에 기반을 둔 청년의 창업이나 취업에 유리할 수 있다. 지역기업에 대한 임팩트투자의 활성화는 지역기업으로 하여금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만들거나 기존 일자리를 전환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으며,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의 지원을 통해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지역기업의 고용 창출에 대한 세제 혜택의 강화도 필요하다. 조세지원의 정책수단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의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세 감면제도는 기업 유치에 집중하고 있어서 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실제로 창출한 일자리 규모와 조세지원 규모 간의 연관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를 유지한 기업에 제공될 수 있으며, 증가한 일자리 개수나 급여 수준과 같은 일자리의 양과 질에 비례하여 조세지원의 규모가 결정될 수 있다. 청년계층도 다른 특수계층과 동일한 또는 조세정책에 보다 우호적인 집단으로 분류함으로써, 청년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한 지역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기업은 본질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영리적 조직이며, 신규 창출한 또는 유지하는 일자리의 비용이 비즈니스모델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보다 낮을 때 일자리 창출에 참여하는 유인이 만들어진다. 이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게 일자리 창출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재정 및 조세적 정책수단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고, 일자리 창출 자체를 또 하나의 성과로 하여 이에 대한 사회 및 정책적 보상이 제공되어야 일자리

창출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청년 친화적인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생산 및 공급하는 기업의 참여와 선택을 유인할 수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 국가와 중앙정부 주도하는 전략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에 지역기업이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하향적 접근은 지역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집중하여 정책수단을 선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혁신클러스터 특화산업 전략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산업 개편 및 추진방향이 이와 같다. 하지만, 현재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전략은 전략산업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나 산업전환을 해야 하는 기업의 참여를 유인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지역산업 기반의 기업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이해관계자가 협업하는 상향적 방식의 거버넌스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거버넌스의 구조를 전환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상향적 접근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기업 중심의 청년 일자리 거버넌스를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 VIII-3과 같다.

지역기업은 기존 중점 산업에서 추가로 일자리를 만들거나 산업전환의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전략적 선택에서 필요한 인력의 적정한 공급과 이를 위한 지역산업생태계의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 즉, 지역기업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기업이 필요한 자원의 충족을 전제로 하며, 인센티브의 작동 역시 지역기업이 달성가능한 성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지역산업 중심의 상향적 거버넌스는 지역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 및 기술수요 등에 대하여 대학 및 교육훈련기관이 맞춤형으로 인재를 공급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필요한 재정 지원 및 자원 연계를 시도하도록 한다. 대학이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공급하는 고숙련의 연구개발 중심의 인재가 지역기업의 인력수요와 불일치하는 현상은 결국 수요자 관점에서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지역기업에 맞춤형 교육훈련을 통해서 해소될 필요가 있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식산업단지 등의 혁신 기반 역시 지역기업의 일자리 수요에 맞춤형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으며, 사전 예측적 기반 조성보다는 사후 대응적 기반 개선을 통해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을 추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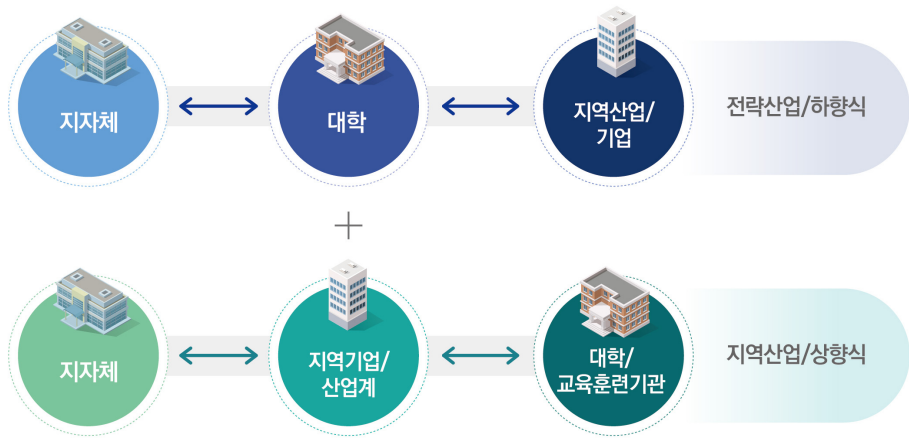


그림 Ⅶ-3. 지역기업 중심의 청년일자리 거버넌스

3) 관련 추진체계

기업의 의사결정은 비용 대비 수익의 극대화와 같은 효율성을 기준으로 한다. 기업이 특정 지역에서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해당 일자리의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수익을 기대하는 경제적인 판단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기업이 지역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비용을 줄이거나 또는 추가적인 수익을 얻는 등의 인센티브가 구조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지역 중심의 일자리 창출의 정부 정책을 지역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특정 위치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임대료와 같은 고정비용의 지원이나 연구개발 및 취창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등의 인센티브 시스템을 활용했다. 하지만, 지역에 기업이 입지를 선정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과 그 기업이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별개의 행위이며, 입주를 위한 인센티브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로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기업으로 하여금 청년이라는 특정계층을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고용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제고할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가 별도로 존재하여야 한다. 기업의 관점에서 청년 고용에 대한 비용은 기업의 인력 수요와 연계하지 않은 인력 공급으로 인한 미스매칭과 그에 따른 이직의 증가 및 업무 열의의 감소와 같은 주관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모든 지역기업이 고숙련의 연구개발역량을 갖춘

인재를 동일하게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지역기업에게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지역기업이 지역청년일자리창출 거버넌스의 핵심적인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및 정책에서 지역기업의 목소리와 참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지역기업이 청년 채용과 기업에 필요한 인재상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의사결정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지역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금전적 재정지원의 다각화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 지역기업은 일자리의 추가 창출에 대한 비용을 일부 지원 받는 형태의 인센티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기대하는 기업 매출 및 수익의 증가 대비 비용의 증가가 클 경우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당한 금액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일자리의 양에 대한 재정지원은 산출 단위에서 비용 감소의 프레임을 제공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가지는 기업과 개인의 소득 증가 및 삶의 질 개선과 같은 성과 단위에서의 효용성 증가의 프레임을 제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때문에, 수량 기반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적인 금전 또는 재정적 지원 방식보다는 일자리 창출의 양과 질을 종합적인 성과를 보상하는 방향으로, 즉 일자리 창출이 기업의 관점에서는 또 다른 성과로 간주될 수 있도록 하는 공공 및 민간 지원 방식의 전환도 요구되는 것이다.

지역기업 및 기반산업 중심의 상향적 지역일자리 거버넌스는 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의 성과를 중심으로 자원을 연계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가 및 지자체는 지역에 입지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데, 이는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소요되는 실질적인 비용의 감소 효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일자리를 통한 수익 증가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여가 높지 않을 경우, 공공 재원을 활용한 금전적 지원의 효과는 한계를 가진다. 지자체와 국가는 지역기업에 대한 조세 및 재정지출하는 금액을 성과보상을 위한 재원으로 분류하거나 추가 확보하고, 지역기업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물적, 인적 자원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공적 재원이 비용 지원보다는 성과 보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의 자원 동원(mobilizing)의 형태 변화를 모색해 볼 수 있다.

4) 기대효과

지역기업이 지역청년일자리 거버넌스에 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기업은 지역의 일자리 구조와 산업생태계의 성장과 전환 등의 정책에 있어서 주요한 정책고객집단이며, 지역기업이 정책사업에 대하여 가지는 태도와 선호는 해당 사업이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지역의 청년인재육성과 청년일자리의 창출을 통한 지역으로의 정주 유인을 제공하는 성과를 결정할 수 있다. 이는 지역청년일자리 거버넌스에서의 지역기업이 가지는 역할이 단순히 사업에 대한 의견과 공모나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업의 방향과 그 내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이며 능동적이어야 할 필요를 의미한다. 지역기업을 거버넌스의 주요 행위자로 간주하고, 이들의 의사결정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며,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사업에 대한 보다 우호적이고 적극적인 지지 집단으로의 정책대상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지역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비용 지원에서 성과 보상으로 전환하고, 일자리 창출 자체에 대한 성과를 재정이나 조세지원을 통해 보상하는 것은 지역기업으로 하여금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가지는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즉,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를 지역 스스로가 판단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대내외적인 활동을 통해서 추구함으로써 기업 자체의 혁신과 함께 지역에 필요한 인재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순환 구조가 참여기업의 주도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지역기업 중심의 청년인재육성 활성화

표 VII-4. 지역기업 중심의 청년인재육성 활성화

정책대안	세부 정책제언	관련 정책추진체계					
		중앙	지자체	지역 기업	대학	국책	민간
4. 지역기업 중심의 청년 인재육성 활성화	4-1. 기업 참여 중심의 지산학 연 생태계 구축		○	○	○		

1) 제언 배경

청년인재육성을 위한 기존의 정책은 지역 특성화에 따른 맞춤형 인재육성이 주로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육성하는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고부가가치를 가진 첨단산업 및 전략사업을 중심으로 한 지산학연의 생태계가 지역의 산업생태계를 외부의 정책투입을 통해서 전환하려 하는 노력으로 특징된다. 하지만, 청년인재육성을 위한 정책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화보다는 전략 산업의 유형을 달리할 뿐 인재육성사업 자체는 표준화 또는 동형화되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학 중심의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인력공급이 지역의 수요와 연계되지 않아 인력 공급과 수요 간의 불일치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기도 하다.

지산학연 생태계와 관련하여, 현재 시점에서의 가장 적극적인 정책은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RISE)이며,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을 통한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지향하는 사업은 계획 단계와 달리 집행 단계에서는 지역 소재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한다. RISE사업은 지역의 산업생태계가 지자체와 대학의 공공 및 민간 지원을 통해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을 기대한다. 그리고, 지역의 산업생태계는 해당 지역의 전통적인 산업과 지자체가 추구하는 전략산업으로서의 첨단산업을 포함하는 다양성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생태계는 대학뿐만 아니라 지역 내부 및 외부의 교육훈련기관을 통한 인력공급의 다각화를 필요로 한다.

지역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지산학연 생태계를 지원하는 정책사업은 지역혁신체계로 나타나며, 해당 지역의 지방정부, 대학, 기업, 연구소 등의 혁신 주체들이 지역의 연구개발,

기술혁신, 신산업 창출, 기존 산업의 개선 등의 분야에서 상호작용 및 협력의 형태로 구체화된다. 지역이 스스로의 산업생태계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내생적 성장을 추구하는 이러한 혁신체계는 지역의 경제 및 사회적 자본을 토대로 구축된 인적자원개발의 토대 위에서 운영될 수 있다. 하지만, 지역혁신이 추구한 방향과 관련하여 대졸자 중심의 신규인력 공급이 지역 기업의 인력수요와 적합한지, 그리고 대학을 통해 공급한 신규인력이 지역기업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중등 및 고등교육을 포함한 학교교육과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인적자원 양성과 고용과 산업부분의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인적자원의 배분과 활용 간의 연계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과도 연결된다.

지역혁신체계를 통한 지산학연 생태계의 전환을 위한 혁신주체의 역할과 효과에 대한 논의도 새롭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대학교육 중심의 학교교육과 연구개발 활동은 연구개발인력의 양성을 지향하고 이들이 지역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에서 신기술을 기반으로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 가는 상대적으로 급진적인 혁신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하지만, 지역기업 단위에서 필요한 혁신이 대학이 양성하는 연구개발인력이 제공하는 기술 혁신과 불일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지역기업이 지역대학을 통해서 공급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혁신을 추구하기에는 기업 자체의 물적 및 인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고, 전문인력이 기대하는 임금과 정주여건을 충족시켜 주기엔 상대적으로 경제 및 사회적 자본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산업생태계가 소수의 신규 전문인력의 유입과 다수의 기존인력의 직무능력 향상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지산학연의 생태계 또는 협업구조는 지역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여 지역의 전략산업으로의 생태계를 급진적으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지역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점진적인 전환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즉, 지자체-대학 중심의 전문인력양성과 함께 지역기업-지자체 중심의 인력활용의 효율화가 청년인재육성을 위한 사업의 주요한 방향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정책 대안

청년이 지역의 주요한 인재로 양성되고 이들이 지역에 정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의 역할과 이들의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지자체의 역할, 그리고 기업이 필요한 일자리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및 유관 교육훈련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선, 지역기업은 지산학연 생태계에서 인력활용을 담당하며, 기업은 현재의 생산성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추구한다. 지역의 산업구조의 특성에 따라 특정 기업은 전략산업 단위에서의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연구개발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수요로 할 수 있지만, 상당수의 기업은 현재의 생산성을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존인력의 직무역량강화와 기존인력과 유사한 수준의 신규인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산업생태계의 다양성과 생태계 내 지역기업의 차별성은 지산학연 생태계 유지에 필요한 인적자원 역시 다양화될 필요가 있고, 수요자 중심의 인재양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지자체는 지역의 산업생태계 내에서 일자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들에 대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청년인구유출이라는 측면에서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경쟁으로 대표되는 지역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은 청년인구를 유인 또는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사회 및 문화적 자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역혁신의 수단으로 인재양성이 활용되고 있지만, 소수의 전문인력이 지역혁신을 견인할 가능성과 이들이 더 높은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의 이탈할 가능성은 동시에 존재한다. 이는 지자체가 지산학연의 생태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지역에 필요한 혁신 수준에 대한 적절한 판단과 지역혁신과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지역기업과 인재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대학은 지자체와 지역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교육과정 및 연구 개발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는 산업생태계의 급진적인 혁신을 그리고 기업은 지역산업생태계의 점진적인 혁신을 추구하며, 이에 따라 대학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방향성은 서로 다른 인력수요를 가진 집단을 전략화하여야 한다. 즉, 대학이 자체적으로 가진 연구개발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의 전략산업 위주의 혁신을 추구하는 하향적 접근과 함께 지역기업이 요청하는 인력의 직무교육 및 훈련에서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지역기반 산업 중심의 혁신을 추구하는 상향적 접근이 필요하다.

각각의 혁신주체의 역할이 균형과 협업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지만, 현재의 지역인재 양성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지산학연의 협업체계에서 지역의 산업생태계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수요에 대한 신호를 보내고, 지역에서 개발한 인적자원에 대한 적합성 및 방향성을 요청하

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지자체-대학 중심의 협업체계에 산업계가 인재육성의 수요기관으로서 역할을 수 있어야 하고, 지역기업에 필요한 인재상과 인적자원의 공동생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지산학연의 생태계에서 산업계의 역할이 참여자 또는 조작 및 수렴의 대상이 아니라, 산업계가 지역의 혁신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의 신설과 특화, 기존 일자리의 확장과 청년과 기존 산업 인력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협업 또는 생산의 대상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지역기업 중심의 인재양성 전략의 로드맵을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VII-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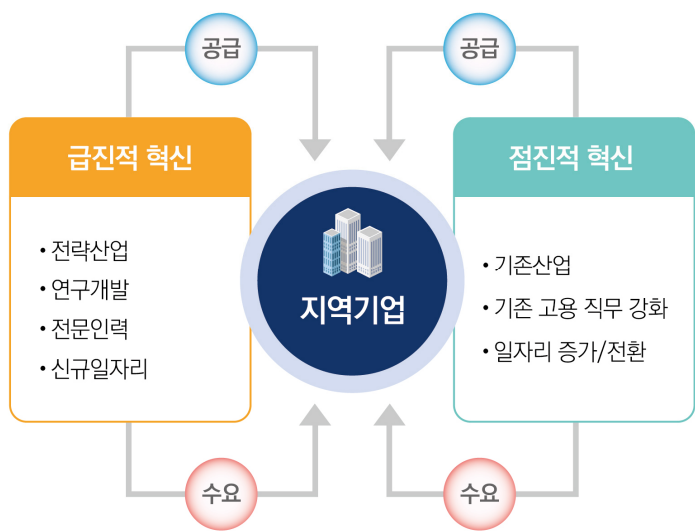


그림 VII-4. 지역기업 중심의 인재양성 로드맵

3) 관련 추진체계

지역혁신체계와 지역의 인재양성체계는 지역 산업생태계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역혁신과 인재양성의 체계는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하지만, 연구개발활동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사업화를 진행하는 혁신 주체는 기업과 지역대학을 통해 만들어진 인재에 대한 수요기관은 기업이다. 따라서, 지역기업이 지역대학과 함께 또는 지역대학을 대체하여 지산학연 생태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지역기업은 산업계의 구성원으로서 지자체, 학계, 연구계의 혁신 주체와 각각의 협업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지역기업은 지역의 총생산과 산업구조의 직접적인 당사자이며, 지자체가 추진하는 전략산업을 강화한 형태의 생태계의 내생적 발전의 주체이다. 지역 혁신이 지역 외부의 기업의 입주와 지역 내부의 기업의 전환으로 달성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지역기업은 지자체가 정책 단위로 추구하는 지역의 전략산업의 선정과 생태계 구축의 방향에 대한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에 따른 정책사업에 대한 수용도 제고의 효과를 기대하여야 한다.

지역 단위에서의 인재양성은 고도의 연구개발활동을 통해 개발하는 전문인력과 그에 미치지 않는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추구해야 한다. 대학이 전문인력의 양성에 강점을 가진다면, 대학 이외의 중등교육 및 교육훈련기관은 직무교육과 중소벤처기업의 직무수요를 적시에 충족시켜줄 수 있는 강점을 가진다. 이에 따라, 지역대학이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인재육성과정을 진행하고, 직무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기관을 연계하는 인재양성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개편에서 지역기업이 산업생태계에 필요한 인력수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수요자 관점으로 인재양성체계를 개편하는 과정에 의사결정자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4) 기대효과

지역기업 중심의 지산학연 생태계의 운영은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의 효과를 기대한다. 일자리 관점에서의 지산학연 협업의 성과는 인적자원개발에 소요되는 비용과 인적자원을 실제 활용하는 취창업의 효과를 비교하는 비용 대비 효과성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수요와 공급을 구분하여 보면, 공급자 중심의 인적자원개발은 육성한 인적자원의 역량 강화와 인적자원의 취창업으로의 연계를 성과로 하고, 수요자 중심의 인적자원개발은 기업의 일자리 수요에 적합한 인적자원의 발굴과 활용을 성과로 볼 수 있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기대하는 일자리 창출의 성과의 양상이 상이한 상황에서, 실제적인 일자리창출과 인재의 활용은 수요자적 관점에서의 성과로 간주될 필요가 있다.

지역기업이 혁신체계 뿐만 아니라 인재육성체계에 참여하는 것은 수요자 관점에서 2개의 체계를 연계하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 혁신의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혁신에 적합한 인재육성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지역의 산업생태계에

특화한 그리고 적합한 인력을 공급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지며, 그 결과 수요와 공급 간 매칭이 개선될 수 있다. 또한, 지역에서 필요하지 않은 전문인력 양성 비용 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5. 미래산업과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산업혁신

표 VII-5. 미래산업과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산업혁신

정책대안	세부 정책제언	관련 정책추진체계					
		중앙	지자체	지역 기업	대학	국책	민간
5. 미래산업과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산업혁신	5-1. 로봇, 인공지능(AI), 정 보통신기술(ICT) 전문 인재 양성, 친환경 에너 지 및 미래 모빌리티 인 재 양성	○	○	○			
	5-2. 지역친화형 인재육성 및 청년일자리 창출 계 획 수립	○	○		○	○	

1) 제언 배경

미래는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한다. 기존의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출현함으로써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진다. 올리히 벡(2014)이 말하는 위험사회(risk society)라는 진단도 불확실성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다양한 예측 방법과 장치를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래는 물론이고 현재 우리 사회의 불확실성을 가증시키는 주요 변수는 최첨단 기술의 등장 및 발전과 인구구조의 변화이다. 최첨단 기술의 경우 AI(Artificial Intelligence)와 관련된 몇몇 사례만 보더라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AI가 수식어로 사용될 정도로 활용 범위가 방대하다. 특히 단순히 AI가 아닌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로 발전해가는 속도를 보면 말 그대로 AI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다(김민주, 2024). 실제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각 국가에서 AI 관련 산업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다(김윤정, 유병은, 2016). 이는 곧 AI와 같은 각종

최첨단 기술에 의한 미래를 사실화하고 그에 대한 대응의 모습이며, 특히 산업적 차원에서 대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구구조의 변화 역시 미래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변수로써 이미 한국 사회에서는 핵심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인구문제의 특성상 인구변화에 따른 미래는 일정 기간 동안 고착화된 경로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요약되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양분화되어 큰 두 축을 이끌고 있다. 출산율 제고를 통한 미래 인구 확보와 고령친화적 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 그에 해당한다. 이러한 노력은 규범적 측면에서 벗어나 산업적 측면의 각종 대응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불확실성의 두 핵심 변수인 첨단기술의 등장과 저출산고령사회라는 인구구조의 변화를 이미 마주하고 있다. 이 두 변수는 모두 시의성을 지닌 인재의 필요성을 전제한 변화를 야기하는 것들이다. 특히 산업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이면서 동시에 청년 중심의 핵심 역할을 기대하게 하는 변수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재 우리 사회는 청년이 중심이 되어 미래산업과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산업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2) 정책 대안

(1) 로봇,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전문인재 양성, 친환경 에너지 및 미래 모빌리티 인재 양성

첨단기술의 등장과 발전 속도에 비추어 볼 때 미래산업에 부응하기 위한 인재 양성 전략 방향은 보다 분명해지고 있다. 특히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산업구조의 효율화를 높여야 하는 청년 중심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산업혁신의 가능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이미 현재에도 체감하고 있는 첨단기술 인력 양성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특히 로봇,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전문인재 양성, 친환경 에너지 및 미래 모빌리티 분야는 첨단기술 기반의 산업혁신을 위한 중추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분야의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청년 세대가 이 분야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산업혁신을 이끈다면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역량(social capacity)도 높일 수 있다.

(2) 지역친화형 인재육성 및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지역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인구구조의 변화는 세대 간 불균형은 물론이고 지역 간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청년 세대의 부양부담의 증가와 지역 이탈은 지역경쟁력은 물론이고 국가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지역소멸을 앞당기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첨단기술 기반의 지역경제는 물론 왜곡된 국가경쟁력을 낳기도 한다. 따라서 첨단기술 시대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의성 높은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지역친화형 인재육성 및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부터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지역별 잠재적 성장 가능성의 산업 발굴과 인재 양성의 여건 분석 등이 선행되어야 하고, 동시에 지역 및 대학과 연계된 양질의 청년일자리 확보와 확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제안된 미래산업과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지역별 산업혁신 전략을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 VII-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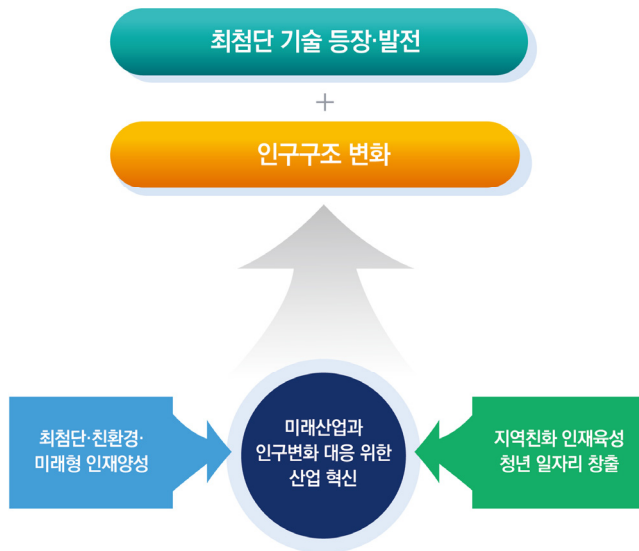


그림 VII-5. 미래산업과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지역별 산업혁신 전략

3) 관련 추진체계

미래산업과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산업혁신을 위해서는 인구변화 대응과 산업혁신 경로 간 상호 연계된 추진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기업, 대학, 연구기관 간 총괄적 연계망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로봇,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전문인재 양성, 친환경 에너지 및 미래 모빌리티 인재 양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기업 간 혁신산업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제도 기반의 정부 지원과 혁신창출에 따른 첨단기술 지역 배양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학과 국책연구기관이 협력하여 지역친화형 인재육성 및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산업혁신을 이끄는 동력을 확보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4) 기대효과

미래산업과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산업혁신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의 기대효과를 지닌다. 첫째, 첨단기술 기반의 인재 양성을 통해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청년 성장을 이끌 수 있다. 외적 환경 요인에 의한 불확실성을 원천 제거하기는 불가능하지만,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로봇,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전문인재 양성, 친환경 에너지 및 미래 모빌리티 인재로 성장한다면 불확실성에 대한 안정적 대비를 가능케 할 수 있다. 이는 곧 불확실성을 위해 무엇이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면(윤성식, 2018), 제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는 오늘날에는 첨단기술기반의 청년 인재가 되는 것이 앞서 말한 무엇이든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중 하나임을 의미한다.

둘째, 인구변화를 고려하여 지역친화형 인재육성 및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시스템화된 지역밀착형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 이는 교육, 일자리, 지역경제, 국가경제로 이어지는 사회적·경제적 부가가치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특히 청년을 지역 특화형의 인재로 육성하고 동시에 그 수준에 부합한 일자리 창출 및 보장이 가능하다면 지역노화와 지역소멸 등을 이끄는 구조적 인구 변화의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6. 지역청년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평생교육 강화

표 VII-6. 지역청년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평생교육 강화

정책대안	세부 정책제언	관련 정책추진체계					
		중앙	지자체	지역 기업	대학	국책	민간
6. 지역청년지역인재 양 성을 위한 평생교육 강화	6-1. 지역 산업구조와 지역 주 민의 수요를 반영한 대학 의 직업교육		○		○		○
	6-2. 지역특화산업 고숙련 인 력양성을 위한 혁신지구 마련		○		○		○

1) 제언 배경

지역 청년 인재 양성은 국가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에도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최근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역 내 인재 유출을 가속화 시키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와 산업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을 강화하여 지역 내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급변하는 산업 구조와 기술 변화에 따라 청년들이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평생교육은 청년들이 직업적 기술과 역량을 끊임없이 강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며, 지역 산업과 연계하여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내 대학과 혁신지구를 중심으로 지역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직업교육과 고숙련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 정책 대안

이에 본 연구는 지역청년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평생교육 강화의 4가지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며,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VII-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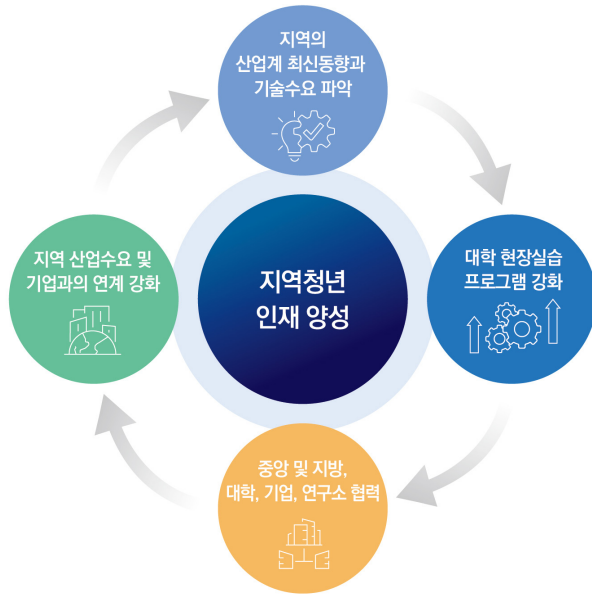


그림 Ⅶ-6. 지역청년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평생교육 강화의 4가지 전략

(1) 지역 산업구조와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대학의 직업교육

지역대학이 지역 산업구조와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지역 청년 인재 양성의 핵심적인 전략이다. 지역별로 산업 특성 및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대학은 해당 지역의 주요 산업에 필요한 기술과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학과 지역기업, 지자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산업 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한 직업교육 과정을 설계해야 한다.

첫째로,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은 정기적으로 지역 산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산업계의 최신 동향과 기술수요를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첨단 제조 기술과 공정 관리에 대한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서비스업이 주력인 지역에서는 서비스 경영과 고객 관리에 중점을 둔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대학은 지역 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시에 공급할 수 있으며, 청년들은 직업교육을 통해 지역 내 취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또한, 대학은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내 기업들과의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직업교육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현장 실습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졸업 후 즉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다. 이러한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은 청년들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2) 지역특화산업 고숙련 인력양성을 위한 혁신지구 마련

지역특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숙련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혁신지구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혁신지구는 지역 산업에 필요한 기술 및 역량을 강화하는 거점 역할을 하며,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고숙련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혁신지구는 해당 지역의 특화산업과 직접 연계된 전문 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고등 교육 기관 및 연구소와 협력하여 운영된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 산업의 특성과 주요 필요 기술을 분석하고, 혁신지구 내에서 이를 실습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바이오산업이 주력인 지역에서는 바이오 연구소와 지역 대학이 협력하여 생명공학 기술과 신약 개발 분야에서 고숙련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혁신지구는 기업과의 밀접한 협력을 통해 청년들이 취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기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자격 인증 과정을 운영하여, 졸업 후에도 기업과 연계된 고급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청년들이 혁신지구 내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지역 특화산업에 필요한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3) 관련 추진체계

대학이 주도하여 지역 내 주요 산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산업 수요와 기술 동향을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은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지역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대학은 기업과 협력하여 현장 실습 및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실무 중심의 교육을 강화한다. 지자체는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제공해야 한다.

혁신지구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대학, 기업, 연구소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중앙정부는 혁신지구 구축과 관련된 정책 가이드라인과 예산을 제공하며, 지방정부는 혁신지구의 인프라 구축과 행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대학과 기업은 혁신지구 내에서 공동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연구소는 신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혁신지구는 고속련 인력 양성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으며, 지역 특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핵심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혁신지구와 대학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는 주기적으로 평가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이 평가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성과, 졸업생의 취업률, 산업계의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평가 결과는 향후 프로그램 개선에 반영된다. 또한, 지역기업들이 요구하는 기술 역량에 대한 피드백을 적극 수용하여, 교육 과정에 즉각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한다.

4) 기대효과

지역 산업구조와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직업교육은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과 현장 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은 졸업 후 지역 내 기업에 즉각 투입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며, 이는 지역기업들이 필요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

혁신지구는 고속련 인력 양성을 위한 중심지로서, 지역 특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혁신지구에서 청년들은 첨단 기술 교육을 받고, 기업과 연계된 실무 경험을 쌓아 고급 기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 산업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고속련 인재를 공급받고, 기술력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내 고속련 인재들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정착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것이다.

7. 고숙련 지역인재의 정주기반 마련 지원

표 VII-7. 고숙련 지역인재의 정주기반 마련 지원

정책대안	세부 정책제언	관련 정책추진체계					
		중앙	지자체	지역 기업	대학	국책	민간
7. 고숙련 지역인재의 정주기반 마련 지원	7-1. 지역친화형 인재육성에 대한 주거 및 자산 형성 지원	○	○				○
	7-2. 정주청년에 대한 지역활력형 편의성 증진		○				○

1) 제언 배경

지역인재 양성 정책은 기본적으로 고등교육을 이수하고 연구개발활동을 수반한 혁신체계를 지역 단위에 형성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지역대학의 경쟁력과 지자체의 산업생태계 특화를 강화에 초점을 둔 지역인재 양성 정책은 궁극적으로 지역대학에서 양성한 고숙련의 지역인재가 대학과 기업이 위치한 지역에서 중장기적으로 정주하는 것을 주요 성과물로 가정한다. 지역인재의 양성을 위한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발전특구제도가 기획될 만큼,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한 정주형 고숙련 인재양성은 주요한 지산학연 협력체계의 성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인재 양성-취업확대-정주여건 개선의 선순환구조의 구축은 인재양성, 취업확대, 정주여건 개선의 순서로 진행 중인데,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재양성과 취업확대의 순환구조의 순서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청년층의 정주여건에 대한 판단은 가구 구성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이 때문에 청년층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은 지역도시권과 연계하여 전략화될 필요가 있는데, 특히 1인가구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단위의 정주환경 조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인 이상의 가구는 자녀의 학교환경과 맞벌이 부부의 근무지, 1인 가구는 기초적인 삶의 질 유지가 가능한 환경이 정주지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1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편의점, 의무시설, 식당, 체육관 등의 생활편의 서비스에의 접근 편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면, 2인 이상의 가족단위 가구는 유아돌봄, 초중등교육, 의료복지 등의 사회서비스에의 접근

편의성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지역의 정주환경은 교통, 문화, 일자리, 사회서비스, 주거와 지역정책의 수준으로 나타난다. 교통환경은 일자리에의 접근성과 문화생활시설로의 이동권과 관련 있으며, 특히 대중교통의 양과 질에 연관이 있다. 지역에서 제공하는 문화시설, 일자리, 사회복지시설, 아동 및 청소년 시설은 문화 및 사회적 자본으로 작동하며, 주거환경은 거주비용의 부담과 공간의 면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지역정책은 지역사회의 공동체성과 정주민구가 지역과 공유하는 일체감의 강화를 지향한다. 교통과 주요 편의시설에의 접근성은 이동거리에 따른 교통비와 시간의 기회비용을 반영하며, 교통환경의 개선은 원거리 이동을 가능하도록 하여 정주환경의 권역을 확장하는 효과를 가진다. 주거환경의 개선은 가구규모에 적합한 주택의 공급과 공급된 주택의 거주비용 부담의 완화를 통해 지역의 정주 가능성과 정주 유지 확률을 높이는 효과를 가진다.

2) 정책 대안

고숙련 지역인재의 정주를 위해 지역친화형 인재육성에 대한 주거 및 자산 형성 지원과 정주청년에 대한 지역활력형 편의성 증진이 종합적으로 지역인재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지역사회 정책 지원 패키지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VII-7과 같다.



그림 VII-7. 지역인재청년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정책 패키지

(1) 지역친화형 인재육성에 대한 주거 및 자산 형성 지원

지역에 정주할 의향이 있고,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의 정주여건 개선은 이들에 대한 주거비용의 완화와 다양한 유형의 자산을 형성하여 지역 기반의 자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주거환경은 청년인재의 정주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며, 주거비용은 1인가구의 2인 이상의 가구로의 전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도심지역이나 밀집지역에서의 주거비용의 증가는 주거비용 완화를 목적으로 한 정책지원의 효과를 상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노동시장에 진입한 일부 청년이 저고용 및 저임금 상태에 머무는 경우가 있으며, 지역의 주거환경 특히 주거비용의 상승이 임금 상승보다 높은 경우에는 이들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 및 지역사회 정착에는 여러 장애물이 등장하게 된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인재육성정책은 청년의 노동시장의 진입과 이후 직장 내의 고용안정을 지향하기보다는 청년이 구성하는 1인, 2인, 또는 다인가구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 및 자산형성 지원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은 청년임대주거지나 공공기숙사를 통한 주거 공간 자체의 지원과 전세자금에 대한 이차지원이나 대출지원 등의 재정적인 지원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청년의 자산형성에 대한 지원은 저축금액에 대한 추가 적립을 통한 자산형 지원사업의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적립의 비율은 지원대상의 근로소득 규모와 그 가족의 자산규모, 목표로 하는 자산형성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다.

(2) 정주청년에 대한 지역활력형 편의성 증진

지역사회에 정착한 정주청년은 가구형태에 따라 다양한 편의시설에 대한 수요를 가지며, 청년에 특화된 문화, 여가, 체육, 돌봄 시설의 인프라를 통한 생활편의성의 제고는 청년인구의 유출을 예방하고 신규 정주 청년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역소멸에 대응하여 청장년 및 노년층의 인구 유입을 기대하는 지역활력타운 모델은 정부 주도로 특정지역에 주거 공간을 조성하고, 생활편의시설 중심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거 공간을 분양과 임대로 적절한 비율로 공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청년층은 교육과 문화 공간을 생활편의성의 추가 요건으로 추구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정주청년에 대한 지역활력형 사업은 일자리-주거-교육-문화 공간을 연계한 복합 공간의 조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즉, 노년 주거를 중심으로 마을기업 등을 통한 지역활력타운 모델이 기획 되는 것과 유사하게 청년 주거를 중심으로 지역특화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일자리, 이들과 가구구성원을 위한 교육 및 문화 공간이 연계되고, 그 외의 생활편의시설이 긴밀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패키지형 사업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3) 관련 추진체계

청년의 정주 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주거 및 자산형성의 지원과 편의성 중심의 공간 조성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주거 및 자산형성에 대한 지원은 주거공간의 현물지원과 주거비용 지원 및 자산형성 지원의 현금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국가 및 지자체가 각각 지원 가능한 재정수단을 확보하고,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공공과 민간의 협업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 생활편의성을 강화하는 지역활력형 사업은 지자체가 주거-일자리-문화예술-사회복지 등의 생활공간을 연계시키는 계획과, 청년의 주거를 목표로 한 지방정부와 기업 간의 공공-민간 협력의 거버넌스를 통해 수행될 수 있다.

4) 기대효과

지산학연의 협력을 통하여 지역혁신과 지역인재 양성체계를 통해서 배출한 고숙련의 지역인재는 노동시장과 고임금과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으며, 전문역량을 안정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필요로 한다. 특히, 청년층의 대상집단의 특성이 문화-생활의 편의성과 가구확장을 염두에 둔 주거비용의 부담을 정주 여부 결정에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주거의 직접 및 간접적 제공과 미래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자산형성에 대한 지원 정책은 청년층의 정주 결정과 지역사회에의 정착 결정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생활편의성을 중심으로 한 패키지화된 사업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사업은 지역에 유입되는 청년층의 증가와 이들을 통한 지역사회의 성장과 성숙을 통한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적 활력의 제고의 성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8. 지역중심 청년인재양성을 위한 대학교육의 혁신

표 Ⅶ-8. 지역중심 청년인재양성을 위한 대학교육의 혁신

정책대안	세부 정책제언	관련 정책추진체계					
		중앙	지자체	지역 기업	대학	국책	민간
8. 지역중심 청년인재양성을 위한 대학교육의 혁신	8-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RISE) 내실화	○			○	○	

1) 제언 배경

지역소멸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시기나 그 정도에서 차이가 날 뿐 수도권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지역소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인구감소지역을 별도로 지정하며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을 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21). 동시에 지역대학 역시 자연 인구감소,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 현상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역의 청년 인구 감소는 지역대학의 위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동시에 지역의 고령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지역의 고령화는 다시 지역 청년의 부양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지역 이탈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와 지역대학의 어려움 그리고 지역의 인구 연령대의 비정상적 분포의 문제 등은 단순히 지역의 문제로 한정되지 않는다. 이는 국가적·사회적 차원의 문제이며, 실제로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각종 문제(저출산, 고령화 등)는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이상립, 2009). 각종 기회비용까지 고려하면 사회적 비용의 정도는 매우 크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급한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 비록 국가적·사회적 차원의 문제로까지 발전되거나 혹은 이미 발전되었다고 하더라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의 출발점부터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출발점은 바로 지역이고, 또 지역의 청년 인구 유입과 인재 양성을 가능케 하는 대학을 주요 행위자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때 이들과 협력 및 활발한 상호보완을 가능하게 하는 공동 상생형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어느 한 주체의 노력이 아니라 공동으로 대응하되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2) 정책 대안

지역에 중심을 둔 청년인재 양성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소프트 파워(soft power)의 동력을 높이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단순히 청년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아는, 즉 지역에 중심을 둔 청년 인재 양성이어야 한다. 지역은 고유의 장소성(placeness)을 지닌 곳이기 때문에 지역 실정과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인재는 지역 문제 해결에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 기반의 인재가 양성되고 그 인재가 다시 지역을 위한 문제 해결의 앙트레프레너(Entrepreneur)가 되어야 한다. 혁신가를 의미하는 앙트레프레너는 기업은 물론이고 공공분야에서도 문제해결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민주, 2019).

이를 위해 핵심 주체는 곧 지역의 대학들이다. 지역대학은 지역의 생산적 사회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싱크 탱크 역할을 한다. 인재 양성은 물론이고 지역 현안에 대해 지역밀착형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거점이다. 따라서 결국 지역 중심의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지역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내실화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는 지역(사회)과 연계된 혁신적 대학 교육으로 지역을 위한 청년인재 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지역별·대학별 특성화를 통해 대학지원체계를 보다 내실화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청년 인재 양성의 질과 지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지역 문제 해결과 동시에 청년의 역량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제공 그리고 지역과 대학이 함께 하는 공동 상생형 생태계 조성도 가능하게 한다.



그림 Ⅶ-8. 지역중심 청년인재양성을 위한 대학교육의 변화 방향

3) 관련 추진체계

지역중심 청년인재양성을 위한 대학교육의 혁신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내실화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세 주체 간 협력적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가 그에 해당하고, 혁신적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의 핵심 주체로서 지역대학, 그리고 대학지원체계의 구성과 진행 과정 및 피드백을 위한 국책연구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앙정부의 경우, 지역의 문제를 지역 기반 혁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별 특성화와 혁신 가능 여건을 고려하여 재정적 지원이 중심이 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대학의 경우, 교육과 혁신 연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학 자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지역사회의 주요 부문과의 상호협력으로 지역문제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국책연구소는 실행되고 있는 대학지원체계 전반을 검토하여 시의성 높은 방향성과 실천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대학지원체계이기 때문에 지역과 연계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예방과 피드백 등의 역할은 국책연구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주기(연도)별·단계별 진행 과정에서 보충할 수 있는 혁신 아이디어도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세 주체는 독립된 역할 수행이 아니라 상호 연계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대학과 지역은 재정적 지원에 따른 결과(outcome) 도출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시간 업무 교류 및 확인이 필요하며, 동시에 그에 대한 유용한 분석 정보가 국책연구기관에 의해 정제화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내실화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4) 기대효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내실화를 통해 지역중심 청년인재양성을 이끌 대학 교육의 혁신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기대효과를 지닌다. 첫째,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 기반을 둔 청년 인재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지역문제 해결의 몰입도와 실질화를 높일 수 있다. 지역문제는 지역의 특수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책임의식이 약하다면 근본적 문제해결이 되지 못한다. 지역소멸을 앞두고 있는 현재 우리

나라 지역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임시방편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몰입도를 높여 실질적 문제해결이 되어야 한다. 대학지원체계 내실화를 통해 지역중심 청년인재 양성은 바로 이 점에서 유용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지역 경제와 지역 인구 유입에 중요한 몫을 하고 있는 지역대학의 교육 및 운영의 혁신과 질적 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체계상 지역대학은 지역에 기반을 둔 인재 양성의 가장 최종 기관이다. 지역대학의 역할과 수준이 해당 지역의 질적 개선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점에서 대학지원체계 내실화를 통해 지역중심 청년인재 양성을 이끌 대학교육의 혁신은 곧 대학의 생산적 개선 및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참고문헌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09). 학령인구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 추진방안.
- 교육부. (2014). 대학 교육의 질 제고 및 학령인구 급감 대비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 교육인적자원부. (2004). 대학 구조개혁 방안.
- 권경득. (2016). 기업주도 맞춤형 인력양성과 일자리 창출. **지방행정**, 65(752), 28-31.
- 권양섭. (2023). 지방대학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법이론실무연구**, 11(4), 11-35.
- 기정훈, 박현수. (2013). 지역발전사업의 일자리창출효과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26(4), 297-334.
- 김동규. (2020). 4차 산업혁명 가속화에 따른 지자체 일자리정책 방향. **월간 공공정책**, 176, 12-15.
- 김민주. (2019). **공공관리학**. 박영사.
- 김민주. (2024). **AI 상상권력**.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선재. (2018). 지역경제와 지역대학: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9), 390-398.
- 김용우. (2014). 더 나은 인재산출을 위한 대학교육의 개선방안. **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지**, 15(2), 16-18.
- 김윤정, 유병은. (2016).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가져올 미래 사회변화. **KISTEP InI**, 12: 52-65.
- 김현호. (2022). 지방소멸 방지의 해법 모색. **월간 공공정책**, 202, 11-13.
- 남수경. (2016).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등록금 변동에 대한 영향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5(3), 27-51.
- 문경희. (2021). 경상남도의 지역혁신과 지자체-대학 협력사업 계획과정에서의 정치동학.

비교민주주의연구, 17(1), 63-101.

박승규. (2018).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적인 준비. **월간 공공정책**, 156, 14-16.

박재희, 주희진, 김필, 이재용. (2022).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국정과제 및 실천과제의 평가. **한국정책연구**, 22(4), 177-201.

박준우, 여찬구, 우승현. (2023). 진로탐색, 취업준비와 취업성공의 관계: 대학 청년 졸업자를 중심으로. **Journal of Corporation and Innovation**, 46(2), 69-91.

박혜진. (2023).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쟁점 탐색**.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충청북도.

변기용, 송인영. (2018). 문재인 정부 고등교육 개혁 추진 현황 및 개선과제: 대학 구조개혁 및 재정지원 사업 재편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24(2), 51-79.

변정현. (2021). 청년 일자리, 중앙정부정책과 지자체사업의 발전방향. **월간 공공정책**, 189, 20-22.

송원근. (2023).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인재 양성 방안. **국토**, 495, 6-11.

신현석. (2016). 박근혜 정부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쟁점과 과제. **교육행정학연구**, 34(5), 125-162.

염민호. (2023). 대학구조개혁의 상수와 변수: ‘라이즈’와 ‘글로벌대학 30’의 의미. **대학: 담론과 쟁점**, (1), 24-56.

오민지, 안선민. (2022). 인구·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고용거버넌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34(1), 53-74.

오윤정. (2020). **문재인 정부 초기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 변동 분석**.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울리히 벡. (2014). 홍성태 옮김,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새물결.

윤성식. (2018).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행복하게 사는 법**. 수오서재.

이상림. (2009). **고령화와 경제적 부담**, 〈한국의 사회동향〉. 2008. 통계개발원.

이성희, 오선정. (2022). 대학 산학협력 인재양성과 대학일자리센터의 고용효과 및 정책과제. **노동리뷰**, 203, 47-59.

이슬아. (2017). **대학 구조개혁 정책 변동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이영철. (2022). 인구감소 시대의 지방연구중심대학 만들기. **월간 공공정책**, 202, 21-23.

- 이용균. (2023). **대학구조조정정책의 논리 구조와 변동 특성**.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대전.
- 이창호, 최용환, 도수관. (2016). **청소년정책 분석 및 평가제도 체계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 16-R02).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채운정. (2023). 윤석열 정부의 지방대학 정책의 전망과 과제: RISE와 글로컬대학 30 정책 추진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4(9), 360-366.
- 최용환, 곽창규, 이성규. (2020a). **지역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평가지표 개선방안** (연구-20-03). 서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최용환, 김강배, 장선희, 조예진. (2018). **2018년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최종결과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용환, 성유리, 박운수, 김보경. (2020b). **청소년활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방안 연구**(연구보고 20-R04).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용환, 이동성, 장혜윤, 임채홍. (2023). **2023년 자치구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용역** (연구보고 23-수탁1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용환. (2015). 청년 실업률의 영향요인과 정책방향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26(2), 83-113.
- 행정안전부. (2021).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지방 살리기 본격 나선다!' 10월 18일자 보도자료.
- 허문구, 이상호, 김운수, 유이선, 조성민, 김진영, 조승국. (2022). **지방소멸 시대의 인구감소 위기 극복방안: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44.
- 허문구. (2022). **K-지방소멸지수 개발과 정책과제 -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 산업연구원.

- Arranz, N., Arroyabe, M. F., Sena, V., Arranz, C. F., & Fernandez de Arroyabe, J. C. (2022). University-enterprise cooperation for the employability of higher education graduates: a social capital approach. *Studies in Higher Education*, 47(5): 990-999.
- Monteiro, S., Almeida, L., & Garcia-Aracil, A. (2021). "It's a very different world": work transition and employability of higher education graduates. *Higher*

- Education, Skills and Work-Based Learning*, 11(1): 164-181.
- Orazbayeva, B., Plewa, C., Davey, T., & Muros, V. G. (2019). The future of University-Business Cooperation: research and practice priorities. *Journal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Management*, 54: 67-80.
- Velez, C. I., Afcha, S. M., & Bustamante, M. A. (2019). Cooperation between university-enterprises and its effect on innovative business performance. *Informacion Tecnologica*, 30(1): 159-168.
- Zhang, S. (2024). Educational cooperation in the perspective of tripartite evolutionary game among government, enterprises and universities. *Plos one*, 19(1), PLoS ONE 19(1): e0294742.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94742>에서 인출)

[인터넷 자료]

- 고용노동부. (2024).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http://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11&act=view&list_no=430503. 2024년 6월 10일 인출.
- 관계부처합동. (2023). 제1차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인구감소지역 활력 제고 추진.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5&nttId=106235. 2024년 1월 15일 인출.
- 교육부. (2023a). 글로벌대학 30 추진방안(확정안).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72775&boardSeq=94725&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4&s=moe&m=0316&opType=N>. 2024년 1월 15일 인출.
- 교육부. (2023b).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지역 선정 운영 계획.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3794&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 김미란. (2014). 대학 구조개혁 평가 방향 정립을 위한 대학평가 운영 실태 분석(OR2014-07). 한국교육개발원. <https://www.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PubForm.do?plNum0=10241>. 2024년 1월 15일 인출.

대학교육연구소. (2021.3.3). 전체 대학 정원감축을 제안한다. <http://khei.re.kr/post/2413>. 2024년 1월 15일 인출.

대한민국정부. (2022).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https://www.president.go.kr/affairs/gov_project. 2024년 1월 15일 인출.

산업통상자원부. (2023). 산업부·중기부 2023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 공동개최.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3f49a5a8c/166861/view?mno=&pageIndex=1&rowPageC=0&displayAuthor=&searchCategory=0&startDtD=2023-02-27&endDtD=2023-02-27&searchCondition=1&searchKeyword=+>. 2024년 6월 10일 인출.

서울신문. (2023, 8월 30일).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를 위한 지방 중심 교육·취업 체계 구축해야”...30일 ‘제2차 지방소멸 대응 협력포럼’ 개최.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0830500235>. 2024년 1월 15일 인출.

통계청. (2024). 주민등록인구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DA7014S_01. 2024년 1월 15일 인출.

통계청. (2022). 「지역소득」 시도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C81&conn_path=I2. 2024년 6월 10일 인출.

한국고용정보원. (2023). 지방소멸위험지수 원시자료(23년). <https://www.keis.or.kr/user/bbs/main/123/3889/bbsDataView/58493.do?page=1&column=&search=&searchSDate=&searchEDate=&bbsDataCategory=>. 2024년 6월 10일 인출.

행정안전부. (n.d.). 인구감소지역 지정. <https://www.mois.go.kr/frt/sub/a06/b06/populationDecline/screen.do>. 2024년 1월 16일 인출.

국문초록

본 연구는 1차년도의 연구인 만큼 인구소멸 위기 속에 청년 지역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의 세부 정책방향과 정책의 청사진을 분석하고 향후 국가정책의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2차 통계를 통한 '지역별 산업특성과 청년 경제활동인구의 특징'을 살펴보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역대 청년층과 대학교육 지원의 세부목표', '비수도권(14개 시도)의 지역별 특화인재 양성 및 관련사업과 청년 지역인재육성 및 일자리 창출 연계된 중앙정부의 부처별 지원사업 목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대학, 기업, 지자체'의 각 주체들이 체감하는 연계성과를 알아보기 위한 '지자체, 기업, 대학'의 정책관계자 산학연 협력에 대한 정보공유 행동실험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는 청년 지역인재육성과 일자리 창출이 내실있게 추진되기 위하여 1) 법제도개선 및 정책강화를 위한 ① 청년친화적인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 개정, ② 중앙부처 연계강화 및 정책평가 내실화, 2) 기업참여 중심의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③ 지역기업의 개방적 참여 유도, ④ 지역기업 중심의 청년인재육성 활성화, 3)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⑤ 미래산업과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산업혁신, ⑥ 지역청년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평생교육 강화, 4) 지역청년 정주여건 강화를 위한 ⑦ 고숙련 지역인재의 정주기반 마련지원, 5) 지역대학 역량 강화를 위한 ⑧ 지역중심 청년인재양성을 위한 대학교육의 혁신의 8가지 정책대안과 13개의 세부정책제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As this study is in its first year, it aims to systematically analyze the detailed policy directions and blueprint for fostering young local talent and creating jobs amid the population decline crisis, while presenting a structured framework for future national policies. Specifically, it examines regional industrial characteristics and the economic activity patterns of young people using secondary statistical data. Additionally, it analyzes the historical policy objectives for youth and higher education support in talent development, as well as specialized talent development initiatives and related projects in 14 non-metropolitan regions, and ministry-specific central government support programs linked to fostering young local talent and job creation.

Furthermore, to assess the perceived effectiveness of interconnections among key stakeholders—universities, businesses, and local governments—an information-sharing behavioral experiment was conducted with policymakers involved in local industry-academia-government collaboration.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eight policy alternatives and 13 detailed policy recommendation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young local talent development and job creation:

1. Strengthening legal frameworks and policy implementation:
 - (1) Revising legal provisions to support youth-friendly local talent development and job creation
 - (2) Enhancing inter-ministerial coordination and policy evaluation mechanisms
2. Promoting corporate-led local job creation:
 - (3) Encouraging active participation of local enterprises
 - (4) Strengthening youth talent development centered on local businesses
3. Enhancing region-specific lifelong education initiatives:
 - (5) Driving industrial innovation to adapt to future industry demands and demographic shifts
 - (6) Expanding lifelong education programs to support young local talent development
4. Improving settlement conditions for young professionals in local areas:
 - (7) Establishing infrastructure to retain highly skilled local talent
5. Reinforcing the capacity of regional universities:
 - (8) Innovating higher education systems to cultivate regionally embedded young professionals

By implementing these policy measures,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structured and pragmatic approach to regional youth talent development and employment generation, ensuring alignment with broader national policy objectives.

202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기관고유과제

연구보고24-기본01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정책 강화방안 연구 / 김지경·송현주·김일우·김윤희
연구보고24-기본02	청소년의 생성형 AI 이용실태 및 리터러시 증진방안 연구 / 이창호·모상현·배상률·이세영
연구보고24-기본03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Erasmus+ 모형 구축방안 연구 / 이윤주·김형주·오해섭·박대승
연구보고24-기본04	청소년 근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이수정
연구보고24-기본05	청소년활동을 통한 환경 실천 지원방안 / 황세영·김정숙·최정원·이은주·손윤희
연구보고24-기본06	청소년은 어떻게 범죄의 길에 빠지게 되는가 : 청소년 범죄 경로와 예방 대책 / 이지연·김영지·박지수·한윤선·박선영
연구보고24-기본07	고립·은둔형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서정아·강경균·최홍일·허창수
연구보고24-일반01	2024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 총괄보고서 / 유민상·이경상·서고운·유설희·유성렬
연구보고24-일반01-01	2024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기초분석보고서 / 유민상·이경상·서고운·유설희
연구보고24-일반05	2024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 사업보고서 / 하형석·김기현·최인재·한지형
연구보고24-일반05-01	2024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기현·오병돈
연구보고24-일반06	2024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총괄보고서 / 신동훈·김희진·이정민·이용해·장윤선
연구보고24-일반06-01	2024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2기패널) / 신동훈·김희진·이정민·이용해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4-44-01 청년종합연구Ⅲ: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자체번호 연구보고24-일반02)	/ 김승경·김지연·백혜정·전현정·김성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4-44-02	2024년 시설퇴소청년의 생활 실태 및 정책개발 /
(자체번호 연구보고24-일반02-01)	김승경·김지연·백혜정·전현정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4-45-01	청년 친화적인 지역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I
(자체번호 연구보고24-일반03)	/ 최용환·김영한·권오영·박윤수·오문준·이경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4-46-01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자체번호 연구보고24-일반04)	연구 I : 사이버도박 / 임지연·황진구·성윤숙·조제성

수 시 과 제

연구보고24-수시01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개선방안 / 김정숙·조남익
연구보고24-수시02	일경험으로서 청년인턴 활성화 방안 연구 -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을 중심으로 / 이윤주·황세영·하형석·서고운·최홍일·이용해
연구보고24-수시03	청소년기 인문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 강경균·최홍일
연구보고24-수시04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 성윤숙

연구개발적립금 과제

연구보고24-연적금01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 실태연구 : 청소년 쉼터를 중심으로 / 김희진·김경준·박지수·조혜영
연구보고24-연적금01-01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 실태연구 : 청소년 쉼터를 중심으로 - 기초분석보고서 / 김희진·박지수
연구보고24-연적금02	미래지향 정책연구 수행사업 / 김대웅·이진아·이유정·김정숙·권오영·변주영·조은혜·이윤주

수 탁 과 제

< 일 반 >

연구보고24-수탁01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장근영·김기현·문호영·이용해·최홍일·구본호·이자경·서지형
-------------	--

연구보고24-수탁02	청년의 결혼 및 출산 의식과 세대지향적 저출생 정책지원망 구축 연구 / 김형주·정세정·박미선·김동훈·김지민
연구보고24-수탁03	2024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 대안교육기관 현황조사 / 최인재·오해섭·권오영·유설희·김소연·박진수·윤철경
연구보고24-수탁03-01	2024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 교원, 학생 및 학부모 실태조사 / 최인재·유설희·김소연·윤철경
연구보고24-수탁03-02	2024 대안교육기관 운영 사례집 / 최인재·오해섭·권오영·유설희·김소연·박진수
연구보고24-수탁04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이지연·하형석·박지수
연구보고24-수탁05	2024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사업보고서 / 서고운·김영지·김지연·이정민·최홍일
연구보고24-수탁06	디지털기반 인성교육 플랫폼 운영지원 및 성과평가 / 임지연
연구보고24-수탁07	청소년 진로 및 디지털 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강경균
연구보고24-수탁08	2024년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 결과보고서 / 최용환·이동성·박윤수·장혜윤·임채홍·임지영
연구보고24-수탁09	2024년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결과보고서 / 최용환·이창호·임지영
연구보고24-수탁10	2024년 중앙부처와 시도교육청의 인성교육 이행점검 및 인성교육정책 분석평가/ 최용환 박윤수·장혜윤·김보경·임지영·이경아
연구보고24-수탁11	2024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관리 보고서 / 최용환·임지영·이경아
연구보고24-수탁12	2024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황진구·김영지·모상현·이용해·김경준
연구보고24-수탁13	광역지역단위 청소년활동 진흥 및 협력강화 방안 연구 / 황세영·유민상·남화성
연구보고24-수탁14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기초연구 / 조연수·하형석·유설희
연구보고24-수탁15	2024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유설희
연구보고24-수탁15-01	2024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부록: 기초통계결과표)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유설희
연구보고24-수탁16	보호관찰 청소년 사이버도박 실태분석 및 지도감독 방안 / 박지수·이지연
연구보고24-수탁17	2024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김지경·송현주·김균화·김일우
연구보고24-수탁18	학교안팎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연구 / 유민상·이경상·황세영·최인재·최홍일
연구보고24-수탁19	취약청년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1인가구 청년 및 경계선 지능 청년을 중심으로 / 유민상·김기현·신동훈·변민수·박미선·한지형
연구보고24-수탁20	2024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 서정아·장여옥

〈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연구보고24-학폭01	2024 학부모용 소식지 모음집 / 모상현·박재욱·전원지
연구보고24-학폭02	어울림 프로그램 개정 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연구 / 모상현·김승혜·최희영·차민희·송채원
연구보고24-학폭03	2024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모상현·전원지·문은솔
연구보고24-학폭04	2023년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결과보고서 / 모상현·박선영·김예지
연구보고24-학폭05	2024년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안내서 / 모상현·박선영
연구보고24-학폭06	2023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 모상현·최지윤
연구보고24-학폭07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1~2학년) / 모상현·정광훈·백성희·최인재·송채원 외
연구보고24-학폭08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중학교 1학년) / 모상현·정광훈·백성희·최인재·송채원 외
연구보고24-학폭09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고등학교 1학년) / 모상현·정광훈·백성희·최인재·송채원 외
연구보고24-학폭10	2024 학교폭력예방 컨설팅 매뉴얼 / 모상현·최지윤·문은솔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연구보고24-대안01	학업중단 숙려제 공통운영기준 / 황세영
연구보고24-대안02	청소년부모·한부모 지원매뉴얼 / 황세영·이진아·김시경·김미혜
연구보고24-대안03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실태조사 구축방안 / 김영지·임지연·유성렬·김강호·이종숙·정유경

〈위(WEE)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

연구보고24-위센터01	2024년 위(Wee) 프로젝트 연구지원 사업 운영 결과보고서 / 김지연·김영지·백혜정·김승경·이정민·전현정·최홍일·양하나·김주영·문세진· 나예인·이유진
--------------	---

자 료 집

〈 세 미 나 〉

세미나24-01	청소년의 생성형 AI 리터러시 증진방안 세미나 (24.5.24.)
----------	--------------------------------------

〈 위 크 슝 〉

- 위크슝24-01 소년사건의 이해: 경찰 사랑의 교실, 법원 수강명령 이해하기 (24.8.29.)
위크슝24-02 2024 꿈지락 운영 위크슝 (24.8.7.)

〈 포 럼 〉

- 포럼24-01 청소년 금융활동 역량강화 방안 (24.3.18.)
포럼24-02 청소년-가족 시설간 정책 연계 협업 관련 다문화 청소년 진로지원 포럼 (24.4.29.)
포럼24-03 다문화청소년 심리·정서 및 진로·진학 지원 정책의 현안과 발전방안 (24.7.18.)
포럼24-04 제1회 청소년 형사 법무 국제심포지엄 청소년 약물 남용과 도박문제 (24.8.19.)
포럼24-05 청소년 디지털 역량 강화 방안 (24.12.10.)

〈 콜 로 키 움 〉

- 콜로키움24-01 가명정보 활용절차의 이해 - 청년종합연구 III: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24.4.24.)

〈 기 타 자 료 집 〉

- 자료24-01 2024년 저경력 전문상담교사 연수
자료24-02 위(Wee) 센터 실장 역량강화 연수 자료집
자료24-03 가정형 위(Wee)센터 컨설팅
자료24-04 제1회 청소년 형사 법무 국제심포지엄 청소년 약물 남용과 도박문제
자료24-05 지역사회 환경교육 협력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안내서
자료24-06 2024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 [제1차] 연수 강의자료
자료24-07 2024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 [제2차] 연수 강의자료
자료24-08 2024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 [제3차] 연수 강의자료
자료24-09 위(Wee) 이슈브리프
자료24-10 (초등학교) 위기사안별 개인상담 개입 지도서
자료24-11 위(Wee) 클래스 및 센터 운영 가이드
자료24-12 가정형 위(Wee)센터 매뉴얼
자료24-13 제13회 위(Wee) 희망대상 우수사례집
자료24-14 위(Wee) 뉴스레터

자료24-15	제13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24-16	2024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매뉴얼
자료24-17	제11회 학업중단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자료24-18	2024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연간사업보고서
자료24-19	2024 꿈지락 운영 워크숍 2차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35권 제1호(통권 제112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5권 제2호(통권 제113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5권 제3호(통권 제114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5권 제4호(통권 제115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

- 151호 어울림 프로그램 현안 진단을 위한 탐색적 연구
- 152호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및 자립지원방안 연구
- 153호 가족환경 다변화에 따른 청소년 가족실태와 지원방안

〈 NYPI Bluenote 통계 〉

- 77호 청소년의 생성형 AI 이용실태조사
- 78호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시민권과 참여
- 79호 소년보호재판 준비메모(2013~2018) 데이터 구축 및 주요 결과
- 80호 청소년활동 실태
- 81호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Ⅱ
- 82호 202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주요 지표 결과
- 83호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치참여 지원 방안 연구
- 84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6차년도 패널데이터 구축 및 주요 조사 결과

협동연구총서 24-45-01

연구보고24-일반03

청년 친화적인 지역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I

인 쇄 2024년 12월 31일

발 행 2024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백 일 현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다원기획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433-3 93330

협동연구총서 24-45-01

연구보고24-일반03

청년 친화적인 지역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
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9 791156 544333

ISBN 979-11-5654-433-3